

2016년도 교원연수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 [중등]

- 일 시 : 2016.7.18(월)~7.29(금) 09:30~16:20
- 장 소 :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임광빌딩 본관 11층)

## 2016년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 강의 세부 일정(중등)

날짜	교시		강의주제	강사
2016년 7월 18일 (제1일)	9:20~9:30		등록 및 개강식	
	9:30~12:20	1교시	자국사와 지역사의 화해	백영서 (연세대)
	12:2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동아시아의 문자, 종교, 제도	이근우 (부경대)
7월 19일 (제2일)	9:30~12:30	1교시	불교의 전파와 발전	김상영 (중앙승가대)
	12:2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신라의 삼국통일 전략과 자주와 사대의 허실	정연식 (서울여대)
7월 20일 (제3일)	역사유적지 답사: 서울의 백제 왕도유적 - 한성백제 박물관, 몽촌토성 풍납토성, 방이동 석촌동 고분군 등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
7월 21일 (제4일)	9:30~12:20	1교시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구조	이근명 (외국어대)
	12:2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몽골제국과 동서문명의 교류	이평래 (외국어대)
7월 22일 (제5일)	9:30~12:20	1교시	일본근세사의 이해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12:2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수업활용 사례 발표 I - 동아시아사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박성기 (하남고)

7월 25일 (제6일)	9:30~12:20	1교시	근대일본과 해외침략	박 훈 (서울대)
	12:2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수업활용 사례 발표 II - 전쟁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	이경훈 (서천고)
7월 26일 (제7일)	9:30~12:20	1교시	중국의 근대화와 한중관계	김형중 (서울대)
	12:2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독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김병렬 (국방대)
7월 27일 (제8일)	역사유적지 답사 - 서대문 형무소 및 근현대사 기념관 등			장규식 (중앙대)
7월 28일 (제9일)	9:30~12:20	1교시	일본 교과서 문제와 한국사 기술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12:2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중국의 한국사교육, 중국교과서 속의 한국사 서술	김지훈 (성균관대)
7월 29일 (제10일)	9:30~12:20	1교시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 - 한국사 연구와 교육, 그리고 동아시아사	김정인 (춘천교대)
	12:2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시험	
	16:20~16:30		수료식	

## 〈 목 차 〉

- 자국사와 지역사의 화해 ..... 09  
백영서 (연세대)
- 동아시아의 문자, 종교, 제도 ..... 35  
이근우 (부경대학교)
- 불교의 전파와 발전 ..... 55  
김상영 (중앙승가대)
- 신라의 삼국통일 전략과 자주와 사대의 허실 ..... 81  
정연식 (서울여대)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구조 ..... 97  
이근명 (외국어대)
- 몽골제국과 동서문명의 교류 ..... 111  
이평래 (외국어대)
- 일본근세사의 이해 ..... 129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 **수업활용 사례 발표 I - 동아시아사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 147  
박성기 (하남고)
- **근대일본과 해외침략** ..... 163  
박 훈 (서울대)
- **수업활용 사례 발표 II - 전쟁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 ..... 177  
이경훈 (서천고)
- **중국의 근대화와 한중관계** ..... 201  
김형중 (서울대)
- **독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 ..... 213  
김병렬 (국방대)
- **일본 교과서 문제와 한국사 기술** ..... 227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 **중국의 한국사교육, 중국교과서 속의 한국사 서술** ..... 257  
김지훈 (성균관대)
-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 - 한국사 연구와 교육, 그리고 동아시아사** .... 273  
김정인 (춘천교대)



# 자국사와 지역사의 화해

백영서 (연세대)



# 자국사와 지역사의 화해: 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성찰

백영서 (연세대)

## 1. 머리말

내가 ‘자국사와 지역사’의 관계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한일간에 이어 한중간에까지 역사분쟁이 심각해진 동아시아의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이다. 여기에, 그런 위기적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교과서들<sup>1)</sup>이 역사연구자들에게 자국사와 지역사를 연관시키는 역사서술의 가능성을 실감하게 만든 것도 한몫 거들었을 것이다.

다만 이 공동의 역사교과서가 동아시아 민간인들이 공동으로 만든 부교재 형태의 것이기에 그에 대한 반향은 우리 사회 일부에 한정되었던 것 같다. 이에 비해 2006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강화 방안에 포함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과목 신설안은 비록 선택과목이지만 정식 교과서인 만큼 한층 더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2012년 정식 교과서가 간행되어 교육현장에서 사용중이다. 따라서 역사학계가 이를 진지한 토론의 과제로 삼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진다.<sup>2)</sup>

- 1) 대표적인 것이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서울, 한겨레출판사, 2005이다. 이 책의 일본어판 『未來を開く歴史』(高研社)와 중국어판 『東北亞三國近現代史』(中國社科文獻出版社)도 거의 동시에 간행되었다. 그밖에 한일 양국의 공용의 역사교재로 이원순 정재정 서의식, 『한국과 일본에서 함께 읽는 열린 한국사』, 서울, 솔 출판사, 2004; 韓日共通歷史教材 制作팀, 『朝鮮通信使: 豊信秀吉의 조선침략과 友好의 조선통신사』 서울, 한길사, 2005;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서울, 한울, 2005; 한일역사교육교류모임, 『마주보는 한일사』, 서울:사계절, 2006; 한일역사교과서연구회 지음, 『한일교류의 역사』, 서울, 혜안, 2007도 간행되었다.
- 2) 2012년에 안병우 외,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천재교육과 손승철 외,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학사의 2종이 간행되어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한 비평은 박근철,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기술 내용과 개선 방안 : 2012년판 『동아시아사』 전근대 부분을 중심으로」와 유용태, 「동아시아 지역사 서술의 현

사실, 바람직한 역사학의 세 요소를 대담한 문제제기, 실증 그리고 참여(commitment)라고 본다면 역사학이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역사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공식적인 지식으로서 사회체제의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한 사회의 전형적인 지배담론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기성의 학문적 성과를 간추린 형태의 서술 방식을 취함으로써 제도권 학문의 주류적 견해를 반영한다. 따라서 역사적 지식 전파의 핵심 통로인 역사교과서를 포함한 역사교육의 현재적 문제는 학계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또한, 역사학계가 역사 연구뿐만 아니라 그 교육에도 더 깊게 관심 가져야 할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역사학의 정체성에 관한 물음과 직결된 것이고, 따라서 사학사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근대적 학문 속에는 반드시 자기검증의 영역이 있기 마련인데 그 부분을 역사학에서는 사학사가 담당해왔다고 볼 수 있다. 역사학적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 어떤 형태로 이뤄져왔는가를 검증하는 작업은 사학사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돌이켜 보면, 한국에 수용된 근대 역사학이 국사·동양사·서양사 3분과의 틀을 지켜온 이래 3분과간의 관계는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었고, 특히 역사 교육 영역에서는 이 문제가 자국사와 지역사의 관계를 묻는 식으로 논의되는 뜨거운 현재적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1970년대 절정을 이루었던 민족주의 담론에 힘입어 국사 연구와 교육이 부상된 데 반해 외국사연구와 세계사교육이 홀대당한 나머지 국사와 (동양사와 서양사를 합친) 세계사가 분리된 상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국사와 세계사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과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유럽중심주의적 서술에 치우친 세계사 교과서에 대한 자성(自省)의 결과 아시아사 서술의 비중은 꾸준히 높아져 왔다.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이래 지식인사회에서 주도적 담론의 하나가 된 동아시아담론과 상호작용하면서 동아시아사를 하나의 단위로 서술하려는 논의를 표출시켰다.

내가 보기에 그간 진행되어온 동아시아사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흐름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한국사의 확대로서의 동아시아’이고, 다른 하나는 ‘국사의 틀을 넘어서는 동아시아사’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이 글에서 민두기(閔斗基)가 일찍이 사용한 용어를 빌어 전자를 ‘자아확충의 동아시아사’로, 후자를 ‘자아충실의 동아시아사’(또는 자기성찰의 동아시아사)로 바꿔 부르고 한다.<sup>3)</sup> 그는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우리(민족)가 공헌한 바를 탐색하는 것을 ‘자아확충’의 기능으로, 우리 자신의 개별성을 동아시아사에서 확인하는 것을 ‘자아충실’의 기능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개별성은 곧 ‘고유성’인데 가치판단이 개재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한 방편일 뿐이라고 전제했다는 점에서 자기성찰의 기능으로 볼 수도 있다.

아래의 글에서는 두 흐름을 각각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그 대안으로서 한국사와 동아시아

황과 과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2012) 근현대 부분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0호, 2013 참조  
3) 閔斗基, 「동양사와 세계사교육」, 『역사교육』19호, 1976.

사가 소통하는 ‘자아확충과 충실의 동아시아사’를 제안할 것이다. 여기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 명확하게 해둘 점은, 민두기의 문제의식 속에 있는 ‘자아’란 다분히 한국 민족이나 국민국가를 염두에 둔 용어로 읽히지만, 내가 제안하는 ‘자아확충과 충실의 동아시아사’에서의 자아란 딱히 국민국가만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의 역할에서 살릴 것은 살리면서도 국가 본위의 좁은 사유방식을 해체하는 이율배반적 과제 수행의 지적 긴장을 유지하는 다양한 주체들까지 포괄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위의 두 흐름을 넘어서 동아시아사와 한국사의 소통을 중시하는 필자의 문제의식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확충과 충실의 동아시아사’ 서술을 한층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 ‘이중적 주변의 눈’이란 관점을 그 바탕에 깔려고 한다.

나는 이중적 주변의 눈에 입각한 동아시아사 서술이 한국을 넘어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 범위에서라도 널리 인정되고 합의될 수 있기를, 바꿔 말하면 (아래에서 설명될) ‘소통적 보편성’(communicative universality)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강연은 소통적 보편성을 지향하는 동아시아사 서술의 가능성을 가늠해보려는 작은 시도이다.

## 2. ‘자아확충의 동아시아사’ 비판

동아시아 국가 간의 역사분쟁에 대해 국사강화(國史強化)를 대응책으로 내세우는 한국사 연구자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는 데 비해, 국사의 틀을 넘어 동아시아사를 시야에 넣고 논의한 한국 연구자를 찾기는 힘들다. 또한 그런 연구자들이 있다 해도 대체로 일국사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한국사의 확대로서의 동아시아사를 상정하는 경향이 짙다. 그런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비교적 일찍 동아시아 담론과 한국사의 관련을 검토한 신용옥의 글이 있다.<sup>4)</sup>

그로 하여금 이 새로운 주제에 관심을 갖도록 자극한 것은 동아시아 담론이다. 그런데 그는 동아시아 담론의 기본 시각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는 지역사적 시각 즉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일국사와 지역사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반발한다. 동아시아적 시각에는 국민국가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양식의 전환과 해체를 강조하는 탈근대적 성향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런 입장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묻는 것이다(197면).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문제의식은 그 유효성이 폐기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경우에는 올바른 준거점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 근대사의 큰 질곡인 분단의 극복과 통일이라는 역사적

4) 신용옥, 「동아시아 담론과 한국근현대사 연구」,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20세기 역사학, 21세기 역사학』, 서울, 역사비평사, 2000.

과제를 염두에 둘 때 더욱 그렇다.”(198면)

이런 이유로 그는 동아시아사의 시각으로부터 한국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로부터 동아시아 지역사로 시각을 확대하기를 제안한다(198면). 그리고 일국사적인 관점을 억지로 해체하기 보다는 “내재적인 발전과 아래로부터 변혁의 측면을 파악하는 데 용이한 일국사적 관점에서 획득된 보편적 가치를 지역사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203면)하다고 역설한다.

과연 일국적인 관점에 서는 것만이 내재적인 발전과 아래로부터 변혁의 측면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것인지도 묻고 싶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은 “일국사적 관점에서 획득된 보편적 가치를 지역사로 확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의 문장에서 추출해보건대, 한편으로는 “분단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외국된 근대성’을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주의로 흐를 수 있는 동아시아 담론을 조정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203~204면)이란 대목이 그가 말하고자 하는 ‘보편적 가치’가 아닐까 싶다.

내게는 이런 주장이야말로 ‘자기 확충’으로서의 기능 곧 동아시아 역사에서 우리가 공헌한 바를 서술하는 것에 해당하는 듯이 보인다. 이런 특징은 다른 연구자에게서도 반복된다. 역사교육학자 송상헌(宋相憲)<sup>5)</sup>은 지금 우리 역사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한국의 입장에서 구성된 가장 설득력 있는 “뛰어난 동아시아사 담론 구성”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세계사 교육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담론이 필요하고 그것도 한국의 위치가 제대로 자리매김된 동아시아사 담론이 필요한 것은 결국 세계사 속에 한국의 위상을 좀 더 정확히 전달할 필요성 때문이다”(64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그도 잘 알고 있듯이 한중일 삼국이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설득력 있는 체계적 동아시아사를 서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능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속에 한국사가 적절하게 위치를 잡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의 역사적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65면).

이런 발언의 저변에는 역사서술상의 아주 중요한 논점이 깔려 있다. 그가 의식했든 안했든 중국과 일본의 역사 속에 한국사를 적절하게 위치 짓겠다는 것은 곧 동아시아사를 (중심국인) 중일 양국의 입장을 축으로 서술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동아시아사 속에서 주변적 존재인 한국의 정체성 문제를 어찌 해석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로부터 동아시아 지역사로 시각을 확대하는 서술방식을 택한다면, 타이완에서 이미 논란의 대상이 된 ‘동심원사관(同心圓史觀)’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중국사연구자로서 한때(2007년) 민진당(民進黨) 정부의 교육부 장관직을 맡은 바 있는 두 쩡성(杜正勝)은 중국과 구별되는 타이완의 새로운 정체성(identity)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이완을 중

5) 宋相憲, 「세계사 교과서 서술에서 동아시아사 담론의 문제」 『역사교육』 84호, 2002.

심으로 해서 중국, 아시아, 및 세계로 점차 확산되는 역사서술을 역사교과서의 설명틀(즉 ‘同心圓史觀’)로 택하였다.<sup>6)</sup> 이것은 중국대륙을 위주로 한 ‘단중심(單中心)’의 역사관을 해체하여 ‘쌍중심(雙中心)’을 이루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거리두기(去中國)인 타이완 위주의 ‘단중심’ 즉 대만민족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바로 이와 같이 자국사로 시작해 지역사를 향해 확대·개방하는 서술하는 방식이 자국에서도 합의되기 쉽지 않다면 그것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 범위에서 인정되기는 더더욱 어려울 터이다. 따라서 ‘소통적 보편성’은 그로부터 먼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기충실(또는 자기 성찰)의 동아시아사’로 관심을 옮겨보자. 이 관점을 견지함으로써 자기중심적인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자기를 상대화하는 역사서술의 길이 열릴지도 혹 모르기 때문이다.

### 3. ‘자아충실(또는 자아성찰)의 동아시아사’ 비판

한국사의 확대로서의 동아시아사론의 대척점에 ‘국사의 틀을 넘어서는 동아시아사’론이 위치한 다. 이 입장을 선명하게 제기한 것이 서양사학자인 김기봉(金基鳳)<sup>7)</sup>인데 그의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사라는 역사서술체계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한국근대역사학에서 국사는 우리가 민족이라는 가상실재(virtual reality)에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으로 주입하는 매트릭스의 역할을 해왔다”(181면)고 단언한다. 따라서 21세기에 적합한 한국사 서술과 역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국사 해체에서 시작한다. 그 과정은 서로 연결된 두 단계를 거친다: 첫째, 국사라는 명칭을 폐기하고 한국사라는 이름으로 교과서를 다시 서술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를 우리 민족이 걸어온 발자취이자 기록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인으로서 자기 정체성(identity)의 재발견을 목표로 해서 서술할 수 있다. (이들테면 민족교육에서 시민교육으로.) 둘째, 한국사 교육과 세계사 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세계 속의 한국사’와 ‘한국 속의 세계사’의 문제의식을 동시에 구현한다(119~120면).

이렇게 국사의 종언을 선언하면서 궁극적인 대안으로 그가 제시하는 것이 한국사와 세계사의 통합임을 알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동아시아사는 그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국사와 세계사라는 이분법으로 자국사와 타국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와 세계사의 상호관련성을

6) 1990년대 중반 이후 논의된 ‘同心圓史觀’의 골자는 杜正勝, 「一個新史觀的誕生」 『新史學之路』, 臺北, 三民書局, 2004, 66~78면 참조.

7) 金基鳳, 『동아시아공동체 만들기』, 서울, 푸른 역사, 2006.

구현하는 역사교과서 서술과 역사교육이 필요하지만, 막상 ‘세계 속의 한국사’가 과연 어떻게 서술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될 때 전략적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이 그 ‘중간단계’로서의 동아시아사이다. 그래서 그는 “기억의 장(場)으로서의 동아시아를 범주로 한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부터 논의해봐야 한다”(강조 인용자: 197면)고 주장한다.

이처럼 그는 탈국사를 위한 대안적 기억의 장으로서 동아시아사의 성립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동아시아사의 맥락 속에서 한국사의 개체성과 고유한 발전방식을 해명할 수 있는 길을 모색”(201면)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내가 말하는 ‘자기충실’로서의 동아시아사와 통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왜 꼭 ‘중간단계’로 동아시아 차원의 역사서술이 필요한가. 그는 한국의 역사학자로서는 드물게 한국에서 제기된 동아시아 담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신의 동아시아론을 전개하는 편이다. 그의 담론은 동아시아라는 지역 개념 규정에서 잘 드러난다. 즉 동아시아는 “역사적 경험공간과 미래의 ‘기대지평’이 융합된 개념”(54면)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미래의 기대지평에 대해 살펴보면, 그것은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신지역주의적 도전”(143면)이자, 탈미국화와 탈민족주의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공간이란 “움직이지 않는 구조”(144면)인 “한국사의 장기 지속적 구조”(198면) 또는 “한국사를 관통하는 장기지속의 구조”(141면)를 가리킨다.

이러한 그의 입론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우리가 동아시아적 시각을 견지해야 할 역사적 근거(곧 경험공간)와 현실적 근거(기대지평)를 그가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데 만족하고, 역사서술 문제에 한정해 좀 더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 국사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 동아시아적 관점을 “앞으로 한국 역사학이 붙잡고 씨름해야 할 화두”(141면)로 간주하는 그는 동아시아사를 서술하는 두 단계 전략을 제시한다. 즉 먼저 한중일의 관계사적인 접점을 찾아서 이를 기점으로 상호 역사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모색하고, 그 기반 위에서 동아시아라는 공통의 역사 지평을 확인함으로써 ‘문맥의 공유’에 이르는 것이다(141~142면). 그가 말하는 첫 단계는 비교적 익숙한 것이므로 단순한 비교와 병렬적 서술에 그칠 한계에서 벗어나야 좀더 의미 있는 서술이 될 것이란 점만을 지적해두겠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인 ‘문맥의 공유’는 동아시아인의 경험의 구조적 연관성 확인하는 작업이므로 좀 더 음미할 가치가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역사인식의 공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국가의 기억을 넘어설 수 있는 문맥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 이런 문맥의 공유를 성취할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 바로 동아시아사라는 점을 인식하고, 3국의 역사가들은 서로 다른 기억을 통합할 수 있는 구조적 연관성을 찾아내고 그것이 미

약하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새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91면)

바로 이 ‘문맥의 공유’ 즉 동아시아사의 구조적 연관성에 대한 강조는 (그의 국사 해체론과 상승 작용해) 그가 자국사와 지역사의 통합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국사를 지역사 속에서 해소시키는 것으로 비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가사를 해체하여 지역사나 세계사에 묻어버린다면 구체적인 인간 생활의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 스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에 부닥치기도 한다.<sup>8)</sup>

이렇게 된 것은 그가 문맥의 공유를 성취할 수 있는 공간을 곧바로 동아시아로 환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여기서 그의 ‘문맥의 공유(共同)’란 발상의 출처인 미조구찌 유후조(溝口雄三)의 본뜻에 돌아가 보자. 미조구찌가 말하는 문맥의 공유란 인식의 공유를 위한 전제이고, “어떤 국가나 민족의 문맥에 발을 딛고 있는 어떤 문화주체와 다른 어떤 국가나 민족의 문맥에 발을 딛고 있는 다른 어떤 문화주체와의 사이에서 마찰과 충돌을 뚫고나가면서 또는 마찰과 충돌을 지양하여 새로운 공간이 공유되고 양자에게 공동의 대화공간이 성립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공동의 대화공간’을 김기봉이 동아시아로 상정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단지 미조구찌가 ‘문맥의 공유’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 “역사인식문제의 문맥 자체의 탈구축”<sup>9)</sup>에 대해 그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좀더 살펴보자.

미조구찌의 뜻을 달리 표현하면, 문맥의 공유는 상대방의 발언을 그 근거하는 기반까지 포함하여 모두 이해하려고 애쓰는 노력과, 그러한 노력에 의해 인식된 상대방의 문맥에 의해 이번에는 자신이 근거하는 문맥을 무단히 상대화해 가는 작업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토리무라 히메루(島村輝)는 “각각의 문맥에는 타자와 다른 개별성이 있음과 동시에 상호이해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보편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지적한다.<sup>10)</sup> 이것은 날카로운 통찰이 아닐 수 없다.

이 통찰에 기대어 김기봉의 문맥의 공유에 대한 이해를 다시 본다면, 그는 각 국가적 문맥의 개별성을 소홀히 다룬 나머지 그 안에 내재한 보편성도 덜 중시하게 된 것 같다. 달리 말하면, 그가 국민국가에 대한 비판과 불신 때문에 편의적으로 동아시아에 의존한 게 아닐까하는 의문마저 갖게 된다. 나는 “탈민족주의야말로 오히려 세계사적 탈근대에 기여할 지역적·민족적 과제를

8) 柳鏞泰, 「다원적 세계사와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김한중등 공저,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서울, 책과함께, 2005, 339면.

9) 溝口雄三, 『中國の衝擊』,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4, 65, 80면.

10) 島村輝, 「‘居心地の悪さに直面する’ということ:‘日中・知の共同體’プロジェクトの経験から」, 『韓日, 連帶21』 발족기념심포지엄 ‘한일, 새로운 미래 구상을 위하여’(서울: 2004.11.19) 발제문. 이 글은 나중에 小森陽一/崔元植/朴裕河/金哲編著, 『東アジア歴史認識論争のメタヒストリー』, 東京:青弓社, 2008에 수록됨(인용문은 40면).

외면하다가 진정한 탈근대에 무기력할 우려는 없는가<sup>11)</sup>하고 묻는 입장을 지지하고, 근대세계에서 국민국가가 위치한 복합적·중층적 관계를 중시하는 편이다. 그래서 개별성을 끌어안고 보편성에 도달할 탄력적인 방안이 없을까 고심하다가 자국사와 지역사가 소통되는 ‘자기 확충과 충실의 동아시아사’에 착목한 것이다.

#### 4. ‘自我擴充과 充實의 동아시아사’

지금까지 ‘자아확충의 동아시아사’와 ‘자아충실의 동아시아사’를 각각 비판적으로 검토한 끝에 그 대안으로서 ‘자아확충과 충실의 동아시아사’에 대해 언급했으니, 이제는 그 내용을 설명할 차례이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동아시아 교과서’가 이번에 한국 사회에서 평지돌출 식으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그 배경을 간략히 정리해두려고 한다.

해방 직후 미군정기(1945-48)에 만들어진 교수요목(教授要目, 1948년)에 따르면, 세계사 교과서(1948)는 ‘먼 나라의 생활’(중1), ‘이웃나라의 생활’(중2), ‘인류문화사’(중4-6)라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이웃나라의 생활(역사)』이 바로 동아시아사교과서이다. 그 교과서는 ‘이웃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웃 나라 역사를 배우는 본뜻은 우리의 이웃 나라인 중국을 비롯하여,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가까운 관계를 가진 여러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문화발전의 자취를 상호관계에서 알아보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양의 민족과 문화가 어떠한 유래를 가졌으며, 어떠한 모양으로 자라나고 움직여 왔는가를 해득(解得)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이웃 나라의 민족과 문화는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가졌으며, 이들에 대한 우리 민족의 사명과 문화의 지위가 어떠한 것인가 등을 밝혀보려는 것이다.”

이 문장을 통해 ‘이웃나라’는 중국을 비롯해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여러 나라와 민족’을 가리키며, 그들의 민족과 문화의 역사를 우리와의 관계사에 중점을 뒀 서술함으로써 우리의 사명과 지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국사와의 관계를 중시했기에 그 「머리말」에서 “국사와 관련된 사실은 될수록 상호관계에서 자세히 적어 국사와 이웃 나라 역사의 연관성을 밝히려고 힘썼음”이라고 명확히 밝혀져 있다.<sup>12)</sup>

11) 柳在建, 「탈민족주의, 탈근대의 관점에서 본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 2007년 봄호, 296면.

12) 金庠基·金日出·金聖七 지음, 『이웃나라의 생활(역사)』, 서울, 同志社, 1949. 겉표지에 ‘문교부 검정필 중

『이웃나라의 생활(역사)』이 잠시 교과서로 통용된 이후 또다시 동아시아사가 제작되어 유통된 적은 없고, 국사와 세계사 교과서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1950년대 후반 중국사학자인 이동운(李東潤)이 유럽중심의 세계사 교과서를 재구성하자고 요구하면서 ‘아세아적 세계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 즉 “중국, 중앙아세아, 동남아세아의 역사를 한국역사와의 긴밀한 연관하에서 재 고찰함으로써 귀납적이 아니라 연역적인 방법으로 아세아 중심의 세계사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도록 하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안은 유럽중심주의를 벗어나자는 데서 주목되나, 역사교과서 삼분과의 하나인 동양사로 회귀할 위험을 안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가 “만약 이러한 교과서 편찬에 난관이 있다면 차라리 무의미한 동서양사의 시대 구분적 배합인 세계사를 동양사편, 서양사편으로 구분하여 편찬하는 것이 지도교사의 입장에서나 피교육자의 입장에서나 그 교육적 효과가 우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sup>13)</sup>이라고 한 데서 잘 드러난다.

그 후로 동아시아 역사교과서를 독립적으로 편찬하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된 적은 없었지만, 한국사를 비롯한 동아시아사의 내재적 발전을 중시한 역사학계의 조류에 힘입어 세계사 교과서에서 아시아사가 확대되고 아시아 여러 문화권에 대한 균형 있는 서술이 추구되어 왔다. 그러다가 최근 중국사학자인 유용태(柳鏞泰)가 “일국사에서 세계사에 이르는 중간 단위의 지역사”인 동아시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독자적 문명을 가진 지역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국가사나 국가사 위주의 세계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포착해낼 수 있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와 그 밖의 다른 지역과의 상호관계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 세계사가 유럽중심주의로 흐르지 않고 국가사도 감정적인 자국중심주의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sup>14)</sup>

나는 지역사를 제안하면서도 국가사의 일정한 역할을 인정하는 그의 구상을 자국사와 지역사의 소통의 길, 즉 ‘자기 확충과 충실의 동아시아사’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한다.

그런데 이 정도의 논의가 이뤄진 단계에서 정부가 동아시아사라는 선택과목 개설 방침을 들고 나왔다. 그 소식을 접하고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화해’를 평소 주장하던 나로서는 솔직히 말해 한편으로 반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웠다. 그리고는 그 방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궁구(窮究)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부가 이 과목 개설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동아시아사 교육과

---

등사회생활과’라고 인쇄되어 있다. 당시 초급중학교는 미국 제도의 영향으로 지리·역사·공민이 통합된 사회생활과(Social Studies)가 학생들에게 사회생활을 이해시키는 교과로 개설되었다.

13) 李東潤, 「세계사교육의 당면과제」 『역사교육』, 2호, 1957.

14) 柳鏞泰, 위의 글, 339면.

정 시안(試案) 개발' 공동연구팀(이하 '개발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조성되고 있는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기반 마련을 위한 역사인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라고 하니, 원칙적으로 나는 그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 주도 아래 동아시아 역사교과서를 편찬하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나는 평가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단순히 동아시아사가 하나의 역사로서 정체성을 아직 갖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동아시아를 하나의 역사로 묶어낼 수 있는 역사적·현실적 필연성은 어느 정도 검토된 상태라고 보는 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역사교과서라는 서술 양식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근대교과서는 일반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국민(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된다. 그래서 역사교과서의 경우 그 서술 양식이 국가별 통사(通史)·통설·종합사일 것이 요청된다. '개발팀'이 작성한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도 물론 이 양식이 적용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시대사 중심의 통사체제로 가다보면 주제별 내용이 분산되어 정리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 시안에 기초한 교과서가 “미래의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해 개설한다는 목표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인기도 없는 수험용 지식을 강제하는 또 하나의 교과목에 그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역사교과서식 서술양식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해서 새로운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편찬되어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지는 것의 의미 자체마저 필자가 부정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사교과서를 허용하는 현행 교육제도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sup>15)</sup>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검인정 (역사)교과서정책 아래에서는 서술양식상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힘들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교과서정책이 검인정에서 자유발행제도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검인정에서 자유발행제로 넘어가는 과도적 조치로 낮은 단계의 검인정제를 시행하도록 관계 당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 밖에서 대안적 역사교과서(사실은 부교재)를 자유롭게 서술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두 방면의 활동은 상호 연동되기 마련이다.

그 다음으로 이 서술 형식상의 문제와 표리관계에 있는 서술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교과서의 역사서술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내용에 치우치기 쉽다. '개발팀'의 시안에서 동아시아사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하나의 역사단위로 하여 가르치는 과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동아시아를 하나의 역사단위로 한다지만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삼고 있기에 그런 우려를 떨쳐 버리기 힘들다. 나는 자국사와 지역사의 소통이 이뤄진 동아시아사

15)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줄고 「제도의 안과 밖을 넘어서: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와 교육의 재구성」 『동아시아의 지역과 인간』, 서울, 지식산업사, 2005.

는 ‘이중적 주변의 시각’에서 서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국가중심의 역사서술을 극복하고 삼국의 역사에 대한 단순 비교를 넘어 상호연관의 지역사를 서술함으로써 동아시아사 속의 한국의 위치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전에 쓴 글의 한 대목을 인용해보겠다.

“동아시아 안과 밖의 ‘이중적 주변의 눈’, 즉 서구중심의 세계사 전개에서 비주체화의 길을 강요당한 동아시아라는 주변의 눈과 동아시아 내부의 위계질서에서 억눌린 주변의 눈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런 ‘눈’으로 동아시아의 역사를 다시 볼 때, 연대와 갈등의 동아시아 역사의 전모가 또렷이 드러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질서의 역사에서 중국(제국)-일본(제국)-미국(제국과 그 하위파트너 일본)으로 중심이 변화함에 따라 그 각각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기억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중첩되기도 하는지가 복합적으로 서술될 것이다.”<sup>16)</sup>

이 시각을 견지할 때 역사교육에서 ‘유럽중심성’과 (최근 주의를 끌고 있는) ‘중국중심성’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외부에 위치하면서도 동아시아에 내재해 있는 ‘우리 안의 미국’이란 존재도 제대로 서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다시 보고자 할 때 흔히 부딪치는 질문인 한국의 정체성 문제, 즉 동아시아에서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중심-주변의 위계질서의 변천사인 동아시아사에서 한국과 같은 주변적 존재의 시각을 통해 위계질서의 연속인 역사세계가 동아시아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는 ‘동아시아 내부의 위계질서에서 억눌린 주변’이란 것이 국가만을 의미하지 않고, 국가의 역할에서 살릴 것은 살리면서도 국가 본위의 좁은 사유방식을 해체하는 이율배반적 과제 수행의 지적 긴장을 유지하는 다양한 주체들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그들의 존재양식을 탐색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역사서술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통해 국가중심의 역사서술을 극복할 길이 열린다.<sup>17)</sup>

마지막으로, 이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다른 나라 사람들, 적어도 동아시아인들에게도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기서 일찍이 동양사학과 한국사의 연계의 중요성에 주의를 환기시킨 고병익(高柄翊)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되새겨보고 싶다.

“외국인 특히 역사와 문화에서 친근성이 많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 독자에게, 내용상의 평가와 결론은 다르다 할지라도, 적어도 서술의 정확성과 논리의 합리성으로서 수긍되어야 하는 것이

16) 『미래를 여는 역사』에 대한 필자의 서평, 『창작과비평』, 2005년 가을호.

17) ‘이중적 주변의 시각’의 유용성에 대한 공감을 표시한 글로는 신주백, 「동아시아 역사 만들기」, 『창작과비평』, 2006년 여름호, 367면.

다. 연구 단계에서도 그렇고 특히 서술과 평가에 있어서, 동아시아 전체에 걸친 시각을 염두에 둘 때에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할 것이다.”<sup>18)</sup>

이 대목은 바로 동아시아에서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을 내 식으로 바꿔 말하면 역사서술이 ‘소통적 보편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보편성이 (진리라기보다) 널리 인정되고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면, 합의를 얻기 위한 다수의 인정과 승인이 필수적일 것이고 인식 주체간의 소통이 그 전제일 것이 틀림없다<sup>19)</sup>.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소통적이지 않은 (따라서 억압적이고 패권적인) 보편성(uncommunicative universality), 아니면 소통적인 개별성(communicative individuality)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더 자주 대하게 된다. 어떻게 이들을 극복하고 역사서술에서의 소통적 보편성(communicative universality)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필자는 위에서 토리무라 히데루를 인용하면서 각각의 문맥에 있는 개별성과 상호이해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보편성을 강조하고 이 점이 ‘소통적 보편성’의 근거됨을 밝힌 바 있다. 요컨대 필자는 소통을 가능케 하는 보편적 요소가 개체 안에 있고 그래서 개체간의 소통 과정에서 생기는 공감과 상상력의 탄력에 힘입어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발상이 한국 지식인사회에서도 일정한 공명을 이루고 있음을 이 글을 쓰면서 발견해 반가웠다. 즉 조희연은 “우리의 특수한 쟁점들과 다른 많은 국민국가들의 특수한 사례들을 관통하는 보편적 측면을 통찰하는 노력” 속에서 “우리의 특수한 이슈와 투쟁 속에 내재한 아시아가 공감하는, 세계가 공감하는 보편적 메시지가 전유(專有)될 것이다.”고 기대하고 있다.<sup>20)</sup> 보편성을 향한 소통 과정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 5. 끝을 맺으며: 소통적 보편성의 확산

나는 이 강의에서 ‘소통적 보편성’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1990년대 초 우리 논단에서 출현해 서서히 확산되면서 분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 (한국발) 동아시아론이<sup>21)</sup> 비판적 지역주의로서

18) 高柄翔, 『東아시아文化史論考』,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7, 374면.

19) 姜正仁은 보편성이란 시공간을 초월해서 유효한 진리·가치·문화라기보다는 ‘널리 통용되는 또한 적용 가능한’ 진리·가치·문화라고 이해한다. 그런 뜻에서 그가 말하는 ‘보편성(wide applicability)’은 그람씨(Gramsci)가 말하는 헤게모니라는 의미와도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 토론 못지않게 물리적 힘과 헤게모니 역할이 중시된다. 姜正仁 「논평: 우리 안의 보편성」 『경제와 사회』, 2006년 겨울호.

20) 曹喜暎, 「우리 안의 보편성: 지적·학문적 주체화로의 길」 『우리 안의 보편성』 서울, 한울, 2006, 51면. 이것을 강정인은 ‘準普遍性’(강정인, 위의 글 297~298면)이라고 해석하지만, 오히려 나는 보편성을 향한 부단한 소통과정을 浮刻하고 싶다.

적어도 동아시아 차원에서 공유되는 사상적·실천적 자원답게 제 구실을 하려면 부단한 이론적 갱신을 감당해야 한다는 과제와 깊이 연관된다. 그 출현기부터 동아시아담론의 주창자의 한 사람이었던 나로서는 그 과제를 수행하는 길에서 국내외 지식인들과 토론하면서 ‘새로운 보편’과 씨름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보편’을 구상하도록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로부터의 요구는 두 개 흐름으로 정리된다.

먼저 거론할 것은, 서양근대가 체현해온 보편주의의 극복이라는 (이미 되풀이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오래된 과제를 새롭게 수행하려는 중국의 의욕적인 시도이다. 요즈음 중국 논단에서는 구미중심의 보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또 하나의 보편을 모색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베이징 컨센서스(北京共識, Beijing Consensus)을 넘어서 중국모델에 대한 논의의 목표가 바로 보편가치가 아닌가. 이 ‘중국발 보편’을 중국 밖의 지식인이 어떤 입장에서 봐야 하는가는 중국과 이웃한 동아시아 지식인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규모의 과제이기도 한다.

이것과 더불어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상호 혐오감정의 비등, 그리고 그와 연동된 각 국가 내부에서 심각해지는 갈등도 새로운 보편의 탐구를 요구한다. 그저 누적되는 상호교류와 협력에 힘입은 상호이해의 증진에 의존해서는 해결되기 어렵고, 한층 더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와 그를 설명할 인식의 틀이 필요한 때이다.

이렇듯 국경 안에서 또 국경을 가로질러 발생하고 있는 분열을 넘어서게 하는 보편적인 윤리(와 정치적 지혜)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그 실마리를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새로운 보편’으로 가는 도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단서도 있다. 이매뉴엘 월러스틴은 ‘유럽적 보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보편적(즉 지구적) 보편주의’를 제시한다. 그 근거는 “보편적 보편주의의 네트워크와 유사한 다수의 보편주의들”의 존재이다. 그는 ‘보편적 보편주의’가 “더 이상 주는 것이 서구가 아니고 받는 것이 나머지 세계가 아닌 세계에 도달하는 것”, 즉 우리 모두가 주고 모두가 받는 ‘만남의 장소’라고 주장한다.<sup>22)</sup>

이것은 내가 위에서 제기한 바 있는 ‘소통적 보편성’과 통한다. 보편성이 (진리라기보다) 널리 인정되고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면, 합의를 얻기 위한 다수의 인정과 승인이 필수적일 것이고 인식 주체간의 소통이 그 전제일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소통적이지 않은 (따라서

21) 한국 동아시아담론의 역사적 궤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윤여일, 「동아시아담론의 형성과 이해: 학술지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7권 4호, 2014 참조.

22) Immanuel Wallerstein, *European Universalism: The Rhetoric of Power*, New York: The New Press, 2006. p. 80, 84. 그 한국어판 이매뉴얼 월러스틴 (김재오 옮김), 『유럽적 보편주의: 권력의 레토릭』 창비, 2008, 139, 145-46면.

역압적이고 패권적인) 보편성(uncommunicative universality), 아니면 소통 가능성은 있으나 개체로 흩어진 소통적인 개별성(communicative individuality)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더 자주 대하게 된다. 어떻게 이들을 극복하고 소통적 보편성(communicative universality)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나는 소통을 가능케 하는 보편적 요소가 개체 안에 있고 그래서 개체간의 소통 과정에서 생기는 공감과 상상력의 탄력에 힘입어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런데 이 발상이 동아시아 지식인사회에서도 일정한 공명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해 반갑다. 동아시아가 서양에 대신하는 별개의 보편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고유한 문제를 생각하고 로컬한 이야기를 쓰되 그로부터 광범위한 과제에 도달하려는 작업, 즉 근대의 존재방식을 되묻고 근대비판에 연결되는 논리를 추출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반향을 얻고 있는 것이다.<sup>23)</sup>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다양한 각도에서 대안적 보편성 내지 보편주의를 탐구하는 논의가 동아시아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다.<sup>24)</sup> 이처럼 새로운 보편을 향한 소통 과정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줄저 『사회인문학의 길: 제도로서의 학문, 운동으로서의 학문』(창비: 2014)에 실린 「자국사와 지역사의 화해」를 “2016년도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 교원연수”(2016.7.18)에서의 강연을 위해 수정한 것이다.]

---

23) 丸川哲史/鈴木將久 對談, 「東アジアの思想的連帶を求めて」, 『週刊讀書人』, 2014년 2월 7일자. 대만의 鄭鴻生의 저서 일역본(鄭鴻生(丸川哲史譯)『台灣68年世代、戒嚴令下の青春』作品社, 2014)에 담긴 대만대학 속의 로컬한 이야기, 그리고 중국대륙의 賀照田의 일역 평론집(賀照田(鈴木將久編譯)『中國が世界に深く入りはじめたとき』, 青土社, 2014)에 실린 중국대륙의 일견 미세하게 보이는 로컬한 현상으로부터 보편적 의미를 위의 두 일본인 연구자가 읽어내고 있다.

24) 필자가 직접 확인한 것만 해도 중국의 陳嘉映, 『普遍性種種』(修訂版, 華夏出版社, 2013)이 있다. 그는 보편성 논의가 다분히 상승이라는 고도의 추상작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추상적 차원에서 부단히 상승하여 도달하는 보편성은 현실문제를 은폐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그는 상승이 아닌 수평을 통해 도달하는 보편성(즉 平移到普遍性)을 말한다. 그것이 그가 말하는 ‘일종의 통(通)의 활동’에 의해 얻는 보편성이다.(특히 162면) 그밖에 CPAG랩업업·シンポジウム 「“新しい普遍性”をめぐる東アジア三方対話」(東京:2014.11.14)에서 일본측 참여자들은 대체로 중국의 보편주의 논의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지상의 인간의 고통을 중시하는 보편성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하향하는 보편성’ ‘다가오는 보편성’, ‘과정으로서의 보편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 공감과 비평의 역사학: 동아시아의 역사화해를 위한 제언

백영서 (연세대)

## 1. 동아시아 역사분쟁과 공공성의 역사학

2차대전 종결 71주년을 맞은 2016년 우리들 동아시아인은 평화의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그간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을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노라면 이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하기 힘들다. 그 이유의 하나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목도하는 상호혐오 감정의 악순환이 아닐까 싶다. 한일간에 서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올해 가장 높아져 최악의 상황에 달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이다.<sup>25)</sup> 이른바 영토분쟁과 역사문제로 인한 국가·국민간 갈등의 정서적 표출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더욱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가 한반도에 설치되기로 공표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의 방아쇠가 당겨졌다고 비유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상호교류의 신뢰양성과 상호협력을 증가해가다보면 어느 시점에서 해소될 것이라든가, 국가안보나 경제 문제를 중시한 관련 정부끼리 국익을 전제로 그 이익을 조정하는 외교적 타협이 이뤄지는 어느 시점에 적당히 해소될 성질의 것이라고 비교적 낙관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간의 협상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시민참여가 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역사화해를 위한 시민참여에 도움을 줄 역사학을 필자는 일찍이 ‘공공성의 역사학’이라고 이름 붙여 제안해본 바 있다. 그것은 ‘공중역사학’(Public History)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구별된다. 왜냐하면 영미권에서 수행되고 있는 ‘공중역사학’은 역사학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대중과의

25)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의 조사결과. 한일수교 50년, 공동여론조사 20년(박석원 특과원) 한국일보, 2015.6.15; 日韓世論調査 外交の幅狭める「反・嫌」の定着, 요미우리, 2015年06月09日

만남, 달리 말하면 역사 지식의 생산보다는 유통이랄까 보급에 더 치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로 학술논문보다는 박물관의 역사교육이나 대중매체의 역사 프로, 구술사(oral history) 등을 통해서 역사 지식의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하는 실천작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필자는 역사학의 사회적 유용성을 중시하기는 하되 공공성 (publicness, 혹은 ‘공공적인 것’ the public)이 과연 어떤 것인지 논의되는 기준에 대해 따져보는 일을 한층 더 강조한다. 대중과의 소통이나 사회적인 실천을 넘어서 공공성이 이해되는 방식, 구성원에게 영향 미치는 공동 관심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논의할 때의 그 ‘정당성의 기준으로서 공공성’을 문제삼는 것이다. 아울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역사 지식의 생산 과정도 중시한다.<sup>26)</sup>

이같은 필자의 제안이 혹 막연하다고 생각될지 모르니 이하에서 사례를 들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다. 즉 동아시아 국가간에 반복되는 역사갈등이란 사회의제를 역사학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를 탐구해본 경험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 2. 공감을 통한 역사화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즉 한일병합 100주년을 맞은 2010년 한일 양국에서 화해의 의미를 다시 묻는 각종 행사들이 열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동향에 직면해 역사연구자인 필자는 어떻게 개입해야 옳은가 고민했다.

위에서 이미 말했듯이 필자는 ‘공공성’을 매개로 재정립되는 역사학을 ‘공공성의 역사학’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것은 과거 사실과의 만남을 통해 타자와의 소통이 성립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사학계의 학술성과(논문이든 저술이든)에 대한 비평은 물론이고, 특히 역사학 밖에서 유행하는 이야기로서의 역사—역사드라마, 역사소설, 역사 소재의 영화, 각종 역사 관련 인문교양서 등—에 대해 비평을 가함으로써 공론의 장에 개입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그해 가장 뜨거운 역사(학)적 현안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고심하던 끝에 ‘공감과 비평의 역사학’을 키워드로 삼아 역사화해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로 했다.

1990년대부터 탈냉전의 시대에 들어간 동아시아에서는 그때까지 주민들의 삶을 지배하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라는 이분법적 지역질서가 동요되었다. 그에 따라 각 국가가 국경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하면서 상호의존이 깊어져갔다. 그러나 교류와 접촉이 잦아지면서 갈등도 생겼

26) 이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은 줄저, 『사회인문학의 길』(창비: 2014)에 실린 「사회인문학의 지평을 열며: 그 출발점인 ‘공공성의 역사학’」 참조.

고, 그와 더불어 한동안 냉전질서 아래 억압되었던 국가간 갈등의 집단기억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는 일이 긴요해졌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아세안과 동북아 3국(이른바 ASEAN+3)의 정부가 동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을 주요한 미래 과제로 논의하고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하면서 그 일환으로 동아시아인으로서의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역사화해는 그 과정에서 정체성 형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떠올랐다. 그에 따라 역사화해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다.

관련 국가 정부들의 지원 아래 또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의지로 공동의 역사연구와 상호대화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그 초점은 자국중심주의의 역사관을 극복하고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역사인식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편향된 역사지식을 바로잡는다든가 상호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발굴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뤄졌다. 급기야 그런 연구의 결과를 일반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공동 역사교과서’가 제작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중일 3국의 연구자와 교사들의 협력에 의해 집필된 『미래를 여는 역사』이다.<sup>27)</sup>

그런데 ‘역사인식의 공유’란 것이 동아시아 지역의 주민들이 단일한 공동의 역사인식을 갖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양한 차이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점을 존중하면서 이제까지의 축적된 노력의 성과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공감의 역사학’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역사화해를 위한 공동연구의 성과를 묶어낸 책의 편자 서론의 말미를 인용해보겠다.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존중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이 진정한 화해를 실현하는 제일보가 아닐까.”<sup>28)</sup>(강조 인용자)

이 구절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지적 아닌가. 사실, 학술논문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역사교과서조차 그것이 설명적 텍스트 형식을 갖는 한은 독자들에게 많은 지식정보를 제공해줄지 몰라도 그들의 적극적인 이해의 공유를 이끌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제 역사책을 읽는 독자를 역사지식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이 역사와 자기를 동일시하도록, 달리 말해 역사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7) 한중일삼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사, 2005.

28) 劉傑 三谷博 楊大慶 編, 『國境を越える歴史認識: 日中對話の試み』, 東京大學出版會, 2006, 서문.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역사학은 ‘과학으로서의 역사학’ 즉 과거 사실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설명(또는 분석)으로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와 더불어 ‘동일시(identification)로서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 갖자고 강조하고 싶다. ‘동일시로서의 역사’는 상상력이나 공감에 의한 과거와의 만남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empathy)이란 무엇인가. 최근 일부 포유동물에서도 공감적 반응을 찾아내는 연구가 나오듯이 공감에 대한 논의의 폭은 넓어졌는데<sup>29)</sup>, 특히 인간 진화의 본성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작업이 주목된다. 즉 철두철미 이기적이고 실리적이며 쾌락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감을 넓히려는 성향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하며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라는 신조어까지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sup>30)</sup> 필자는 그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능력도 없으려니와 이 글의 주제인 역사화해를 다루는 데 필요한 만큼만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공감이란 인간이 남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그것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 표현이란 보편적이므로 다른 사람을 자기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고 동일시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감을 통해 인간됨이란 무엇이고, 타인의 기쁨이나 슬픔,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감과 동정의 구별이다. 공감이 동정(sympathy)과 정서적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수동적인 입장의 동정과 달리 공감은 적극적인 참여 즉 관찰자가 가까이 다른 사람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1)</sup>

이렇듯 공감 능력이 모든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보편적 것이라면, 역사학이 어떻게 글을 읽고 쓰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감성능력(emotional literacy)을 키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이나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방법을 배우고 그로부터 갈등을 해결하는 힘을 끌어낼 수 있을까.

나는 ‘공감의 역사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것은 과거에 산 사람들과의 공감적 관계를 맺는 ‘동일시(identification)로서의 역사’를 중시하고, 특히 역사상의 인물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도덕적 기준에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뒤에 숨은 감정과 동기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의 역사학이 우리를 역사 화해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29) 프랑스·도둑·전쟁 『共感の時代』, 紀伊國屋書店, 2010. 원제는 Frans de Waal, *The Age of Empathy: Nature's Lessons for a Kinder Society*, 2009.

30) 제러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55면. 원제는 Jeremy Rifkin, *The Empathic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2009.

31) 제러미 리프킨, 위의 책, 20면. 일본어에서 2차대전 종전 이후 공감이란 어휘가 정착됨에 비해 동정의 의미는 점차 좁아져 고통이나 슬픔에 대한 공감에 한정되었다. 한국어의 용례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 3. 공감의 역사 사례 검토: 가또오 요오코의 저서를 중심으로

그렇다면 '공감의 역사학'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일까. 그 가능성을 짚어보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서, 필자는 일본의 가또오 요오코(加藤陽子)가 쓴 『그래도 일본인은 전쟁을 선택했다』<sup>32)</sup>와 그것을 읽은 한국 대학원생들의 독후감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현재 한국인에게 역사분쟁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는 1980년대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심각하게 갈등을 빚어온 식민지 시기(1910-1945년)의 평가 문제가 떠오른다. 그 다음으로는 2002년부터 중국과 한국 사이에 벌어진 고구려사 귀속 논쟁이 있다. 여기에서는 전자에 한정해 살펴볼 것이다.

필자는 한국이 일본 식민지가 된 지 100주년이 되는 2011년 봄 학기에 수업을 신청한 대학원생들과 한일 양국의 역사학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학생들과 함께 비교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 주제와 관련된 독서목록에 바로 가또오 요오코의 책이 들어 있다.<sup>33)</sup>

이 책을 특별히 중시한 이유는, 일본 서점에서 역사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잘 팔린다는(2013년 7월 현재 15쇄 18만 부) 것이므로 '공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좀 더 상세히 말하면, 그것이 일본 독자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것은 '공감의 역사학'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인 독자들이 공감하는 것을 한국인 독자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지를 따져봄으로써 역사화해에 '공감'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거의 10년마다 치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이 책은 일본 국제정치사를 전공하는 저자가 중고등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5일간 진행한 강연 노트가 토대로 되었다. 그래서 대화체의 역사서술을 채택하여, 학생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은 왜 전쟁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보도록, 또한 당시의 상황과 조건을 세심히 고려해 자기라면 어떤 정책적 판단을 내렸을지 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발생한 전쟁이 일본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또 다른 특징은, 전쟁의 책임을 묻고 싶은 오늘의 독자의 관점과 전쟁을 선택하게 된 당시인의 관점에서 동시에 그 문제를 보도록 저자가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련의 전쟁을 선택하는

32) 加藤陽子, 『日本人は“戦争”を選んだ』, 朝日出版社, 2009.

33) 한 주 세 시간씩 14주에 걸친 한 학기 강의에 참여한 학생은 박사과정생 1명과 석사과정생 5명이었다. 한 학기 실러버스 가운데 한 주가 가또오 요오코의 저서를 읽고 제출한 각자의 보고서를 토대로 토론하는 것이었다.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창의적 의견이 이 발표문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데 간여한 다양한 인물들---주로 천황을 비롯한 정치가·관료·군부 엘리트들이 서술되지만 간간이 덜 알려진 인물이나 대학생들, 그리고 현의 관리나 촌장, 또는 그 주변의 시골사람의 반응---의 육성을 통해 전쟁에 연루된 그들의 고뇌·타협·갈등을 생동감 있게 재현한다. 일차자료를 두루 섭렵한 역사학자답게 일기·서한·보고서 등 생동감 있는 일차 사료를 솜씨 있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저자 자신의 개인 에피소드를 적절히 끼어 넣어 시대 분위기의 세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 같은 역사서술은 독자의 공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본문 중에 나오는 한 학생은 “이제까지 당시 사람들의 감각을 전혀 몰랐지만 이번에..... 여러 사람의 사고나 문장에 촉발되어 조금이나마 이전 사람의 감각을 알게 되었다고 느낀다.”(401면)고 밝힌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독자의 공감을 얻고 있는 이 책은 전쟁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저자는 종래의 ‘침략과 피침략’이라는 이분법에 의하지 않고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의 이야기로서 중국과 일본의 과거를 보자고 한다. 아래 인용문은 저자의 이 같은 역사관을 간명하게 드러내준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중국이 일본에 침략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는 이야기로서 과거를 본다. 일본의 전쟁책임을 부정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침략과 피침략이란 문맥에서 오히려 보기 어려웠던,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前半)에서의 중국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전략을 일본 측의 그것과 비교해 보는 식으로 일중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84면)

현재 일본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적 역사이해를 넘어선다면, 서구 열강보다 뒤늦게 제국주의 경쟁에 참여한 일본이 처음부터 줄곧 침략의 의도를 갖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조속한 제국주의국가로 전환해가면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선택한 복잡한 굴절과정을 겪었다고 설명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다. 가토 요코도 그런 흐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이, 생동감 있는 대화체의 역사서술 방식에 의해 전달됨으로써, 일본근대사를 ‘침략의 역사’로 보는 데 익숙한 한국의 젊은 독자에게조차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자의 학생 가운데 하나는 보고서 말미에 “읽는 내내 그녀의 글에서 잘못된 내용 즉 역사를 왜곡했다거나 한 것은 없는지 찾으려고 애를 썼던 나 역시 자세의 변화가 필요함을 일면 느꼈던 시간이었다.”(강조 인용자)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위에서 말한 공감 즉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그것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 하나의 산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저술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고 해서 한일간의 역사화해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젊은 대학원생 독자들로 하여금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만들 정도의 흡인력을 그

책은 분명 갖고 있다. 그렇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 학생은 “이 책을 다 읽고 냈을 때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일본의 독자들이 일본 전쟁 유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기보다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느끼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sup>34)</sup>

여기서 공감이란 단순한 감정이입에 그친다면 진정한 역사화해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타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진정성을 갖되 동시에 그러한 이해에는 한도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서로의 차이를 빛은 역사적 맥락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일찍이 역사교육에 공감 개념을 적극 도입한 D. 스톡클리(David Stockley)의 논의가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공감을 활용하는 일이 단순히 남의 입장에서 서 그와 꼭 같이 느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란 입장에서, 역사 내지 역사교육의 ‘공감적 재구성’(empathetic reconstruction)은 상상적 행위인 동시에 분석적 행위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역사의 온전한 설명을 위해서는 역사 행위자들의 동기나 의도까지 이해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이뤄진 상황적 분석 내지 상황적 증거들이 결합되어야 한다. 요컨대 “역사의 공감적 재구성은 타인의 경험을 느끼는 것이자, 증거와 어린/역사가 사이에서 이뤄지는 상상적이면서도 분석적인 상호작용이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sup>35)</sup> 내가 ‘공감의 역사학’이 ‘비평으로서의 역사학’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4. ‘비평으로서의 역사학’의 특징들

‘비평으로서의 역사학’에서 말하는 ‘비평’은 ‘비난’이나 ‘합리적 분석’이 아니라 ‘판단’을 뜻한다. 그러니 ‘공감의 역사학’이 ‘비평으로서의 역사학’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34) 한국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한다고 간단히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 일본인 가운데도 이 책이 지도층의 선택에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의 시각, 특히 역사주체로서의 조선의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소리가 나온다. 필자는 여기서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조선이 차지한 역할은 일본 근대사를 다시 보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 보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것이 단기적으로 일본제국의 팽창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긴 시간대에서 돌아봤을 때 한국병합이 과연 일본의 ‘국익’에 보탬이 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일병합이 없었다면 만주 사변과 중일전쟁, 급기야는 태평양전쟁과 패전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병합을 보는 시각은 일본사를 돌아보는 데는 물론 일본의 현실을 개혁하는 데도 관건적이란 뜻이다.

35) David Stockley, “Empathetic Reconstruction in History and History Teaching,” *History and Theory*, Vol. 22, No. 4(Dec., 1983), p.61.

사실, 동아시아 역사학의 전통에서는 일찍부터 사평(史評)이란 이름의 역사비평이 발달해왔다. 고대 역사서에서부터 각 단락 말미에 논찬(論贊: 左傳의 君子曰, 史記의 太史公曰, 漢書의 贊曰 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평이란 분야가 도서·학술 분류에서 하나의 독립 항목이 되기도 했다. 그것은 역사 자체에 대한 비평임과 동시에 그 서술에 대한 비평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 지점에서 가치판단적 성격을 갖는 '비평으로서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역사비평의 전통과 만나게 된다. 그렇다고 이전의 옛 역사학으로 그냥 돌아가자는 것은 물론 아니고 창조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과학적 역사학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 역사학을 혁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에 이 같은 기대를 걸게 되는가. 첫째 역사가의 가치판단이 '삶의 비평'(criticism of life)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들고 싶다. '삶의 비평'이란 '삶에 대한 비평'이란 의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더 확장되어 삶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삶에 의한 비평'의 의미까지 아우르는 뜻인데, 역사과정 속의 사람들의 실천적 관심과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새로운 문제제기가 비평의 기준이 된다. 이 문제는 역사학의 오랜 쟁점인 사실과 가치판단과 관련된다.

그런데 비평으로서의 역사학이 가치판단을 중시한다 해서 역사가의 가치판단이 역사과정에서 독립된 자의적인 것일 수는 없다. 사실이란 "어떤 실체(thing)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과정에 실재(reality)한다"는 입장에 선다면, 가치판단 역시 "역사적 사실에서 발생하는 가치 내지 인간적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응대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사실들을 드러내는 역사학의 과제는 곧 사실들에 내재하는 인간적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되고, 이것은 실천적으로는 현실세계를 살아가는 다수 대중의 삶에 내재하는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과 통한다.<sup>36)</sup>

포스트 모던한 담론이 위세를 떨치는 요즈음의 지적 풍토에서 이런 주장이 다분히 논쟁적일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 문단에서 1980년대 이래 토론해온 리얼리즘론에 익숙한 필자로서는 사실이 (실체가 아닌) 역사 과정 속의 실재란 주장이 쉽게 이해된다. 필자가 알고 있는 리얼리즘은 작품과 그 바깥의 현실세계의 유기적 연관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사실을 존중하되 그것을 넘어서 진리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좀 더 설명하면, 진술과 대상의 일치라는 의미의 '바로 맞음'(truth) 또는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근원적인 진리(중중 Truth로 표현됨) 즉 "우리가 끊임없이 물으며 걸어 가야 할 '길'로--인간이 멋대로 만드는 도로나 통로도 아니지만 동시에 '길을 닦는' 인간의 실천과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도(道)'로 파악"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근대세계의 과학과 실증의 정신을 수용하되 현존하는 세계에 대한 실증주의적 인식을 넘어 그 핵심적 모순을 파악하고 변혁의 전망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sup>37)</sup> 이 같은 근원적 진리관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 위에서 말

36) 유재건, 「E. P. 톰슨의 역사방법론」, 『역사교육』, 제39집, 1986, 317, 335면.

37) 백낙청, 「작품 실천 진리」, 『민족문학의 새 단계』, 창작과비평사, 1990, 374면.

한바 ‘삶에 대한 비평’이자 ‘삶에 의한 비평’을 겸하는 ‘삶의 비평’이다. 그래서 역사과정 속의 사람들의 실천적 관심과 삶의 경험을 비평의 기준으로 중시한 것이다.

둘째, 비평으로서의 역사학은 “학문적 수련에서 얻어진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만 사실들은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역사학적 논리의 엄격한 절차와 그 자체의 경험적 증거와 대화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단히 ‘자기비판과 개념수정이라는 변증법적 방식’을 준수하게 된다.<sup>38)</sup> 하나의 제도라기보다는 연구 자세와 접근법을 뜻하는 ‘비평으로서의 역사학’이 학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역사학 분과 학문에서의 기율과 훈련(discipline)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창의적인 학문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맹목적 행동이나 무책임한 상상력의 발동”으로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sup>39)</sup>

그런데 일정한 분야에서의 기율과 훈련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비평으로서의 역사학이 ‘비평’이란 성격을 지니는 한은 그 훈련은 (보통의 전문역사연구자로서의 훈련 이외에) 비평가적 수련 곧 역사텍스트를 ‘체대로 읽어주는 독자’로서의 수련을 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비평으로서의 역사학의 세 번째 특징이라 하겠다. 그런데 비평가는 “독자들 가운데서 ‘가장 체대로 읽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지향하면서 자신의 독서경험을 글로 정리함으로써 ‘체대로 읽어주는 사람’의 수준과 수효를 최대한으로 높이려고 나선” 자이다. 이렇듯 평범한 독자의 처지에서 출발하되 비평문을 쓰는 특수한 독자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겸허함이란 덕목을 갖추게 된다. 게다가 ‘비평으로서의 역사학’에 참여하는 자는 역사 텍스트의 생산과 그 수용이라는 두 영역에 걸쳐 활동하는 덕에 지나치게 전문화된 역사연구가 직면한 일반 독자와의 소통 장애를 넘어설 수 있다.<sup>40)</sup>

바로 이런 비평의 특성에 힘입어 ‘비평으로서의 역사학’에 전문역사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가또오 요오코의 저술을 진지하게 읽은 필자의 학생들과의 대화는 그 하나의 사례이다.

자, 이제 필자의 글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역사분쟁등으로 혐오감정이 고조되는 이즈음 가장 뜨거운 역사학적 현안에 대해 필자가 발신하고자 한 핵심적 메시지는, 역사에 대한 공감과 그로부터 향상된 비판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일반인들과 역사연구자가 공동주체가 되어 함께 수행하는 ‘공감과 비평으로서의 역사학’ 프로젝트였다. 이것이야말로 역사분쟁을 넘어 역사화해를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공감훈련을 받으면 비판능력과 창의적 사고가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를<sup>41)</sup> 적극 받아들이자. 그럴

38) 유재건 위의 글, 316, 335면.

39) 백낙청, 「사회인문학과 비판적 잡지에 관한 몇 가지 생각」, 『동방학지』, 152집, 2010, 6면.

40) 이 대목은 백낙청, 「비평과 비평가의 단상」, 『통일시대 한국 문학의 보람』, 창비, 2006에서 크게 시사 받았다. 직접 인용한 구절은 이 책 460면.

41) Mary Gordon, *Roots of Empathy: Changing the World Child by Child*, 2005의 한국어 번역본인 매리 고든, 『공감의 뿌리』, 산티, 2010, 164면.

때 공감과 비평이 어우러진 새로운 역사학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고, 더 나아가 역사인식의 차이를 ‘생산적 자극물(irritant)’로 적극 활용하면서, “낮은 수준의 ‘공존’을 거쳐 높은 수준의 ‘협력증대’로 향상해가는 역사화해”의 긴 여정<sup>42)</sup>도 한층 더 순조로워질 것이 분명하다. 역사학이 그러한 역할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삶의 자세를 성찰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21세기에 필요한 ‘좋은 역사학’이 추구하는 바 아니겠는가.

[이 글은 줄저 『사회인문학의 길: 제도로서의 학문, 운동으로서의 학문』(창비: 2014)에 실린 「공감과 비평의 역사학」을 “2016년도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 교원연수”(2016.7.18)에서의 강연을 위해 수정한 것이다.

---

42) 1st International Forum on Historical Reconciliation in East Asia(Seoul: 2007)에서 펠드만은, 화해는 “서로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융합하는 것”이란 입장에서, 역사 이해의 차이를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부정적으로만 간주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Lily Gardner Feldman, "The Role of History in Germany's Foreign Policy of Reconciliation: Principle and Practice", 동북아역사재단 편, 『역사대화로 열어가는 동아시아 역사화해』, 동북아역사재단, 2009.

# 동아시아의 문자, 종교, 제도

이근우 (부경대)



# 동아시아의 문자, 종교, 제도

이근우 (부경대)

## 1. 문자

### 〈한자 문화권〉

중국의 문자 체계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이점은 방언의 차이와 또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언어상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자를 해독하는 중국인은 비록 그들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쓴다고 해도, 같은 서적을 읽을 수 있고, 고전 한문은 그들 자신의 언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민족집단으로 성장한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문자체계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문명이라고 하는 더 큰 통합체도 또한 주로 이 문자체계에 의거하고 있다. 중국 문자에 대한 애착과 존경이 여러 나라를 결속하는 유대가 되어 왔다. 지난 세기까지 사실상 조선과 월남에서 기술된 모든 책과 일본에서 기술된 많은 책은 중국어였고, 그들 자체의 국어로 된 것이 아니었다. 오늘에 있어서도 교양있는 일본인이나 한국인, 월남인은 최근까지 중국책을 보고 한 눈에 그 제목을 읽을 수 있었다.<sup>1)</sup>

서양인 학자가 관찰한 것처럼 한자는 중국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서 한반도, 일본열도, 베트남 북부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으며, 지식인의 필수적인 교양이자 문화를 공유하는 수단이었다. 20세기 까지 이러한 지역들은 분명히 한자문화권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는 “한자가 중국의 주변지역으로 전파되고 그 지역에 정착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자문화권이 형성된 근저에는 주변민족이 한자를 습득해야만 하는 정치적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한자의 전파는 문자가 없는 지역에 문자가 전해진다고 하는 이른바 문화전파

1) 라이샤워·페어뱅크 저, 전해중·고병익 역, 1964, 『동양문화사』 상, 을유문화사, 50쪽

일반의 현상으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물론 그는 정치적 사정으로 책봉체제를 들고 있으며, 그 밖에도 외교적인 관계를 위한 문서 작성과 국내 지배를 위한 각종 문서와 장부의 작성, 각종 제도의 수용, 사상과 종교의 수용에도 한자의 습득은 필수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문화권이란 한자문화권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문화권이 한자를 문자로 공유하는 영역이었던 만큼, 동아시아사 교육에서 한자의 중요성은 반드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에서 기원한 한자가 주변으로 전파되는 과정, 한자를 이용하여 각국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하여 고안된 문자, 훈민정음 창제의 근본적인 목적, 근대에 서양 용어를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 등을 살펴보자.

### 〈한자의 확산〉

한반도의 한자 보급에 대한 이러한 단편적인 자료에 대하여, 본격적인 한문의 사용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광개토태왕비문이다(414). 이후 고구려·백제·신라에서 다양한 한자·한문 자료가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한사군의 설치 이후 한반도 삼국의 실물 문자자료 사이에는 상당히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따라서 그 간격은 문헌기록을 통해서 메울 수밖에 없다. 『삼국사기』에는 삼국의 문자기록과 고구려의 『신집』이나 신라의 『국사』와 같은 사서 편찬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사서 편찬은 단순한 한자·한문의 해득을 넘어서서 그 문자를 통해서 자국의 역사를 편찬하려는 것이므로, 한자·한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열도가 한사군 등을 통하여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하는 것은 전한시대다. 중국의 삼국 시대에 이르면 邪馬臺國이 외부와의 교역을 통제하면서 景初 3년 명문이 있는 거울 등 문자가 새겨진 동경(三角緣神獸鏡)을 위나라로 부터 입수하게 된다. 동경에는 다양한 명문이 새겨져 있었지만 이 단계에서는 한자는 문양의 일부로 간주되었을 뿐 일반적으로 문자로 인식되지는 못하였다. 360년경에 전래된 백제의 七支刀도 역시 한자로 기록된 문장이 象嵌되어 있어서 열도 사회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고 그로부터 100년쯤 뒤에는 칼의 표면에 문자를 상감한 사례가 나타난다(船山古墳大刀銘, 稻荷山古墳辛亥銘鐵劍銘).

칠지도의 전래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는 박사 왕인이 왜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하였다고 한다(『古事記』) 그러나 이때 전래되었다고 하는 『논어』와 『천자문』은 남조 梁에서 만들어진 周興嗣의 『천자문』 1권과 皇侃의 『논어의소』 10권이며, 박사 제도가 後漢 이후 형해화되었다가 梁武帝가 다시 설치한 점, 왕인에 대한 기록이 시조전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6세기 초에 백제에서 오경박사를 파견하는 시점과 여러 가지 면에서 중첩되어 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남는다.

宋 이후 일본열도는 직접 중국과 교류하지 않았고, 대신 백제를 통해서 선진문물을 수용하였

다. 불교의 전래나 오경박사 파견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오경박사 파견은 일본의 한자 사용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백제가 파견한 오경박사의 성격을 둘러싸고도 일국사적 관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동아시아사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계에서는 대체로 백제에 오경박사제가 존재하였으며 백제의 유학이 크게 발전하였고, 그 결과 왜에 백제의 오경박사가 파견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양무제가 오경박사제를 부흥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제가 양에 사신을 처음 파견한 것은 512년이고 백제가 왜에 오경박사 단양이를 파견한 것은 514년이다. 사신이 왕래하는 데 걸린 시간을 생각하면 백제가 양의 오경박사제를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오경박사를 양성하여 파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백제가 양에 毛詩博士를 요청한 사실(『삼국사기』, 『梁書』)이나 講禮博士 陸詡가 백제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왔다는 기록(『南史』)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왜에 파견된 오경박사는 백제인이 아니라 백제가 양의 관인을 요청하여 이를 왜로 보냈다고 보는 편이 옳다.

오경박사의 의의는 열도 사회의 한자 환경을 크게 바꿔 놓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어의 원어민들이었고, 공교롭게도 동시에 梁代에 편찬된 중요한 서적들을 전래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천자문』, 『옥편』, 『문선』, 『고승전』 처럼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널리 읽힌 문헌들이 함께 전래되었기 때문에 오경박사가 체류한 기간은 짧았지만 6세기 전반대의 강남지역 한자음(뭇퉁이 열도 사회에 정착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현재까지도 일본 한자음의 양대 주류를 이루고 있다. 宋과의 교류는 몇 차례의 사신 왕래에 그쳤고 이후 600년에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할 때까지 130년 가까이 중국 본토와 전혀 교류하지 않았는데도 강남지역의 음가를 반영하는 한자음 체계가 성립된 것은 오경박사가 중국인이었기 때문이다.

7세기가 시작되면서 왜는 다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수·당과의 교류를 통해서 새롭게 7세기 이후의 중국 북방음을 받아들일게 된다. 이후 200년 동안 13차례 정도 건당사를 파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승과 유학생들이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또한 일본열도에 많은 서적을 가져왔기 때문에 새롭게 수·당의 음가를 반영한 새로운 한자음 체계가 성립된다. 이것이 바로 漢音이다.

이렇게 漢代 이래로 수·당대까지 지속적으로 한자·한문에 노출되고 또 이를 수용하면서, 일본열도에서도 한자·한문이 사용이 일반화되어 701년에는 大寶律令이라는 법전을 편찬하게 되고, 720년에는 일본국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다룬 『일본서기』가 편찬되기에 이른다.

## 〈향찰과 이두〉

한대에 전래된 불교가 남북조시대에 다시 주변지역으로 전파·전래되면서, 불경이 동아시아 사회에 유포되었다. 한자의 본격적인 수용은 불경의 이해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팔리어 경전 등을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 한역경전을 만들었으나, 한반도나 일본열도에서는 특히 고대의 단계에서는 불경을 번역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문으로 된 불경을 그대로 두고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하는 句讀法이 발달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불경의 연구와 더불어 한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언어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한자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곧 자신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작업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한자는 원래 形·音·義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山’이라는 글자는 山이라는 글자 형태를 가지고 있고, ‘산’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말로로는 ‘되’, 일본어로는 ‘야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이해하고 또 그 특성을 살려서 각각의 언어를 표기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문자의 창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향찰이나 이두, 혹은 일본어의 만요가나 [萬葉假名] 등은 독자적인 문자에 이르지 못했지만, 독립적인 문자의 직전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에 이르는 데도 많은 난관이 있었고 또한 적지 않은 고심을 거듭해야만 했다.

한자를 이해하는 첫 단계는 한문을 해독하는 것이고 다음 단계는 한자를 이용해서 한문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광개토태왕비문이나 칠지도를 들 수 있다. 이들 사례는 중국에서 작성된 한문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

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문을 사용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고유 언어가 갖는 어순이나 어법을 반영하고 있는 이른바 韓式 한문이 출현하게 된다. 중원고구려비 등에 보이는 ‘中’은 ‘가운데’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 고대한국어의 ‘에’에 해당하는 뜻으로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임신서기석에서는 보다 뚜렷하게 신라어의 어순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늘앞에 맹서한다’라는 뜻으로 쓴 ‘天前誓’는 중국어라면 ‘誓天前’이라고 써야 하고, ‘지금부터 3년 이후에’라는 뜻으로 쓴 ‘自今三年以後’도 ‘自今三年以後’로, ‘충성스러운 도를 지켜’의 ‘忠道執持’도 ‘執持忠道’로, ‘과실이 없을 것을 맹서한다’의 ‘過失无誓’도 ‘誓无過失’로 써야 한다. 목적어를 동사 앞에 쓴 것은 모두 중국어와 다른 신라어의 어순에 따른 때문이다.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한자와 한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순에서는 신라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① 조사적인 성격을 가진 한자의 관용적인 표현, ② 중국어와 다른 구

문표현, ③ 신라어의 어법이 반영된 표현, ④ 고유어의 어순이 반영된 표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교착어인 중국어와 비교하여 굴절어에 해당하는 고대 한국어를 한자만으로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굴절어인 언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동사어미나 조사를 한자의 본래 뜻이나 소리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葛項寺石塔記(국립중앙박물관 소재)의 경우를 보면, ‘戊戌中’의 ‘中’은 신라어의 조사 ‘에’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立在之’와 ‘成在之’의 ‘在’는 존경어미 ‘(이)시’의 뜻으로, 之는 종결사 ‘다’ 혹은 ‘니라’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在旆’는 ‘(이)시며’, ‘在也’는 ‘(이)시다’의 뜻으로 쓰였다. ‘在’가 ‘있다’라는 뜻이므로, ‘이시’라는 소리를 갖게 된 것으로 본다면, 이는 한자의 훈을 신라어의 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 것이다. 한편 旆는 한자의 음을 빌려 그대로 신라어의 ‘며’라는 음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유어의 어휘 자체를 한자의 음과 훈으로 나타내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도 불경의 번역과정에서 축적한 표기방식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를 들면 스투파(stupa, 산스크리어로 ष्टुपा)를 卒塔婆, 상가(samgha)를 僧伽 등 한자의 음으로 표기하였다. 지옥을 뜻하는 나라카(naraka)는 奈落으로 표기하였는데, ‘落’은 음뿐만 아니라 의미상으로도 연관성을 갖도록 하였다. 주변제국은 이렇게 한자와 불경을 수용하면서 한자의 뜻에 해당하

는 고유어의 뜻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는 고유어의 어휘 그 자체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자라는 문자와 접촉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고유어에 대해서도 비로소 주목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창녕의 옛이름은 比子伐(창녕 진흥왕순수비), 比斯伐(『삼국사기』 「신라본기」), 比自火(『삼국사기』 「지리지」), 非火(『삼국유사』 「기이」 오가야조), 比自焔(『일본서기』 「신공기」)로 나타난다. 첫 번째 글자인 比와 非는 음이 일치하지만 그 뒤의 글자는 다양한 한자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한자는 소리가 별·밭이 많이 보인다. 한편 火의 훈은 불이므로, 마지막 소리는 결국 별·밭·불로 좁혀진다. 창녕의 고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리로 별·밭이라고 하기도 했고 뜻으로 불을 쓰기도 한 것이다. 문제는 가운데 한자다. 子·自와 같이 음이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斯라고 한 경우도 있고 가운데 소리를 아에 나타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혀 음도 다르고 뜻도 다른 한자를 사용하거나 아에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결국 독립된 소리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소리의 받침을 나타내려는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즉 가운데 한자를 다 발음하지 않고 앞 글자의 받침을 나타내기 위하여 초성 즉 자음의 음가만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가운데 글자의 음가는 ㅈ과 ㅅ으로 압축된다. 이를 첫 번째 소리에 받침으로 놓으면 빗 혹은 빚이 된다.

결국 여러 가지 한자표기는 차례대로 빗벌, 빚벌, 빚불, 비불, 빚밭이라는 소리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빛 혹은 빛은 바로 빛이다. 창녕의 고명은 바로 ‘빛벌’이고 그 소리를 여러 가지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非火(비불)는 받침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사용한 한자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 하나의 소리를 근사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한자음보다 훨씬 복잡한 받침을 가지고 있는 신라어를 한자로 표기하려고 했던 고대인들의 고투가 눈에 선하다. 그러나 고대 한국어는 첫소리와 받침이 복잡하여 한자의 음만으로는 그 음가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그대로 이용한 표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복잡한 음가를 한자에 용이하게 대응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표기방식이 訓備表記라고 할 수 있다. 한자를 읽을 수 있는 계층 내부에서 한자에 대한 훈이 상당한 정도로 고정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훈을 사용함으로써 고유어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인명의 경우를 보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居柒夫를 荒宗이라고 표기하는 방식이다. 대다수의 사람이 荒에 대해서 ‘거칠다’, 宗에 대해서는 ‘마루’라는 훈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이러한 훈차표기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훈에 대한 공통인식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훈을 공유하는 일부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통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한자로 고대 한국어를 표기한 원칙을 보면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사벌과 같이 모두 한자의 음만을 이용한 음차 방식, 荒宗과 같이 모두 한자의 훈을 이용한 훈차 방식, 비자화나 伊宗과 같이 음차와 훈차를 혼용한 방식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일본어에서 음차와 훈차를 혼용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말이 한자음보다도 더 많은 字音韻尾(받침)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수·당시대의 자음운미에는 p, t, k, m, n, ŋ가 있었으나, 고대 한국어에는 d, l, b, s, z, ts, h과 후대에 終聲合用並書라고 부르는 받침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한 한자로 한 음절씩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聲母 즉 初聲의 경우에도 初聲合用並書가 있었다.

후자의 예로 角干과 舒伐那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한자표기는 동일한 것인데, 각간은 훈차와 음차로, 서벌한은 음차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서벌한의 첫 번째 한자인 舒는 온전한 발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모만을 취하여 벌과 함께 발음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s+벌’ 즉 ‘썰’이라는 음가를 가지도록 한 것이다. 이는 중세 국어에서 角의 훈이 ‘썰’이었던 사실과 대응된다.

따라서 고대 한국어의 경우는 이론적으로 한 음절을 표시하려고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3~4자의 한자를 사용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즉 초성(합용병서), 중성, 받침(합용병서 포함)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발음체계로 인하여 일본의 假名처럼 한자 한 글자에 한 음절씩 대응시키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 〈가나문자〉

일본의 경우는 한자를 변형한 가내(假名)를 문자로 채택하였다. 가나에는 히라가나와 카타카나가 있는데, 히라가나는 나라시대에 주로 사용하던 일본어의 음가를 표시하던 차자가, 헤이안시대에 이르러 초서화가 진행되면서 형성되었다. 9세기 후반부터 詩歌 등에 사용되던 히라가나는 10세기 초에는 『古今和歌集』(905)에도 나타나며 10세기 중엽에는 카타카나와 분명하게 구별되었다. 카타카나는 한자의 부수나 획의 일부를 따서 만든 것이다. 카(カ)는 加의 왼쪽 부분을 나타내는 식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경우는 口訣에서 멈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구결과 가나의 관련성도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나와 구결은 한자와 불교라는 문화와 접촉하면서 생겨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자의 경우도 결코 독자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문화교류의 결과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 〈동아시아의 여러 문자〉

한자 주변에서 생성된 동아시아의 문자는 한자를 참고하여 고안된 문자(거란문자, 서하문자, 여진문자)와 서아시아문자(돌궐문자, 위구르문자, 몽골문자, 만주문자) 및 인도문자(티베트문자, 파스파문자)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문자가 있고, 다시 한자를 참고한 문자 중에는 표의성이 강한 것(거란문자와 여진문자의 大字)과 표음성이 강한 것(일본문자, 거란문자와 여진문자의 小字)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한 문자 속에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와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월남문자)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주변 지역의 문자는 실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조선이 만든 문자는 위구르 계통의 문자처럼 표음문자이면서, 거란 및 여진 문자의 소자와는 달리 한자에 의존하지 않고 전혀 독자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 〈한자어의 변용〉

일본에서는 명치유신을 전후한 시기부터 서구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번역의 시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은 번역서가 출간되었고, 이와 함께 서양 문물과 관련된 많은 한자를 사용한 번역어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러한 한자 번역어들이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한자어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도 한자는 비록 중국에서 생겼지만 중국만의 전유물은 아니며, 특히 서구의 문물이나 개념에 관련된 많은 한자 어휘가 일상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서구

문화의 번역에서 비롯된 한자어가 홍수처럼 밀려든 것은, 한자문화권의 근대적인 변모라고 할 수 있다.

서양 문물의 번역 작업은 전근대 시기에도 있었다. 명대의 마테오 리치의 『天主實意』(1593~1596)나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의 『解體新書』(1774)가 대표적이다. 이들 책에서 유래한 天主, 神經, 軟骨, 動脈, 生殖器 등의 번역어는 현재도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책들은 종교, 의학 등 극히 제한된 영역의 번역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아편전쟁과 일본의 명치시대 이후 시작된 서양 문물에 대한 번역 작업은 일반인들의 근본적인 인식들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래에 동아시아에 없었던 물건, 제도, 개념 등이 도입되면서 그에 따른 외국어를 모두 번역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서구 열강의 군사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근대적인 군사훈련을 위해서 서양에서 군사 고문을 초빙하였다. 그런 점에서 군사 분야의 용어가 가장 먼저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그 밖에도 선거제도, 의회제도,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 동아시아 사회에 없었던 정치·경제제도, 근대적인 군사제도, 방직·방직업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산업, 서구건축 관련 용어, 기차와 기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통수단, 전화·전보 등의 통신 등과 관련된 한자 용어들이 새롭게 생겨나거나 기존에 있던 용어의 의미를 바꾸어서 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현재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이 근대 초기에는 모두 번역될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외래어의 번역에서 신조어를 만든 경우도 있지만 그전부터 있었던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쓴 경우도 적지 않았다. 幾何學의 경우는 ‘얼마’, ‘몇’ 등의 뜻으로 쓰이는 어휘를 지오메트리(geometry)의 번역어로 쓰게 되었다. 物理學라는 말의 물리도 사물의 이치 등을 뜻하였지만, 피직스(physics)의 번역어로 쓰인다. 福祉라는 말도 신의 가호라는 뜻이었지만 현재는 웰페어(welfare)의 번역어이다. 機關이라는 용어도 과거에는 주로 외부의 자극으로 작동하는 함정이라는 의미였으나, 현재는 엔진(engine), 오거니제이션(organization), 인스티튜션(institution)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演說이라는 말도 불교용어로 교리를 쉽게 설명한다는 뜻이었지만, 근대에 들어서는 스피치(speech)의 번역어가 되었다. 自由도 마음대로 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지만, 프리덤(freedom)의 번역어가 되었다. 이때 자유라는 말 대신 道理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같은 한자어라도 전통시대와 근대를 사이에 두고 그 내포가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양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기도 한다. 가까운 예를 들면 壘라는 말은 堡壘·城壘처럼 흙으로 쌓은 성채, 진지 등의 의미를 가진 말이다. 그런데 이 용어가 野球가 들어

오면서 1루·2루·3루와 같이 베이스(base)의 번역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동시에 베이스라는 말은 基礎(신조어), 基地(신조어), 基本, 本部, 本社(신조어), 鹽基(신조어, 화학), 基底(신조어), 基底數(신조어, 수학)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이는 영어의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범주를 동아시아인들이 결코 하나의 어휘로 나타낼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번역과 똑같은 문제를 당시 사람들도 안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베이스라는 용어가 그 말이 사용되는 각각의 영역에서 거의 독립적으로 번역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發明이라는 용어도 원래 있었지만 밝혀낸다는 뜻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한 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한자어들 중에는 測量·折衷·橫說豎說·完璧·生産과 같이 의미와 용법이 변화한 것들, 功利·權利와 같이 가치가 뒤바뀐 것들, 자연·본성·사물·도덕·국가·실학·학문과 같이 세계관이 엇갈리는 것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실로 전통과 현대의 단절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한자 용어 속에서 나타났다. 역시 근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哲學(philosophy)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철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성리학과 같은 전통철학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文明과 같은 용어는 원래 있던 용어였지만, ‘문덕이 빛나는 통치’, ‘세도가 실현된 이상사회’, ‘중화’ 등으로 쓰였다. 그러나 시빌리제이션(civilization)의 번역어가 되면서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났다. 먼저 중화문명의 우월성을 주장하던 단계(서양에 대한 夷狄觀)에서 서양문명도 동등한 문명이라고 보는 단계(東道西器)에서, 서양문명만이 문명이 된 단계(西道西器)로 이행하게 된다.

서양 문물에 대한 번역 과정은 결코 단선적이지 않았고, 하나의 용어에 대하여 복수의 번역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한 가지로 통일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철학이라는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費祿蘇非亞라는 음역어를 비롯하여 格物窮理之學, 格致學, 性理學, 理學 등도 사용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경합 혹은 조정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대 중반에 이학은 자연과학을 가리키는 용어로 굳어지고 철학이라는 용어가 자리잡게 된다. 경제학도 생계학, 사회학은 大同學, 물리학은 격치학, 윤리학은 修身學 등 의 번역어가 있었다.

한편 모던(modern)에 대한 번역어로는 近世·近代·現代가 있고, 소사이어티(society)의 번역어로 社會라는 말이, 인디비듀얼(individual)의 번역어로 個人이 어렵게 탄생되었다. 權利라는 말도 권력과 이익(재산)이라는 뜻으로 이미 『荀子』에 보이지만, 라이트(right)의 번역어로서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義務 역시 그렇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현대사회라는 말 자체가 근대 이후의 번역어이며, 이런 번역어가 없었다면 현대사회와 그 속에 사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존재할 수 없는 셈이다.

분야별로 새로운 용어를 보면, 정치 분야에서는 정부, 관청, 관리, 공무원, 의회, 議員, 議院, 의

안, 행정, 시정, 선거, 투표를 들 수 있고, 경제 분야에서는 회사, 기업, 은행, 보험, 신탁, 증권,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 등을 들 수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産業이라는 표현을 필두로 임업, 광업, 수산업, 전기, 기계, 계측, 기획, 입안, 교통과 관련된 철도, 선로, 기차, 열차, 전차, 자동차, 자전거, 비행기, 항공, 우편, 전신, 전보, 전화 등이 있다. 운동과 관련된 것으로도 운동을 비롯하여 각종 구기와 관련된 용어, 체육, 체조, 육상, 수상, 경기, 경주, 선수, 심판, 구장 등을 들 수 있다.

학문 분야에서는 화학, 생물학, 지질학, 지리학, 海理學, 수산학, 기하, 함수(일본은 關數)와 같이 새로운 학문 분야의 명칭 자체를 비롯해서 그 학문 속에서 통용되는 개념들이 모두 번역어를 필요로 하였다. 지질학의 경우, 지질(geological features)·지층(stratum)·단층(fault)·褶曲(fold)·산맥(range), 화강암(granite)과 같은 각종 암석 이름 등 모든 것이 새롭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지리학에서도 열대·온대·한대, 동물학의 경우도 분류(categorization)라는 용어가 새로운 쓰임을 얻게 되고, 어류·양서류·조류·파충류·포유류가 모두 신조어로 만들어졌다.

또한 외국과의 통상이 본격화되면서 국제법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 『萬國公法(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이 번역 소개된다. 국제법에 대한 최초의 번역어 중 하나가 만국공법이었던 셈이다. 아울러 독립(independence), 주권(sovereignty) 등의 용어도 생겨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출입국 및 관세 징수를 위한 海關(한국과 일본은 稅關)이 설치되었고, 이와 관련한 용어들이 새롭게 등장한다. 현재의 여권과 비자를 합한 개념인 護照를 비롯하여 船鈔(船料), 무게와 관련된 톤(噸, ton) 등이 나타난다.

군사적인 용어로는 군복·군화·군악대·사관·총검, 포병·공병·해병 등 군사 편제, 분대(squad)·소대(platoon)·중대(company)·대대(battalion)·연대(regiment)·여단(brigade)·사단(division)·군단(corps) 등 병력 편성단위, 소총·대검(bayonet) 등 근대적인 병기류,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군대 계급 등이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에서 만들어낸 많은 번역 한자어들이 조선으로도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일본의 번역어가 중국으로 유입되기도 하였다. 양계초는 일본어와 중국어가 가깝고 따라서 습득과 번역이 용이하다고 보았다. 張之洞도 일본어 서적을 번역해서 서양사상을 학습하는 것이야말로 ‘노력은 줄이고 효과는 빠른 방법’이라고 하였다. 강유위도 ‘중국의 변법은 일본을 귀감으로 삼으면 모든 것이 족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동아시아와 서양의 만남은 결과적으로 서양의 학문과 동아시아의 학문을 둘러싼 문제로 발전하였고, 중국의 근대와 일본의 근대는 중첩되는 양상을 띠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일본에서 번역된 용어들이 중국에 채용된 것으로는 패권(supremacy, hegemony), 백금(platinum), 백기(flag of truce), 관화(block print), 반경(radius), 포화(saturation), 보장

(guarantee), 배경(background), 比重(specific gravity), 필요(necessity), 변호사(lawyer), 변증법(dialectics), 이론(theory), 이념(idea), 이성(reason), 이지(intellect), 역학(dynamics), 영토(territory), 유체(fluid), 전염병(epidemic), 가정(home) 등이 있다. 그 밖에 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 밖에도 근대적인 담론의 중심축을 이루는 용어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자연(nature) · 진보(progress) · 진화(evolution) · 종교 · 기독교 · 자본 · 주식(stock) · 민주 · 공산 · 주의 · 관념 등등. 그런데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 ·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의 번역어들이 우리 사회에 전면적으로 유입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특히 행정, 사법, 군사, 기술, 학술용어 등에서 영어로 대체된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한자 용어의 전통적인 의미는 해체되고, 서구의 문물에 기초한 새로운 의미부여 혹은 새로운 번역어 위에 근대의 골격이 형성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개념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한자야말로 동아시아 사회의 근대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 바탕이었던 셈이다. 또한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번역어야말로 현재의 한 · 중 · 일의 언어적 공통성을 다시 마련하였다.

## 2. 종교(유교를 중심으로)

유학은 한 대에 국교로서의 지위를 누렸으나 남북조 시대 이후 불교와 도교가 융성하게 되면서 점차 그 세력이 약해졌다. 무엇보다 당시까지의 유학이 실천 윤리적인 성격은 강한 반면,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약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송 대에는 유학에, 불교적인 논리체계를 수용하고 종교적 실천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서 신유학으로 일컬어지는 성리학이 출현하였다.

한편, 송 대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농법이 보급되고 농업생산력이 증대하면서 신흥지주층의 세력이 커졌는데, 성리학은 이러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논리이기도 하였다.

성리학이 이전의 유학과 다른 점은 형이상학적인 논리 체계를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는 각각의 인간과 사회, 인간과 우주가 이(理)라는 보편적인 원리에 의하여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본성인 성(性)이 곧 우주의 이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후천적인 습관 등에 의해 가려지거나 어지럽혀져 있기 때문에 실천적인 수행방법을 통해 본성을 회복해 야 한다고 한다. 그 방법이 바로 거경공리와 격물치지이다. 거경공리란 잡념이나 망상을 끊은 상태에서 마음에 본래 구비되어 있는 이(理)를 밝히는 것을 말하고, 격물치지란 존재하는 사물의 의미를 끝까지 탐구하여 깨달음에 이른다는 뜻이다.

송 대의 유학자들은 오경보다 사서를 중시하였다. 사서는 <대학>, <중용>, <논어>, <맹자>를 말한다. 오경 중에서는 형이상학적인 논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주역>을 핵심이라고 보았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는 사서에 성선설, 성즉리, 수행의 방법 등 성리학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고, 주석을 달아 <사서집주>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원 대에 과거 시험의 교재로 채택되어 수백 년 동안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 통용되었다. 아울러 사상가 중에서는 성선설과 천명사상 등을 주장한 맹자가 공자와 더불어 성인으로 추앙되었다. 한편, 요·금이 성장하여 송을 압박하자, 한족의 민족의식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성리학에서도 대의명분론과 화이관이 강조되었다. 이들 사상은 성리학을 통해 조선과 일본에도 전해져, 조선에서 병자 전쟁 이후 일어난 북벌론과 19세기의 척화론, 일본의 양이론 등에 영향을 끼쳤다.

사대부층의 학문으로 성립된 성리학은 서원과 향약의 보급과 함께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었다. 서원은 성현의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해 세워진 사설교육기관으로 성리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기에 유리하였다. 향약은 상부상조의 정신과 유교 윤리를 결합하여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이다. 주자가 이를 실천하도록 한 뒤, 특히 명대에 향촌 질서의 재건을 위해 중시하면서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한편, 이민족 왕조인 원을 물리치고 한족의 국가를 다시 건설한 명은 민족적·전통적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과거제를 강화하고 성리학을 관학으로 수용하였다. <성리대전>과 같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문헌이 편찬되어 과거의 참고서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성리학을 과거 합격이라는 세속적인 목적을 위한 학문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자, 일부 성리학자들은 육구연의 심학을 받아들여 도덕실천적인 측면을 강화하였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왕수인의 양명학이 탄생하였다. 양명학은 학문적인 탐구를 강조한 주자의 성리학과는 달리 수행과 구체적인 실천에 중점을 두었다.

성리학은 13세기 말에 안향에 의해 고려에 전해지고, 이제현, 이색 등을 거쳐 정몽주, 정도전 등에 의해 크게 확산되었다. 고려 말의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무기로 삼아 불교 사원 및 그와 결탁된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조선을 건국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이 국가의 지배 이념뿐만 아니라 국가 의례와 사회 의례의 논리가 되었다. 과거 시험에도 <사서집주>가 시험교재로 채택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학자들 사이에 성리학의 기본개념을 둘러싸고 다양한 철학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태극 논쟁, 주리·주기 논쟁, 인물성동이 논쟁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주세붕이 처음으로 백운동 서원을 세운 이후 많은 서원이 건립되었고, 선조 때부터는 사람을 중심으로 마을마다 향약을 만들어 실천하였다.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 시대 후기에 성리학이 전래되었으나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다가, 정유 전쟁 때에 포로로 잡혀간 조선의 성리학자 강항이 후지와라 세이카와 교류하면서,

주자학 연구가 활발해졌다. 후지와라는 강항의 도움으로 〈사서오경왜훈〉을 간행하고, 하야시 라잔 등의 제자를 길렀다. 하야시 라잔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불교와 신도의 영향이 강했던 일본 사회에서는 성리학이 국가 이념으로까지 성장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성리학은 일본 근세 말기와 근대 사회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에도 막부 시대 말기에 존왕사상이 성행하고 메이지 유신으로 일왕이 권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리학의 명분론과 관련이 깊다.

베트남에서는 15세기 중엽에 리 왕조의 성종이 사서를 중심으로 하는 신유학 사상을 보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사회에서도 성리학은 사회의 지배 이념으로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 〈정치이념에서 사회규범으로〉

유교적인 의례가 보급된 양상도 조선과 일본은 크게 달랐다.

조선은 유교적인 관혼상제의 의례를 실천하였다. 〈주자가례〉에 따라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지냈고, 조상에게 제사지내기 위하여 가묘나 사당을 세웠으며, 공자를 모시는 문묘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성리학적 규범이 더욱 확산되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남녀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지내던 부모의 제사를 만아들이 주로 지내게 되었고, 동성 간의 혼인을 규제하는 동성 불혼제와 여성이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혼인형태인 친영제도 수용되었다. 가옥의 구조도 성리학적인 음양의 원리에 따라 여성이 거주하는 안채와 남성이 거주하는 사랑채로 나누어졌으며 사당에는 태극무늬를 그려넣기도 하였다. 성리학은 의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려 후기부터 사대부들은 주술적인 치료법을 부정하고 약재의 연구를 중시하였다.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등은 의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간행된 결과물이다.

일본의 경우, 유교적인 가묘는 설치되지 않았다. 왕실에도 조상신을 모신 신궁이나 위패를 모신 사찰이 있었을 뿐 종묘를 따로 두지는 않았다. 에도 막부 시대에 문묘로서 유시마 성당이 세워졌으나 국가적인 제도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결혼과 같은 각종 의례는 신도에 따랐고 장례와 제례는 불교식으로 치렀다. 그런 의미에서 유교가 일본사회에 미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리학은 명·청이나 조선에는 큰 영향을 끼쳤으나, 일본과 베트남에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성리학은 동아시아 사회에 충·효·예와 같은 가치관을 전파하고 인간과 우주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심화시켜 주었다.

### 3. 율령

동아시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불교·유교와 더불어 율령도 빼놓을 수 없다. 불교가 중원을 거쳐 동아시아 각 지역에 전파된 문화요소라면 율령과 유교는 중원에서 형성되어 동아시아 각 지역에 전파된 문화요소이다.

율령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데 이용된 법으로, 중원의 왕조들은 일찍부터 이를 정비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많은 사람과 다양한 지역사회를 통합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획일적인 통치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원에서 법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진 대였다. 진은 상앙·이사와 같은 법가 사상을 등용하여 법치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천하를 통일하고(콤포 삭제) 황제가 지배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 시황제가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한 것도, 전국에 문서로 명령을 전달하여 시행하게 하고 법률로 정한 대로 조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였다.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의 법률은 한대에도 대부분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한대에는 법가나 도가 사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유가 사상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통치 이념으로 부상하였다. 하늘의 명령으로 덕이 있는 자가 군주가 되어 천하를 다스린다는 유교의 천명 사상이 황제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유용했기 때문이다.

유학자였던 동중서는 한 경제 때에 박사가 되어 많은 제자를 가르쳤다. 그런데 그는 인간 사회의 차별적인 질서가 하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보고, 천자의 지위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천자가 정치를 잘하지 못하면 하늘이 재해를 내려 경고를 하는데, 여러 번의 경고에도 천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하늘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였다.

경제의 뒤를 이은 무제는 이러한 동중서의 철학에 매료되었다. 그의 사상이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추구하던 자신의 정책을 확고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유교는 중국의 역대 왕조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확고한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에 한 무제는 태학을 설치하고 5경 박사를 두어 유교를 진흥시켰다. 또, 유교적 지식인과 교적 덕목을 실천한 인물을 관리로 선발하여 자신의 통치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방마다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 들어서고, 유학을 공부하는 것이 관리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았으며, 법률에도 유교사상이 폭넓게 반영되었다. 국가를 정교한 법으로 통제하려는 법가적인 원리와, 가족과 마을의 공동체적 질서를 존중하는 유가적인 원리가 율령 속에서 결합된 것이다.

한편, 진·한 대만 하더라도 범법자를 처벌하는 형벌 위주의 법률이 주로 시행되었지만, 점차

황제 중심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 법률이 늘어났다. 그리하여 서진 대에 이르러 전자는 ‘율’, 후자는 ‘령’이라는 명칭으로 구분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법인 법전이 되었다. 이후 사회의 변화, 발전에 따라 법조항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복잡해진 법조항을 체계화시켜 객관적이고 간편하게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각 왕조에서 일어났으며, 이러한 노력은 수·당 대에 이르러 완성을 보게 되었다.

### (수·당의 율령 체계)

수·당은 이전 시대의 율과 령을 이어받아 정리하는 한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격과 식을 추가함으로써 율령에 바탕을 둔 통치 체제를 완성하였다.

율은 황제가 통치를 위해 만든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었다. 당 대에는 이전의 가혹한 처벌을 완화하고 간략히 하여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5가지 형벌\*을 두었다.

그런데 율은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었다. 지배층인 황제와 황족, 관리는 특정한 죄를 제외하면 거의 실형을 받지 않았다. 반면 피지배층인 양민과 상급 천민, 하급천민(노비)은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되었다. 즉, 노비가 양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는 양민 사이의 범죄보다 2등급 높게 처벌되었고, 반대의 경우에는 2등급 낮게 처벌되었다 또한, 유교의 가족윤리를 반영하여 부자 사이의 범죄를 가장 엄격히 처벌하였고, 남편과 부인 사이, 세대 차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구성원 사이의 범죄일 때도 차등적으로 처벌되었다.

영은 국가를 운영하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각종 제도와 규범을 정한 법령이다. 여기에는 황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의례, 통치에 필요한 부서를 나누는 제도, 이를 담당할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백성과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먼저 통치기구로는 중앙에 3성 6부를 두고 지방에 주현을 두었다. 3성은 황제가 내린 명령을 기초로 법령을 기초하는 중서성, 이를 심의하는 문하성, 심의에 통과한 법령을 실행하는 상서성을 말한다. 6부는 상서성에 소속되어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관청에서는 모든 업무를 문서를 통해 시행하였으므로, 문서를 해독하고 작성할 수 있는 관리들이 필요하였다. 이에 과거제가 시행되었는데, 과거의 과목은 시문 위주의 진사과와 경전 위주의 명경과가 있었다. 과거제의 시행으로 점차 유교적인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들의 관직 진출이 늘어났다. 관리의 등급은 크게 9품으로 나누었다.

백성들에게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조세와 노역과 군역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는 먼저 전국의 백성을 파악하여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하고, 그 호적을 근거로 토지를 지급하였다(균전제). 토지를 받은 백성은 조, 용, 조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했다(조용

조제). 또한 성인 남성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부병이 되었는데, 부병은 변경의 수비, 도성의 방어, 거주 지역에서의 치안 유지 등의 임무를 맡았다(부병제). 부병제는 농민의 병역의무를 바탕으로 한 국가 상비군 제도였다.

### 〈율령의 전파와 지역적 특징〉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수당의 통치 체제는 당 후기에 다소 느슨해지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중국 역대 왕조의 통치 체제의 기본 골격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한반도와 일본열도, 베트남에도 전해져 고대 국가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중원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당의 율령 체제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각 나라마다 통치의 형태, 신분 질서, 백성의 권리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남녀의 지위, 결혼 풍습 등이 수당과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삼국은 중앙집권국가가 형성되던 초기에 이미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그 후 신라는 통일 이후 통일 이후 당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당의 제도를 수용하여 율령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당의 국가감을 본뜬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도 신라는 관위나 관직에서 골품제적 고유성을 유지하였고, 관리 선발에서도 과거제 대신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발해는 중앙 관제로서 3성 6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중앙 교육기관으로 주자감과 문적원을 두고, 지방에도 주현을 설치하는 등 당의 통치제도를 적극 수용하였다. 그러나 3성과 6부의 명칭과 관리 체계를 당과 다르게 하고, 각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를 다르게 편성하는 등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고려는 율령을 정비하여 당의 3성 6부제와 9품의 관품 체계를 수용하고, 과거제도 시행하였다. 그러나 지배층 내에서는 근친혼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동성불혼을 위주로 하는 중국적인 친족체계는 수용하기 어려웠다.

일본의 경우, 7세기 후반부터 율령제를 수용하기 시작하여 701년에 당의 율령과 흡사한 다이호 율령을 반포하였다. 그러나 당의 율령은 호족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일본열도에서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특히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군(郡)의 관리는 지방호족 중에서 임명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죽을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였다. 과거도 유학, 율령, 산술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하급 실무관료를 선발하는 데 그쳤으며, 근친혼을 인정하고 모계를 중시하는 친족제의 영향으로 유교적인 예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베트남은 독립 이후 1070년에 처음으로 공자와 그 제자를 모시는 문묘를 세우고 학교를 부설

하여 왕자와 고위관리의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쳤다. 또, 과거제를 시행하여 관리를 선발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과거제의 시행횟수나 선발 인원도 적었고 그들이 관료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았다. 또한, 베트남에서 부부는 거의 동등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인이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이상과 같이 수당의 율령은 한반도와 일본, 베트남 등에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실제 규범의 측면보다 정부 조직의 측면에서 좀 더 영향을 끼쳤고, 정부 조직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경우에도 각국의 독자적인 전통에 따라 상당히 변형된 형태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유교와 율령 및 이에 기초한 통치 체제는 관료제도, 문서 행정 체계, 관료 선발제 등을 비롯한 각 지역의 통치제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사회가 법령에 근거한 지배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과거시험은 유교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동아시아 사회의 문화적인 공통성을 마련하고 이 지역에서 식자율과 교육열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불교의 전파와 발전

김상영 (중앙승가대)



# 불교의 전파와 발전

## - 중국불교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

김상영 (중앙승가대)

### 1. 동아시아史와 불교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함께 동아시아는 최근 미래 인류사회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져 나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이 진정한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해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상당 수 남아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의적 역사왜곡 사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고 하겠다. 과거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이들과 함께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추구해갈 수는 없다. 동아시아인들에게 과거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자세, 과거사의 과오를 진정하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

참으로 오랜 세월동안 불교는 동아시아 역사의 '공통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물론 전래된 지역에 따라 불교 역사와 문화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동아시아 각국은 '한역(漢譯)불전을 바탕으로 한 대승불교 국가'라는 공통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만약 동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이 보다 진정한 자세로 공동 번영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적어도 한 그릇에 담아낸 '동아시아사'는 함께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불교는 이같은 '동아시아사', 즉 공통의 역사관에 기초한 '동아시아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역사이다.

## 2. 불교사의 이해와 경전 결집의 역사

### 1) 불교사의 대강

고타마 붓다의 성도(成道) 이후 전개된 불교 역사는 보통 ‘초기불교(근본불교-원시불교) → 부파불교 → 대승불교’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 한동안 일본 학자들에 의해 근본불교(붓다 在世 時의 역사)와 원시불교(붓다 재세시의 역사를 포함하여 불멸 후 100년 경까지)라는 용어가 통용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이들 용어의 부적합성이 제기되면서 부파불교 이전 시대를 ‘초기불교’라고 명명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물론 이러한 불교 역사의 시대구분법에 대해서도 지극히 대승불교 중심적인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이 간행한 『불교사의 이해』(조계종출판사, 2004)에는 불교의 역사를 다섯 시기로 나눈 이후, 각 시기별 특징을 서술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 내용을 일부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제1 흥륭기 : 초기불교의 단계로서 고타마 붓다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는 기원전 5, 6세기경부터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아쇼카 왕(Aśoka, 기원전 268~232년 재위)의 즉위 이전 기원전 300년경까지가 제1 흥륭기에 해당한다. 때로는 ‘근본불교’라 하여, 고타마 붓다가 생존해 있던 당시의 불교만 한정하여 부르기도 한다.

□ 제2 분파기 : 부파불교시대로서 근본불교 이후로부터 대승의 중흥기 전까지를 제2 분파기라 말한다. 소승불교, 아비달마(阿毘達磨, Abhidharma)불교, 성문(聲聞)불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시대적으로는 기원전 300년경부터 기원전 100년경까지이며, 일설에서는 붓다의 불멸 후 100여 년경부터 제2기로 보기도 한다. 부파는 근본 상좌부와 대중부로 나누어진 다음에, 다시 총 18부로 분열되었다.

□ 제3 발달기 : 대승불교의 시대로서 기원전 100년경 또는 서기 1세기경을 그 시발점으로 삼는다. 대승불교는 불교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화려한 결실을 맺었다. 발달기는 대승불교의 전개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눈다. 초기 대승불교는 서기 300년경까지를 말하며, 반야계 경전, 화엄계 경전을 비롯하여 『중론』, 『대지도론』 등의 논서가 성립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카니슈카 왕이 재위하던 때로서 제4차 결집이 이루어졌으며, 중국으로 불교가 유입되었다. 중기 대승불교는 300년경부터 600년경까지를 말하며, 여래장 계통과 유가행과 계통의 문헌이 성립되었

다. 이 때를 고전불교의 완성기라고도 부르며, 인도에서 불교가 지배적 지위를 점유하던 때로서 부파시대라고도 한다. 이즈음 중국에서는 불교가 널리 퍼져서 원숙기로 접어들었다. 후기 대승불교는 600년경부터 소위 잡밀(雜密)까지만 포함시켜서 구분한다. 이 시기를 중세기의 불교라 하며, 인도에서 밀교가 성립되었다.

□ 제4 변천기 : 서기 700년경부터 힌두교의 습합 아래 독특하게 전개된 불교양상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밀교의 일파인 좌도(左道)밀교의 경우는 5M, 즉 술, 고기, 물고기, 볶은 곡물, 성교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것을 숭배하는 수행방법을 택함으로써 초기불교와는 매우 달라진 교의를 보여 주었다. 이 시기는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기를 맞이한 것과는 달리 그 외 여러 나라에서는 불교가 정착하여 발달하였다. 불교는 인도사회의 뿌리 깊은 계급제도를 뛰어넘지 못하고 쇠퇴하여 갔지만, 불교의 평등사상은 오히려 보편적이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1000년경부터 1500년경까지는 우리나라, 일본, 몽고, 티베트, 미얀마 등에서 불교가 매우 융성했던 황금기였다(‘제5 현대기’의 내용은 생략함).

## 2) 경전결집의 역사

결집(結集: Saṅgīti)이라는 말은 빠알리 또는 산스크리트의 상기띠Saṅgīti라는 말의 한역이다. Saṅgīti는 ‘노래하다’, ‘합창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Saṅgāyati(sam+gāyati)에서 명사화된 말이다. Saṅgīti에 대한 한역은 결집 이외에 합송(合誦), 집법(集法), 등송(等誦) 등으로 옮겨졌다.

결집은 경전편찬회의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을 종합하고 교정하는 편집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확인된 불설은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합창하는 공인의 절차를 말한다. 즉 불교교단 내에서 공식적인 회합을 통해 당시에 유통되었던 불설(佛說)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합법적인 정전화(正典化) 절차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 제1차 결집은 붓다가 열반에 든 해에 라자가하(王舍城)에 500명의 비구가 모인 가운데 행해졌다고 한다. 때문에 ‘왕사성 결집’이나 ‘오백집법’이라 불린다. 마하까싸빠가 사회자가 되고 이 발사 출신의 우빨리 존자가 율(律)을, 아난다가 법을 암송하여 그 내용이 불설임을 승인받았다고 한다. 마하까싸빠가 먼저 우빨리에게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이유로, 계율이 제정되었는지를 질문하면 이에 답변으로 송출한 것이 바로 율이다. 마찬가지로 아난다에게 붓다가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설하였는가를 묻는 것에 대해 아난다는 ‘여시아문(如是我聞)’으로 시작하

여 송출한 것이 바로 경(經)이다. 다시 우빨리와 아난다에 의해 송출된 율과 경은 참가한 아라한들에게 진위의 심의를 거친 후 참가자 전원이 합송하는 형식을 거쳤기에 결집의 다른 말이 합송인 것이다.

□ 제2차 결집은 제1차 결집 때보다 많은 수의 700아라한이 참여했기에 ‘칠백집법’ 또는 ‘칠백결집’이라고 하고, 결집 장소는 웨살리에서 열렸기에 ‘웨살리 결집’이라고도 한다. 제2차 결집은 불멸 후 대략 100년 후에 일어난 일로 이야기된다. 계율에 철저한 서인도 출신의 야사(Yasa: 耶舍)라는 이름의 비구가 동인도의 웨살리로 유행할 때 그곳 비구들이 재가자들로부터 편법으로 금은을 보시 받는 광경을 목격하고서 정사(正邪)의 시비(是非)를 따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웨살리에 동인도와 서인도 등지로부터 700명의 비구들이 모여 율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경과 율을 결집하는 제2차 결집이 결행되었다. 십사(十事) 논쟁 이후 금은을 받았던 비구들은 불만을 품고 1만 명이 모여 또 다른 대규모의 결집을 행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교단이 최초로 상좌부와 대중부로 분열되었고, 이를 인도불교사에서 근본분열이라고 한다.

□ 제3차 결집은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인 빠팔리뻬따(華氏城)에서 이루어져서 ‘화씨성결집’이라 하거나 1,000명의 아라한이 참여하였기에 ‘천인집법’ 또는 ‘일천결집’이라고도 한다. 아쇼카 왕이 불교교단에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자 교단이 크게 타락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왕은 당시의 고승인 목갈리뻬따 띠사(帝順)와 상의하여 교단정화를 위한 결집을 단행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무려 6만의 비구가 적주비구로 판정되어 불교교단으로부터 추방되었다. 제3차 결집 이후 회의의 결정에 따라 아직 불교가 미치지 않은 인도아대륙과 해외에 전법사(포교사) 파견이 이루어졌다. 아쇼카 왕의 마에법칙 제13장에도 아쇼카 왕이 인도 변경지와 다른 나라에 불교전도단을 파견한 내용이 남아 있다(일부에서 제3차 결집을 문자화한 결집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없다).

□ 빠알리의 상좌부가 전하는 인도불교사의 삼장 결집의 완성은 이상과 같이 제3차 결집만을 전한다. 하지만 다른 부파인 설일체유부의 소전에 의하면 기원후 2세기경에 또 다른 제4차 결집이 인도아대륙 본토에서 있었다. 즉 중앙아시아 신장 지역에서 흉노에 쫓기어 인도로 이주한 쿠사나 왕조의 호불왕인 카니시카 왕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제4차 결집은 흥미롭게도 제3차 결집에 의해 완성된 삼장에 대한 주석서 성립이라는 일련의 맥락을 보여준다. 현장의 『대당서역기』 등은 당시 인도에 전해오는 캐쉬미르 결집에 대한 이야기를 잘 채록하고 있다. 제4차 결집은 삼장에 관한 결집보다는 이설의 통일을 위한 삼장의 주석에 중점이 놓여 있다. 나아가 제4차 결집은 대대적인 문자화를 알려준다.

□ 이상과 같이 인도불교사에 있어 네 차례의 결집의 의의를 정리하면 제1차 결집은 삼장 가운데 율장과 함께 경장이 중심이 된 결집이었고, 제2차 결집은 율장이 쟁점이 된 율장과 경장의 결집이었고, 제3차 결집은 논장의 추가로 삼장이 완성된 결집이다. 그리고 제4차 결집은 삼장에 대한 주석서라는 불교전적의 순차적인 정합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sup>2)</sup>

### 3. 중국불교의 전개양상

#### 1) 중국불교사 시대구분

□ 카마다 시게오(鎌田茂雄, 정순일 역, 『중국불교사』, 경서원, 1985 : 『중국불교사』 1·2·3권, 장승)

- I. 전래와 수용 --- 초기번역시대 --- 후한, 삼국의 불교
- II. 발전과 정착 --- 준비육성시대 --- 동진, 남북조의 불교
- III. 완성과 盛大 --- 諸宗성립시대 --- 수, 당의 불교
- IV. 실천과 침투 --- 동화융합시대 --- 송, 원의 불교

□ Arthur F. Wright(『Buddhism In Chinese History』 : 양필승 역, 『중국사와 불교』, 신서원, 1994)

- I. 준비의 기간(The Period of Preparation) --- A.D.65-317
- II. 국내화(육성)의 기간(The Period of Domestication) --- A.D.317-589
- III. 독자적 발전의 기간(The Period of Independent Growth) --- 589-900
- IV. 專有(동화)의 기간(The Period of Appropriation) --- 900-1900

#### 2) 중국불교전래설

- ① 삼대 이전 전래설(伯益, 종병의 명불론)
- ② 주(周)대 전래설(「주서이기」, 「열자」 주목왕 편)
- ③ 공자대 전래설(「열자」 중니 편, 『홍명집』 등)

2) 이상 경전 결집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조준호의 논문 「인도 불전 성립과 체제」(『역경학개론』, 운주사, 2011)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④ 전국시대 말년대 전래설(연 소왕 7년 尸羅, 「拾遺記」)
- ⑤ 신진시대 전래설(아육왕사)
- ⑥ 진시황대 전래설(「불조통기」, 『사기』, 『수서』)
- ⑦ 전한 무제대 전래설(곽거병, 동방삭, 『위서』, 『사기』)
- ⑧ 장건(張騫)대 전래설(『위서』, 대월지국과 흉노족, 실크로드)
- ⑨ 유향(劉向)대 전래설(「명불론」, 역경)
- ⑩ 애제(哀帝)대 전래설(B.C. 2년, 『위략』, (진)景憲과 伊存)
- ⑪ 초왕(楚王) 영(英)의 불불설(A.D. 65년, 『후한서』)
- ⑫ 후한 명제의 감몽구법설(『후한서』, 『불조통기』 등)

### 3) 전래 초기의 중국불교

- ① 노자화호설(老子化胡說)
  - 양해(襄楷)의 상소문(166년), “부도(浮屠)가 되었다....“  
어환의 『위략』 서용전(3세기 중반), “호(胡)를 가르쳤다....“
  - 진대(晉代, 265-316) 왕부(王浮)의 『노자화호경』(不傳)
  - 중국역사와 불교, 도교의 관계
- ② 격의불교(格義佛敎)
  - 초기의 중국 불교도들이 자신의 사상을 설명(번역)하기 위하여 중국의 문헌, 특히 도가 문헌에 있는 표현을 사용함.
  - 노장사상으로 불교를 이해하려는 풍조(無와 空 등)
  - 격의는 비합리적이고 현학적이며 원전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구마라집의 활동과 함께 점차 사라짐
- ③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 후한 명제, 12인의 사신, 필사  
기록상 중국 최초의 불경, 가섭마등과 축법란의 한역(『고승전』)
  - 엄밀한 의미에서 번역서라기보다 편역, 개작에 가까움(도교적 이해)

④ 모자이혹론(牟子理惑論)

- 『홍명집』 권 1, 37장의 문답체
- 유불도 3교의 동이점과 우열을 논함, 중국 불교도가 불교에 관해 저술한 최초의 문헌. 도교적 교리와 신비주의에 반대하는 결연한 입장

4) 4-5세기 중국의 고승

① 도안(道安, 312-384)

- 중국불교의 개척자(특히 화북지역)
- “불법의 근원, 그 시초는 불도징에 의해 도안이 있었고, 그 도안에 의해 혜원이 있었다”.
- 『종리중경목록(綜理衆經目錄)』(『도안록』, 『안록』)
- “최초로 경전을 펴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구역(舊譯)에는 때때로 잘못이 있어 깊은 뜻을 잃어버려 아직 통하지 않는 바가 많다. 항상 강설을 할 때는 오직 대의를 서술하고 전독(轉讀)할 뿐이었다”(『출삼장기집』 「도안전」)
- “한위에서 진에 이르기까지 경전의 전래가 점점 많아졌다. 그러나 경전을 전한 사람의 이름이 설해져 있지 않으므로 뒷사람들이 찾아내려 해도 연대를 추정할 수 없었다. 이에 도안은 경전의 이름을 한데 모아 그 시대와 사람을 표시하고, 새것과 옛것을 상세히 밝히고 정리하여 경록으로 찬술하였다. 여러 경전들이 근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실로 그 공적에 연유한다. 사방의 학사들이 다투어 찾아가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양)고승전』)
- 의례의 제정 및 교단의 정비. 율전번역 장려. 석씨(釋氏)의 사용

②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jiva, 344-413, 350-409)

- 고역(古譯)(안세고지루가참축법호 등) → 구역(구마라집, 본인은 자신의 번역물에 ‘新’자를 붙임)→ 신역(현장)
- 반드시 원전에 충실한 번역은 아니지만, 유려한 번역문장의 생명력은 대단한 것으로 평가됨. 중국 불교교학의 발전과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기록됨.
- 전진왕 부견이 장수 여광에게 서역 정벌을 시키면서 라집을 모셔오라고 했다는 고승전의 기록이 전함(역사서 『진서』에는 없는 내용). 라집은 401년 후진의 요흥이 후량을 함락시키면서 장안으로 모셔감(후량에서 라집은 역경이나 불교 교화와 관련한 일을 거의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훗날 역경사업의 기초가 되었던 중국어 학습기간으로서의 의의는 있다고 볼 수 있음). 요흥은 대표적인 승불군주로 라집에게 소요원의 서명각을 제공하고 본격적

인 역경사업을 후원함. 그의 문하에서 역경을 도운 인물들이 무려 3,000명에 달했다고 함.

- 라집의 역경은 중국불교 학파의 형성, 천태·선·정토 등 중국적 불교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함. 아울러 수많은 학생들이 그의 문하에서 배출되므로써 중국불교의 학적 기반이 대폭 확대되는 계기를 맞이함.

③ 혜원(慧遠, 334-416)

- 도안불교의 계승자, 강남지역 포교의 선구자, 수행자의 표상(律師)
- 21세 때 도안의 명성을 듣고 동생 혜지와 함께 북상하여 도안을 만남. 이후 25년간에 걸쳐 도안을 사사. 출가 직후 도안으로부터 『반야경』 강의를 들은 혜원은 “儒道九流는 皆糠粃”라고 탄식함(유교→도교→불교로 이어지는 사상편력). 24세 무렵부터 『반야경』을 강설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도안은 혜원에게 만큼은 『장자』 등의 중국 고전을 이용하여 불교를 이해시키는 방법을 허락하였다고 함.
- 전란으로 인하여 도안이 제자 500여 명과 함께 양양으로 이주(혜원 32세). 이 때부터 13년간 도안의 문하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섭렵. 378년(379년) 전진왕 부견이 양양을 공격하여 도안을 데려가자 도안 교단은 와해됨. 혜원은 이 때 스승과 헤어졌으며, 형주 상명사, 여산 심양(강서성 九江市) 용천정사(381년)를 거쳐 동림사(384년 이후)에 주석. 이후 416년 8월 입적할 때까지 30여 년간 여산 밖으로 단 한번도 나가지 않음. 401년 장안에 도착한 구마라집과는 서신을 통한 교분을 맺음(『대승대의장』, 18통의 서신).
- 백련결사(불교 결사운동의 효시)
- ‘배왕론(拜王論)’ 논쟁과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  
인도에서는 비록 천민 출신의 승려라 할지라도 왕은 그에게 예를 표하는 관습이 있었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래 천자의 권위 속에 종교적 권위까지 포함시키는 유교적 전통과 불교는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승려 역시 제왕에게 예를 표해야 한다는 이른바 배왕론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제1차 대립〉

- 최초로 출가 사문도 왕에게 경배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유빙이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한 이후 340년 승려를 ‘은일의 선비’로 규정하고 왕에게 경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정에서 강력한 불교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하충은 유빙의 주장에 반발하였고(『홍명집』에는 유빙의 조문이 2개, 하충의 반론이 3개 각각 실려 있다), 이후 몇 차례의 논란이 진행되다가 당시 예관들이 하충의 의견에 동조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 〈제2차 대립〉

- 일시적으로 종결되는 듯 했던 배왕론 문제는 태위 환현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403년 다시 문제를 제기하였다. 환현은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배왕론을 주장하였으며, 팔좌·왕밀 등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그들이 동조하지 않자 마지막으로 당시 승단의 최고 지도자였던 혜원에게 직접 의견을 물었다. 환현과 혜원은 배왕론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놓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이 때의 논란은 403년 12월 도인은 왕에게 예배하지 않아도 좋다는 내용의 조칙(「許道人不致禮詔」)이 반포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혜원은 이같은 논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여 5편에 달하는 「사문불경왕자론」을 저술하였다. 결국 4-5세기 중국 승단은 권력으로부터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승려들은 스스로 '臣稱'을 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말았다.

## 5) 남북조시대의 불교

- 동진시대의 불교를 계승하여 엄청난 불교의 발전을 이룩함. 한역불전을 바탕으로 본격적 불교연구가 진행됨. 학파의 탄생. 홍불과 폐불의 엇갈린 결과가 연속됨. 도교와의 대립. 불교 문화의 발달. 위경(僞經)의 탄생
- 남조 : 유송(420-479) → 제(479-502) → 양(502-557) → 진(557-589)
- 북조 : 북위(386-534) → 동위(534-550) → 북제(550-577)  
→ 서위(535-556) → 북주(557-581)
- 梁 무제의 불교
  - 武帝 재위기간은(502-549) 남조 불교문화의 최전성기에 해당
  - 무제는 중국의 역대 제왕 가운데 가장 특출한 신앙을 보였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음. 유학, 문학 등 뛰어난 학문적 재질을 갖춘. 본래 도교 가문 출신이었으나 504년 도교를 버리고 불교에 귀의할 것을 선언하였다고 함(정사류에는 없는 내용).
  - 511년 - 「단주육문(斷酒肉文)」 공포. 이후 철저한 계율생활 유지
  - 517년 - 희생(犧牲)제도의 폐지. 한족의 심한 반발. 도관을 폐지하고 도사들을 환속시킴(육수정 등의 도사들이 모두 북제로 달아남)
  - 527년 - 동태사(同泰寺) 완공(이후 무제 불교활동의 중심 무대가 됨). 양의 도읍지인 건강은 "도읍의 大寺가 700여 곳이며 僧尼講衆이 항상 1만이 있었다"고 함
  - 법회를 이용하여 대사면을 하던가 또는 연호를 자주 개정.
  - 사신(捨身, 528년, 546년, 547년 등)

- 『열반경』 『반야경』 『유마경』 등에 대한 주석서. 스스로 경전 강의
- 13개소에 달하는 무진장(無盡藏) 설립
- '황제보살'로 칭송됨

#### □ 북위의 불교

- 태조 → 태종 → 세조
- 세조(太武帝)때 최초의 법난 발생
  - 삼무일종의 법난(북위 태무제, 북주 무제, 당 무종, 후주 세종)
  - 태무제의 법난은 최호(381-450)와 구겸지(363-448)가 주동
- 문성제(452-465 재위)가 즉위하여 흥불. 사문통 담요의 활동

#### □ 북주 무제의 폐불

- 도교와의 갈등이 빌미가 됨
- 위원승과 장빈이 주동

### 6) 수 · 당대의 불교

□ 수(589-618), 당(618-907)의 불교는 중국불교 최전성기에 해당. 각 학파와 종파의 성립으로 중국화된 불교의 다양한 전개 양상을 살필 수 있음(특히 선종과 천태종 등). 귀족 뿐 아니라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불교신앙이 확산됨. 동북아시아 지역의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 국가불교적인 모습이 완전하게 정착됨으로써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 회창 법난 이후 중국불교는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게 됨.

□ 수 문제(581-604, 楊堅, 중국 역사의 명군으로 평가됨)

- 즉위 이후 다양한 불교 진흥책을 시행. 수 당대 불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됨. 586년 이후 공식적으로 불교도가 될 것을 맹세함. 이후로 '천자보살'로 불리움.
- 통일된 중국대륙의 결집과 통치를 위해 불교사상을 적극 활용. 110개소에 이르는 지역에 불탑을 건립(아쇼카대왕). 포교를 위해 25衆(600년, 교화단체)과 5衆(592년, 연구단체)의 조직을 적극 지원.

- 수 양제(604-617, 楊廣, 유교사가들과 불교사가들의 다른 평가)
  - 진(陳)과의 전쟁 과정에서 파괴된 불상 경전 등을 복구. 천태 지의, 길장 등과 교분을 맺음. 특히 지의는 양제에게 보살계를 주고 ‘총지보살’이라는 법호를 수여. 양제 역시 지의에게 ‘지자대사’의 호를 수여함.
  - 607년 승려들은 황제와 관리들에게 예를 올려야 한다는 칙령을 반포(남방 승단의 전통이 종식됨). 운하 건설, 궁전 건립, 침략 전쟁 등으로 인해 수의 멸망을 초래함.
  
- 당 태종(627-649, 성군으로 평가됨, 貞觀之治)
  - 즉위 초기에는 불교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음. 오히려 노자와 성이 같다는 이유로 도교 우선적 정책을 펴. 물론 국가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불교적 시책은 시행(자신이 승리한 전장에 탑과 암자를 건립, 전사자들을 위한 천도재, 인왕경 대운경 등의 독송 권장 등)
  - 재위 후반기에 현장의 영향으로 불교에 귀의. 현장의 구법 여행 직후(645년) 상면(“나는 이제 불교의 세계가 끝이 없는 것임을 알았다. 유교 도교나 다른 학설들을 이에 비교하면 마치 웅덩이를 큰 바다에 비교하는 것과 같다. 三敎의 가르침이 대체로 같다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말이다”). 태종의 정치는 중국 정치사에서 크게 주목됨.
  
- 회창(會昌) 폐불(845년, 중국역사상 가장 철저하고 대규모로 시행된 폐불)
  - 중국 불교가 쇠퇴기로 전환되는 사건(도교와의 갈등. 황제 측근의 사대부 세력과 불교를 지지한 환관들의 갈등. 승단의 타락 등의 요인)
  - 도사 조귀진 등의 음모. 「毀佛寺勒僧尼還俗制」(845년) 공포. 이어 즉위한 선종이 불교 탄압을 중단하고 조귀진 등 11명을 처형
  
- 당말 오대의 불교(학문불교 쇠퇴, 선종 대두, 환관의 전횡, 농민 起義)
- 후주 세종대의 폐불(955년)

#### 4. 동아시아의 구법승과 그들이 남긴 기록

□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수많은 구법승들은 ‘법(法)을 구하려는 종교적인 동기’로 온갖 위험을 무릅쓰면서 중앙아시아 또는 인도를 향한 순례를 감행하였다. 구법승들의 순례는 3세기부터 시작되어 11세기 말까지 이어졌으며, 이들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이들만 약 140여 명에 이른다. 상인들에게 실크로드는 교역로에 지나지 않았지만 구법승들에게 실크로드는 불교문화를 수용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전파하는 통로였다. 이러한 구법승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구법행으로 인해 중국 너머에 있는 다양한 세계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쌍방향적인 문화교류도 가능하게 되었다. (「해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엮음, 『고승법현전』, 2013, p.16)

□ 법현(法顯, 339-420, 카마다 시계오는 335-420)

- 기록상 전하는 중국 최초의 구법승
- 속성은 공씨, 평양 무양인, 3세에 사미가 되어 9세(또는 20세) 구족계 수지. 율장이 빠진 것을 개탄하고 구법행 결심. 399년 장안 출발. 마갈제국 천왕사에서 3년간 주석함. 인도에서 인도어를 공부한 이후 대중부 율장을 필사하고 설일체유부 율장·대반열반경 등을 구해서 돌아옴.
- 399-412년까지의 14년간 고행(11인의 도반과 함께). 이 기간동안 30여 국의 불적·종교·풍속 지리 등을 기술한 것이 『법현전』(『불국기』, 『歷遊天竺記傳』).
- 현장(600-664)의 『대당서역기』, 의정(635-713)의 『남해기귀전』(『대당서역구법고승전』)과 함께 3대 불적기행문으로 칭송됨. 현장은 28세, 의정은 37세에 각각 구법여행을 떠났으나 법현은 60세에 출발.

□ “돈황태수 이호는 일행이 사하를 건너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었다. 사하에는 악귀와 열풍이 많아서 만난다면 모두 죽고 하나라도 온전한 것은 없을 것이다. 위로는 날아가는 새가 없었고, 아래로는 달리는 짐승이 없었다. 두루 바라보고 멀리 보아서 건널 곳을 구하려고 해도 헤아려지는 바를 알 수 없었다. 오직 죽은 사람의 마른 뼈로써 표식을 삼을 뿐이었다”(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엮음, 『고승법현전』, 2013, pp. 65-66)

□ 현장(玄奘, 602-664, 596-664)은 당의 정관 원년(627) 또는 정관 3년(630)에 장안을 출발해서 중앙아시아와 인도를 유력한 후에 정관 19년(645)에 귀국하였으며, 태종의 칙명에 의해

서 『대당서역기』를 편찬하였다. 여기에는 각 지역의 역사와 전설 등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7세기 전반의 중앙아시아 및 인도의 풍속, 지리, 언어, 문화 등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준다.

- 의정(義淨, 635-713)은 당의 천수 2년(691)에 『남해기귀내법전』과 『대당서역구법고승전』을 저술하였다. 전자는 인도와 남해 여러 나라를 유력하면서 직접 본 불교도의 생활양식을 기록한 것이며, 후자는 당의 정관 연간(627~649)부터 천수 연중(690~691)까지의 기간 동안에 서역으로 구법을 위해 떠난 60명의 고승의 전기를 수록한 것이다. 이들 문헌을 통해 당시 인도불교의 상황은 물론 남해의 여러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신라인 혜초(慧超)는 중국에서 해로로 인도에 건너가서 불교성지를 참배하고, 오천축으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개원 15년(727) 11월에 당나라의 장안으로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저술인 『왕오천축국전』은 원본이 산실되어 헤림의 『일체경음의』에 본서의 음의 3권만이 전해지고 있었지만, 1908년에 돈황의 막고굴에서 발견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이 문헌은 8세기 중앙아시아 각국의 제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일본인 자각대사 원인(圓仁, 794-864)은 794년 태어나, 15세 때 천태종 좌주 최징의 제자가 되었다. 838년 일본의 건당사와 함께 당에 들어가, 847년까지 머물렀다. 원인은 당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오늘날 남경에서부터 산둥반도, 오대산, 장안을 거치면서 ‘구법순례’를 하였다. 그러나 당 무종에 의해 불교탄압이 단행되자, 847년 재당신라인의 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원인은 당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재당신라인의 많은 도움을 받아 귀국 직후, 당에서의 구법순례 여정을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라는 기록으로 남겼다. 이후 연력사의 주지를 맡으면서 일본 천태종의 3대 좌주가 되었고, 864년 그가 입적하자 일본 조정에서는 자각대사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 이 자료는 장보고, 재당신라인, 범패 등 신라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중국불교사 관련 참고문헌〉

- 鎌田茂雄, 정순일 역, 『중국불교사』, 경서원, 1985
- Kenneth K.S.Chen, 박해당 역, 『중국불교』 상·하, 민족사, 1991·1994
- 野上俊靜 외, 권기중 역, 『중국불교사』, 현대불교신서 54, 동국대, 1985
- 토오도오 교순 외, 차차석 역, 『중국불교사』, 대원정사, 1992
- 木村清孝, 장휘옥 역, 『중국불교사상사』, 민족사, 1989
- 鎌田茂雄, 장휘옥 역, 『중국불교사』 1·2·3권, 장승
- 任繼愈, 『중국불교사』 1·2, 중국사회과학출판사, (추만호·안영길 역, 『중국중세불교사상비판』, 민족사, 1989)
- Arthur.F.Wright, 『Buddhism In Chinese History』, (양필승 역, 『중국사와 불교』, 신서원, 1994)
- 정성본, 『중국 선종의 성립사 연구』, 민족사, 1991
- 이부키 아츠시(伊吹敦), 최연식 역, 『중국 선의 역사』, 대숲바람, 2005
- 기무라 기요타카(木村清孝), 정병삼 역, 『중국화엄사상사』, 민족사, 2005

# 불교의 전파와 발전

## 중국불교를 중심으로

중앙승가대 김상영

### 목차

- 01 / 머리말
- 02 / 불교사의 이해와 경전결집의 역사
- 03 / 고 중세 중국불교의 전개양상
- 04 / 동아시아의 구법승과 그들이 남긴 썩씨

## 01. 동아시아사와 불교

- 1. 한역(漢譯)불전을 바탕으로 한 대승불교 국가
- 2. 공통의 역사관에 기초한 동아시아사 만들기와 불교

## 02. 불교사 대강의 이해와 경전 결집의 역사

### 1. 불교사의 대강

‘초기불교(근본불교-원시불교)

→ 부파불교 → 대승불교’

### 1. 불교사의 대강

- 1. 제1 응릉기: 고타마 붓다의 시대
- 2. 제2 분파기: 부파불교시대  
소승불교, 아비달마(阿毘達磨, Abhidharma)불교  
성문(聲聞)불교
- 3. 제3 발달기: 대승불교의 시대
- 4. 제4 변천기: 인도 불교 쇠퇴기  
1000년경부터 1500년경까지는 우리나라, 일본, 몽고  
티베트, 미얀마 등에서 불교가 매우 융성했던 황금기

### 2. 경전결집의 역사

▶결집

결집(結集: Saṅgīti)이라는 말은 빠알리 또는 산스크리트의 상기띠(Saṅgīti)라는 말의 한역이다.

Saṅgīti는 ‘노래하다’ ‘합창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Saṅgayati (sam+gayati)에서 명사화된 말이다. Saṅgīti에 대한 한역은 결집 이외에 합송(合誦), 집법(集法), 등승(等誦) 등으로 옮겨졌다.

## 2. 경전결집의 역사

- ▶ 제1차 결집(붓다의 열반 직후) '왕사성결집' '오백집법'
- ▶ 제2차 결집(불멸 후 100년 경)  
'질백집법' '질백결집' '웨살리결집'  
교단이 최초로 상좌부와 대중부로 분열됨
- ▶ 제3차 결집(아쇼카왕 시대)  
'와씨성결집' '천인집법' '일천결집'  
교단정화를 위한 결집, 불교가 미치지 않은 인도의 지역과  
예외에 전법사(포교사) 파견
- ▶ 제4차 결집(A.D.2세기 경) 삼장의 문자화, 주석서 성립

## 03. 고 증세 중국불교의 전개양상

### 1. 중국불교사 시대구분

#### ▶ 카마다 시게오(鎌田茂雄)

- 전래와 수용 --- 초기번역시대 --- 후한, 삼국의 불교
- 발전과 정착 --- 준비육성시대 --- 동진, 남북조의 불교
- 안정과 盛大 --- 諸宗성립시대 --- 수, 당의 불교
- 실현과 침투 --- 동화융합시대 --- 송, 원의 불교

### 1. 중국불교사 시대구분

#### ▶ Arthur F. Wright

- 1 준비의 기간(The Period of Preparation)  
A.D.65 - 317
- 2 국내화(육성)의 기간(The Period of Domestication)  
A.D.317 - 589
- 3 독자적 발전의 기간(The Period of Independent Growth)  
589-900
- 4 專有(동화)의 기간(The Period of Appropriation)  
900 - 1900

### 2. 중국불교 전래설

- 1 삼대 이전 전래설
- 2 주(周)대 전래설
- 3 공짜대 전래설
- 4 전국시대 말년대 전래설
- 5 전진시대 전래설
- 6 진시왕대 전래설

### 2. 중국불교 전래설

- 7 전한 무제대 전래설
- 8 장건(張騫)대 전래설(B.C. 138년-실크로드의 개척과 불교)
- 9 유양(劉向)대 전래설
- 10 애제(哀帝)대 전래설
- 11 초왕(楚王) 영(英)의 봉불설(A.D. 65년-불교 공인문제의 이해)
- 12 후한 명제의 감몽구법설

### 3. 전래 초기의 중국불교

- ▶ 노자와호설(老子化胡說)
- ▶ 격의불교(格義佛敎)
- ▶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 ▶ 모자이혹론(牟子理惑論)

#### 4. 4 ~ 5세기 중국의 고승

- ▶ 도안(道安, 312 - 384)
- 중국불교의 개척자(특히 화북지역)
- “불법의 근원, 그 시초는 불도장에 의해 도안이 있었고, 그 도안에 의해 예원이 있었다” .
- 379년 전진왕 부견이 양양을 공략한 이후 도안, 습작시를 장안으로 데려옴. 이후 7년간 장안 오장사라는 사찰에 머물며 수천 명의 승도를 지도함
- 『종리중경목록(綜理衆經目錄)』 『도안록』 『안록』

#### 4. 4 ~ 5세기 중국의 고승

- ▶ 도안(道安, 312 - 384)
- “안 위에서 전에 이르기까지 경전의 권례가 점점 많아졌다. 그러나 경전을 전한 사람의 이름이 전해져 있지 않으므로 뒷사람들이 찾아내려 해도 연대를 추정할 수 없었다.

#### 4. 4 ~ 5세기 중국의 고승

- 이에 도안은 경전의 이름을 안데 모아 그 시대와 사람을 표시하고, 새 것과 옛 것을 상게이 밝히고 정리아어 경적으로 찬술하였다. 여러 경전들이 근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실로 그 공적에 연유한다. 사방의 학사들이 다투어 찾아가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 (『양고승전』)
- 의계의 제정 및 교단의 정비. 율전번역 장려. 석씨(釋氏)의 사용

#### 4. 4 ~ 5세기 중국의 고승

- ▶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jiva, 344-413, 350-409)
- 고역(古譯)(안세고, 지루가람, 축법오 등) → 구역(구마라집, 본인은 자신의 번역물에 ‘新’ 자를 붙임) → 신역(신장)
- 반드시 원전에 충실한 번역은 아니지만, 유려한 번역문장의 생명력은 대단한 것으로 평가됨. 중국 불교교학의 발전과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기록됨.

#### 4. 4 ~ 5세기 중국의 고승

- ▶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jiva, 344-413, 350-409)
- 라집의 역경은 중국불교 학파의 형성, 전제. 전. 정토 등 중국적 불교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함. 아울러 수많은 학승들이 그의 문하에서 배출됨으로써 중국불교의 약척 기반이 대폭 확대되는 계기를 맞이함.

#### 4. 4 ~ 5세기 중국의 고승

- ▶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jiva, 344-413, 350-409)
- 전진왕 부견이 장수 여광에게 서역 정벌을 시키면서 라집을 모셔오라고 했다는 고승전의 기록이 전함.
- 라집은 401년 후진의 요충이 우량을 함락시키면서 장안으로 모셔감.

#### 4. 4 ~ 5세기 중국의 고승

- ▶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jiva, 344-413, 350-409)
- 요옹은 대표적인 승불군주로 라집에게 소요원의 서명각을 제공하고 본격적인 역경사업을 후원함.
- 그의 문하에서 역경을 도운 인물들이 무려 3,000명에 달했다고 함.

#### 4. 4 ~ 5세기 중국의 고승

- ▶ 혜원(慧遠, 334-416)
- 도안불교의 계승자, 강남지역 포교의 선구자, 수행자의 표상(律師)
- 21세 때 도안의 명성을 듣고 동생 예지와 함께 북상하여 도안을 만남. 이후 25년간에 걸쳐 도안을 사사. 출가 직후 도안으로부터 『반야경』 강의를 들은 혜원은 “儒道九流는 皆糠粃” 라고 탄식함.

#### 4. 4 ~ 5세기 중국의 고승

- ▶ 혜원(慧遠, 334-416)
- 24세 무렵부터 『반야경』을 강설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도안은 혜원에게 만큼은 『장가』 등의 중국 고전을 이용하여 불교를 이데시키는 방법을 여러하였다고 함.

#### 4. 4 ~ 5세기 중국의 고승

- ▶ 혜원(慧遠, 334-416)
- 전란으로 인하여 도안이 제자 500여 명과 함께 양양으로 이주(혜원 32세). 이 때부터 13년간 도안의 문하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섭렵.

#### 4. 4 ~ 5세기 중국의 고승

- ▶ 혜원(慧遠, 334-416)
- 378년(379년) 전진왕 부견이 양양을 공격하여 도안을 데려가자 도안 교단은 와해됨. 혜원은 이 때 스승과 헤어졌으며, 영주 상명사, 여산 심양(강서성 九江市) 용현정사(381년)를 거쳐 동림사(384년 이후)에 주석.

#### 4. 4 ~ 5세기 중국의 고승

- ▶ 혜원(慧遠, 334-416)
- 이후 416년 8월 임척할 때까지 30여 년간 여산 밖으로 단 한번도 나가지 않음.
- 401년 장안에 도착한 구마라집과는 서신을 통한 교분을 맺음(『대승대의장』, 18통의 서신).

#### 4. 4 ~ 5세기 중국의 고승

- ▶ 혜원(慧遠, 334-416)
- ▶ 편란으로 인하여 도안이 제자 500여 명과 함께 양양으로 이주(혜원 32세). 이 때부터 13년간 도안의 문하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섭렵.
- ▶ 378년(379년) 전진왕 부견이 양양을 공격하여 도안을 데려가자 도안 교단은 와해됨. 혜원은 이 때 스승과 헤어졌으며, 영주 상명사, 여산 심양(경서성 九江市) 용현정사(381년)를 거쳐 동림사(384년 이후)에 주역.

#### 4. 4 ~ 5세기 중국의 고승

- ▶ 혜원(慧遠, 334-416)
- ▶ 이후 416년 8월 입적할 때까지 30여 년간 여산 밖으로 단 한번도 나가지 않음.
- ▶ 401년 장안에 도착한 구마라집과는 서신을 통한 교분을 맺음 (『대승대의장』, 18통의 서신).

#### 4. 4 ~ 5세기 중국의 고승

- ▶ 혜원(慧遠, 334-416)
- ▶ 백련결사(불교 결사운동의 요시)  
배왕론(拜王論) 논쟁과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  
인도에서는 비록 현민 출신의 승려라 할지라도 왕은 그에게 예를 표하는 관습이 있었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래 현자의 권위 속에 종교적 권위까지 포함시키는 유교적 전통과 불교는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다

#### 4. 4 ~ 5세기 중국의 고승

- ▶ 혜원(慧遠, 334-416)
- ▶ 이러한 문제는 승려 역시 제왕에게 예를 표해야 한다는 이른바 배왕론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1차 대립(340년, 유빙과 야중의 대립)  
2차 대립(403년, 환연과 혜원의 논쟁, 「사문불경왕자론」)

#### 5. 남북조시대의 불교

- ▶ 동진시대의 불교를 계승하여 엄청난 불교의 발전을 이룩함.  
한역불전을 바탕으로 본격적 불교연구가 진행됨. 학파의 탄생.  
응불과 폐불의 엇갈린 결과가 연속됨. 도교와의 대립.  
불교문학의 발달. 위경(偽經)의 탄생
- ▶ 남조 : 유송(420-479) → 제(479-502) → 양(502-557) → 진(557-589)
- ▶ 북조 : 북위(386-534) → 동위(534-550) → 북제(550-577) → 서위(535-556) → 북주(557-581)
- ▶ 梁 무제의 불교 : 지나친 응불로 인한 폐단

#### 5. 남북조시대의 불교

- ▶ 북위의 불교
- ▶ 태조 → 태종 → 세조
- ▶ 세조(太武帝)때 최조의 법난 발생  
삼무일종의 법난(북위 태무제, 북주 무제, 당 무종, 후주 세종)  
태무제의 법난은 최호(381-450)와 구경지(363-448)가 주동
- ▶ 문성제(452-465 재위)가 즉위하여 응불. 사문통 담요의 율동 -역굴 사원의 조성(운강)과 '왕제즉여래' 전통
- ▶ 북주 무제의 폐불
- ▶ 도교와의 갈등이 빌미가 됨-위원승과 장빈이 주동

## 6. 수, 당대의 불교

- ▶ 수(589-618), 당(618-907)의 불교
- 중국불교 최 전성기에 해당.
- 각 학파와 종파의 성립으로 중국화된 불교의 다양한 전개 양상을 살필 수 있음(특히 선종과 천태종 등).
- 귀족 뿐 아니라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불교신앙이 확산됨.
- 동북아시아 지역의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
- 국가불교적인 모습이 완전하게 정착됨으로써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
- 외장 법난 이후 중국불교는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게 됨.

## 6. 수당대의 불교

- ▶ 수 문제(581-604, 楊堅, 중국 역사의 명군으로 평가됨)
- 즉위 이후 다양한 불교 진흥책을 시행.
- 수 당대 불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됨.
- 586년 이후 공식적으로 불교도가 될 것을 맹세함.
- 이후로 '천자보살'로 불리움.
- 통일된 중국대륙의 결집과 통치를 위해 불교사상을 적극 활용.
- 110개소에 이르는 지역에 불탑을 건립(야오카대왕).
- 포교를 위해 25衆(600년, 교화단체)과 5衆(592년, 연구단체)의 조직을 적극 지원.

## 6. 수당대의 불교

- ▶ 수 양제(604-617, 楊廣, 유교사가들과 불교사가들의 다른 평가)
- 진(陳)과의 전쟁 과정에서 파괴된 불상 경전 등을 복구.
- 천태 지의, 길강 등과 교분을 맺음.
- 특이 지의는 양제에게 보살계를 주고 '충지보살'이라는 법호를 수여.
- 양제 역시 지의에게 '지자대사'라는 호를 수여함.
- 607년 승려들은 양제와 관리들에게 예를 올려야 한다는 칙령을 반포(남방 승단의 전통이 중식됨).
- 운아 건설, 궁전 건립, 침략 전쟁 등으로 수의 멸망을 초래함.

## 6. 수당대의 불교

- ▶ 당 태종(627-649, 성군으로 평가됨, 貞觀之治)
- 즉위 초기에는 불교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음.
- 오나라 노자와 성이 같다는 이유로 도교 우선적 정책을 펴.
- 물론 국가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불교적 시책은 시행(자신이 승리한 전쟁에 탑과 암자를 건립, 전사자들을 위한 전도제, 인왕경 대운경 등의 독송 권장 등)

## 6. 수당대의 불교

- ▶ 당 태종(627-649, 성군으로 평가됨, 貞觀之治)
- 개위 후반기에 연강의 영향으로 불교에 귀의. 연강의 구법 여행 직후(645년) 상연(“나는 이제 불교의 세계가 끝이 없는 거임을 알았다. 유교 도교나 다른 학설들을 이에 비교하면 마치 웅덩이를 큰 바다에 비교하는 것과 같다. 三教의 가르침이 대대로 같다는 것은 전여 터무니 없는 말이다”). 태종의 정치는 중국 정치사에서 크게 주목됨.

## 6. 수당대의 불교

- ▶ 회창(會昌) 폐불(845년, 중국역사상 가장 철저하고 대규모로 자행된 폐불)
- 중국 불교가 쇠퇴기로 전환되는 사건(도교와의 갈등. 왕제 측근의 사대부 세력과 불교를 지지한 환관들의 갈등. 승단의 타락 등의 요인)
- 도사 조귀진 등의 음모. 『毀佛寺勒僧尼還俗制』(845년) 공포. 이어 즉위한 선종이 불교 탄압을 중단하고 조귀진 등 11명을 처형

## 6. 수당대의 불교

- ▶ 당말 오대의 불교  
(학문불교 쇠퇴, 선종 대두, 환관의 전횡, 농민 起義)
- ▶ 후주 세종대의 폐불(955년)

## 04. 동아시아의 구법승과 그들이 남긴 기록

- ▶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수많은 구법승들은 '법(法)을 구하려는 종교적인 동기'로 온갖 위업을 무릅쓰면서 중앙아시아 또는 인도를 향한 순례를 감행하였다.
- ▶ 구법승들의 순례는 3세기부터 시작되어 11세기 말까지 이어졌으며, 이들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이들만 약 140여 명에 이른다.

## 04. 동아시아의 구법승과 그들이 남긴 기록

- ▶ 양인들에게 실크로드는 교역로에 지나지 않았지만 구법승들에게 실크로드는 불교문화를 수용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전파하는 통로였다. 이러한 구법승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구법행으로 인해 중국 너머에 있는 다양한 세계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쌍방향적인 문화교류도 가능하게 되었다.  
(『예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엮음, 『고승법연전』, 2013, p.16)

## 04. 동아시아의 구법승과 그들이 남긴 기록

- ▶ 법현(法顯, 339-420, 335-420)
- 기록상 전하는 중국 최초의 구법승
- 속성은 공씨, 평양 무양인, 3세에 사마가 되어 9세(또는 20세) 구족계 수지. 율장이 빠진 것을 개탄하고 구법행 결심.
- 399년 장안 출발. 마갈계국 현왕사에서 3년간 주석함.

## 04. 동아시아의 구법승과 그들이 남긴 기록

- 인도에서 인도어를 공부한 이후 대장부 율장을 필사하고 열일계유부 율장·대반열반경 등을 구해서 돌아옴.
- 399-412년까지의 14년간 고행(11인의 도반과 함께). 이 기간동안 30여 국의 불적, 종교, 풍속, 지리 등을 기술한 것이 『법현전』(『불국기』, 『歷遊天竺記傳』).
- 연광(600-664)의 『대당서역기』, 의정(635-713)의 『남해기귀내법전』(『대당서역구법고승전』)과 함께 3대 불적 기행문으로 칭송됨.
- 연광은 28세, 의정은 37세에 각각 구법여행을 떠났으나 법현은 60세에 출발.

## 04. 동아시아의 구법승과 그들이 남긴 기록

- ▶ “돈왕태수 이호는 일행이 사자를 건내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었다. 사자에는 약구와 열풍이 많아서 만나다면 모두 죽고 하나라도 온전한 것은 없을 것이다. 위로는 날아가는 새가 없었고, 아래로는 달리는 짐승이 없었다. 두루 바라보고 멀리 보아서 건널 곳을 구하려고 애도 해야 겨우 지는 바를 알 수 없었다. 오직 죽은 사람의 마른 뼈로써 표식을 삼을 뿐이었다”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엮음, 『고승법연전』, 2013, pp. 65-66)

#### 04. 동아시아의 구법승과 그들이 남긴 기록

• 현장(玄奘, 602-664, 596-664)은 당의 정관 원년(627) 또는 정관 3년(630)에 장안을 출발해서 중앙아시아와 인도를 유력한 후에 정관 19년(645)에 귀국하였으며, 태종의 칙명에 의해서 『대당서역기』를 편찬하였다. 여기에는 각 지역의 역사와 전설 등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7세기 전반의 중앙아시아 및 인도의 풍속, 지리, 언어, 문화 등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준다.

#### 04. 동아시아의 구법승과 그들이 남긴 기록

• 의정(義淨, 635-713)은 당의 현수 2년(691)에 『남해기귀내법전』과 『대당서역구법고승전』을 저술하였다. 전자는 인도와 남해 여러 나라를 유력하면서 직접 본 불교도의 생활양식을 기록한 것이며,

#### 04. 동아시아의 구법승과 그들이 남긴 기록

• 후자는 당의 정관 연간(627~649)부터 현수 연중(690~691)까지의 기간 동안에 서역으로 구법을 위해 떠난 60명의 고승의 전기를 수록한 것이다. 이들 문헌을 통해 당시 인도불교의 상황은 물론 남해의 여러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04. 동아시아의 구법승과 그들이 남긴 기록

• 신라인 혜초(慧超)는 중국에서 해로로 인도에 건너가서 불교성지를 참배하고, 오천축으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개원 15년(727) 11월에 당나라의 장안으로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 04. 동아시아의 구법승과 그들이 남긴 기록

그의 저술인 『왕오천축국전』은 원본이 산실되어 예림의 『일제경음의』에 본서의 음의 3권만이 전해지고 있었지만, 1908년에 돈황의 막고굴에서 발견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이 문헌은 8세기 중앙아시아 각국의 제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04. 동아시아의 구법승과 그들이 남긴 기록

• 일본인 자각대사 엔닌(圓仁, 794-864)은 794년 태어나, 15세 때 천태종 좌주 최장의 제자가 되었다. 838년 일본의 견당사와 함께 당에 들어가, 847년까지 머물렀다. 엔닌은 당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오늘날 남경에서부터 산둥반도, 오대산, 장안을 거치면서 '구법순례'를 하였다. 그러나 당 무종에 의해 불교탄압이 단행되자, 847년 제당신라인의 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 04. 동아시아의 구법승과 그들이 남긴 기록

▶ 엔닌은 당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제당신라인의 많은 도움을 받아 귀국 직후, 당에서 구법승례 여정을 「입당구법승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라는 기록으로 남겼다. 이후 연력사의 주지를 맡으면서 일본 천태종의 3대 짝주가 되었고, 864년 그가 입적하자 일본 조경에서는 짜각대사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 이 자료는 장보고, 제당신라인, 범패 등 신라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감사합니다 ^^~\*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구조

이근명 (외국어대)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구조

이근명 (외국어대)

## 1. 머리말

‘동아시아’는 본래 아시아의 동부 지역을 가리키는 지리적 용어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늘날 동아시아는 단순한 지리적 명칭 또는 역사적 명칭이 아닌, 지향을 가진 지역 질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민족·국가가 지난날 지속적으로 영위해 온 역사적 경험과 현대에 들어와서 두드러진 성공적인 경제발전·사회발전을 묶어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역사적 경험만 하더라도 이 지역 나라들의 관련도는 그 정도가 서로 같지는 않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여러 민족·나라들로는 중국, 한국, 몽골, 일본, 티벳 그리고 베트남 등을 들 수 있는데, 예컨대 티벳과 일본의 역사적 상호관련도를 중국과 한국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를 알 수 있다.

6세기로부터 8세기, 즉 삼국시대의 말기와 통일신라 시대, 중국사를 기준으로 하면 수당시대에 이른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우리 중등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동아시아 세계’는 그것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 동아시아 문화권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듯 한자와 율령, 유교, 불교(대승불교)라는 네 가지 문화요소를 공유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지역적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그 주변 지역(티벳과 몽골)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주변 지역의 경우 지역 사회의 동태에 따라 동아시아 세계에 포함되기도 하고 때로 그렇지 아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공유되었다고 하는 네 가지 문화 요소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중국에서 연원하거나 혹은 재정립된 것들이다. 한자와 율령, 유교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대승불교도 처음 출현한 것은 기원 전후의 인도였지만 중국에 전래되어 새로운 형태로 발

전하였다.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어 있는 불교의 종파는 이렇게 8세기 이전의 중국에서 출현하여 재정립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조공-책봉이라는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이다. ‘동아시아 문화권론’을 제기하는 학자들 공히 네 가지 문화 요소의 확산과 조공-책봉이라는 국제 질서가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같은 학자는, ‘동아시아 문화권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과 합치되며, 중국 황제와 주변 국가(민족) 수장(군주) 사이에 형성된 정치 관계(조공-책봉)를 기반으로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권에 등장하였던 중국 중심의 정치 질서, 즉 조공-책봉 관계가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다름 아닌 한반도이다. 전통시대 중국의 왕조는 조공-책봉 체제를 모든 외국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적용된 곳은 동아시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야말로 조공-책봉이라는 국제질서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보이는 곳이었다.

한국사에 출현했던 전근대의 왕조 대부분 중국 왕조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완전한 의미의 조공-책봉 관계는 여타 동아시아 세계, 즉 일본은 물론이러니와 베트남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왜 우리 선조들은 ‘수치스럽게도’ 중국 왕조에 대해 ‘성실하게’ 사대를 행하였던 것일까? 동아시아 문화권의 정치질서는 어떠한 것이며 그에 대한 주된 이해의 시각은 무엇일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조공-책봉이라는 정치 관계는 어떠한 의미를 띠었던 것일까? 나아가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권론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녀야 하고, 또 사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

## 2. 동아시아 문화권과 관련한 주요 이론

전근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대략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이론이 등장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논리는, 일본 학자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가 제기한 책봉체제론과 미국 학자 페어뱅크(John K. Fairbank)가 주장한 조공체제(Tributary System)론이다. 이들 학설은 제기된 지 이미 50년 이상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가장 유력한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근래의 새로운 주장 또한 이들 이론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논리를 다소간 변형하고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 1) 일본 :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1960년대의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일본사 연구자들 사이에 ‘동아시아’라는 관점이 폭넓게 도입되어 많은 연구가 출현하였다. 니시지마의 ‘동아시아세계론’(1962년)은 이 같은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의 학설은 이후 적지 않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 체계적이고 장대하며 다이나믹한 측면 때문에 오늘날까지 일본 ‘동아시아세계론’의 대표적인 지위를 점하였다. 1970년도 이후 일본 학계의 전근대 ‘동아시아’와 관련된 연구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니시지마의 ‘동아시아세계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그의 동아시아세계론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1) 중국·한국·베트남·일본은 중국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 구체적으로는 한자·유교·한역불교(漢譯佛敎)·율령과 같은 중국 기원의 문화를 공통요소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 — 이 표현도 니시지마에 의해 시작되었다 — 이다. (2) 이 문화권은 문화의 확대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정치구조인 ‘책봉체제(冊封體制)’가 존재한다. 그 핵심을 이루는 ‘책봉체제’란 한대 이후 중국황제가 주변제국 또는 제민족의 수장에게 중국의 작위를 내려 군신관계를 맺게 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로써 중국 내의 신하들이 내신(內臣)이라 불린 것에 대해, 주변민족 또는 국가의 수장은 외신(外臣)이라는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3) 여기서 문화권과 정치권이 일체화된 자기완결적 ‘동아시아세계’가 성립되어, 고대 이후 청대까지 역사적 근거를 갖는 지역세계가 형성되었다.

요컨대 니시지마는 ‘책봉체제’가 중국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움직이게 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이 체제를 매개로 실현되어, 그 논리에 따라 자기운동을 시작해 문물 제도(문화)의 파급 또한 그것에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놓쳐서 안 될 중요한 점이 니시지마의 독특한 가설을 낳게 했던 배경이다. 먼저 이론적으로는 니시지마보다 한발 앞서 "한(漢)의 국제적 질서는 황제의 덕(德)·예(禮)·법(法)·왕화(王化)로 구성되는 중국 국내질서가 외부로 연장된 것이다"라고 한 구리하라(栗原朋信)의 주장이 존재한다. 니시지마의 학설은 구리하라의 연구보다 한층 본격적이고 장대하다. 하지만 구리하라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관점을 계승했다는 일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압축적으로 비교한다면 구리하라의 연구가 ‘미시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니시지마의 그것은 ‘거시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니시지마의 ‘동아시아세계론’은 현실적인 측면, 즉 당시의 일본이 처해진 상황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동아시아세계 설정’은 당시의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4국이 단순히 한자문화권으로서 만이 아니라 미국의 베트남전쟁 등 제국주의적인 진출에 대하여 단일의 대응을 할 필요가 생겨났다고 한다. 동아시아의 위기와 함께 歐美的 가치의 일원성이 강조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동

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니시지마로 대표되는 전후 일본학계에 흥미한 동아시아세계론의 배경에는, 동아시아로 회귀하여 거기서 자기 역사와의 관련성을 찾아내려는 의식과, 나아가 구미제국의 동아시아로의 진출에 대한 대응이라는 실천적인 면이 흐르고 있었다.

## 2) 미국 : 페어뱅크(John K. Fairbank)

미국에서는 니시지마의 연구보다 조금 앞서 일본과는 약간 다른 입장에서 전통중국의 국제질서에 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 교섭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의 역사적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의 전통질서에 접근했다. 당시 그러한 질서가 전개된 무대를 '동아시아(East Asia)'보다 '극동(Far East)'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한 것처럼 일본과 같은 특별한 가치개념은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동아시아 세계론'보다 '전통 중국의 국제질서'의 특징에 먼저 주목하게 되었다. 이 또한 당시의 현재적 관점, 즉 19세기의 서구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였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조공시스템'이었다. 미국 중국사학계의 개척자이자 대부격인 페어뱅크는 1941년에 등사우(鄧嗣禹)와 함께 「청대의 조공제도(On the Ching Tributary System)」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19세기 중국의 외교정책은 오로지 중국의 전통적인 배경, 즉 조공시스템을 배경으로 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하여, 처음으로 '조공시스템'(Tributary System)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19세기 이후의 근대적 국제관계를 '조약시스템'(Treaty System)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포섭되지 않고 있던 종전의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관계를 '조공시스템'으로 정의했다. 19세기 이후 영국으로 대표되는 소위 '서세동점' 하에서 '조공시스템'이 '조약시스템'으로 강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국적 세계질서였던 '조공제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어뱅크가 말하는 조공제도의 특징은 후대의 많은 학자들과 크게 틀리지 않는다. (1)조공시스템은 초기 중국인들의 문화적 우월감에서 자연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2)중국의 천자(황제)들은 자기 방어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했다. (3)실제 면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이 본질적이고 중요했다. (4)그것은 중국의 국제 관계와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는 조공시스템의 직접적인 연원을 명대로 보고, 명대에서 청 말기에 이르는 조공제도를 분석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조공 의례와 관련된 부분에 많은 서술을 할애했다. 이를 통해 그는, '교역과 조공은 동일한 시스템의 양면으로서, 중국은 조공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주변의 여러 민족, 즉 이적(夷狄)은 교역의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여, 양자 사이에 균형이 잡히면 조공시스템은 지속됐다.'는 인식을 보였다.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나온 19세기 중국외교사의 여러 연구는 이

같은 성격을 갖는 중국의 특이한 세계 질서(조공체제)로부터, 근대적인 조약체제로 전환되었다는 틀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공시스템’에 대한 페어뱅크의 이론적 틀은 그보다 훨씬 뒤에 그가 편집한 『중국적 세계 질서』(The Chinese World Order, 1968)의 서장(A preliminary framework)에서 다시 정리되었다. 이 논문집은 주로 명과 청 시기의 대외관계를 다룬 연구 저작이었다. 여기서 새롭게 주목되는 점은 그가 중국의 외교관계, 즉 ‘중국적 세계질서’와 관계를 갖는 공간을, 1) 중국 내부의 정치질서와 문화가 외부로 연장되어 나타난 ‘중국문화지대(The Sinic Zone)’, 2) 중국문화권 밖에 있으나 중국에 위협을 주는 ‘내륙아시아지대(The Inner Asian Zone)’, 3) 먼 곳에 있어 교역할 때만 조공해 오는 ‘외곽지대(The Outer Zone)’의 셋으로 나눈 점이다. 나아가 중국왕조는 자기중심적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각국에 대한 정책목표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용했다고 말한다. 즉 목표가 지배(Control)일 경우(=A)에는 그 수단으로서 군사적 ‘무력’(A1)과 예(禮)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적 장치(A2), 목표가 교화(attraction)일 경우(B)에는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德)적 수단(B1)과 불교적 수단(B2), 그리고 목표가 간여(manipulation)일 경우(C)의 수단에는 물질적 이익(C1)과 외교적 방법(C2)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페어뱅크는 이렇게 분류한 다음,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오직 B1만이 적용된 반면 티베트의 경우는 B2와 C2 그리고 A1도 일시 적용되었다고 한다.

### 3. 중심질서와 소중심질서

정치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 대륙을 지배하는 권력을 중심축으로 하는 하나의 중심질서(中心秩序)를 형성해 왔다. 그것은 정치적이고 동시에 문화적인 것이었다. 이를 중화질서(中華秩序) 또는 조공질서(朝貢 혹은 冊封秩序)로 부를 수 있다. 조공질서란 중국 주변 지역의 지배자가 중국 황제를 유일(唯一)·지고(至高)의 지배자로 보고 그로부터 자기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받고(책봉)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행(使行)을 보내 중국 황제의 유일·지고의 지배권을 재확인하는(조공) 관계 또는 질서이다. 중국 황제의 지배권은 상징적·명목적인 것으로서 내정에의 간여는 거의 하지 않지만, 중국이 문화적으로 가장 우월하다는 화이사상(華夷思想)에 바탕을 둔 문화적 우월성을 가지고 그 지배권위를 정치책임과 동시에 문화적인 것으로 만든다.

물론 이 설명은 하나의 모델로서의 것이므로 지역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그 실제 양상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국 주변 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엄격하게 이 조공질서에 편입된 것은 한반도의 여러 왕조와 베트남으로서 19세기 말 중국 밖의 힘이 작용하여 소멸될 때까지 지

속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 특히 조선왕조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대외적으로 중국에 대하여 충실한 조공국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대내적으로는 황제를 칭하여 중국 왕조의 유일·지고성을 부인하였으며 베트남 주변의 다른 나라·민족에게는 조공을 받아 스스로 하나의 작은 조공 질서를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중국 왕조도 베트남의 이중적 태도를 알았지만 그리고 그 이중성은 이론상으로는 중국 중심적 조공질서를 거부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적 필요에 따라 묵인하였다.

한국사의 경우, 중국의 왕조에 조공을 한 바 있던 고구려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걸쳐 스스로를 질서 중심인 ‘화(華)’에 비정하고 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 민족·나라를 정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천하질서(小天下秩序)를 구축하여 그들을 ‘속민(屬民)’ 또는 ‘이(夷)’라 불렀고 신라 왕에게 고구려 관위제(官位制)와 관련된 의복을 사수(賜授)하거나 하였다. 신라의 경우에도 형식상 중국의 당왕조(唐王朝)의 중심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의 지배를 받도 밖으로 몰아내어 백제·고구려의 고토(故土)를 상당 부분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그 근거에는 진흥왕 마운령비(摩雲嶺碑, 568 A.D.)에 보이는 “집(朕)은 …제왕으로서 건도(乾道, 天道)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한다”는 소천하질서 사상이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도 발해(渤海)에 대해서도 신라를 상위에 놓는 소중심질서를 주장하였고, 백제·발해의 입장에서도 사정은 서로 비슷하였다.

가장 전형적인 조공국으로 불리는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도 유사한 현상은 여러 경우에 볼 수 있다. 세종·세조 시기의 대여진(對女眞) 정책은 중국이 주변 민족·나라에 베푸는 화이적 조공 질서와 아주 유사하다. 여진인은 조선에 입조(入朝)하고 조선에서는 그들에게 명의상 신하임을 나타내는 수직(授織)을 하였고, 경제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회사(回賜)가 있었다. 중국의 명왕조(明王朝)의 감시와 압력 하에서도 이 소중심질서(事시) 정책은 일본에 대해서도 시행되었던 것이다. 14·15세기에 걸쳐 일본의 실권자인 장군이 일본 국왕의 명의로, 그리고 그 밖의 일본 안의 지방 세력도 사신을 조선에 보내어 대장경(大藏經)을 하사해 줄 것을 요청해 오면 조선의 예조(禮曹)는 “절도(絶島)의 원인(遠人)이 조선의 의(義)를 흠모하여 내조(內朝)해 왔으므로 딱 질라 거절하여(그들을) 쫓아 보낸다는 것은 대국의 미사(美事)는 아니다”라고 하여 스스로의 ‘대국’의식을 충족시켜 주는 내조행위에 만족을 표하였다. 때에 따라서는 분명히 가짜 사행(使行)임을 짐작하면서도 그들이 조선을 ‘대국’ 또는 ‘상국(上國)’이라고 부르는 것에 ‘편의적’으로 만족해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지배자가 엄연히 하나의 소중심 질서의식을 갖고 행동하고 있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중국 중심의 조공 질서로 편입되는 것이 매우 변형적이었다. 조공 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던 5세기에도 대내적으로는 천황이 ‘치천하대왕(治天下大王)’이라 자칭하였다. 그 뒤 주변의 신라·발해에 대하여 대국을 자처하여 ‘관념적 우위’를 계속 주장하였으나 신라는 언제나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 신라가 당과 분유가 와중에 있을 때 일본은 신라보다 상위에 있

음을 자처하여 마치 중국 황제가 조공국에 보낸 것 같은 위조문서를 보냈으나 신라가 그러한 처사에 불만을 표하는 것을 두고(737 A.D.) “신라국이 항상 지켜야 할 예(常禮)를 어겨 일본 천황의 사지(使旨)를 받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신라에게 조공국이 황제에게 올리는 것 같은 형식의 외교문서를 요구했으나 ‘대국’임을 자처한 신라는 그에 응하지 않고 있다. 중국 주변의 소천하질서가 끝내는 중국중심의 중심 질서에 힘으로 파괴되거나 변경을 강요당하기도 하였지만, 신라와 일본, 조선과 일본의 경우처럼 서로 실체를 수반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우월을 주장하면서, 즉 ‘편의로운 오해’를 통해 소중심질서에 안주하여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정치적 차원에서의 소중심질서와 유사한 것을 문화적인 면에서도 볼 수 있다. 조선과 베트남의 소중화사상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조선의 소중화 사상은 흔히 이민족(夷民族, 清朝)이 중원을 지배한 뒤에 강조된 것으로 보나 그 이전부터 있었다. 조선왕조의 세종(世宗)은 유교적인 생활규범의 하나인 상례(喪禮)를 언급하면서 중국인은 상중에 슬픔을 나타내는 망애(亡哀)를 하지 않고 음식·가무에 아무 제한을 가하지 않고 식육(食肉)·연악(宴樂)을 해도 “중론(衆論)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니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 충실히 망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들여온 상례를 중국인보다 더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중국 문화의 정통은 베트남에 있다고 하여 스스로를 중국 또는 ‘문헌의 나라’로 부르거나, 또는 중국을 상대화하여 (남에 대한) ‘북’으로 불렀으며 이족지배(夷族支配)의 청조를 경멸하였다. 마찬가지로 경향은 조선에게도 소중화사상을 이루게 하였지만 조선의 경우 19세기 말에 가서도 서양문물과 관련하여 조선이 공맹(孔孟)의 도(道)의 적전(嫡傳)임을 강조하며, “온 세계가 다 양이(洋夷)의 문물에 빠져 문화가 파괴되었지만 우리 조선만은 그렇지 않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보수적 논자가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서도 스스로를 화(華)로 설정하여 주변에 이(夷)를 거느린 소중심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의식이 있었으며, 율령(律令)의 수용에 있어서도 그 중의 화를 스스로에 비정(比定)한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근세에 들어와서도 유학적 이상을 일본에 실현하기를 바란 요코이 쇼난(横井小南) 같은 주자학자가 도(유학적 인의)의 유무로 화와 이를 나뉘으로써 일본을 문화적 소중심으로 본 예가 있고, 그것은 수구적인 방향이 아니라 개화·진취의 방향으로 나가는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 4. 지역내 교류와 문화의 변용

동아시아 문화권을 이해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또 하나 있다. 중국 주변 민족의 중국 문화 수용문제는 책봉체제를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중국 문화를 수용하는 측의 주체적인 계기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용하는 측의 의도가 있고 나서야 다른 문화의 수용이나 그 정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변 민족이 중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의 주체적인 판단에 근거한 전략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예컨대 10세기 독립 당초의 베트남은 중국 왕조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문화 채용하고 있다. 지방세력 연합체로서의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개입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리 왕조의 지배자들은 적극적으로 중국적인 과거관료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통치체제의 구축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을 제외한 주변 각국 간의 상호 교류와 그로 말미암은 문화의 변용에 대해서도 적절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니시지마 사다오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 책봉관계의 긴밀한 관련성에 대해 강조한다. 중국 주변 민족에 한자 문화가 퍼져나가는 계기로서 중국 황제와 주변 민족 수장들과의 정치적 관계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각지에 문자가 사용되는 것은, 사회 내부에서 문자에 대한 요구가 성숙해진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기, 즉 문자에 의한 왕래 성립된 국제질서에 편입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자 수용의 계기가 이처럼 책봉 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다 해도, 한자 문화가 그 사회에 뿌리를 내려 정착해 가는 과정은 조금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예컨대 1980년대 후반에 발견된 6세기 초 신라의 비석(524년의 울진 봉평 신라비, 6세기 초 영일 냉수리 신라비)을 살펴보자. 이들 비석은 물론 한자로 쓰여져 있으나 모두 전형적인 한문은 아니다. 오히려 신라 고유의 구문법이 강하게 나타난다. 신라의 한자 문화는 중국에서 직접 수용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와의 장기간에 걸친 정치 관계에 의해 성숙된 측면이 강하다. 6세기 신라의 한자 문화에는 고구려적인 요소가 많이 내재해 있었다. 고구려가 변용시킨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신라 언어의 요소가 결합된 형태를 띠었다. 신라는 4세기 이래 오랫동안 중국 왕조와 관계를 갖지 못했지만, 6세기 단계 독자적인 한자문화를 분명히 지니고 있었다. 그 한자 문화는 고구려와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 추정된다. 신라의 한자 수용에 있어 중국과의 정치 관계가 반드시 결부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사례는 신라와 일본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신라의 목간(木簡)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한국에서 출토된 목간은 현재까지 수백 점에 지나지 않는다. 7세기를 전후한 신라의 목간에는 고대 일본의 목간에서 보이는 특별한 용법이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목간의 모양, 표기 내

용, 글꼴, 문서 형식, 용도 등에서 신라 목간은 일본의 선구임이 명확하다. 이를 통해 고대 일본의 한자 문화는 신라와의 관계를 빼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7세기 후반기 일본의 건당사 파견은 전무하였다. 반면 신라와는 쌍방 35회가 넘을 정도로 빈번하게 사신 왕래를 주고받는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일본의 한자 역시 신라를 매개로 하여 변용되고 나아가 신라적 요소를 도입하였던 것이라 이해된다. 고대 일본의 한자문화는 신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한자문화의 전파와 수용에 있어 중국과의 정치관계가 큰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연속성이 적었다. 이에 반해 인접한 주변 나라 사이의 왕래와 중층적 교섭은 빈번하였다. 한자의 수용 계기나 정착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구문법 등을 공유하는 주변 민족 상호간의 교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주변 민족 상호간의 교류 속에서 한자 문화의 수용과 정착은 더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 5. 동아시아 세계와 한국

우리 교과서의 조공-책봉 관계에 대한 서술은 매우 애매하면서도 부정확하다. ‘형식적인 외교의 틀에 불과하였다.’거나 혹은 ‘책봉은 정치적 군사적 직접 통치를 할 힘이 미치지 못한 결과이자, 상대국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심지어 ‘조공-책봉 관계는 종주국과 속국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서 만들어진 의례적인 성격이 강하였다.’고 적고 있기도 한다. 동아시아 세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조공-책봉 체제는 ‘외교의 틀에 불과’하거나 혹은 ‘서로의 필요에서 만들어진 의례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결코 아니다. 중국 왕조의 강력한 의지와 권위가 투영되고 관철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책봉을 받는 대상 국가로서는 그것에 복종하여 중국 왕조가 요구하는 형식대로 따르거나 아니면 그 질서를 외면하는 길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한국과 일본, 베트남이 취한 방식도 서로 달랐다. 일본은 고대의 일부 시기와 15세기 초를 제외하고는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거부하였다. 중국과 밀접하게 교류하던 고대의 시기에도 일본은 중국에 조공은 바치되 책봉은 받지 않는다는 자세(有貢無封)를 견지하였다. 자기네 군주에 대해 중국과 동등하거나 혹은 상위에 있다는 의미로 천황이라 칭하였으며 시종일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베트남은 비교적 긴밀하게 중국과 왕래하며 그 향배를 주시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하지만 10세기의 독립 직후부터 황제를 칭하며 내부적으로는 중국과 대등하다는 인식을 지녔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중국에 대해 조공을 바치며 그 책봉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강렬한 자주의식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출하였다. 중국의 왕조도 이러한 베트남측의 이중적 태도를 숙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중성은 이론상으로 중국 중심의 조공질서를 거부하는 것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역대 왕조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한반도에 세워진 왕조 가운데 황제를 칭하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시종 중국 왕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조공-책봉 질서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실 일본이나 미국의 학자들이 제시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즉 책봉체제나 조공체제가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한반도 국가와 중원 왕조 간이다. 한국사에 등장하는 역대 왕조는 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이리도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자세를 보였던 것일까?

수 양제의 시기였던 607년 일본의 쇼토쿠(聖德) 태자가 수의 조정에 사신을 보내,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낸다. 잘 지내는가?(日出處天子致書日沒處天子, 無恙?)”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수 양제는, ‘오랑캐의 글이 무례하니 다시는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러한 국서의 전달을 두고 일본사에서는, 쇼토쿠 태자의 자주성 내지 중국에 대한 대등 의식이 나타난 것이라 하여 상찬해 마지않는다.

만일 당시 한반도에 존재하던 국가, 즉 백제나 신라·고구려라면 어떠했을까? 한반도의 삼국이 라면 양제 시기의 기세등등하던 수 정권에 대해 감히 이러한 언사를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설령 그러했다 해도 당시 수 양제가 일본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일소에 부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쇼토쿠 태자가 국서를 보낸 후 몇 년이 안 되어 고구려는 수양제로부터 전면적인 정벌 전쟁의 대상이 된다. 그 명분은 수 중심의 천하 질서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이유에서라면 쇼토쿠 태자의 국서는 즉각적인 토벌 전쟁을 불러일으켜야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양제는 그렇지 않고 불쾌감만을 표하는 것으로 그쳤다.

한반도의 역대 정권이 중국의 눈치를 살피며 조공-책봉 관계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을 두고, 중국 왕조의 현실적인 위협과 지리적인 인접성을 빼고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한반도는 일본과 달리 중원의 왕조와 육지를 통해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전근대의 교통 여건 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해양은 대단히 심각한 장애물이었다. 13세기 몽골에 맞서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하자, 몽골 군대는 그 작은 물길을 건너지 못한채 내륙으로만 횡행하였다. 같은 시기 일본은 쿠빌라이가 파견한 사자를 참수하기까지 한다. 몽골은 불패를 자랑하며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하고 있었다. 그러한 몽골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일본에게는 바다라는 믿음직한 장애물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쿠빌라이가 야심차게 추진한 두 차례의 일본 원정도 결국 그 바다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반면 한반도는 중국과 육지로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국가가 중국 왕조의 권위에 거스를 경우 즉각적인 정벌의 대상이 되었다. 수양제와 당태종 시기 고구려는 중국의 요구에 불응하다가 대대적인 정벌을 받아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7세기 중반에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는 것도 다름 아니라 중원 왕조인 당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 신라 역시 당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당의 군대와 맞서 싸워야만 했다. 중국 왕조의 위협과 군대 파견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물론이려니와 조선 역시 중국 왕조의 군사적 위협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의 여러 나라가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요구에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그것은 바로 정권 자체의 존립을 뒤흔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리의 인접성은 남방의 베트남과도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도 중국과 육지로 바로 잇닿아 있다. 하지만 북방의 중국인들에게 열대 우림지대라는 생소하고 부담스러운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베트남은 10세기의 독립 이래 한국에 못지 아니할 만큼 빈번히 중국의 침략을 당했지만, 기후 및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번번이 격퇴시킬 수 있었다. 베트남이 중국을 북국(北國), 혹은 북(北)이라 지칭하며 내부적으로 황제를 칭할 수 있었던 것(外王內帝)도 바로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힘입은 바 크다.

이처럼 한반도의 역대 국가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즉 조공-책봉 체제에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사에서는 중국적인 정치 질서나 문화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답습하는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고대 이래로 중국적 요소의 도입 자체에 극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거나, 혹은 채용한다 하더라도 고유의 질서나 여건에 맞춰 변용시켜 간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고대 일본, 특히 다이카 개신(大化改新) 전후 일본사의 동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7세기의 일본은 중국적 문화 요소와 정치 제도의 도입에 극히 열성적이었다. 이 시기 일본은 중국의 정치제도를 모방한 율령체제, 즉 율령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제도, 즉 율령을 아무런 변형 없이 원형 그대로 일본 사회에 적용하려 들었다. 이를 위해 수와 당에 대해 빈번히 사자를 파견하였다. 일본사에서 견수사, 견당사라 칭해지는 사절단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도입한 중국의 제도는 거의 아무런 가감 없이 채택되었다. 645년에 단행된 다이카 개신의 개혁 내용은 당의 율령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었다. 특히 반전수수법(班田收授法)과 조용조제는 당의 균전제와 조용조제를 액면 그대로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와 관련 법령도 당을 모방하고자 했다. 고대 일본의 령(令)을 통해 당령(唐令)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당 제도의 모방은 철저하였다. 이러한 모방은 비단 법제와 정치기구에 그치지 않았다. 고대 일본의 수도인 후지와라쿄(藤原京)나 헤이조쿄(平城京)는 당의 장안을 크기만 줄여 그대로 본뜬

것이였다. 가옥의 형태 역시 중국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전통시대 일본의 가옥은 당대 중국의 건축물 형태와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한국사상의 역대 왕조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순종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지리적 여건상 불가피하였다. 하지만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볼 때 한국의 역사는 중국적 요소의 도입에 자못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이러한 점은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매우 두드러진다. 동아시아 문화권이 정치와 문화가 긴밀히 결합된 지역세계였으나, 정치적 항배 내지 경향성이 문화적 독자성까지 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한국의 문화사는 그러한 동아시아 세계의 구조와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 6. 맺음말 : 아시아의 연대에 대하여

전근대시기에 동아시아 여러 지역 사람들이 문화적 공동 경험을 가졌다고 해서 서로 연대하자는 의식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연대를 필요로 하는 객관적 대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이래로 서양 문화, 서양의 경제력·군사력이 동아시아 지역에 압력을 가해오게 되면서 그에 대항해야 한다는 뜻에서 연대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아시아주의’ 또는 ‘대아시아주의’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인데, 이 말에서 의미하는 ‘아시아’는 대부분의 경우 동아시아 여러 나라를 지칭하고 있으며 대아시아주의의 변형인 대동아공영권론(大東亞共榮圈論)은 그 침략적 의도와 관련되어 그 범위를 오늘날의 동남아시아까지 확대하였다. 동남아시아까지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사용하던 ‘동문동종(同文同種)’이라는 같은 문자(문화적 배경을 의미한다)를 쓰는 비슷한 인종끼리의 연대 논리는 사라진다. 그러나 19세기 말 서양의 압력에의 저항과 그를 위한 국내적 개혁의 필요가 연결되었을 때 특히 중국에서는 ‘동문동종’이라는 발상이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런 배경 하에서 주로 일본에서 중국,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 주의가 제창되었다.

# 몽골제국과 동서문명의 교류

이평래 (외국어대)





따라서 연운16주(燕雲十六洲)<sup>2)</sup>를 손에 넣었던 거란과 중원에 수도를 둔 여진의 등장은 전통적인 남북관계의 해체를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고, 그런 만큼 중원을 포함한 당시 동아시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거란이 요나라를 세운 이후 중원에서는 북송(960~1127)과 남송(1127~1279)이 번갈아 일어나고, 그 서북쪽에서는 탕구트족의 서하(1038~1227)가 송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 국가를 세웠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흥기하고, 오늘날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여진의 금나라가 등장했다. 따라서 이 시기 동아시아에서는 열국이 흥망을 거듭하는 격동의 역사가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의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특정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 질서 대신 여러 나라가 각축하는 다원적 질서의 수립으로 이어졌다.<sup>3)</sup> 특히 이 과정에서 나타난 북방민의 중원진출은 그 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역사 전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역사상 처음으로 북방민족의 중원에 대한 영토적 지배가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 그 후 원나라와 청나라는 중원 전토(全土)를 지배하게 된다. 다음으로 북방민족이 중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 한반도 거주민 역시 그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었다. 거란과 여진의 고려 침략이나 몽골의 고려 침략과 지배 그리고 청의 조선 침략이 이를 실증해준다. 이 과정에서 고려를 비롯한 한반도에 있었던 왕조들은 그들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거나 영향권 아래 들어가고, 외교정책을 통해 그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등 북방민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대외정책에서도 항상 북방과 중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국제관계와 마주하게 되었다.

한편 13세기 초 몽골제국의 등장은 거란과 여진에 의하여 촉발된 다원적 국제질서를 해소하고 중원을 포함하여 주변지역까지 포괄하는 대일통(大一統)으로 이어져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또 한 번 일변시켰다. 몽골인들은 자신의 영역을 동아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및 동유럽 문턱까지 확장시켜 세계제국을 건설했는데, 이는 단지 동아시아의 역사에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 유라시아 역사를 새로 쓰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주로 동서 문명교류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몽골제국이 동아시아사 및 세계사에 미친 영을 살펴볼 것이다.

2) 지금의 북경(北京)과 산서성(山西省) 대동(大同)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허북성(河北省)에 속한 유(幽), 계(薊), 탁(涿), 단(檀), 순(順), 영(瀛), 막(莫), 신(新), 규(媯), 유(儒), 무(武), 울(蔚)의 12개 주와 산시성에 속한 운(雲), 환(冀), 응(應), 삭(朔)의 4개 주를 합한 16개의 주를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

3) 이 시기 다원적 국제 질서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윤영인(2007), 「10-13세기 동북아시아 다원적 국제질서에서의 책봉과 맹약」, 『동양사학연구』 101 참고.

## 2. 몽골제국의 형성과 전개



도 1: 몽골제국의 영역

1206년 칭기스 칸(1162-1227)은 몽골고원을 통일하고 에케 몽골 울루스(대몽골국)의 군주로 즉위했다. 후대학자들은 이를 몽골제국이라 부른다. 칭기스 칸은 내부정비를 마치고 곧바로 대외원정에 착수했다. 1207년에는 큰아들 조치(주치)를 시켜 몽골북방의 삼림민을 토벌하고, 1209년에는 탕구트족이 세운 고비 남부의 서하를 공격했다. 이처럼 인근지역을 평정한 다음, 그는 전군을 동원하여 1211년 봄 금나라 원정에 나섰다. 1215년 금의 수도 중도(中都)가 함락되고 칭디스 칸은 황하 이북의 땅을 지배하에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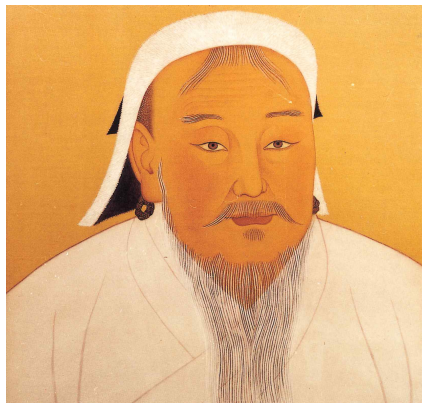


사진 1: 칭기스 칸의 초상

1218년 중앙아시아의 호레즘에 파견한 사절단이 시르다리야 중류의 오프라르에서 살해되고 상품이 몰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칭기스 칸은 이를 빌미로 1219년 가을 15만 대군을 이끌고 중앙아시아 원정에 나섰다. 그 해 말 오프라르에 도착한 몽골군은 군대를 4개로 나눠 공격을 시작했다. 칭기스 칸의 장남 조치가 지휘하는 우익(右翼)은 시르다리야 하류의 잔드를 공격하고, 좌익(左翼)은 강 상류의 호젠트로 진군했다. 둘째 차가타이(차가다이)와 셋째 오고타이(우구데이)는 오프라르를 공략하고, 칭기스 칸과 막내 톨로이(톨루이)는 중군(中軍)을 이끌고 키질쿰사막을 횡단하여 부하라로 진군했다. 호레즘 군주 무함마드(재위 1200-1220)는 사마르칸트를 버리고 동부이란의 호라산(후라산)으로 도망갔다. 칭기스 칸은 제베와 수베테이로 하여금 그를 추격하게 했는데, 무함마드는 이란 각지를 떠돌다 그 해 12월 카스피 해의 작은 섬에서 병사했다. 몽골군 본대는 무함마드의 후계자 잘랄 앳딘(재위 1220-1231)을 쫓아 아무다리야를 건너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지만, 험난한 지형 때문에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철수했다. 정복지로 돌아온 몽골군은 1225년 봄 몽골초원으로 돌아왔다.

1226년 칭기스 칸은 다시 서하정벌에 나섰다. 명목은 호레즘 원정 때 협력을 거부한데 대한 응징이었다. 그는 서하 수도 흥경(興慶)의 함락을 눈앞에 두고 1227년 8월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区) 육반산(六盤山) 남쪽 청수하(淸水河)에서 과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칭기스 칸이 사망하고 2년이 지난 1229년 셋째아들 오고타이(재위 1229-1241)가 카안, 즉 대칸<sup>4)</sup>에 즉위했다. 그는 즉위 후 곧바로 금나라 원정에 착수하여 1232년 1월 금의 새로운 수도 개봉(開封)을 함락시켰다. 오고타이는 이어 1235년 몽골고원 중앙부에 수도 카라코룸을 건설하고 행정기구를 정비한 다음, 다시 대규모 원정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동서 두 방면에서 원정이 이루어졌다.

하나는 오고타이의 셋째아들 쿠추가 지휘하는 남송(南宋) 원정이었다. 그러나 이 원정은 개진 초기(1236년 3월) 쿠추가 급사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서방원정군의 총사령관에는 칭기스 칸의 장남인 조치의 둘째아들 바투가 임명되었다. 조치가문의 영지로 예정되어 있던 킵차크(킵착)초원(현재 카자흐 초원-남러시아 초원)을 평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235년 몽골초원을 떠난 원정군은 이듬해 킵차크초원의 투르크계 유목민을 모두 흡수했다. 몽골군은 이어 불가강 중류의 불가르를 함락시키고, 이듬해 1237년에는 루시(러시아)의 제후국을 정복했다. 계속하여 몽골군은 불가강 하류에서 캅카스 방향으로 군대를 돌려 아스족(고대 알란족으로 현대의 오세트인)을 평정한 다음, 1240년에는 키예프를 함락시키고, 한 부대는 폴란드로 진격하여 1241년 4월 9일 레그니차(리그니츠)에서 폴란드와 독일의 연합기사단을 격파했다. 한편 바투 휘하의 본대는 헝가리로 진격하여 동년 4월 11일 모히 초원에서 헝가리군을 격파했다.

이 무렵(1242년 3월) 원정군 사령관 바투의 장막에 오고타이의 사망소식과 원정군의 귀환 명령

4) 칭기스 이후 대몽골국 준주는 칸 중의 칸을 뜻하는 카안을 칭했다.

이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몽골군은 차례로 동방으로 돌아갔다. 이때 바투는 몽골로 가지 않고, 자기의 본영인 불가 강 하류로 돌아와 원정과정에서 얻은 광대한 영역을 자기의 영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역사적인 조치 울루스(킵차크 칸국)가 성립되었다.

오고타이가 사망하고 5년이 지난 1246년 그의 아들 구유크(구육, 재위 1246-1248)가 대칸에 즉위하지만, 그는 즉위한지 2년 만에 사망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251년 칭기스 칸의 막내아들인 톨로이의 장남 몽케(재위 1251-1259)가 대칸에 즉위했다. 몽케는 동생 쿠빌라이에게 남송정벌 등 동방전략을 맡기고, 그 아래 동생 훌레구(재위 1256-1265)에게 이란 방면의 통치를 위임했다. 쿠빌라이는 오고타이 시대에 시작된 남송원정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면공격을 피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몽케는 쿠빌라이의 이러한 전략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출전했는데, 이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전염병이 몽케의 군영을 급습하여 1259년 7월 30일 그는 사천성(四川省) 조어산(釣魚山) 진중(陣中)에서 급사했다.



사진 2: 쿠빌라이 카안의 초상

1260년 4월 쿠빌라이(원 세조, 재위 1260-1294)가 내몽골 상도(上都)에서 쿠릴타이(부족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칸에 즉위했다. 수도 카라코룸에 남아 있던 막내 아리크 부케(아릭 부케)도 그 해 5월 쿠릴타이를 개최하고 대칸에 즉위했다. 이렇게 제국에 두 명의 대칸이 존립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새로운 대칸 자리를 둘러싼 싸움은 군사력, 보급, 외교에서 열세에 있었던 아리크 부케의 투항(1264년 7월)으로 종결되었다. 실력으로 제위를 장악한 쿠빌라이는 수도를 몽골초원의 카라코룸에서 자기의 본거지인 상도로 옮기고, 1267년에는 현재의 북경 땅에 제국의 새로운 수도 대도(大都)의 건설을 명했다. 그리고 그는 1271년에는 중국식 국호인 대원(大元)을 채택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카안 울루스이자 원조(元朝)이다.<sup>5)</sup>



사진 3: 원 상도 유지

한편 서방원정에 나선 훌레구는 1253년 가을 몽골을 출발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1258년 2월 바그다드를 접수했다. 이어 그는 1260년 시리아에 진출하여 알레포와 다마스쿠스를 함락시킨 뒤 이집트로 진격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때 대칸 몽케의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훌레구는 선봉 부대인 키트 부카에게 후사를 맡기고 남은 군단을 거느리고 귀환 길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타브리즈 부근에서 쿠빌라이의 즉위소식을 듣고, 귀환을 포기하고 이란과 이라크에 새로운 정권을 수립했다. 이렇게 하여 역사적인 훌레구 울루스(일 칸국)가 성립되었다.

중앙아시아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칭기스 칸이 중앙아시아에서 철수한 후 통치를 위임받은 관리들의 노력으로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지대는 빠른 속도로 복구되었다. 이곳은 원래 칭기스 칸의 둘째아들 차가타이 가문의 영지로 되어 있었지만, 오고타이 카안은 무슬림상인들을 총독으로 임명하고 중앙아시아 경영에 관여했다. 쿠빌라이가 동생 아리크 부케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중앙아시아를 관할하던 차가타이 가문의 알구(재위 1260-1266)가 그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아리크 부케는 보급물자를 주로 중앙아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쿠빌라이의 지지자인 알구가 사망하고, 그를 계승한 바라크(바락, 재위 1266-1271)가 오고타이 가문 및 조치 가문과 연대하여 쿠빌라이에게 반기를 들면서 중앙아시아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틈을 이용하여 오고타이의 손자인 카이두(재위 1269-1301)가 중앙아시아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그는 차가타이 가문의 수령 바라크를 살해하고 그들의 속민과 아리크 부케의 아들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었다. 이처럼 카이두는 알타이산맥에서 마와란나흐르<sup>6)</sup>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쿠빌라이와 대치했다.

5) 이 무렵 카안 울루스의 지배영역은 몽골초원, 여진의 영역이었던 북중국, 서하의 영토였던 하서 지방, 티베트 등이다.

6) 오늘날 중앙아시아 핵심부로서 아무다리야 강과 사르다리야 강 사이를 말함.

1294년 쿠빌라이가 죽은 후 테무르(원 성종, 재위 1294-1307)가 카안 울루스(대원)의 대칸에 즉위했다. 그 후 1300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몽골서부와 알타이 일대에서 카이두와 대원의 군대가 충돌했다. 수차의 회전 후 카이두가 패주하고 그때 입은 상처로 그는 사망했다. 이때 차가타이 가문의 수령 두아(재위 1284-1306)와 카이두의 아들 차파르가 테무르에게 복속했다. 이 화합은 훌레구 울루스와 조치 울루스로부터도 환영을 받아 1305년을 전후하여 40년 동안 계속된 중앙아시아 분쟁이 종식되었다. 두와는 대원의 군대와 협력하여 오고타이 가문의 전존세력을 하나씩 격파했다. 그 후 중앙아시아에는 두와를 중심으로 하는 차가타이 가문의 단독 지배권이 확립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차가타이 울루스(차가타이 칸국)다.

### 3. 동서 교류의 확대

14세기 초기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에는 칭기스칸의 후손들이 건설한 카안 울루스(대원), 차가타이 울루스(차가타이 칸국), 킵차크 울루스(킵차크 칸국), 훌레구 울루스(일 칸국) 등 4개의 거대한 울루스가 탄생했다.<sup>7)</sup> 몽골제국의 출현은 제국의 크기만큼 각 지역의 역사는 물론 세계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라시아 대륙은 그 때까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각 지역의 역사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움직여 왔다. 그러나 이들이 몽골에 의하여 통합되면서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유라시아 전역의 역사가 긴밀하게 연동하여 움직이게 되었다.

첫째 몽골제국의 등장은 인간집단의 대대적인 이동을 촉진시켰다. 원정군에 동원된 몽골전사들은 원정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정복지의 유능한 인재와 장인들이 몽골 땅으로 끌려 왔다. 대원의 쿠빌라이는 킵차크초원 출신의 킵차크족, 아스족, 캅글리족 등 유목민을 이주시켜 자신에게 충성하는 친위군을 조직하고, 중국남부 운남(雲南) 지역의 개발에 중앙아시아의 무슬림과 위구르인들을 참여시켰다. 인간의 집단적 이동은 주변지역으로도 파급되었다. 몽골군의 침략으로 투르크계 유목민들이 아나톨리아반도로 이주하고 이를 계기로 11세기 이후 계속된 이 지역의 투르크화가 촉진되었다. 또한 몽골군의 침략을 받고 중앙아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지역 거주민들이 북인도로 이주하면서 이 지역의 이슬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7) 지금까지는 이들 4개의 울루스의 출현을 계기로 몽골제국이 분열되었다고 이해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몽골제국사 연구자들은 이들 4개의 울루스는 종가(宗家)인 카안 울루스가 멸망할 때까지 통합성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들어 쿠빌라이 이후의 몽골제국을 일종의 연방제로 보고 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론이 나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분열보다는 연방제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1) 학자

둘째 몽골제국의 출현은 동서세계의 교역과 교류를 촉진시켰다. 제국 각지를 연결한 역참(驛站, Jamchi)이 정비되어 육상교통로가 완성되고, 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교통로를 이용하여 위구르상인과 무슬림상인 등이 대규모 상업 활동을 전개했다. 몽골제국을 축으로 하는 상업망은 홀레구 울루스와 우호관계를 갖고 있던 제노바와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상인과 비잔틴상인이 참여하면서 지중해까지 확대되었다. 14세기부터 본격화되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몽골제국이 이룩한 세계규모의 경제교류와 발전이 그 배경이 되었다.



사진 4: 역참의 통행증 피자

셋째 교통로의 안정이 보장되면서 동과 서를 오가는 장거리 여행자들이 출현했다. 우선 서방 3왕가<sup>8)</sup>를 비롯한 제국 각지의 왕족과 지방군주의 사절단이 대원의 수도 대도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사실상 최고급 특산품과 진기한 물건을 휴대한 공식적인 통상사절단으로서 때로는 규모가 수백 명에 이르렀다. 종교인의 왕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중국 도교교단의 장로 장춘진인(長春真人, 1148-1227)은 칭기스 칸의 부름을 받고 중앙아시아를 여행했으며, 네스토리우스교의 사제 랍반 사우마(1220-1294)는 대도에서 홀레구 울루스로 순례여행을 떠나 그 곳에서 홀레구 울루스의 아르군 칸(재위 1284-1291)의 명으로 유럽 각지를 다녀왔다. 또한 프란체스코파 수도사 플라노 카르피니는 1245-1247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의 명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카라코룸을 다녀왔고, 같은 교단의 수도사 루브루크(루브룩)는 1253-1255년 프랑스 왕 루이 9세의 사절로 역시 몽골을 방문했다.

8) 몽골제국 서쪽에 있는 일 칸국, 킵차크 칸국, 차가타이 칸국.

15살 때 아버지를 따라 동방으로 갔던 마르코폴로(1254년경-1324년경)는 고향으로 돌아와 『동방견문록』이라는 불후의 명저를 집필했고, 모로코 태생의 이븐바투타(1304-1368)는 각지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의 도움으로 서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와 인도를 거쳐 중국을 여행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의 사정이 서양에 알려지고, 서방의 정보가 동방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서양인이 쓴 최초의 본격적인 동방에 관한 소개서였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양쪽 사람들은 몽골제국 출현 이전에 상대방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



사진 5: 마르코폴로

셋째 동서간의 학술과 과학교류도 확대되었다. 특히 대원과 홀레구 울루스의 교류가 두드러졌다. 대원의 수도 대도에는 이란과 이슬람권 학자들이 상주하고, 홀레구 울루스의 수도 타브리즈에서도 다수의 중국학자들이 활동했다. 예컨대 1271년 대도에 건설된 회회사천대(回回司天臺)에서는 이란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자말 앓딘(札馬兒丁)의 주도로 천문을 관측하고 역서(曆書)를 편찬했다. 회회사천대의 관측기기는 모두 이란에서 제작된 것이고, 도서관에는 페르시아어 서적이 갖추어져 있었다. 자말 앓딘 등 이란과 이슬람권 학자들이 소개한 서아시아의 우수한 천문학은 그 후 중국 천문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대표적 사례가 수시력(授時曆) 편찬이다. 1276년 관수경(郭守敬) 등은 우수한 서아시아의 관측기기와 천문학을 응용하여 새로운 역서인 수시력을 편찬했다. 이는 128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명나라 시대의 대통력(大統曆)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의거하고 있다. 따라서 수시력은 중국 역사상 최장기인 350여 년에 걸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홀레구 울루스에서도 나시르 앓딘 투시에 의하여 설계된 천문대가 마라가(타브리즈 남쪽의 작은 마을)에 건설되었는데, 1271년에는 중국학자들까지 참여한 천문

관측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 칸 천문표’가 봉정되었다.

농학과 의학 분야의 교류도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다. 홀레구 울루스에서 편찬된 농서(農書)는 의문이 들 정도로 중국의 농서 내용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 작물의 특성과 번식에 관한 서술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는데, 이란에 도입된 대표적 품종으로 기장(粟)이 특기되고 있다. 새로운 품종은 이란에 집단 거주한 중국인들에 의하여 실험 재배되었다. 홀레구 울루스에는 또한 많은 중국 의사들이 활동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당시 이란에서는 중국의술 중 특히 진맥(診脈)이 인기가 있었다. 대원에서 1292년 대도와 상도에 회회약물원(回回藥物院)을 세워 이슬람의학을 관리하도록 했으며, 1273년에는 이븐시나(980-1037)의 『의학전범』(Al-Qanun fi al-Tibb)<sup>9)</sup>이 『의경(醫經)』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다.

제국의 규모와 인적 물적 교류는 동서간의 문화교류로 이어졌다. 제국 내 빈번한 인적 교류는 음식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이란에서는 다수의 중국 요리사들이 활동하고 많은 무슬림 요리사들이 중국에 진출했다. 이들은 당연히 현지의 음식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쌀 음식과 미주(米酒)를 이란에 소개한 사람들도 동방 출신자들이었다. 특히 몽골식 양고기 수프와 치즈, 중국의 쌀가루, 만주의 잣, 서아시아의 꿀·호도·완두가 어우러진 이슬람식 퓨전요리의 존재는 몽골제국 시기 문화전파의 실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몽골제국 시기 증류주의 전파 또한 세계적 규모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이 시기 몽골인들이 중국의 증류 기술을 발전시켜 간편하고 휴대하기 쉬운 증류기를 개발하여 세계 각지에 보급했음을 입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려 말 한반도에서 크게 유행한 소주가 그 대표적 사례인데, 이 소주 제조법은 군인이나 목부(牧夫)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고려에 온 몽골인들에 의해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세기 전반 중국의 경덕진(景德津)에서 생산된 청화백자(青花白磁)는 이 시기 동서간의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중국의 우수한 도자기기술과 이란의 도자기 걸 그림 기법 그리고 코발트 안료가 결합되어 청화백자가 만들어졌다. 청화백자는 서아시아에서 인기를 얻어 고가의 국제상품으로서 세계 각지로 수출되었다. 중국의 도자기 제작기술은 또한 이란에서 빼어난 도자기와 색 타일 제조를 촉진시켰다. 이 시기 이란의 세밀화 속에 중국회화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도 동서간의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

9) 이븐시나는 11세기 세계최고의 대학자임과 동시에 이슬람세계가 배출한 최고의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유럽의 의학과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대 연구자에 따르면 그의 저작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총 276종에 달한다. 이 중에서 『의학전범』은 이슬람세계는 물론 서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의학서 역할을 했다.



사진 4: 청화백자

활발한 동서교류는 무서운 전염병의 유행을 불러왔다. 흑사병의 발생과 서방전파다. 이 병은 원래 야생 설치류에 나타나는 전염병인데 몽골제국 시대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서방으로 전해졌다. 홀레구 울루스의 마지막 칸인 아부 사이드도 1335년 흑사병으로 사망했으며, 1338-1339년 중앙아시아의 이식 쿨호 부근의 네스토리우스파 교도들도 이 병으로 집단 사망했다. 흑사병은 14세기 중엽 서아시아와 유럽에 전파되어 대략 2500만 정도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때 유럽 인구의 최소한 1/3정도가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사진 5: 흑사병을 옮기는 타르바가

## 4. 세계사의 탄생

지금까지 몽골제국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리 긍정적인 편이 아니었다. 영역의 광대함에 대해서는 자타가 인정하지만 전란과 정복의 시대라는 말이 더 많이 쓰였다. 대외원정 과정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문화재가 소실되고 약탈이 자행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몽골제국을 어떻게 평가하든 거대 제국의 역사적 역할과 관련하여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몽골제국의 출현으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 안에 포함된 여러 민족의 역사도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유라시아 세계는 몽골제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서 재조정된 후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몽골제국의 흥망과 성쇠는 세계사를 가르는 분기점이었으며, 제국의 출현은 진정한 세계사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몽골인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이전 동서세계는 각각 별개로 움직여 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와 로마제국, 한나라와 당 제국, 페르시아제국, 이 모두는 후대 역사가들이 붙여준 세계제국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각 지역의 맹주에 불과했다. 물론 유럽에서, 서아시아에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이들이 이룩한 업적은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인, 그리스인과 로마인, 한나라와 당나라 사람들이 상정한 세계는 지역적으로 제한된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극히 편협한 세계였다. 이러한 지역적 가름을 걷어낸 주역이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야만인으로 폄하되었던 몽골인이다. 확실히 몽골인들은 지역적으로 한정된 골목대장이 아닌 세계를 경영한 진정한 장수였다. 이는 그 이전 제국과 몽골제국에서 편찬된 역사서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4세기 초 이란 지역의 몽골 정권인 훌레구 울루스(일 칸국)의 재상을 역임한 라시드 앗딘에 의해 『집사(集史)』(Jâmi' at-Tavârikh)라는 방대한 역사책이 집필되었다. 이 책은 제국을 통치했던 역대군주들의 과업 뿐 아니라 그들의 지배 아래 있었던 중국, 아랍, 투르크, 심지어 인도와 유럽, 유테인의 역사까지 망라한 세계인의 역사이다. 인류는 그때까지 이처럼 방대한 역사서를 접해보지 못했다. 유명한 사마천의 『사기(史記)』도 헤로도토스(기원전 485경-425경)의 『역사도 기껏해야 자기 주변의 이민족의 역사를 다루었던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 『집사』를 세계 최초의 세계사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몽골인들은 새로운 세계사의 초석을 놓았다. 그리고 그들이 뿌린 변화의 씨앗은 몽골시대에 이어지는 15세기부터 서서히 꽃피기 시작했다. 15세기는 서구인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로 이른바 대항해시대가 시작된 시기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서양 사람들에 의하여 촉발된 바다의 시대는 중앙아시아 위상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증기기관을 장착한 선박의 수송능력은 낙타에 화물을 싣고 사막을 오가던 상행위를 거의 원시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따라서 신대륙 발견으

로 상징되는 대항해시대의 개막은 서구의 우위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동서교역의 패턴을 일변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과장하면 세계는 그 후 내륙국가 번영의 시대에서 해상국가 패권의 시대로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구세계가 해상으로 진출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이 문제는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던 유라시아대륙 동서의 대국, 즉 청나라와 오스만 제국(1299-1922)이 왜 서구와 달리 바다로 진출하지 않고 내륙으로 눈을 돌렸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그 후 세계사의 분기를 이루었는가 하는 이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서구인들이 바다로 진출하게 된 이유는 몽골제국과 그 계승국가들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14세기 중반에서 15세기 중엽에 걸쳐 일어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로 개척의 필요성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아시아 나라들(명, 청, 오스만제국)은 내륙 지향적이었으며, 그것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지을 기회와 위협이 어디에 있었는가가 달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명나라의 정화(鄭和, 1371-1433)와 콜럼부스(1451?-1506) 항해는 모두 몽골시대의 유산을 상속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계승양상은 판이하게 달랐다. 그러한 차이가 당시 유럽과 중국의 항해술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륙과 해양을 바라보는 중국과 유럽인의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럽인에게 해양진출은 새로운 부의 창출을 보증했고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중국(명과 청) 입장에서 보면 더 긴박한 것은 내륙으로부터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었다. 이 문제, 즉 유럽이 해양 지향적이고 아시아 국가들이 내륙 지향적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몽골지배의 유무(有無)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말 우연히 몽골의 지배를 받지 않은 서유럽과 그 지배를 받은 유라시아의 내륙국가(명, 청, 오스만 제국, 러시아)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바다에 대한 인식의 분기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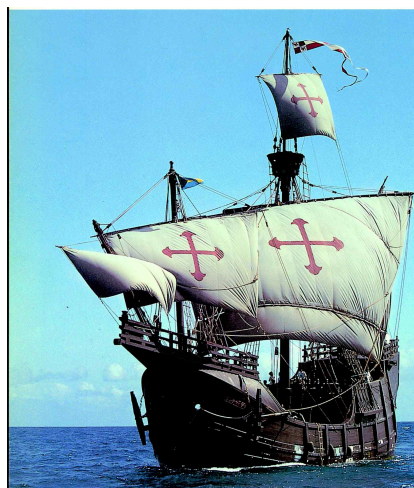


사진 6: 콜럼부스가 제1차 항해에 탔던 산타마리아호(복원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서구인이 바다로 진출하여 통상무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유라시아 전역을 거대한 통상권으로 일체화시키고 세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시킨 몽골제국의 유산을 고스란히 상속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몽골제국의 출현은 유럽의 근대를 여는 단서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지구적 범위에서 통상과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20세기에 와서다. 이른바 근대인데, 그 기원을 놓고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학자들은 15세기 대항해시대 이후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근년 세계학계에서는 근대의 시작으로 알려진 대항해시대는 그 전대, 즉 몽골시대에 대여행의 시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이런 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동서 세계를 하나로 묶은 몽골인이 근대의 초석을 놓았다고 보고 있다.

## 5. 몽골제국의 해체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긴 몽골제국도 14세기 중엽 대원의 몰락을 전후하여 서서히 해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몽골제국의 종가(宗家)인 대원은 쿠빌라이의 손자 테무르가 죽은 뒤 계속된 제위계승 분쟁으로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장기에 걸친 궁정의 낭비와 방당한 재정운용은 국가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여기에 자연재해와 역병으로 농민반란이 빈발하고 각지에서 무장 세력이 할거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농민출신 주원장(朱元璋, 재위 1368-1398)이 1368년 남경(南京)에서 즉위하고 명나라를 창건했다. 자연재해와 내분에 시달리던 대원의 토곤 테무르(원 순제, 재위 1332-1370)는 대도를 떠나 몽골초원으로 퇴각하고, 명나라 군대에 의하여 점령된 대도는 잿더미로 변했다. 북방으로 퇴각한 몽골인들은 그 후 수백 년 동안 군소집단으로 나뉘어 상호항쟁을 거듭하다 17세기 초기 내몽골을 시작으로 차례로 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캅차크초원의 조치 울루스는 14세기 전반 우즈베크 칸(재위 1313-1341)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고 수도 사라이는 교역과 수공업 중심지로 번영했다. 그러나 그의 손자 베르디 벅(재위 1357-1359)이 죽은 후 창업자 바투 가문의 적통이 끊기면서 조치 울루스는 20년 동안 25명 이상이 칸 위에 오르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이런 혼란 속에서 토카 테무르(조치의 13남)의 7대손 토타미슈(재위 1378-1395)가 등장하여 잠시 울루스 전체를 통합했다. 그러나 그가 티무르제국의 창건자 티무르(1336-1405)의 침략을 받고 패하면서 조치 울루스는 더 이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개의 군소정권으로 분열되었다. 한편 훌레구 울루스는 개혁군주 가잔(재위 1295-1304)과 그의 동생 울제이투(재위 1304-1316) 시기에 일시적으로 중흥을 맞이했다. 그러나 1335년 울제이투

의 아들 아부 사이드(재위 1316-1335)가 사망하고 훌레구의 적통이 끊기면서 각지에서 지방정권이 자립했다.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울루스도 1340년대에 파미르고원을 중심으로 동서로 분열되는 혼란을 거듭하다 1370년 티무르에게 정권을 내주고 역사에서 사라졌다.(mongollee@naver.com)

## 【참고문헌】

스기야마 마사아키/임대희·김장구·양영우 옮김(1999), 『몽골 세계제국』, 신서원  
고마츠 히사오 외/이평래 옮김(2005),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니콜라 디코스모 지음/이재정 옮김(2005), 『오랑캐의 탄생』, 황금가지.  
잭 웨더포드/정영목 옮김(2005), 『칭기스 칸-잠든 유럽을 깨우다』, 사계절  
윤영인(2007), 「10-13세기 동북아시아 다원적 국제질서에서의 책봉과 맹약」, 『동양사학연구』 101  
강토가 외 지음/김장구, 이평래 옮김(2009), 『몽골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2009  
김호동(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미야 노리코/김유영 옮김(2010), 『조선이 그린 세계 지도』, 소와당  
모리스 로사비 저/강창훈 역(2015), 『수성의 전략가 쿠빌라이칸』, 사회평론  
김호동(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 일본근세사의 이해

- 센고쿠시대·에도시대의 일본을 가다 -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 일본근세사의 이해

## - 센고쿠시대·에도시대의 일본을 가다 -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 1. 센고쿠(戰國)시대로의 이행

- : 오오닌의 난(1466~77) 이후 쟁란은 전국으로 확산. 전국에 걸쳐 100여년 동안 전란의 시대가 계속됨. 전란의 와중에 장원은 해체되고 많은 전통귀족이 몰락.
- : 오오닌의 난 이후 무로마치 쇼군집안도 몰락을 거듭함  
1493년 10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키(義材, 후의 義植)가 管領細川씨와 대립하다 폐립되어 쫓겨나는 정변이 발생. 권위의 실추.  
막부의 주도권이 유력다이묘의 손으로 이동. 장군은 다이묘에 의해 진퇴가 좌우되는 꼭두각시로 전락. 1565년 14대 義輝(요시테루)가 암살당하는 사건은 하극상을 상징하는 사건.
- : 京都를 중심으로 하는 近畿지방에서 막부권력을 둘러싼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항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로마치 막부체제는 점차 해체되어 감.
- : 지방에서는 슈고(守護), 슈고다이(守護代), 고쿠진(國人) 등 여러 계층 출신의 무사들이 자력으로 領國을 구축하여 독자적인 지배를 행하는 지방정권이 탄생. 16세기가 되면 關東, 東海, 中國지방 등에 분권적인 자립권력이 출현. 全國에 센고쿠 다이묘가 할거하며 領國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약 1세기를 센코쿠시대라 함.

## 2. 센고쿠(戰國)시대 일본사회의 특징

: 일본국민의 생활 양태가 전국시대를 기점으로 변모. 그 양태가 현재까지 이어짐. 일본사를 이분하는 획기

- 衣 --- 오오닌 난 이후 면 재배가 보급. 서민층 의복의 주재료가 麻에서 목면으로 전환. 그 전까지 일반서민은 모시를 이용. 14, 15세기에는 왜구, 한일 간의 무역을 통해 조선산 면이 대량으로 일본에 수입됨.

일본 면재배는 15세기말 무렵, 규슈지역에서 시작되어 16세기 말까지는 關東지역까지 확대. 전국시대 일반서민들이 면 의류를 입기시작. 17세기 전반, 서민의 일상의복의 주원료가 됨. 면은 주요한 군수물자이기도 함. 면의 재배와 보급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의는 가히 혁명적.

- 食 --- 남북조시대까지 일본인의 식사는 1일 1식(朝夕). 무로마치 중기부터 1일3식이 유행하기 시작. 전국시대에 서민층에도 3식이 점차 보급. 에도시대에 점심 포함한 3식이 정착. 쌀을 주식으로 하는 조리법(밥짓기, 죽)이 확산. 미소, 소유 등이 조미료로 등장.
- 住 --- 武家가옥에서는 공간을 구분하여 작은 방이 독립. 천정에도 天井板을 만들었고 각 방에는 다다미를 깔. 이전시대의 방은 板敷き만으로, 다다미는 자는 곳과 손님접대용 공간에만 사용. 製材혁명 때문. 14세기 말부터 두 사람이 맞잡고 목재를 자르는 톱이 등장하여 얇은 판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됨.

: 다이묘의 領國 지배정책

부국강병책을 지향. 전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군자금조달의 근간인 산업과 경제발전이 필수.

- 家臣團에 의한 통치 --- 一門(一族)과 譜代衆(종래의 가신단)뿐만 아니라 비혈연집 단인 外樣家臣, 國人층이나 촌락지도자(地侍, 토호, 小領主) 를 가신으로 편입시켜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시켜 가는 것이 최대의 과제 중 하나.

가신단을 군사조직으로 편성. 영국내의 소영주급 무사들로 가신단을 편성하고 가신에 대해서는 지행지(知行地, 영지) 를 주어 은전을 베풀고 충성을 요구. 지위와 수입을 보장해 주는 대신 그것에 상응하는 軍役을 부담시킴.

가신단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도 知行地로 부여할 영토를 전쟁을 통해 확대하고 유지, 방어할 필요가 있었음.

- 도시정책 --- 영국내의 교통의 요지에 성곽을 건설, 성곽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건설. 가신단의 통제와 신속한 군사동원을 위해 무사를 城下로 이주시켜 집주하게 함. 이주

한 무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공업자를 유치하는 등, 인구를 집중시켜 城下町을 건설. 도시 기능을 갖는 城下町는 領國의 정치, 경제, 교통의 중심지가 됨.

⇒ 병농(兵農)분리정책

→ 에도시대의 城下町은 侍町, 商人町, 職人町 등의 구획제가 관철됨.

- 수공업지배 --- 수공업 분야에서 다이묘가 직접적인 장악과 편성에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은 건설관계와 武器제조관계의 職人들.

이들을 城下町에 집주시키는 정책을 추진. 직인들을 집단화시켜 그들을 집단적으로 파악하려는 정책은 각지에서 진행됨.

- 金銀 광산의 개발 --- 다이묘 영국의 경제력, 군사력 강화에 있어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 광산자원의 개발. 광산인근 지역의 다이묘들은 광산 획득을 둘러싸고 격렬한 각축을 벌이기도.

出雲(이즈모, 島根현) 鐵의 주산지.

銀(16세기 전반 하카다상인 가미야 슈테이神谷壽禎가 조선에서 회취법灰吹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은 정련기술을 도입. 은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 17C초, 일본의 은 수출액은 연간 20만kg. 당시 전세계 銀 생산량의 1/3에 달하는 양. 이와미(石見) 大森銀山

#### : 중국과의 관계

1551년 오우치씨(大内氏)의 멸망과 함께 1547년에 파견된 견명선(遣明船)을 최후로 감함무역이 폐절됨. →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정부 간 공식무역 단절

16세기 중후반 織豊정권의 시대에 일본의 대외관계는 중국과의 공식적인 국교 및 官貿易이 두절된 반면 後期倭寇와 포르투갈의 출현으로 인해 이전 시대에 비해 대단히 다채로운 양상을 띠게 됨.

- \* 後期倭寇---16세기는 후기왜구 활동시기. 일본인은 1~2할 정도.

明의 海禁정책에도 불구하고, 밀무역 집단 즉 중국인을 주력으로 한 武裝 海商집단이 출현. 浙江, 福建省연안의 중국인 해상들.

⇒ 일본 銀과 중국산 生絲, 견직물을 기축으로 하는 무역분 형성.

#### : 유럽인의 내향

15세기 중엽~16세기 초 유럽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쳐 근대사회로 이행. 지리상의 발견의 시대, 대항해시대

스페인, 포르투갈은 절대주의국가를 형성, 중상주의 정책 하에서 식민지 획득을 위해 해외로

진출. 목적은 '향료 획득과 기독교'로 대변되듯이 무역과 포교.

이슬람상인의 중개무역에 의해 유럽에 입수되던 고가의 향료를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직접 입수하고, 아시아에 크리스티교를 확대하여 이슬람세계를 협격하고자 아시아 해로를 찾기 시작.

\* **포르투갈의 동아시아 해역 진출** ---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인도항로를 개척. 1510, 인도의 고아 점령. 1511, 말레이반도의 말라카 점령. 후기왜구집단의 교역망과 항로를 따라 말레이해협에서 북상. 포르투갈은 중국무역의 이익을 추구하며 명정부와 교섭했으나 공식적인 무역을 허가받지 못하자 왜구를 상대로 한 사무역에 전념. 1550년대 왜구의 대반란(嘉靖大倭寇)을 계기로 明朝는 포의 협력을 얻어 왜구금압을 강화. 포르투갈은 마카오의 왜구를 금압한 보상으로 1557년 明朝로부터 마카오를 할양받고 이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역할비중은 한층 증대. 마카오를 동아시아 무역의 기지로 삼음.

1570년에 마카오-나가사키 간 정기 무역루트 열림.

후기왜구 쇠퇴 후 일본은 중국생사 교역에 적극참여. 아시아무역 달리박스

일본 다이묘들은 다투어 포르투갈 선박을 自領으로 입항시킴(대형범선)

\* **스페인**---16세기 중반 태평양을 횡단, 동아시아에 진출. 1571년 필리핀제도 점령. 마닐라와 멕시코의 아카풀코를 연결하는 정기항로.

1584년 나가사키 내항

\* **포교활동**---1549년 예수회 선교사 **프란시스코 자비엘** (스)이 가고시마에 와서 전파. 2년 3개월 동안 규슈와 기나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포교.

다이묘들은 구교국과의 무역이윤을 중시, 선교사를 보호. 단기간에 신자가 증가.

1582년경 규슈의 신자가 12만 명, 기나이가 2만 5천명.

기리시탄 다이묘, 바테렌 (半天連), 南蠻寺 (교회당)

: 鐵砲 (화승총, 조총) 의 전래---왜구에 의해 전래되었을 가능성

당시의 기마중심의 전법과 갑옷, 축성술에 변화를 초래.

화약과 첩포의 조달은 다이묘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

### 3.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82)의 통일사업

- : 오와리 (尾張 : 나고야) 의 슈고다이묘 시바(斯波)씨의 守護代의 家老 집안.  
父 노부히데(信秀) 때에 세력이 확대. 노부나가에 이르러 강대해짐.
- : 18세에 가독 상속. 상속을 둘러싼 분규(弟 信行). 상속 후 약 8년 간 경쟁관계에 있던 일족, 주위세력을 제거하는 데 전념
  - \* 1559, 오와리 통일
  - \* 1560, 오케하자마 (桶狭間) 의 전투
- : 駿河(遠江, 三河)의 거대 다이묘 이마가와 요시모토 (今川義元) 의 대군을 격파  
오다의 군대(2000 or 4000)가 이마가와(2만 5천 이상?)를 급습.
- : 이에야스, 이마가와와의 인질에서 해방되어 본거지로 귀환. 노부나가와 군사동맹 체결  
노부나가는 이에야스를 客將으로 대우했고, 이에야스는 노부나가의 통일사업에서 東國의 강자인 다케다(武田)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준 셈.
  - \* 1567, 미노 (美濃) 의 사이토씨 (齊藤龍興) 를 정복. 미노를 병합.  
7년 동안 10번 출병한 끝에 정복.
  - \* 본성을 기후(岐阜)로 옮김.
- : 「天下布武」의 朱印을 사용하기 시작. 정치적 야심을 상징. 上洛을 지향
  - \* 1568, 교토 入京
- : 13대 쇼군 요시테루(足利義輝, 암살당함) 의 동생인 요시아키(義昭)에게 막부 재흥의 의지가 있음을 간파한 노부나가는 요시아키를 데리고 교토로 진격. 손쉽게 교토를 제압. 기나이를 거의 평정.
- : 요시아키를 쇼군에 취임시킴
  - ⇒ 막부의 권력이 쇠퇴한 마당에 요시아키로서는 노부나가라는 강력한 지원자를 필요로 했고, 이제 겨우 2개 國을 통합하여 세력이 강대해지기 시작한 노부나가가 경쟁관계에 있는 다이묘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쇼군의 전통적인 권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음.
- : 요시아키는 쇼군으로서 나름 정력적으로 움직였지만 그의 정권은 막부와 노부나가의 이중정권으로, 현실적인 실권은 노부나가가 장악. 군사력, 경제력에서 노부가 압도적인 우위. 막부의 군사력 행사, 권력행사에 있어 노부나가의 협조와 보증이 필요했음. 초반에는 상호 협력하는 우호적인 관계.
  - \* 1570년, 요시아키와의 대립이 표면화하기 시작.

- : 노부나가, 쇼군과의 별도의 권한행사 의지를 표현. 요시아키는 노부나가에게 반감을 가진 세력,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다이묘, 종교집단과 수면 하에서 결탁하기 시작. (朝倉, 武田, 石山本願寺, 毛利 등)
- \* 1570, 사원세력과의 항쟁이 본격화, 石山戰爭 시작됨.
- : 1571, 比叡山 엔랴쿠지(延曆寺)를 불태워 院政 이래의 강대한 사원세력을 타도.
- : 天台宗의 總本山. 近江지역에 莊園과 강력한 僧兵조직 소유. 고대 이래의 종교권력. 노부나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다이묘와 결탁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 2000~3000명의 승려 살육.
- \* 1572, 다케다 신겐(武田信玄)의 공격을 받음.
- : 다케다 신겐, 甲, 信, 駿 삼개국의 대군을 이끌고 공격. 노부나가 上洛 후 최대의 위기. 신겐이 공격 중에 발병하여 上洛을 중지하고 본거지로 퇴거.
- \* 1573, 쇼군 요시아키 추방. 형식상으로는 유지되던 무로마치 막부가 멸망.
- \* 1575, 나가시노(長篠) 전투. 武田勝頼의 기마부대를 괴멸시킴. 신구문화의 충돌?
- \* 1576, 비와호수 연안에 아즈치성(安土城)을 건설. 통일사업의 거점으로 삼음.  
근세적인 성곽의 시초. 소켄지(惣見寺)
- \* 1582, 다케다씨 공격. 다케다씨 일족 패주, 멸망.
- : 혼노지(本能寺)의 변……모리(毛利)를 공격하고 있던 히데요시를 격려하기 위해 친정에 나섬. 극소수 병력만을 이끌고 교토의 本能寺에 숙박.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의 기습으로 노부나가 사망.

#### 4.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全國 통일

- : 오와리 출신의 농민(1536/7生~1598沒)
- : 1567. 노부나가의 미노 사이토씨 공격에서 두각을 드러냄. 외교술을 발휘, 사이토씨의 가신들이 배신하도록 유도.
- : 1582. 모리씨의 다카마쓰(高松城)를 공격하던 중 오다의 부음을 들은 히데요시는 모리와 강화체결, 회군하여 아케치 미쓰히데를 격파(山崎の戦い:中國大返し<sup>1)</sup>). 노부나가 사망 이후 히데요시는 오다 가신단내의 파워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수완을 발휘, 주군 노부나가의 장례식을 주관하여 성대하게 치름. 또한 노부나가의 후계자를 정하는 가신단 회의(淸

1) 하루 100km를 뛰어서 이동. 5일만에 山崎에 도착. 중장비 무장10kg, 보병5kg)  
미쓰히데, 近江으로 패주하던 도중 土民에게 살해당함(落武者습격). 3일 천하(정확하게는 11,12일).

洲회의)에서 남은 두 아들 중 한명으로 정했다가는 혼란만 커진다면 노부나가의 長孫 산포시(三法師, 3歲)를 추대하여 결정.

: 1583. 가독상속에 불만을 품고 거병한 삼남(信孝)이 히데요시에게 진압되자, 1584년 信孝의 최후를 보고 불안해진 차남 노부카츠(信雄)가 亡父 노부나가의 충실한 客將이었던 이에야스와 손잡고 거병함(고마키·나가쿠테 전투). 이 전투는 전쟁의 발단이 된 노부카츠가 독자적으로 히데요시에게 굴복하는 형태로 화의를 체결. 군사적으로는 이에야스의 승리이나 정치적으로는 히데요시의 승리. 이에야스는 차남을 히데요시에게 양자로 보내서(실질적으로는 인질), 일단 평화상태를 유지.

그러나 히데요시를 전투에서 이긴 유일한 다이묘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적나라한 형태로 복종하기를 꺼려하여 스스로 히데요시를 찾아가 배알하지 않음. 무력이 아닌 평화리에 이에야스를 굴복시키려 한 히데요시는 1586년 동생 아시히히메를 이에야스의 正妻로 주는 정략결혼, 生母天瑞院을 인질로 浜松城에 보냄. 그제서야 이에야스는 오사카성에 와서 히데요시를 배알함. 이에야스는 형식상으로 히데요시에게 臣從하긴 했으나 別格 다이묘의 대우를 받음.

: 1583. 오사카성 건설. 3년 걸려 완성. 교토의 聚樂第(취락제 파괴후에는 후시미성)에 이어 豊臣정권의 政廳으로 사용. 전국통일의 기점으로 삼음. 히데요시의 권력과 지위를 상징.

: 1585. 천황으로부터 관백(關白)에 임명됨. 公家の 관직이지만 히데요시에게는 전국에 호령할 수 있는 國政上的 지위에 올랐다는 점이 중요.

私戰禁止令 (惣無事令) / 태합(太閤)檢地

: 1587~1590까지 규슈, 관동, 도호쿠 지방의 다이묘를 차례로 굴복시켜 전국통일을 달성. 九州の島津氏, 關東の後北条氏, 東北の伊達政宗

\* 전국지배를 위한 체제……檢地, 刀狩

① 檢地 (토지조사정책) ……1582~1598. 太閤檢地

: 히데요시에 의한 일련의 검지.

: 檢地란 봉건영주가 자신의 영지를 파악하기 위해 田畑, 屋敷地를 조사하는 것.

: 差出檢地 (指出검지) ……종래의 전국다이묘나 노부나가의 검지

신고제. 가신에게 자기領地의 명세서를 제출시킴

전국시대 가신은 아직 독립성이 강하여 영주가 가신의 영지에 들어가 실측조사를 통일적으로 행할 수 없었음

: 太閤檢地에서는 秀吉의 직신들이 檢地奉行이 되어 實地測量을 행함.

검지실시규칙인 檢地條目を 만들어 각지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검지를 행함.

토지의 면적표시는 새로운 기준으로 마련된 町, 段, 畝 (무), 歩로 통일.

곡물의 양을 재는 마스 (枡) 도 종래 지역과 용도별로 여러 종류가 사용되던 것을 京枡로 통일.

: 검지방범……전국의 토지를 사단계(상, 중, 하, 하하)로 등급을 매김.

이에 기초해서 사전에 일정면적의 표준수확고(米의 예상수확고)인 石盛 (こくもり) 을 확정.

石盛에 면적을 곱한 것이 石高. 石高란 田地의 기준적인 예상수확고를 쌀로 표시한 것. 토지의 생산력을 쌀 수확고로 표시.

: 검지에 의해 촌의 생산고는 石高로 표시되고 다이묘령도 村高를 근거로 한 석고로 표시.

: 석고는 다이묘에게는 군역부담의 기준, 농민에게는 연공부담의 기준.

: 年貢……石高에 일정한 연공부과율을 곱한 것. 실제로 영주에게 납부되는 연공납입액. 통상적으로는 石高의 3분의 2를 영주에게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

: 이로써 모든 大名들의 석고가 확정되고 다이묘는 석고에 걸맞는 군역을 부담하는 체제가 구축됨.

: 검지를 거부하는 자는 영주건 백성이던 모두 참살한다고 위협하면서 실시.

: 새로 정복한 지역에는 반드시 검지를 실시.

: 전국66개국의 石高 약1800만 (1598) . 全國지배의 상징.

## ② 刀狩令……1588년

: 농민의 무기(刀, 脇差, 弓, 槍, 鉄砲)를 몰수하고 소유를 금지. 농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

: 검지와 중과세에 반항하는 잇키를 봉쇄하여 兵農分離를 추진하려는 것.

: 농민의 무기소지 금지정책은 전국시대를 통하여 형성된 자신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관념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많은 저항이 예상되었음.

: 몰수한 무기는 京都 方廣寺 (秀吉 건립) 의 대불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므로 현세도 내세도 구원받는다는 명목으로 몰수.

: 1592, 조선침략

## 5. 이에야스의 대두와 히데요시 말년의 政局

: 이에야스는 1543년 1월일 미카와(三河) 오카자키(岡崎)성(아이치현)에서 출생. 아버지는 마쓰다이라 히로타다(松平広忠). 날로 강성해지는 노부나가와 이마가와씨 사이에서 고전하다가 부친 히로타다가 1549년 가신에 의해 살해당하고, 이에야스는 이마가와씨 휘하에서 8세부터 19세까지 인질로서 생활함.

- : 1560년 오케하자마(桶狭間) 전투---이마가와 요시모토 戰死 후 이에야스는 이마가와 군 중 가장 뒤늦게 적지를 탈출. 오카자키 성으로 입성함으로써 인질의 신분에서 해방됨. 가신들을 앞세워 세력 확장에 몰두하다가, 1561년 이마가와 씨를 배신.
- : 1562년 비밀리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군사 동맹을 결성.
- : 미카와의 內政을 어느 정도 정비한 이에야스는 미카와의 동부에서 이마가와씨를 완전히 몰아내고 미카와를 통일. 1566년 姓氏를 세이와(清和) 겐지(源氏) 계통의 도쿠가와(德川)로 바꿈.
- : 1582년 이에야스는 스루가, 도요토미, 미카와 등 세 개의 국을 장악.
- : 1584년 고마키·나가쿠테 전투. 히데요시를 패배시킴
- : 1590년 전국 통일을 달성하자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교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이에야스의 영지인 도카이도(東海道)에서 간토(關東)지역으로 轉封시킴. 간헛슈(關八洲) 지역과 이즈(伊豆). 1590년 8월 에도(江戶)에 입성.  
⇒ 에도막부의 근거지
- : 에도 건설 이후,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와 다른 다이묘들 중간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 1590년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와 오슈의 다테 마사무네(伊達政宗) 간의 화해를 주선하여 성공시켰고,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구로다 나가마사, 아사노 나가마사, 고바야카와 히데아키 등 의 무단파 무장을 변호하여 그들의 신망을 얻음.  
⇒ 후일 에도 막부 수립에 작용
- : 1598년 히데요시는 죽음을 앞두고, 어린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보좌할 다섯 다이묘(五大老)와 다섯 부교(五奉行)를 뽑아 정책을 결정하도록 유언.  
이에야스는 마에다 도시이에, 모리 테루모토, 우에스기 가게카쓰, 우키타 히데이에와 더불어 다섯 다이묘로 뽑혔고, 집행 기관인 다섯 부교에는 문관파인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 아사노 나가마사, 마에다 겐이, 나쓰카 마사이에, 마시타 나가모리가 뽑힘.  
→ 도요토미 정권의 경우 그의 심복으로 활약한 인물들이 존재했지만 그 인물들의 합의기관 또는 정권의 중추라고 할 만한 정치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음
- : 武斷派 무장과 文吏派 무장 간의 불화. 이에야스, 무단파와 손잡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
- : 1600년 세키가하라(關ヶ原) 전투. 이시다 (서군) v s 이에야스 (동군) .  
서군에 가담했던 88家の 다이묘를 멸망시키고 5家를 감봉 처분함. 총 632만석을 몰수. 전국 다 이묘의 총 石高 1800만석의 3분의 1이 영주 없는 공백지가 됨.  
이에야스는 이 몰수지를 도쿠가와씨의 직할령으로 편입하거나 도쿠가와 편에 섰던 다이묘에게 하사.
- : 1603년 이에야스, 쇼군 (征夷大將軍) 에 취임하여 에도에 막부를 개창. ⇒ 260년간의 정권

## 6. 에도막부의 성립과 정치체제

: 쇼군직을 2년 만에 아들 히데타다 (秀忠) 에게 물려 줌.

: 大御所와 쇼군의 이원체제

1607년 家康, 秀忠에게 에도성을 주고 駿府(시즈오카 시)로 거성을 옮김.

大御所로서 家康이 幕政을 실질적으로 장악. 막부의 중신들을 양쪽으로 분할하여 정권을 운영. 아직 미숙한 정권인만큼 秀忠에게 領地安堵權을 행사하게 하여 쇼군으로서 다이묘들의 충성을 맹세받도록 하고, 자신은 전국시대를 통해 구축한 다이묘와의 인맥관계 등을 심분 활용하여 현직 쇼군을 보좌하는 역할.

: 對 도요토미씨 정책

: 1611. 천황의 양위식 거행. 이에야스는 교토로 가서 천황의 양위식을 직접 주재. 히데요리(秀頼)도 양위식에 참가(加藤清正이 설득)하여 이에야스와 면대.

: 1614. 교토의 호코지 (方廣寺) 鐘銘사건

方廣寺는 히데요시가 교토에 설립, 大佛을 안치한 사원(關白에 의한 鎮護國家의 상징, 豊臣家の 氏寺). 히데요리는 수길에 남겨준 재산 金 수만냥을 투입하여 높이 19미터의 거대한 金銅像, 3.2m의 鐘을 완성.

鐘銘 (國家安康, 君臣豊樂) 은 도쿠가와씨를 저주한 것이라는 트집

: 오사카 겨울 전투(冬の陣) (1614)

家康은 일찍부터 영국, 네덜란드 상인으로부터 유럽제 대포를 구입. 미리 전쟁 준비를 해 둠. 豊臣恩顧의 다이묘들은 거의 히데요리의 출병 요청에 응하지 않음. 강화가 성립되었으나 도요토미 쪽에는 강화에 불만인 자가 많아 로닌을 다시 모아 전쟁준비에 돌입.

: 오사카 여름 전투(夏の陣) (1615)

本丸 만으로 농성전을 벌임. 히데요리 母子의 자결. 아들(8세)은 교토에서 참수.

⇒ 도요토미씨 멸족

: 오닌의 난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의 시대가 1615년 오사카 전투를 끝으로 막을 내림.

\* 도쿠가와 쇼군의 권력……역대 막부의 쇼군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였고 토지와 인민에 대한 전제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었음.

: 경제력……天領 (御領, 御料) 이라는 쇼군의 직할령을 보유. 도요토미 시대에는 250만석. 17세기 말에는 700만석 (직할령이 400만석, 하타모토령이 300만석)

전국의 총 石高 약 3,000만석 중 4분의 1을 쇼군이 지배.

에도, 교토, 오사카, 나가사키 등의 주요 도시와 금은광산이 직할지

무역의 이익을 독점. 화폐 주조권을 장악.

: 군사력……군사력의 중핵은 直參이라고 불리는 쇼군 직속의 家臣.

하타모토(旗本) (장군의 직속 가신단 중 1만石 이하. 오메미에御目見이상. 직접 쇼군을 알현할 수 있는 자) 6~7만. /고케닌御家人

### \*막번체제

: 에도막부와 이 이전의 막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藩이 성립되었다는 점.

: 번이란 다이묘가 지배하는 領地와 그 지배기구 (정치조직) . 다이묘들은 家臣團을 편성하여 농촌과 도시를 지배. 가신단을 행정관료제적으로 편성하여 번내의 정치를 행함.

: 막부의 쇼군과 지방의 번주인 다이묘가 주종관계를 맺어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는 봉건적인 정치체제. 조세를 부담하는 농민을 기초로 하고 土農工商등의 엄격한 신분제에 의해 질서화됨.

### \*쇼군과 다이묘 主從관계

: 쇼군과 다이묘의 관계의 본질은 군사적인 주종관계.

: 쇼군은 다이묘에게 새로운 영지를 하사하거나 기존의 영지지배를 승인하여 御恩을 베풀으로써 다이묘들의 主君으로서 그들 위에 군림. 에도시대 초기에 확정된 다이묘의 영지는 改易이나 減封처벌을 받지 않는 한 그대로 상속됨.

: 다이묘는 쇼군에게 신하의 예를 취하여 영지지배를 인정받고 자신의 가신단을 이끌고 軍役奉仕를 행하는 것이 원칙.

軍役은 石高를 기준으로 병사와 무기에 대한 규정이 있었음. 다이묘는 석고에 상응하는 규모의 병사와 무기를 확보하고 있다가 戰時에 쇼군의 명령이 있으면 출동.

ex)大阪の陣, 島原の亂 (1637,38) , 長州征伐 (1866)

평상시에도 준군사적인 성격을 지닌 봉사가 요구되는데 이것도 군역의 원리에 의거하여 인원수와 무기를 갖추어 행하는 경우가 많음

ex) 쇼군의 出行시에 호위 (京都上洛, 日光東照宮への参拜) , 에도성의 경비와 에도의 소방업무, 성곽수축과 하천공사, 조선통신사 등 외국사절의 호위 및 접대업무

### \*막부의 행정조직

: 에도막부의 제도는 秀忠과 家光의 시대에 거의 정비됨. (배포자료 참조)

### \*다이묘의 통제

: 쇼군과의 친소관계, 知行高의 정도, 관위, 막부내에서의 직위 등을 근거로 하여 서열이 정해짐. 전국에 270씨. 최대는 加賀의 마에다(前田)씨 (103만석) .

: 쇼군과의 親疎관계

신관親藩……도쿠가와씨 일족의 다이묘. 御三家(尾張, 紀伊, 水戶)

후다이譜代……원래부터 도쿠가와씨의 가신이었던 다이묘.

도자마外様……세끼가하라 전투 이후 도쿠가와씨에게 복종한 다이묘.

: 一國一城令(1615)---다이묘의 거성을 한 곳으로 제한. 거성 이외의 모든 성을 파괴시킴. 군사력을 약화시킴. 일부 예외가 인정. 장군에 의한 다이묘 통제책으로만 평가되어 왔으나 家臣의 성 소유를 금함으로서 다이묘의 권력 강화를 초래한 측면도 있음.

: 武家諸法度(1615)---다이묘의 반역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 막부의 허가 없이 城을 무단으로 수축해서는 안 됨. 대규모의 선박주조 금지. 쇼군의 허가 없이 다이묘 상호간의 혼인관계 불가

: 改易, 減封, 轉封---2대, 3대 쇼군 시기에 120家 이상의 다이묘를 개역. 대대적인 다이묘 재배치를 실시. 親藩, 譜代다이묘를 關東, 東海, 近畿 등 전국의 요지에 배치하고 유력한 外様다이묘는 에도에서 먼 지역에 배치. 나아가 규슈, 四國, 동북지방과 같은 원격지에도 요소요소 덕천계 열이나 譜代다이묘를 배치. 전국지배를 위한 막부의 전략적인 배려가 근거에 깔림.

: 參勤交代制---다이묘가 격년 교대로 가신들을 거느리고 영지를 떠나 에도에 와서 생활하며 쇼군을 배알하는 것. 히에요시도 실시. 처지는 에도에 살게 함.

에도에 가신들을 상주시켜야 했음(藩邸). 上屋敷/中屋敷/下屋敷

규정된 규모의 군단을 편성하여 에도와 영지를 정기적으로 왕복. 재정적 부담. 에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교통로가 발달.

ex) 1688년, 土佐번의 참근교대비용은 번의 총지출의 약 40%

에도의 인구 약 100만명 중 武家の 인구가 50%, 공간적으로도 武家地가 70%.

## 7. 대외관계와 鎖國

\* 신교국 영국과 네덜란드의 일본진출(국가의 보호아래 아시아로 진출)

: 네덜란드……1581,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1602, 동인도회사를 건립.

: 영국……1600, 동인도회사를 건립. 인도로부터 아시아 전역에 진출.

: 네는 1609년, 영국은 1613년 각각 일본에 내항하여 家康의 허락을 얻어 平戶에 商館을 설치.

영국은 경영부진을 이유로 일본에서 철수(1623, 商館을 폐쇄, 자진철수).

: 결국 네만이 에도시대에 유일한 유럽국가로서 활동.

**\* 朱印船무역 (1604~1635)**

- : 17세기 초에는 일본인의 해외진출이 활발.
- : 朱印船 무역이란 중앙정권의 보호무역. 막부는 해외로 진출하는 상인에게 朱印狀이라는 공문서를 교부하여 商船이 해적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이 배를 朱印船이라 함.
- : 家康는 무역상대국에 서한을 보내 무역허가증인 朱印狀을 가진 무역선에 대해서는 무역상의 편의와 보호조치를 취해 줄 것을 의뢰함. 朱印船제도의 창설을 알린 것.
- : 朱印狀 (異國渡海朱印狀) 에는 「自日本……國舟也」라고 도항지가 명기되고 「源家康弘忠恕」라는 朱印이 날인되어 있음.
- : 朱印船은 일본의 銀을 적재하고 동남아시아나 南洋諸島에 도항하여 현지인과 또는 그 지역에 도항한 중국선과 무역을 행함.
- : 무역품……수입품 : 생사, 견직물, 피혁, 사탕, 香木, 염료  
(주인선무역 전성기의 生絲수입량은 포선의 일본수출량을 압도할 정도)  
수출품 : 은, 동, 철, 유황, 쌀, 세공품
- : 朱印船을 파견한 것은 교토, 오오사카, 堺, 博多, 長崎 등의 豪商들과 서국 다이묘들 (島津, 加藤, 鍋島, 細川, 松浦, 有馬), 막부관리, 외국인 (윌리엄 아담스, 안 요스텐, 중국인) 등 100달함. 그러나 1609년, 막부는 제다이묘가 500石積이상의 大船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이묘의 朱印船 파견은 불가능해져 이후 주인선영업자는 막부와 관련이 깊은 특권상인에 한정됨.
- : 주인선의 해외도항활동도 1635년의 법령 (일본인의 해외도항 전면금지) 으로 철폐됨.
- : 1604년부터 일본인의 해외도항이 금지되는 1635년까지 약350여척의 朱印船이 동남아시아의 각 지역에 도항.

**\* 日本町 (日本人町)**

- : 朱印船이나 외국의 선박에 편승하여 동남아시아지역으로 진출한 일본인은 약 10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동남아시아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도 상당수에 이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타이 등지에 日本町이라는 일본인 촌락이 형성됨. 일종의 상업이민.  
Ex)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일본인 이름.
- : 日本町의 주민은 통상무역에 관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상업이민이 주된 구성원. 그 외에 전란으로 主君을 잃은 浪人, 막부의 기독교 금압정책으로 추방되거나 도피한 기독교도들, 외국인에게 고용된 자들 등.

- : 일본정 전성기의 주민수……루손일본정 3000명, 타이 1500명, 캄보디아 350명, 일반적으로 일본인에 의한 自治制를 유지했고 治外法權을 인정받기도 함.
- : 쇄국체제가 강화되어 1635년에 朱印船 무역제도가 전면적으로 정지되자 日本町은 본국과의 유대단절로 점차로 쇠퇴하여 18세기에 소멸. 마닐라의 日本町은 1762년까지 존속됨.

**\*막부의 무역정책**

- : 家康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지만 무역은 보호 장려했기 때문에 포교를 묵인.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무역이 일본산 銀과 중국산 生絲 (白絲) 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 生絲는 당시 일본의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대단히 높았음. 명과 직접 통교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던 일본이 이 생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포르투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음. 家康이 초기에 포교를 묵인했던 이유는 포를 매개로 생사를 수입,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것.

**\*쇄국정책의 본격화**

- : 그러나 신 앞에서 평등을 설교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일본의 봉건적 신분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一神敎적 성격은 기성종교와 대립하였고 일부다처제의 금지, 切腹의 금지 등은 봉건도덕과 모순됨. 신도의 증가와 단결은 봉건지배의 강화를 꾀하는 막부의 두려움을 불러 일으킴.
- : 막부는 큐슈의 다이묘들이 무역의 이익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해지는 것을 두려워 함. 이러한 이유에서 막부는 점차 기독교의 금압과 무역의 통제를 강화.
  - 1612, 막부의 直轄領에 기독교금지령.
  - 1613, 전국에 금지령을 확대. 교회 파괴, 선교사의 추방, 신도의 개종을 강요. 선교사 추방후에도 일본잡입이 계속됨.
  - 1616, 유럽인의 寄港地를 히라도(平戸), 나가사키의 2 항에 제한. (중국선은 예외) . 다이묘의 영내에 유럽선이 내항하면 이를 모두 히라도, 나가사키로 回航시킴.
  - 1622, 55명의 선교사 (잡입한 선교사들) 와 신자들을 나가사키에서 화형으로 처형. (元和大殉敎) 후미에 (踏繪) 의 방법으로 기독교도를 색출. 寺講제도를 강화하여 신자를 불교로 개종 시킴.
  - 1624, 선교사의 잡입을 방지하기 위해 스페인 선박의 내항을 금지.
  - 1635, 일본인의 해외도항과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귀국을 전면 금지. 중국선의 寄港地를 長崎 데지마(出島)로 이주시킴.

1637-8, 시마바라 (島原) , 아마쿠사(天草)의 난 발생

일반적으로 島原 · 天草의 난은 기리시탄一揆로 불림.

두 곳 모두 기리시탄 다이묘의 舊領인 까닭에 막부의 금교정책하에 일단 신앙을 버린 크리스티교도나 몰래 종교를 고수하는 신자들이 많았고 그들이 봉기에 참가했던 것은 사실.

그러나 領民봉기의 근본적 원인은 신영주의 연공징수에 의한 酷政에 있었음. 영주의 혹정에 대한 반항과 기리시탄 금압에 대한 반항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일어난 農民一揆.  
→ 이 사건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난이었으나, 막부는 반란세력 중에 크리스티 교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기리시탄一揆로 과대 선전. 禁教정책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

→ 1638년 2월 막부군의 총공격. 일규 세력이 완전히 전멸, 진압됨.

1639, 포선의 내항을 전면금지. 島原의 란이 큰 요인으로 작용.

1641, 平戸 네덜란드상관을 데지마 (出島) 로 이전. 長崎奉行의 감시 하에 둠.

일반 일본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네덜란드인을 감시하기 위한 시설.

⇒ 쇄국의 완성

: 이후 무역항은 나가사키 한곳으로 제한되었고 나가사키에는 네덜란드선과 중국선만 내항하게 됨.

: 쇄국의 시대 네 개의 창구 說

長崎---네덜란드, 중국

對馬藩---조선

薩摩藩---류큐(琉球)

松前藩---아이누

## 【일본전근대사 참고문헌】

-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사계절, 2011
- 아사오 나오히로 지음, 이계황 외 옮김 『새로 쓴 일본사』, 창작과비평사 2003 연민수편자, 『일본역사』, 도서출판보고사, 2000
- 동경대학교양학부일본사연구실편 김현구.이언숙역, 『일본사개설』, 지영사, 1998
- 박경희,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일빛, 1998
- 정혜선 『일본사 다이제스트 100』 가람기획 2011
- 김희영 『아마토 시대부터 전후 일본까지 (이야기 역사 시리즈)』 청아출판사, 2006
- 우리미래역사체험학습 강사진 『한 권으로 풀어 쓴 이야기 일본사 (이야기 역사 시리즈 12)』 청솔, 2011
- 키토 히로시 지음, 최혜주, 손병규 옮김 『하룻밤에 읽는 일본사』 어문학사, 2009
- 전국역사교사모임 지음 『처음 읽는 일본사』, 휴머니스트

##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참고문헌】

- 무라이 쇼스케지음, 이영 옮김, 『중세왜인의 세계』, 도서출판소화, 1998
- 다시로 카즈이, 『왜관』, 논형, 2005
- 이영.김동철, 이근우공저, 『전근대한일관계사』, 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 동아시아사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 일본과 관련한 수업을 중심으로 -

박성기 (하남고)



# 동아시아사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 - 일본과 관련한 수업을 중심으로 -

박성기 (하남고)

### 1. 학교 및 교과목 이해

본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경기도 인근, 서울 바로 옆에 위치한 학교이다. 학년당 10개 학급으로 3개 학년 30개 학급 784명이다. 교육과정 상 역사수업은 2016년 현재 1학년 한국사 2시간과 2학년에서 동아시아사가 선택수업으로 인문계에서 3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2학년 인문계 선택과목은 법과정치/윤리와사상, 세계지리/동아시아로 편성되어 있다. 현재 2학년 인문계 학생은 120명 4개 학급이다. 이중 세계지리를 선택하고 있는 학생은 94명이며, 동아시아사를 선택하고 있는 학생은 26명이다<sup>1)</sup>.

### 2. 수업의 실제

#### 1) 지리에서 접근하는 일본

학생들에게 일본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 참 막연한 질문이다.

처음 동아시아 교과서 작업에 참여하면서 가졌던 고민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무척 생소한 주제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사는 그래도 몇 번 들어본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사의 경우 대부분의 단어들 이 한국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그래도 접근성이 조금은 나왔다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각 나라 왕조 이름 정도는 들어보았으니...

그러나, 일본사는 달랐다. - 물론 베트남사 역시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학

---

1) 2015년 2학년 선택인원수는 이와 반대였다. 동아시아사와 세계지리가 7:3 정도였다.

생들에게 가장 생소한 것은 고유명사. 지명과 인명을 포함한 시대 구분 역시 생소한 것들이었다. 이들에게 일본사를 이해시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특화된 내용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본에 대한 도입 단계에서 시작한 것이 기본적인 일본 지도와 지형 이해이다.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로와지면서 20여년전 처음 교직에 들어섰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해외 경험을 한 학생들이 많다. 일본도 상대적으로 다녀온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그 학생들에게 일본의 어디를 다녀왔느냐고 물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몇 명은 도쿄. 오사카. 교토 등을 이야기를 하기는 한다. 그런데, 다시 그곳이 어디에 있는냐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학생은 많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수업은 일본의 지형이다.

### (1) 일본 지리 개요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북으로부터 北海道(홋카이도), 本州(혼슈우), 四國(시코쿠), 九州(큐슈)이다. 이외에 큐슈 남서쪽을 길게 뻗은 沖繩(오키나와) 지역이 있다. 같은 일본이지만, 지리적으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지형의 특징으로 지역마다 문화·역사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북부 홋카이도는 원래 アイヌ(아이누) 원주민의 땅이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본토의 침략이 본격화되어 이제는 완전히 일본땅이 되었고, 원주민인 아이누인은 일부 지역에서 관광산업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토에 비하여 혹독한 환경이었으며, 혼슈의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동하여 지금의 홋카이도를 건설하였다. 홋카이도 북쪽은 사할린이다. 사할린은 러시아의 영토였고, 러일전쟁 이후 북위 50도 이남지역을 일본이 차지하였다. 사할린 강제징용의 역사를 언급할 수도 있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토문제인 北方領土<sup>2)</sup>를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도 있다.

혼슈 지역은 한국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본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다. 2011년 일본 동북지방대지진으로 유명한 福島(후쿠시마)를 비롯하여 수도인 도쿄가 있다. 고대·중세 문화의 중심지이자 메이지유신 이전까지 천황이 살았던 교토와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새로이 건설되었던 大阪(오사카)가 혼슈 서쪽 지역에 위치한다. 오사카에서 전철로 30여분 거리에 고대 일본 문화가 피어난 飛鳥(아스카)·奈良(나라)가 있다. 고대 동아시아 문화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高松塚(다카마츠즈카) 고분벽화가 아스카에 있고, 당의 장안성, 발해 상경성과 함께 등장하는 고대 동아시아의 전형적인 도시인 平城京(헤이조쿄)가 지금의 나라이다. 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法隆寺(호류지)와 大佛로 유명한 東大寺(도다이사)가 있다. 도다이사 한쪽에는 신라 민정문서가 발견된

2) 홋카이도 북동쪽에 위치한 네 개의 섬을 둘러싼 영유권 논쟁. 홋카이도 동쪽 끝인 根室(네무로)라는 지역에 가면 ‘북방영토를 돌려받는 날이 평화의 날’이라는 슬로건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크게 네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 각 지역의 위치를 알아두면 일본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된다.



오키나와 시가지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가데나 미군기지. 재일 미군기지의 75%가 오키나와에 있다.

을 정벌하기 위하여 설치한 총사령부였던 名護屋(나고야)성터에서는 무령왕이 태어났다는 加唐島(가카라시마/섬)가 보이고, 지금은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규슈 서쪽에는 왼쪽으로 알려진 나가사키가 있다. 나가사키항에서 서남쪽으로 뱃길따라 30여분 거리에 군함섬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섬이다. 규슈의 남단인 가고시마 현 知覧(치란)이라는 곳에는 가미가제특공평화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2차 대전 당시 죽음을 맞이하였던 젊은이들의 기록이 있다. 물론, 이곳에는 당시 한국인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의 기록 역시 함께 볼 수 있다.

正倉院(쇼소인)이 있다. 한국에 경주가 있고, 일본에는 교토가 있다고 한다. 794년 나라에서 도읍을 옮긴 지역이 지금의 교토인 平安(헤이안)이다. 메이지유신까지 에도와 함께 일본 정치의 한 축으로 존재했지만, 이곳에는 조선인들의 코와 귀를 묻은 耳塚(미미즈카)가 있는 비극의 장소이기도 하다. 재일한국인들의 삶을 다루었던 '박치기'를 촬영한 곳도 이곳 교토이다.

부산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狹馬(츠시마)를 건너면, 福岡(후쿠오카)이다. 규슈 지역에는 일본 최초의 벼농사 유적지인 板付(이타즈케) 유적이 있다. 일본 고대 국가의 시초로 볼 수 있는 吉野の里(요시노 가리) 유적도 볼 수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일본 지역을 침략할 것에 대비하여 건설한 조선식山城<sup>3)</sup>도 볼 수 있다. 漢으로부터 일본이 받은 金印이 발견된 곳도 이곳 후쿠오카 지역이다. 13세기 후반 여원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하였을 때 일본이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석담 등 일본 입장에서 元寇(원구)로 표현하고 있는 여몽연합군과의 유적지도 볼 수 있다. 임진전쟁 당시 조선

3) 일본에서는 중세 이후 대부분 평성을 만들었다. 이에 비하여 현지에서 부르는 명칭이다.

일본에 점령당하기 전 琉球(류큐)라는 독립된 왕국이었던 오키나와. 아열대 지역인 이곳에서는 중국 문화와 일본 문화. 그리고, 미국 문화를 함께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독립된 왕국이었다가 일본에 정복된 이곳에서는 지금도 자기들과 일본 본토 사람들을 구분하여 부른다. 2차 대전 당시 미군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섬 주민의 상당수가 희생당했고, 그러한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 당시 주민과 일본군이 피난하였던 몇 곳의 동굴에 가면 당시 한국에서 끌려온 여인들의 흔적을 만나볼 수도 있는 곳이 오키나와이다.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의 75%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미군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편 학생들에게 이러한 역사적인 것만을 강조하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다. 좀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역시 적절하게 섞어서 수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는 3월이면 遊氷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추운 지역이다. 매년 2월에 열리는 홋카이도 도청이 있는 札幌(삿포로)의 雪祭り(유키마즈리/눈축제)는 대표적인 홋카이도의 관광 상품이다. 혼슈의 도야마 현과 나가노 현을 잇는 立山(다테야마)라는 곳은 매년 5월까지 천연설이 있는 지역으로 매년 이곳을 찾는 관광객으로 유명한 곳이다. 반면 남부 오키나와는 아열대 기후로 다양한 해양스포츠와 색다른 문화를 맛볼 수 있다. 일본의 제주도라고 할 수 있는 오키나와는 매년 3월에 해수욕장을 개장한다. 지리와 관련한 다양한 일본에 대한 모습은 일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돕는데 유용하다. 지역에 대한 이해는 다시 역사적 사실 이해로 이행하기가 쉽다. 즉, 선사시대 한반도와 일본 문화의 교류에서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인 규슈 지역에 대한 이해. 瀬戸内海(세토나이카이)를 통과하는 항로, 현재의 오사카 지역인 難波(나니와)와 아스카·나라·교토에 이어, 조선통신사의 이동경로를 설명하면 이후의 역사 수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진다.

## 2) 학생과제 평가를 통한 동아시아의 이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과제를 줄 수 있을까. 2016년 1학기 학생들에게 제시한 수행평가는 다음과 같다.

명칭	내용	시기	배점
개인과제-독후감쓰기	동아시아와 관련한 책 읽고 독후감쓰기	5월 3째주	10점
조별 발표	동아시아에서 갈등과 협력 관계를 1개씩 선정하여 조별 발표	6월 3째주	10점
어휘 쓰기	1학기 내용 중 총 10개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무작위 선택하여 단어의 의미쓰기	6월 말	10점

이중 두 번째 과제인 '동아시아 갈등과 협력 사례 조사·발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시기	학생 과제 내용
학생 과제 예시	3월말	사전에 공지하여 학생들이 과제를 인지하고 준비할 시간을 준다.
학생 모둠구성	4월초	학생별 모둠 인원을 확인한다. 학생들과 상의하여 모둠 인원을 조절할 수 있다.
학생과제 중간 점검	5월 초	모둠별로 과제에 대한 중간 점검 단계 학생들 수행과제를 점검하여 추가·수정 사항을 이야기 할 수 있다.
학생 과제 발표	6월 3째주	학생들 앞에서 발표한다. 발표를 진행하면서 질의·응답 역시 함께 진행한다. 채점은 각 항목별로 모둠별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총 7개 조로 구성되어 발표를 진행하였다. 현재 4개 학급(7.8.9.10반)에서 2개 학급씩 선택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7·8반 학생 중 선택학생은 7명으로 2개의 조가 구성되었고, 9·10반 학생 중 선택학생은 19명으로 총 5개조가 구성되었다. 각 조별 명칭과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학급	조명칭	학생 발표 내용	
		갈등	협력
7·8반	보람상조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갈등	고대 한일 문명의 교류
	수행평가하기 힘들조	청일전쟁-동학농민운동	신라의 삼국통일 - 나당연합군 결성
9·10반	조광조	역사논쟁 - 임나일본부	나당연합군과 신라 삼국통일
	역발상조	해양자원,영토갈등	환경·기후변화에·에너지 대한 대응
	진웅이화이팅 조	일본군 '위안부' 합의	조선통신사 - 신뢰를 말하다.
	꺾조	남경대학살	Beseto - 삼국간 포괄적 협력활동
	공굴리기조	역사분쟁 - 동북공정	백강전투

수업을 하면서 각 모듈별로, 개인별로 자료에 대한 내용과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다음은 수업 후 각 조별로 남긴 감상문을 정리한 것이다.

### 조광조

오래 전에는 나당연합군과 같은 동아시아 나라들간의 협력사례(예 : 조공과 책봉)가 상당히 많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각국들이 주도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하지 않으려 하는 아쉬웠다. 동아시아 나라들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 공굴리기조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 사례(신라.당 vs 백제.왜)로 볼 수도 있는 백강 전투를 굳이 협력 사례로 꼽은 것은 백제와 왜 사이 관계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지금 엄밀히 따지자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고대에는 백제에게서 선진문물을 전해받는 나라였다는 것이 묘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 역발상

\* (협력 사례) 최근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인 환경, 에너지, 재난에 대한 문제점들을 동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힘을 합치면 앞으로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이나 에너지에 관한 문제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갈등 사례) 서로의 국가가 좋은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하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과거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기 보다는 자꾸 자국 중심으로만 생각 하려는 것 같았다. 그래서 역사 갈등을 완화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역사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수행평가 하기 힘들조

- 청일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일본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의 일들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청과 일본이 서로의 실리를 위해서 조선을 두고 싸우는 것을 보니 중국과 일본, 큰 나라들 사이에 우리나라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다.
- 남에 나라를 자기들끼리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당시 힘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안타깝다.
- 나·당 연합군은 중국과 한국이 연합한 것은 좋은데 같은 동포를 죽인 것이 안타깝다.
- 각 나라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모습이 현재 동아시아 정세와 많이 닮은 것 같다.
-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각 모듈별로 나름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주제를 찾아냈고, 사실을 조사했다. 모듈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참 기발한 발상들도 열보였다. 특히, Beseto에 대한 조사·발표는 동아시아의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대안이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소개하고 싶은 감상은 다음 내용이다. 다른 모듈에 비하여 짧은 글이었지만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과연'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문구였다.

## 보람상조

왜 동아시아의 갈등에 미국이 많이 보이는 것일까?....

보람상조 모둠에서는 협력 사례로 고대한일간의 문화교류 내용을 들었다. 대부분 한국사 교과서를 기초로 한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사진을 바탕으로 한 나열이었다. 갈등사례로 소개한 내용은 ‘북한 핵개발’이었다. 북의 핵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소개한 내용이었다. 중요한 것은 수업 말미에 학생들의 감상. 미국에 대한 언급이었다. 현대에 있어서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등장하는 미국. 학생들은 자신들의 경험 학습을 통해 역사적 시야를 더욱 확대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세계시민교육과 연관지는 동아시아사 수업실천

#### 1) 한국에서의 세계 시민 교육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의식있는 지성인에 의해 감지되고 있었으며 국경을 넘어선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오해와 적대감을 극복하려는 교육적인 시도가 있었다. 1차 대전의 참혹한 기억이 아직도 깃누르고 있던 1920년대 중반, 새로운 갈등과 전쟁의 씨앗이 배태되고 있던 1925년에 유럽의 양식있는 교육학자들이 모여 제네바에 국제교육연구소를 설치했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사상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였다. 전쟁 이후 전쟁의 방지와 평화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1945년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United Nations Organization)이 탄생하였다. 그 1년이 지나고, 유엔은 평화유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1946년 11월 런던에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Educationalm Scientific and Culttural Organization)을 창설하였다. 유네스코는 그 창설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전문기구입니다. 그 이름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 on)’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따

4) 이삼열, 「국제이해교육의 철학과 역사적 발전」 『세계화 시대의 국제화 교육』,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03

서 만든 것입니다. 인류는 두 차례 세계 대전의 참화를 겪으면서 항구적인 평화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물리적 힘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으며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에 기초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sup>5)</sup>

이후 세계 여러 곳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고, 2016년 현재 한국에서 역시 세계시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현상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사회 부분에서 국제이해교육, 세계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가 아닌가 싶다<sup>6)</sup>.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국제화·다문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교육 정책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수가 없었다. 단일국가의 개념에 기반한 기존의 학교교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문제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전부터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25 전쟁 이후의 존재하였던 혼혈아 문제, 베트남 전쟁으로 발생한 문제들도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부차적인 문제화되어 사회문제로 주목받지도 정책으로 입안할 여유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일정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민주화가 진전된 시점에서 국제화·세계화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 2)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주제

1990년 유네스코는 태국 파타야 쯔티엔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세계회의〉를 개최해 유아, 초등, 문해, 기술 교육을 아우르는 범세계적인 기초교육운동을 출범시켰다. 이러한 기초교육운동은 저개발국가에서 보편 교육 확대,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확대, 문해능력 향상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는 다시 2000년 UN에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적인 약속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발표하였다. 당시 참가했던 191개의 국제연합 참여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초등교육의 완전보급, ③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유아 사망률 감소, ⑤임산부의 건강개선, ⑥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⑦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발전을 위한 전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sup>7)</sup> 그런데, 2015년 9월 UN총회에서는 향후 15년 동안 국제사회의 발

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esco.or.kr/about/sub\\_01.asp](http://www.unesco.or.kr/about/sub_01.asp)

6)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점은 국제화는 경계가 분명한 단위를 기초로 하는 개별 민족국가를 단위로 한다면, 세계화는 국제와 국내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모호한 보다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측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4204&cid=40942&categoryId=31645>

전방향성을 제시하는 『세계의 변혁:2030 지속가능개발의제(Transforming Our World: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세계 각국 정상들의 합의하에 발표되었다. 여기에서는 17대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포함하고 있다. 2030 개발의제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발전’을 표방하며, 현재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어떤 방향으로 해소해 갈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랜 고민을 SDGs와 이행수단등을 통해 밝히고 있다. 실제 SDGs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목표라기 보다는 지구촌 전체가 이행해야할 보편적·전환적·미래지향적인 ‘우리 모두의 목표’로 보아야 한다.<sup>8)</sup>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한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세계시민교육의 주제와 내용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세계화**

우리의 삶은 세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상호연계성 속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기르며, 아울러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인류 발전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인권 존중**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인권의 의미를 깨우치고,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도 우리와 똑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하는 동등한 인간이라는 평등의식을 기르도록 하며, 이들의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연대의식을 갖도록 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수집단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 **평화로운 세계**

세계 곳곳의 분쟁과 갈등의 현실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관용과 협력, 대화와 중재 등 다양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평화적 감수성을 기르고, 학생들 스스로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

8) KOICA(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prkoica/220699901735>

## 지속가능발전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문제(경제, 사회, 환경, 자원, 문화 등의 영역에서)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와 가치관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문화 다양성

문화는 늘 변화하는 것이며 ‘살아서 움직이는’ 것임을 이해하고,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오늘날의 문화적 환경에서 낯선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적 감수성의 계발을 통해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익히고, 익숙한 우리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sup>9)</sup>

## 3) 세계시민교육의 특징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세계가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시민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의 기본은 세계와 별개의 나가 아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우리’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에서의 출발은 세계시민으로 객체로서가 아닌 주체로서 바로 나와 ‘우리’의 변화를 위한 아름다운 실천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성 함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세계 시민교육은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지역적 또는 세계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학습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핵심으로 삼는다.<sup>10)</sup>

아울러,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를 능동적인 교육의 주체로 삼으며, 변혁적인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자신이 처한 문제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고 변화·개선시키는 노력을 통해 문제해결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개인이 참여하고, 실천하여 변화시키는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의 실천은 특정 순간,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유과정을 모두 망라한 평생교육적 접근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 4) 세계시민교육과 현장 교육의 응용

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대하여 고민한 적이 있다. 역사교사로서 역사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대하여 고민한 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역사에 대한 정의는 ‘역사는 기억이고, 기록이다.’, ‘역사는 실천에 의하여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살아가는 당대의 현실은 곧 역사이다. 이러한 역사의 주제로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9)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세계시민교육 선생님을 만나다.-세계시민교육교사 워크숍 가이드북』

10) 환경규 외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방안』, 유네스코아시아 태평양 교육원, 2015.

무엇일까. 산업화 시대 이후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현실과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은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과연 진리는 존재할까. 동서양. 과거와 현재를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은 과연 존재할까...

그러한 고민 속에서 '지속발전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교육적 변용은 학생들이 현실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단순한 능력의 함양에 그치지 않고, 자그마한 실천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정과 결과를 담보로 한다. 배고픈 아이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고기잡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이를 경험함으로써 하여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 그러한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일면 새로운 교육적 담론이기보다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졌던 교육활동의 또 다른 해석이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 5) 한일청소년 교류 활동 - '나눔의 집' 방문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일본 학생들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는 한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록과 삶을 알 수 있는 곳. 역사교과서 속의 현장을 항상 한일학생들이 방문한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많은 논쟁. 사실 학생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의 배경이나 의미를 모두 이해시키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본 학생의 경우 '국가'의 틀 속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접근조차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일본 학생들과 매년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직접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 교과서 속의 인물이 아닌, 평범한 이웃할머니의 체험.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공동의 경험을 통하여 현실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옮기기도 한다. 한국에서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변화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 일본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지역에서 다시 할머니들을 초대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4. 글을 마치며

2012년부터 정식 교육과정으로 일선 현장에서 수업하고 있는 동아시아사 연수는 초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출발점이었다. 교사 연수 역시 어떠한 내용들을 어떠한 형식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해를 더해가며 다양한 개별 수업들이 개발. 소개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기존의 수업들을 함께 공유하는 작업. 아울러, 평가와

수업의 확산을 위한 분야에도 관심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세계화 시대에 더불어 실천할 수 있는 수업 실천. 지속적인 실천을 통한 세계시민교육과의 결합 역시 자칫 동아시아 수업이 가지기 쉬운 공간적·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근대일본과 해외침략

박 훈 (서울대)



# 근대일본과 해외침략

박 훈

## 해외침략의 연속

- 에조지직할(1854), 타이완파병(1874), 운양호사건(1875), 류큐처분(1879)
- 청일전쟁(1894), 의화단의 난 파병(1900), 러일전쟁(1904), 한국병합(1910), 1차대전참전(1914~), 시베리아파병(1918)
-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 태평양전쟁(1941):‘15년전쟁’
- 무모한 해외팽창:일본패망,아시아와 불화

## ‘과장된 위기감’과 해외팽창

- 18세기말부터 위기의식의 조장
- ‘강력한 소수파(powerful minority)’의 존재
-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웅비론’(해외팽창론) 등장
  - 경제적 팽창론
  - 군사적 팽창론

[북방에는 [러시아라는] 교활한 나라가 있어, 신주(神州)를 빼앗으려고 노리고, 항상 남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아아. 한탄스럽게도 오늘날 사람들[일본인]은 작은 지혜에 우쭐대고 있어, [러시아인의]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 작은 새의 [좁은] 식견으로 대룡(大鵬)이 하는 일을 비웃고 있다. 말하자면 장작의 비유 그대로이니, 쌓아놓은 장작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서 자면서 아직 불길이 올라오지 않았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藤田 幽谷 『正名論』, 1791).

## [混同秘策](佐藤信淵, 1823)

- 만주인은 조급하며 지모가 부족하고, 지나인은 나약비겁하여 겁이 많다. 조금만 놀랄 일이 있어도 꼭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구원하려고 할 것이다. 많은 인원이 자꾸 동원되면 인력은 피폐해지고 財用은 고갈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물며 지나의 王都인 북경에서 만주해안까지 왕복하려면 사막이 遼遠하고 山谷은 매우 험난함이라. 그런데 황국이 이것(만주)을 정벌하는 길은 겨우 160, 170리의 해상이므로 순풍에 돛을 달면 하룻밤에 그 해안에 도달한다

## [混同秘策](佐藤信淵, 1823)

- 皇國이 鞏固를 취하고 이 夷狄를 잘 다스려 이 무리로 하여금 남쪽으로 향하게 한다면 支那國이 강성하다해도 어찌 저항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 버려지같은 만주오랑캐도 지나를 취한 바 있다. 하물며 황국의 兵糧과 大統.화약의 神威를 갖고서 그 뒤를 잊지 못하겠는가. 십수년사이에 지나전국을 통일할 것은 논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다

### [幽囚錄](吉田松陰,1854)

- 蝦夷地를 개간하여 諸大名을 봉하고 틈을 봐서 캄차카, 오오츠크를 탈취하고 류큐도 타일러 內地의 제후와 마찬가지로 참근시키고 會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또 조선을 옛날과 마찬가지로 공납하도록 촉구하고, 북으로는 만주의 땅을 분할하여 빼앗고, 남으로는 타이완, 루손의 여러 섬을 우리 수중에 넣어 점차 진취의 기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 [幽囚錄](吉田松陰,1854)

-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의 남쪽에 있는데 바다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리 멀지는 않다. 그 위도는 딱 중간정도이다. 그러므로 그곳은 당연히 초목이 무성하고 인민은 풍족하여 여러 외국이 앞다퉈 이 땅을 얻으려고 할텐데, 영국이 이 땅에서 개간하고 있는 것은 겨우 그 심분의 일이 불과하니, 내가 항상 이상하게 여기는 바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곳을 손에 넣으면 분명히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조선과 만주는 연결되어 있는데 일본의 서북쪽에 있고 양쪽모두 바다로 떨어져 있을 뿐 가깝다. 그리고 조선과 같은 곳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臣屬했지만 지금은 좀 거들먹거리는 점이 있다. 그 현상을 분명히 밝히고 원래대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 • 神功皇后와 豊臣秀吉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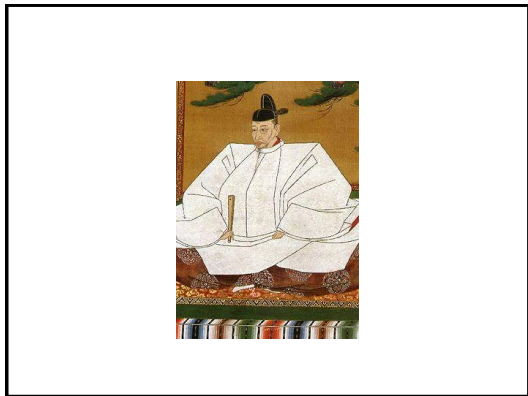
- 에도시대에 두사람의 인기가 높아짐
- 講談을 통해 대중적으로 유포
- 해외침략의 무용담이 상상력을

### 神功皇后





## 토요토미 히데요시



## 오사카의 영웅



### 이유 없는 해외 침략론

- 당시의 일본은 산업혁명 이전, 해외시장개척이나 자원확보의 필요 없음
- 조선/청 등 인근국가와 군사적 긴장감이 전혀 없었음
- 그렇다면 왜?

### 위기감 대두의 배경

- '북방무역' 활황 : 아이누와 일본의 무역관계가 긴밀화
- 일본인 방문자 급증, 거주자도 발생
- 북방지역이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
-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진출: '러시아 위기'

## 북방무역로



## 과장된 위기감의 원인

- 2백년간의 장기평화
- 해국일본이라는 안보개념의 대전환
- 에도봉쇄에 대한 공포 : 수야충방 운하공사
- 청의 안보우산의 부재
- 풍부하고 정확한 서양정보 : 네덜란드, 청국상인->서양식민지화 움직임을 숙지
- 순결, 독립의 일본이미지형성
- 기독교에 대한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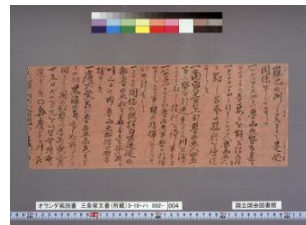


## 아편전쟁의 영향

- 청 : 변방오랑캐의 소요정도로 생각(북방유목민과의 전통관계의 변형정도로), 애로우호사건과 베이징점령으로 위기의식->양무운동, 그러나 본격적 위기감은 청일전쟁 후
- 조선 : 영토점령이 없었다, 청이 패한 것은 아니다, 국방보다는 아편유입을 경계, 지리적/재정적 이유로 彊軍건설에 회의감

## • 일본

- 청의 굴욕적 패배로 인식, 영국의 군사력과 그 일본침공을 크게 우려. 이국선타불령(1825)을 폐지하고 신수급여령(1842)으로 전환, 해방조치 착수, 국내개혁(대운하)
- 정보의 광범한 유통(風說書): 막부/다이묘 뿐 아니라 중상농민에까지, 지역적으로 동북 등 변경까지 전파, 강렬하고 민감한 반응



## 서양문물의 수용

- 군사기술부터 수용 : 지배층이 사무라이, 국방위기관
- 양이주의자도 서양군사기술 도입주장
-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관용적
- 취장보단 : 고대천황과 상한의 예
- 서양문화 일본기원설(평전득윤)
- 조선의 주자학같은 도그마 부재 : 실용주의

## 큰 저항없이 개혁



## 해외웅비론의 대두

- 서양의 식민지화 움직임에 대한 상세한 정보
  - 세계가 몇 개의 세력권으로 재편될 거라는 예상
  - 無主地 선점에 대한 의욕
- 당장 실현가능성은 없지만 하나의 로망으로 강한 생명력 : 현실주의외교노선이 약화될 때

## 조선식민지 지배의 실패

- 동화와 차별정책의 혼선
- 조선인의 비협조, 저항, 독립투쟁
- 남은 것은 조선/한국인의 강한 반일감정
- 조선식민지화의 특성에 기인한 측면

## 같은 문화권/역사권

- 조선역사상 최초의 異族정권
- 같은 문화권에서 벌어진 식민지화
  - 조선인의 국제적/문화적 우월감
  - ‘국제서열’의 전복
  - 역사를 이용한 지배와 저항이데올로기 : 神功皇后, 任那日本府, 日鮮同祖論, 이순신현창운동
  - 始原的 적대감 유발

## 늦은 식민지화의 時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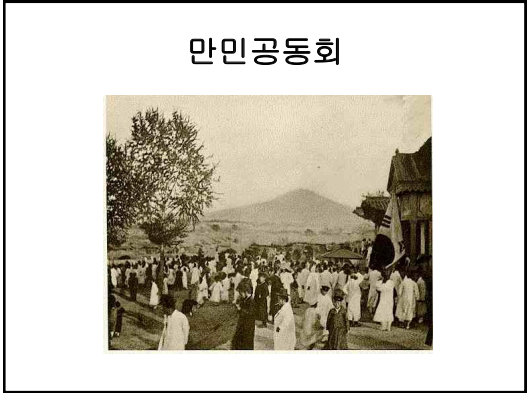
- 영국 동인도회사의 부분적 인도지배는 1600년대초, 전면적 지배는 1857년경
- 포르투갈, 1511년 말라카점령, 네덜란드 1619년 바타비아(자바)건설, 영국 19세기초반 싱가포르, 프랑스, 1860년대에 코친차이나, 1880년대에 안남과 톤킹.
- 식민지는 대체로 1880년 이전에 형성, 조선식민지는 그로부터 20-30년 후

## • 1880년대부터 20-30년의 세계사적 중요성

- 1880년대부터 본격적인 서양제국주의
- 이에 대응해 비유럽지역 민족주의 발생, 성행 : ‘民族’ ‘中國(人)’이란 어휘사용시작
- 조선은 1895년경부터 ‘민족주의의 소나기’, 합방당시는 민족정체성의 관점에서 조선은 이미 성인: 오키나와와의 대비

## 민족주의의 소나기

-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 독립신문\* 등 미디어와 시민조직 발달
- 민족주의적 출판물의 범람과 학교교육활성화: 애국계몽운동



### 짧은 식민지기간

- 다른 식민지들은 직접지배부터 계산해도 100여년, 타이완도 60년, 조선은 35년.
- 식민종주국이 패전했기 때문에 즉각 해방
- 독립국으로서의 기억과 망국의 충격을 잊기엔 너무 짧은 기간
- 식민정책이 뿌리내리기 전에 해방

### 다른 식민지의 경우

- 타 식민지: 종주국과 식민지간에 독립에 대한 로드맵/협의
  - 1차대전 중 군인을 제공한 인도에 대해 영국은 독립/자치 등을 인도인과 논의
  - 미국의회는 30년대 중반 필리핀독립법안을 의결 (10년후 독립약속), 45년 독립
- 식민지리더들은 미리 준비, 종주국에 대한 악감정도 완화

### 조선의 경우

- 한일 양자에게 예기치 않은 사태(1940년에 5년후 조선독립을 예견한 사람은 극소수)
- 식민기간 중 조선독립은 논의조차 금지
- 일본과의 협상경험, 협상채널 거의 없음
- 일본 역시 혼선: 조선독립의 始點(포츠담 선언 수락/대한민국,북한정권수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체결시점 중 어딘가?)

## 몽양 여운형



## 중국과의 대결 선택

- 아편전쟁 이후 중국열시관 : '중국'에 대한 콤플렉스와 혼재
- 갑신정변에서 청군에 패되한 후 福澤諭吉가 脫亞論(1885)
- 청일전쟁승리 후 福澤諭吉의 [발언](#) \*
- 타이완외에 요동반도 욕심 : 러시아와 대립
- 1900년 의화단의 난에 파병 : 연합군전체 전력의 반 이상\*

## 脫亞論(1885)

- 오늘날 일을 이룸에, 우리나라는 인국(隣國)의 개명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를 일으킬 여유가 없다. 오히려 그 대오에서 이탈하여 서양 문명국과 진퇴를 함께 하고, 저 지나, 조선을 대하는 법도도 인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 줄 것 없이, 실로 서양인이 이들에게 대하는 품을 따라 처분해야 할 뿐이다. 악우와 친한 자는 함께 악명을 면키 어렵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아시아 동방의 악우를 사절하는 바이다

## 후쿠자와의 청일전쟁 소감

- 실로 이번 전쟁은 一大快事이다. 오래살고 보니 이러한 활극을 볼 수 있구나. 나는 立國의 기초는 단지 서양의 문명에 있을 뿐이라고 오랫동안 떠들어 왔지만... 도저히 생애 중에 실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지금 눈앞에 이런 盛事를 보고, 지금은 이웃의 지나와 조선도 우리문명 중에 포섭되려고 하고 있다. 필생의 愉快, 실로 望外の 일이다

- 러일전쟁 승리로 요동반도(관동군), 남만주(만철) 차지
- 신해혁명(1911)후 만주는 군벌 張作霖 휘하에 일본은 장작림과 협력관계, 만주에 영향력 유지
- 1차세계대전을 틈타 베이징군벌정권에 21개조 요구 (1915), 독일령 산둥성 파병
- 5.4운동으로 반일운동 성장



- 1920년대 중국내셔널리즘 급성장 : 손문, 장개석의 국민당정권이 베이징입성(1928)
- 관동군, 장작림 폭살(1927), 만주사변(1931), 관동군이 조종하는 만주국 수립
- 조선에 이어 중국내셔널리즘과도 대결노선 선택
- 열강의 만주국 불인정, 국제연맹 탈퇴(1933): 중국, 영국, 미국, 소련과 갈등

## 만주국 국기



## 만주국 영토



## 아시아호



- **중일전쟁 돌입(1937)**
  - 관동군의 고의도발
  - 단기전 예상, 수도 남경항락(남경대학 살)
  - 장개석 결사항전(청일전쟁 때와 다름)
  - 일본군전력의 한계, 고노에(近衛) 성명, 남경괴뢰정권 수립
- **소련과 노몬한 전투(1939)**

## 노몬한 전투



藤田兵器研究所



## 미국의 입장

- 1차세계대전후, 세계의 공장, 초강대국으로 성장
- 중국에 대해 문호개방, 기회균등정책 : 일본의 '특수권익' 주장과 배치
- 만주국 불승인
- 중일전쟁으로 파국 : 장개석 원조
- 미일항해통상조약 파기, 석유/광물 수출금지
- 1941년 진주만기습과 동시에 동남아시아의 영국, 프랑스령을 공격 : 미, 중, 영과 본격전쟁, 1945년 소련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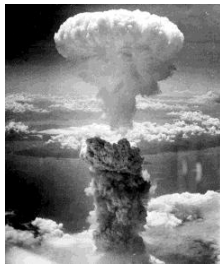
### 진주만 기습



### 태평양전쟁도



### 나가사키 원폭



### 폐허시찰하는 히로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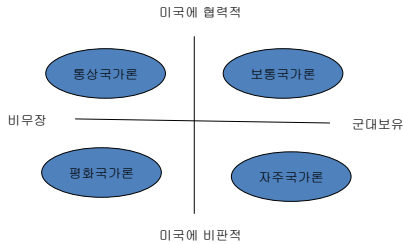
### 맥아더와 히로히토



### 해외침략사의 교훈

- 현실주의외교세력의 쇠퇴로 빚어진 참화 : 일본내에도 반침략그룹이 상당 (원로 사이온지, 궁중, 의회세력)
- 무책임체계의 문제점
- 이상주의/모험주의의 파탄

### 일본사회의 노선지도 : 우파의 부상



### 각 노선의 주장내용

통상국가		보통국가	자주국가
-자민당주류 (90년대초까지) -민주당일부 -재계 -요미우리신문 (최근변화)	어느세력에 포진?	-자민당우파 (90년대중반이후 자민당주류) -민주당일부 -요미우리신문, 중앙공론	-극우세력 -산케이신문 -諸君 -후소샤 -새역모

### 각 노선의 주장내용

	통상국가	평화국가	보통국가	자주국가
헌법개정(군대보유)	반대	절대반대	적극찬성	적극찬성
미국과의 관계	-안보의존 -적극추종	-중립화, 친소경향 -안보조약반대 -미국비판	-안보분당 -미국과 협조하며 세계질서유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미군철수

### 각 노선의 주장내용

	통상국가	평화국가	보통국가	자주국가
역사인식	-사죄와 반성이 공식입장 -전전일본에 친밀감	-독일수준의 철저한 사죄와 반성	-모든 것이 잘못 된 것은 아님 -과거지사는 잊어야	-과거역사를 찬양, 미화 -대동아전쟁은 아시아해방전쟁

### 각 노선의 주장내용

	통상국가	평화국가	보통국가	자주국가
중국에 대한 인식	-현상유지 -하먼서경 -제교류	-과거 공산중국에 동경 -우호적	-가상적국으로	-중국위협론 -가상적국
한반도에 대한 입장	-한국과 경제/문화교류 -북한의 현상유지	-한국독재 정권에 반대 -북한에 우호적	-더 사죄는 없다, 우호관계는 유지 -북한에 강경	-한국성공은 일본의 몫 -북한은 파괴해야

**전쟁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  
**- 야스쿠니 신사**

이경훈 (서천고)



# 전쟁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 - 야스쿠니 신사

이경훈 (서천고)

## 1. 주제 선정 이유

2016년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 이후 새로운 반세기로 접어드는 의미있는 시기이다.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관계설정을 하고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한해이지만 역사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가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문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 등 근대 이후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비교적 최근에 한일 간의 역사갈등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일본의 전통종교를 빙자한 군사시설, 침략전쟁의 도구라는 비판은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과 타이완인이 유족의 동의도 없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A급 전범을 합사하여 신으로 만들고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에 참배를 하면서 한일 역사 갈등의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정부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과거 군국주의로 되돌아가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전 세계적인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야스쿠니 신사의 실상과 비판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평소 이와 관련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은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기사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면 독도문제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같이 단순히 한일 간의 역사 갈등으로 생각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뉴스보도(SBS, 2013.04.28)에서는 야스쿠니 신사를 '신사(神社)'가 아니라 '신사(紳士, gentleman-젠틀맨)'로 알고 있는 학생들의 인터뷰가 나와서 충격을 주었던 적도 있었다.

역사적 비판은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릴 수 있다. 이 수업에서는 '일본의 신사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야스쿠니 신사의 정체'와 '야스쿠니 신사가 비판을 받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과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여 같은 침략전쟁을 저지른 국가이지만 ‘전쟁에 대한 기억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살펴보고 일본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다음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지역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수업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의 실상을 알고 일본에 대해 더 나쁜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한 독일의 사례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인들의 노력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일본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인식을 통해 문제해결의 출발점을 알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단지 교과서나 매스컴에서만 나오고 나오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역사 화해를 위해 내가 문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해 직접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이다.

## 2. 교육과정(성취기준)과의 연관성

학교급	과목	영역	내용요소와 성취기준
중	역사	대한민국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국가와의 역사갈등 해결노력</li> <li>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변국가와의 역사갈등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아본다.</li> </ul>
고	한국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바른 역사관과 주권의식</li> <li>독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영토문제, 역사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탐구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의식을 확립한다.</li> </ul>
	동아시아사	오늘날의 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등과 화해</li> <li>동아시아의 현존하는 갈등과 분쟁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화해를 위한 방법을 탐구한다.</li> </ul>

### 3. 교수 학습 과정안

수업 목표	야스쿠니 신사 문제의 실상을 알고 독일의 사례를 통해 이것이 평화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한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교수학습 자료	프레지, 학생용 활동지, 교사용 참고자료		
단 계	학습주제	교수 학습 활동 내용	자료
도입 (5분)	1. 신사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및 출석 확인, 활동지 배부</li> <li>• 신사란? - 일본의 전통 종교 신도, 신사 - 호기심 유발</li> <li>• 교사의 질문과 학생 답 -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해보자</li> </ul>	프레지를 보면서 활동지 해당 내용 작성
전개 (35분)	2. 야스쿠니 신사란?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훈사의 의미와 야스쿠니 신사 탄생의 역사적 과정</li> <li>• 야스쿠니 신사의 주신(모시고 있는 신)</li> <li>• 지방의 야스쿠니 : 호국신사</li> <li>•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시설</li> </ul>	
	3. 야스쿠니 신사가 문제가 된 이유는? (7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 A급 전범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 - 전범을 애국자로 미화, 침략전쟁의 정당화</li> <li>• 한국인 강제 합사 - 강제 징용, 징병에서 사망한 한국인 - 유족의 동의도 없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li> <li>• 야스쿠니 신사 축의 합사 논리</li> </ul>	뉴스영상 [00:46]
	4. 침략전쟁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 - 일본과 독일(8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전쟁박물관 '유슈칸' -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동상의 의미 - 침략전쟁에 대한 인식 - 와신상담, 러일전쟁 - 전사자를 전쟁영웅화 - 고이즈미 전 총리, 아베 총리의 침략 전쟁에 대한 인식</li> <li>• 독일 국립 중앙 전몰자 추도소 '노이에 바헤' - '죽은 이들을 감싼 어머니' 동상의 의미 -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참회 행동 - 아우슈비츠를 방문한 독일 축구대표팀, 주장 필립 람 인터뷰</li> </ul>	

	5.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리의 신사참배와 한국인 무단합사 취소 소송</li> <li>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일본, 타이완 시민들의 국제연대</li> </ul> </li> </ul>	뉴스영상 [01:36]
	6.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한일 양국민의 인식(8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일본인·한국인의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양국 국민의 인식</li> <li>- 한국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답)</li> </ul> </li> <li>새로운 추도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종교 국립추도시설의 건립</li> <li>-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li> <li>- 야스쿠니 신사에서 A급 전범 분사</li> </ul> </li> </ul>	뉴스영상 [01:24]
정리 (10분)	7.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li> <li>야스쿠니 신사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사이트 방문</li> <li>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 관련 피켓 만들어 SNS에 올려보기</li> <li>평화적 해결방법에 대해 토론해보기(모둠활동)</li> </ul>	학생 발표 - 시간이 부족하면 과제로 제시

#### 4. 지도상의 유의점

- 각 주제별 내용과 사진·영상에 대한 해설 및 강조점은 ‘교사용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은 클릭 후 재생될 때까지 1~2초 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 수업을 하다보면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일본인들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공동으로 해결하려고 활동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 ‘6.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한일 양국민의 인식’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70%가 넘는 일본인들이 참배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야스쿠니 참배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70%가 넘는 일본인들이 왜 참배를 허용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양국 국민의 기억의 차이이고 야스쿠니 신사 문제 해결의 출발점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인터뷰 영상에서 보듯이 한국인들도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있음을 알고 역사적 사실을 아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수업의 목적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금지’보다 새로운 추도시설,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의 기능 확장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의 유족들을 설득하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합니다.
- ‘7. 우리(학생)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가보고 관련내용을 SNS에 올리는 등 간단한 참여방법을 통해 나도 참여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또한 모둠토론을 통해 다양한 문제 해결방법 및 우리(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게 하여 한일 간 역사갈등 문제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가까운 일이고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합니다.

## 5. 학생들의 반응

### 1) 수업하기 전 설문

#### ① 2-1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

- ‘모른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모른다.’
- ‘유골이 있는 곳’, ‘시신을 모신 곳’, ‘죽은 사람들의 위패가 있는 곳’
- ‘아베총리의 참배로 문제가 된 곳’, ‘침략전쟁에 죽은 일본인을 신으로 모신 곳’
- ‘전쟁범죄자들을 신격화 하는 곳’, ‘전범재판에서 A급으로 재판받은 범죄자들을 숭배하는 곳’

#### ② 4. ‘야스쿠니 신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 ‘일본 양복입은 남자’, ‘젠틀하다.’
- ‘일본인이니까 나쁜사람?’, ‘쪽바리’
- ‘저스틴 비버’, ‘최근에 일어난 폭발물’
- ‘일본 관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아서 화가 난다.’, ‘별로 인종계 생각 하는 장소’,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

## 2) 수업 후 소감

### ① 정확한 사실 인식

- “야스쿠니 신사가 문제가 되는 중요한 두가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 ...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도 모르는 채 그들을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들에 대해 정확히 배우고 일본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들을 신으로 모시고 추모하는 반면 독일은 전쟁에 피해를 받은 모든 이들을 추모하며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과거에 큰 잘못을 했지만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반성하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바른 역사인식을 갖는 독일의 모습이 너무나 멋져보였고, 일본도 독일과 같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다.”

### ② 일본에 대한 인식 변화

- “일본내에서도 올바른 생각을 갖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놀랐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 일본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것들을 파악하면서 우리부터 알아야 한다.”
- “일본이라고 무조건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본에도 옳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나서 무조건 싫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 ③ 개인의 참여와 활동

- “집에 가서 (관련) 사이트에 응원의 댓글을 달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SNS를 통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알리는 글을 공유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등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 교사용 지도자료

## 1. 신사란?

일본의 전통종교인 신도에 대한 소개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도입부입니다. ‘일본에 가본 학생?’, ‘신사에 가본 학생?’ 등의 질문으로 흥미를 갖게 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발표하게 해줍니다.

신도는 자연에 깃들여 있는 정령, 과거의 영웅, 죽은 조상, 위인, 존경 받았던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고 숭배하는 일본의 토착신앙이자 전통종교입니다.

### 〈사진·영상 해설〉

- 오사카 츠루하시 미유키모리 신사

츠루하시는 재일한국인들이 밀집해서 모여살고 있는 곳이다. 미유키모리 신사는 일본인들과 이곳에 사는 재일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건강과 복을 비는 전통적인 신사입니다.

- 배전 - 참배하는 곳

배전은 일반인이 참배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전 뒤편으로 신을 모셔두는 본전이 있습니다.

## 2. 야스쿠니 신사란?

야스쿠니 신사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일반 신사와 무엇이 다른 점인지를 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반신사가 아닌 국민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군사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의 주신으로 한국을 침략했던 군인들도 신으로 모셔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메이지 유신 전후 유신세력은 천황중심의 정치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후 신도를 일본의 국교로 삼아 천황의 권위를 강화합니다. 메이지 천황의 지시로 내란에서 천황 측에서 싸우다 전사한 자들을 위령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초혼사를 세웠고 이 중 도쿄 초혼사는 1897년 군의 요청으로 야스쿠니 신사로 개칭됩니다. 따라서 일반 신사는 내무성 관할이었으나 야스쿠니 신사는 군에서 관할하는 군사시설이 됩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모두 2,466,532명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메이지 유신 전

후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과 침략전쟁에서 전사한 자들입니다. 특히 조선침략과 관련된 자들도 205명이 신으로 모셔져있고 한국인으로서 강제 합사된 사람들도 21,181명이 있습니다.

일본 각지에는 '호국신사'가 있습니다. 호국신사는 '지방의 야스쿠니'라고 불립니다. 이곳에는 야스쿠니 신사와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죽은 각 지역의 전사자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고 각종 전쟁관련 물품을 전시하고 신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떠받들고 국민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군사시설입니다. 병사들은 죽어서 야스쿠니의 신이 되어 일본을 지키는 신이 되고 천황의 추모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천황은 매년 정기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국민들을 침략전쟁에 동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사진·영상 해설〉

#### - 도쿄 초혼사(출처 : 유슈칸)

창건 당시의 도쿄 초혼사의 모습입니다. 유슈칸에 전시되어 있는 판넬 사진입니다.

#### - 야스쿠니 신사 입구 표지석과 도리이

입구의 도리이는 높이 25m로 청동으로 만든 도리이로는 일본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 - 야스쿠니 신사 배전(출처 : 야스쿠니 신사 홈페이지)

야스쿠니 신사에 일반인이 참배하는 곳입니다. 배전 뒤에 본전이 있고 본전 뒤에는 야스쿠니 신사가 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들의 명부인 '영새부'를 보관하고 있는 영새부봉안전이 있습니다.

#### - 야스쿠니 신사 합사자 수(그래프, 출처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팸플렛)

야스쿠니 신사가 신으로 모시고 있는 2,466,532명의 세부 내역입니다. 대부분 침략전쟁과 관련하여 신으로 합사되어 있고 조선침략과 관련된 합사자들도 205명이 있습니다.

#### - 보신전쟁(출처 : 유슈칸)

메이지 원년인 1868년 10월부터 1869년 5월까지 계속되었던 메이지 정부군(천황 측)과 막부 세력 사이에 벌여졌던 내란입니다. 도쿄 초혼사는 보신전쟁에서 천황을 위해 죽은 3,588명을 위해 처음 건립되었습니다.

#### - 호국신사 - 야마구치현

아베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 현에 있는 호국신사입니다. 이곳에는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와 마찬가지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신사 경내 포탄과 전투기 프로펠러**

야마구치 현 호국신사 내에 전시되어 있는 전쟁관련 무기들입니다.

- **야스쿠니 신사 앞에 도열해 있는 출정군인들(출처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팸플렛)**

전장으로 나가기 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드리기 위해 도열해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침략전쟁의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 **출정을 앞둔 가미가제 특공대(출처 : 치란 가미가제특공대 기념관)**

가고시마현 치란에 있는 가미가제 특공대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가미가제 특공대는 '죽어서 야스쿠니에서 만나자'라고 맹세한 후 연합국의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출격한 자살특공대였습니다.

- **히로히토 천황 부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출처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팸플렛)**

1943년 춘계임시대제에 참석한 히로히토 천황 부부입니다. 당시 천황이 직접 참배하자 4만 명의 유족이 감격했으며 전사자 19,987명의 영령을 새로 합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3. 야스쿠니 신사가 문제가 된 이유는?

야스쿠니 신사에는 전쟁범죄자로 처벌받은 A급 전범이 신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이들을 전쟁범죄자가 아닌 애국자로 평가하여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는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한국인 및 타이완인을 야스쿠니에 일본을 위해 죽은 애국자로 합사해두었다는 점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측은 “전사한 시점에서는 일본인이었으므로 사후에도 당연히 일본인”, “일본의 병사로 죽으면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모셔진다는 생각으로 싸우다 전사했으므로 합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이들의 합사철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합사를 추진하여 생존자까지 합사를 해두고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진·영상 해설〉

- **일 아베총리, 야스쿠니 신사 전격 참배(2013.12.26, YTN 뉴스 영상)**

일본 아베총리는 2006년 고이즈미 총리 이후 7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 총리가 그간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범들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역사정의와 인

류양식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행위로 강력한 분노를 표시한다.”며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전통적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마저도 이례적으로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친구이지만 일본 지도자가 주변 국가와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취한 것에 실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A급 전범(출처 : 조선일보)**

A급전범은 극동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 혐의로 판결을 받은 자들로 총 28명이다. 이 중 1명은 정신장애로 형이 면제되었고 2명은 판결 전에 병사하였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받은 A급 전범은 총 25명이다. 이중 7명은 사형, 나머지 18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형판결을 받은 7명을 포함하여 14명이 1978년 10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다.

- **고이즈미 총리, 아베총리(출처 : 연합뉴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전현직 총리의 모습이다.

-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수**

야스쿠니 신사는 강제징용, 징병으로 끌려가 전사한 한국인들을 해방 이후에도 유족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1959년 마음대로 합사하였다. 이로 인해 해방 이전 합사된 415명을 포함하여 21,181명의 한국인이 일본인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다.

- **생존자까지 합사시킨 야스쿠니 신사(출처 : 한겨레 21)**

2001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중 생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필리핀 서쪽 남양군도로 강제징병을 갖다 돌아온 김희중씨의 경우 창씨개명된 ‘토요카와(豊川)’으로 합사되어 있었다. 2006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야스쿠니에 합사되었으나 생존자로 확인된 한국인은 총 60명이다.

#### 4. 침략전쟁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 - 일본과 독일

이 부분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침략전쟁을 기억하는 시설과 방식이 서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하면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고 독일은 과거를 반성하는 장소를 만들어 침략전쟁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젊은이들을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기억하는 대표적인 공간은 야스쿠니 신사의 부속시설인 ‘유슈칸’이고 독일은 국립중앙전몰자추도소 ‘노이에 바헤’입니다. 유슈칸에서는 당시 참전했던 군인의 동상을 전면

세워두고 전쟁무기와 점령지역을 보여주면서 과거 침략전쟁 당시 영광스러웠던 일본의 모습을 전 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일전쟁 당시 삼국간섭으로 인해 라오둥반도를 ‘빼앗긴 것’으로 여기고 ‘와신상담’하여 다시 찾아야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러일전쟁으로 인해 아시아 각국이 독립의 의지를 갖게 되었고 태평양전쟁으로 식민지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와 아베 현 총리는 유슈칸의 전쟁인식과 마찬가지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침략전쟁을 기억하는 대표적인 장소는 국립중앙전몰자추도소인 ‘노이에 바헤’입니다. 추도소 정면에 반전평화주의자 케테 콜비츠의 ‘죽은 아들을 감싼 어머니’ 상을 두어 전몰자를 대하는 인식이 유슈칸과는 다름을 보여줍니다. 또한 추도소 앞에서 ‘전몰 병사뿐만 아니라 시민 등 전쟁과 폭력지배의 희생자들 모두를 추도하고 기억’함으로써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폴란드의 유대인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의 반성을 하였습니다. 독일 축구대표팀은 2012년 6월 유로 2012년 대회가 폴란드에서 열리자 가장 먼저 아우슈비츠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은 독일이 역사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젊은 청년들에게 침략전쟁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히 알리고 전쟁의 비참함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사진·영상 해설〉

### -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야스쿠니 신사 부속 전쟁박물관 유슈칸 2층 전시실 정면에 위치한 동상입니다. “かえりみは せん(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작품으로 나카무라 신야가 제작하였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군가 “海ゆかば(바다에 가면)”의 노랫말의 마지막 부분에서 따와서 지은 것으로 유슈칸이 침략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 - ‘죽은 아들을 감싼 어머니’

독일 국립 중앙 전몰자 추도소 내부 정면에 있는 ‘죽은 아들을 껴안은 어머니’ 상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반전평화주의자로 알려진 여류 조각가이자 화가인 케테 콜비츠(Käthe Kollwitz)가 제작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케테 콜비츠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장남을 잃고 반전·평화의 중요성과 전쟁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제작한 것입니다.

작품의 앞쪽에는 금색 글씨로 ‘전쟁과 폭력지배의 희생자를 위하여(DEN OPFERN VON KRIEG UND GEWALTHERRSCHAFT)’라고 쓰여있습니다. 이것은 반나치·반전평화주의적인 추도의 기본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몰병사를 포함해서 전쟁에서 죽은 자들을 ‘영웅’으

로 기리거나 ‘현창’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로 애도한다는 의미입니다.

#### - 태평양 전쟁 당시의 전투기

태평양 전쟁 당시 사용된 제로센 전투기입니다. 제로센은 일본해군의 주력전투기로 사용되었고 1944년말부터 가미가제 특공대의 작전에 이용되었습니다.

#### - 와신상담 - 침략전쟁에 대한 시각

‘와신상담’은 유슈칸 청일전쟁 관련 전시 패널의 하나입니다. 청일전쟁(1894~1895)의 승리로 요동반도를 얻은 일본은 삼국간섭에 의해 이를 다시 청에 반환하였습니다. ‘와신상담’이란 “삼국간섭을 굴욕으로 생각하고 러시아의 개입에 분개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당시 일본 국민의 생각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뒤통수, 다룬 조차와 한반도로 남하가 국민에게 새롭게 러일전쟁의 각오를 다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쓰여있다. 이와 같이 침략전쟁을 일본의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처럼 생각하게 하여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 - 영웅시되는 전사자들

유슈칸에 전시되어 있는 전사자들의 증명사진들. 이와 같은 사진판넬은 각 실마다 전시되어 있고 현재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 -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각국 독립

유슈칸 태평양 전쟁실에 전시되어 있는 판넬

“러일전쟁의 승리는 세계 특히 아시아인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안겨주었고 많은 선각자들이 독립과 근대화의 모범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도 아시아민족은 독립의 길을 열지 못했다. 아시아 민족의 독립이 실현된 것은 대동아전쟁 서전에서 일본군에 의해 식민지 권력이 타도된 이후였다. 일본군의 점령하에 피어올라던 불씨는 일본이 패하였어도 꺼지지 않고 독립전쟁 등으로 이어져 민족국가가 차례로 탄생하였다.”

#### - 노이에 바헤

독일의 국립중앙전몰자추도소인 ‘노이에 바헤(Neue Wache)’는 1818년 나폴레옹전쟁의 승리를 기념하여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3세를 위해 세운 왕궁위병소를 개조하여 1931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설치한 프로이센 주립 전몰자추도소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이 추도소는 나치독일체제하에서는 ‘영웅’추도시설로 사용되었고 동서독 분단시절에는 동독의 국립전몰자추도소로 사용되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국립전몰자추도소로 이어져오고 있다.

“독일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과제는 주변 국가들이 독일에 가지고 있던 깊은 증오 해소와 그들에게 가해졌던 만행에 대한 사죄였습니다. (추도소 건립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을 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확실한 화해정책도 아니었습니다. 주변국들과의 공생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었으며, 우리 독일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자성의 결과였습니다.”

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추도소를 건립했고, 많은 포로수용소를 추모관으로 개조했습니다.”- 한스 오토마이어 관장(독일역사박물관)의 인터뷰(출처 : 동북아역사넷)

- **전몰자를 추도하는 독일대통령(출처 : 한국일보)**

2014년 11월 16일 우르줄라 독일 국방장관,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 등이 노이에 바헤 '죽은 아들을 감싼 어머니' 상 앞에서 헌화하고 있다.

-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가 서독과 폴란드의 국교정상화 조약을 맺은 후 바르샤바 게토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나치의 만행을 사죄하는 장면입니다. '게토'란 중세 이후 유럽 각 지역에서 유대인을 강제로 격리하기 위해 설정한 유대인 집단 거주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게토지역은 폴란드 내 유대인 학살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총리의 사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로써 독일은 침략국이라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총리의 사죄를 두고 당시 한 언론은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난 것은 독일 전체였다.”라고 압축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총리의 인터뷰 내용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독일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인용하였습니다.

- **아우슈비츠를 방문한 독일 축구대표팀(출처 : 조선일보)**

독일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은 2012년 6월 7일 '유로 2012'가 열리는 폴란드에 캠프를 차리고 아우슈비츠를 방문하여 희생자를 추모하였다. 요아힘 뢰브 감독과 볼프강 니어스바흐 독일축구협회 회장, 축구대표팀 주장 필립 람, 폴란드 출신 국가대표 미로슬라브 클로제, 루카스 포돌스키 등이 방문하였다.

니어스바흐 독일축구협회 회장은 “(나치독일의 유대인 학살은) 독일 역사상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대해 눈감는다면, 현재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교육하는 것은 우리(독일)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덧붙였다.(출처 : 워싱턴 포스트)

## 5.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한국과 일본, 타이완의 시민단체와 개인이 '국제연대'를 결성하여 일본 법원에 야스쿠니 신사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야스쿠니 신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제연대는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인과 타이완인의 무단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일본을 비

못하여 유럽에도 야스쿠니 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촛불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 중에서도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인식하고 연대하여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이 문제가 단순히 한국과 일본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사진·영상 해설〉

#### - 총리의 신사참배 및 한국인·타이완인 무단합사 취소 소송

일본과 한국 및 타이완의 시민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소송의 일부입니다.

총리의 신사참배와 관련된 소송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헌법 제20조 3항의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소는 소송 자체는 기각되었으나 총리의 참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합사 철회 소송은 합사자의 유족이 야스쿠니 신사 합사 철회와 합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본정부에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의 무단 합사로 인해 식민지의 아픈 역사를 가진 원고들이 받는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야스쿠니 신사가 자기 식대로 모시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며 합사여부를 결정한 것은 야스쿠니 신사이자 일본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 재한군인군속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출처 : jp뉴스, <http://jpnews.kr>)

재한군인군속재판이란 일본정부를 상대로 태평양전쟁 당시 희생당한 군인, 군속 유족 및 시베리아 억류자들이 생사확인, 유골반환, 미불금 지급, 야스쿠니 합사 취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2001년부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재판입니다. 2009년 10월 재판(2001년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손해배상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문제이고 야스쿠니 신사 합사문제는 종교의 문제이므로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 - 2006년 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 결성(출처 : 통일뉴스)

2006년 7월 한국, 타이완, 일본, 오키나와 등 4개 지역 연대단체인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이 결성되었다. 서울 정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야스쿠니반대 공동행동 한국위원회’가 주관하여 ‘야스쿠니 신사참배 저지, 한국인과 타이완인 전사자 강제합사를 규탄하며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의 양심세력과 힘을 합쳐 국제적인 공동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야스쿠니 반대 독일행동(출처 :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에서 야스쿠니 반대운동을 펼쳐온 학자와 시민운동가 등 ‘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 대표단 23명이 유럽에 야스쿠니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독일 외무부를 방문해 아시아 담당관을 만나 야스쿠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2015년 5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한 8일 밤 베를린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반대하는 평화의 촛불행동을 하였습니다.

- **“야스쿠니 반대!” 도쿄의 촛불시위(2013.08.10. SBS 뉴스 영상)**

야스쿠니 신사에 반대하는 한국인 희생자 유족 및 일본 시민들이 촛불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앞서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을 알리기 위한 심포지움에 참석한 시민은 “야스쿠니는 신사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완전한 군사시설입니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야스쿠니 참배 위헌소송의 도쿄 사무국장 즈시 미노루씨도 ‘야스쿠니신사는 전사자를’ 치하하고 그런 가치관을 갖게 하여 다음에 전쟁에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사상적 장치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6. “어둠의 야스쿠니에 평화의 촛불을!”

여기에서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일본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0%가 넘는 일본인들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용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무턱대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갈등을 더욱 키우는 것입니다. 70%가 넘는 일본인들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용인하는 것은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침략전쟁의 정당화에 동조한다기보다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에 대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둘러싼 주변국가와의 갈등 내용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과 주변국가와의 갈등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SBS 뉴스의 인터뷰 영상에서 보듯이 한국에서도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해 감정적 인식을 갖기 이전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추도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무조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금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안의 국립 추도시설 이나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의 기능 확대를 통해 일본인들의 이해를 구하고 이들이 문제해결에 동참하여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문제해결을 함께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사진·영상 해설〉

### -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는 일본사람들(출처 : jp뉴스, <http://jpnews.kr>)

2009년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본사람들. 실제로 친족이 야스쿠니에 신으로 모셔진 일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이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의 건강과 번영을 위해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 -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2015년 일본의 언론NPO,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원이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입니다. 두 기관은 2013년부터 매년 한일관계의 주요사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약 1천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년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 ‘야스쿠니 신사가 젠틀맨?(2013.04.28, SBS 뉴스 영상)

야스쿠니 신사를 비롯하여 한일 역사갈등 내용,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한국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본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하여 야스쿠니 신사,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매우 빈약한 역사지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은 일본정부가 해외에서 사망한 군인, 군속의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1959년 건설한 무종교 국가시설로 현재 약 348,000위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묘원은 유족에게 전달할 수 없는 전몰자 유골을 안치하는 국가의 시설”이라고 하였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공적인 추도시설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1년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계기로 ‘추도·평화 염원을 위한 기념비 등 시설문제를 생각하는 간담회’에서 무종교 국립 추도시설 건설 제안이 나오면서 야스쿠니 신사의 대안으로 대두되었으나 야스쿠니 유족회, 우익세력들의 반대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고 있다.

### -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찾아 현화하는 케리 미국 국무장관(출처 : 뉴스1)

2013년 10월 3일 미일 안전보장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알링턴 국립묘지와 야스쿠니 신사가 같다는 아베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방문하여 현화하고 참배하였습니다.

## 7. 함께 생각해봅시다.

여기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역사갈등 문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에 더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재진행형 생활문제’이고 내가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유게시판에 응원의 글을 남기고 방학을 이용하여 직접 방문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관심은 직접 활동을 하는 시민활동가들에게 큰 힘이 될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학생들을 모듬으로 만들어 토론을 통해 제시된 방법 이외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법을 생각해보게 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직접 실천하게 한다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직접 일상 생활에서 실천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사진·영상 해설〉

#### - ‘야스쿠니 신사가 젠틀맨? 영상 화면(2013.04.28. SBS 뉴스 영상)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질문에 야쿠르트를 연상하는 학생

#### - ‘야스쿠니 신사가 젠틀맨? 영상 화면(2013.04.28. SBS 뉴스 영상)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질문에 ‘신사(神社)’를 ‘신사(紳士)’로 착각하여 대답하는 여학생

#### -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우익세력(출처 : 뉴시스)

2012년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군복을 입고 욱일승천기를 들고 서있는 일본 우익세력들

#### - 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

홈페이지(<http://www.minjok.or.kr/kimson/home/minjok/yasukuni.php>)

####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홈페이지(<http://www.pacificwar.or.kr/>)

## 【참고자료】

- 동북아역사넷 「야스쿠니 신사」 ([http://www.nahf.or.kr/on\\_media/content/01/main.html](http://www.nahf.or.kr/on_media/content/01/main.html))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야스쿠니 신사 무엇이 문제인가」 2015.
- 이경훈 「한일 간 역사갈등 해소와 역사화해를 통한 수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역사교사모임 2014.
- 민족문제연구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공동기획 침략신사, 야스쿠니』 민족문제연구소, 2009.
- 남상구 「야스쿠니 신사 무엇이 문제인가」 『제3기 직장인을 위한 역사 아카데미』 동북아역사재단, 2008.
- 다카하시 데쓰야 저, 현대송 옮김 『결코 피할 수 없는 야스쿠니 문제』 역사비평사, 2005
-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 2005.

**01**

## 전쟁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 ..... - 야스쿠니 신사 문제

1. 일본의 신사(神社)란 무엇입니까?

자연이나 사물, 조상을 신으로 모시면서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토착신앙이자 전통종교인  
신도(神道)의 신을 모시는 시설

2. 1869년 메이지 천황의 지시로 건립되었으며 야스쿠니 신사의 모태가 된 것은?

도쿄 초혼사

3. 야스쿠니 신사가 일반적인 신사와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일까?

야스쿠니 신사는 국민을 ( 침략전쟁 )에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 군사 )시설이다.

4. 야스쿠니 신사가 한일 간 역사갈등의 중심에 놓인 이유는 무엇일까?

1. A급 전범을 신으로 모시는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총리가 참배하는 것은 이들을 전쟁범죄자가 아닌  
애국자로 평가하여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2. 강제징용 및 징병으로 끌려가 사망한 한국인을 유족의 동의없이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5. 독일이 과거 전쟁으로 저지른 범죄를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든 시설은 무엇인가?

국립중앙전몰자추도소(노이에 바헤)

6. 일본과 독일의 침략전쟁의 기억에 대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본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있지만, 독일은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젊은 세대들을 교육하고 있다.

7. 야스쿠니 신사의 반인권 반평화적인 본질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 한국, 일본, 타  
이완의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국제연대 조직은?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역사화해 활동지 No.02 ( )학교 ( )학년 ( )반 ( )번 이름( )

8. 야스쿠니신사 문제위원회 즈지 미노루씨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전사자를 치하하고 그런 가치관을 갖게해서 다음에 전쟁에서 ( 죽을 수 있는 ) 인간을  
만들어 내는 사상적 장치입니다.”

9. 2015년 설문조사를 통해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자.

일본인의 ( 70.4 )%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인의 ( 64.6 )%는 어떤 경우에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10. 야스쿠니 신사를 대신해서 새로운 추도시설로 대두되고 있는 무종교 국가시설은 무엇인가?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

11.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친구들과 토론해보고 정리해보자.

1)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2)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확인란	/



# ‘야스쿠니 신사’ 가 뭐예요??

이 설문지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여러분이 알기 쉽고 재미있는 수업자료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의 설문 내용을 잘 읽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것, 알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용인 서천고 이경훈 드림 -

( )학교 ( )학년 이름 ( )

1.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 )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 )

1-1.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들어본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였나요? ( )

- ① 학교 수업 ② 책 ③ 텔레비전 뉴스나 방송 ④ 인터넷 ⑤ 신문 ⑥ 기타 ( )

2.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알고 있나요? ( )

- ① 잘 알고 있다 ② 조금 안다 ③ 전혀 모른다 ④ 기타 ( )

2-1. 여러분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알고 있다면,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 )

3. 여러분이 야스쿠니 신사(이하 야스쿠니)를 공부하게 된다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 보기에서 3가지만 골라주세요. ( , , )

- |                          |                             |
|--------------------------|-----------------------------|
| ① 신사란 무엇인가               | ② 야스쿠니의 정체                  |
| ③ 야스쿠니 참배의 목적            | ④ 야스쿠니 참배의 문제점              |
| ⑤ 야스쿠니 참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⑥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일본정부, 사람들의 생각 |
| ⑦ 야스쿠니 참배저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   | ⑧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
| ⑨ 야스쿠니에 관한 책이나 영상자료      | ⑩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 ⑪ 과거반성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     | ⑫ 기타 ( )                    |

4. ‘야스쿠니 신사’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아래에 자유롭게 써주세요.

( )

-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중국의 근대화와 한중관계

- 청말의 자강·개혁운동과 조선 -

김형종 (서울대)



# 중국의 근대화와 한중관계

## - 청말의 자강·개혁운동과 조선 -

김형종 (서울대)

### 1. 청말의 중국과 자강운동(양무운동)<sup>1)</sup>

#### 1) 자강운동(양무운동)의 전개

- 가) 태평천국 반란 진압과 서구에의 유화 정책: 총리각국사무아문의 설치(1860) - '이무(夷務)'에서 '양무(洋務)'로의 변동, 양무 인력의 양성(京師同文館 등 외국어학교 설립, 유학생 파견)
- 나) 군수공업의 도입 : 안경내군계소, 강남제조국등/ 근대적 군대와 훈련제도 및 해군(남양, 북양해군) 건설 (북주선정국)
- 다) "구강(求強)에서 구부(求富)로" ('자강'과 '부국') : 군사공업의 자금, 원료 해결 위한 민간기업(富國) 설립으로 이행 → 근대적 기업의 육성과 '관독상판제도(官督商辦制度)'의 도입

#### 2) 자강운동의 추진 주체

- 가) 태평천국 진압에 기여한 증국번(曾國藩), 이홍장(李鴻章), 좌종당(左宗棠) 등 한인독무(漢人督撫)의 개별, 분산적 추진
- 나) 중앙 일부 세력 후원: 공친왕(恭親王) 혁흔(奕欣), 문상(文祥)

---

1) 현재는 '양무운동'이라 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중전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자강운동'이란 개념이 보다 보편화되고 있음.

다) 보수파의 집요한 반발과 비난

ex) 왜인(倭仁. 朱子學者), ex) ‘기기음교(奇技淫巧),

‘용이변하(用夷變夏)’ 『맹자』

ex) 청의파(청류파)의 공격

라) 추진 주체간의 알력과 경쟁(상계 湘系와 회계淮系の 대립)

마)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한 전국적인 계획 부재

cf: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 제도적 개혁에의 접근 부재(정치개혁이나 정부기구의 변화

부재) : 아편전쟁 이래 정부 주도의 제도 개혁 부재, 또는 거기에의 소극적 대응

cf: 조선과의 비교 가능 (갑신정변 1884과 갑오경장 1894)

cf: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의 비교는 가능한가?

### 3) 자강운동의 한계

가) 중앙정부의 계획 부재: 서태후西太后정권의 한계, 보수파 반발

나) 추진주체의 파벌투쟁 및 기반 경쟁 - 상호 협조 부재

다) ‘관독상관’ 경영 : 기업이나 상인이 아닌 관료의 주도·운영

라) 사상적 지향 : ‘중체서용론(중체서용론)’이 지닌 양면성

→ 청일전쟁에서의 패배(해군 전멸/ 육군 완패)가 그 지표

\* 청일전쟁 실패 이후에도 자강(양무)운동의 계속 진행

\* ‘양무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변화

: 종전의 부정적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로의 전환

\* 초보적 변법론·개혁론의 제기

: 자강운동에 참가한 관료·막료들에 의한 개혁 시도 존재

## 2. 이홍장(李鴻章), 원세개(袁世凱)의 대 조선외교

### 1) 이홍장(李鴻章)과 조선

가) 1870년대 이후 중국번의 뒤를 이은 독무 가운데 실세로 등장 ← ‘누전누패(累戰累敗)와 누패누전(累敗累戰)’의 고사, 태평천국 이후 남은 ‘염군(揜軍) 진압’ / 천진교안(天津教案)의 처리 성공

- 나) 직예총독/북양(통상)대신으로 중국의 외교사무 거의 전담
- 1871년 일본과의 외교관계 주도(「청일수호조규」) : 시종 일관 일본의 위협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나, 항상 급진·강경책보다는 유화적인 방안을 선호
  - 끊임없는 일본의 조선 ‘독립’ 확인에 대해 ‘속방론(屬邦論)’ 견지
  - 조선과 열강에 대해서도 “조선은 ‘속방’이지만, 내정·외치는 ‘자주’”라는 입장 표명, 계속견지  
(총리각국사무아문으로 대표되는 청조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



- 다) 1880년대 이후 총리각국사무아문/예부(禮部)를 대신하여 조선과의 외교 사무 전담하게 됨
- 중국 일부의 조선 군현화(통합)론, 감국과건론 등을 거부, 간접적인 통제론 견지(만국공법과 일본에 대한 경계)하던 태도에서 임오군란 이후 단계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전환
    - \*청군의 파견과 대원군 납치, 임오군란 제압
    - \*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 (何如璋의 전략 추종!)
    - \* 원세개(袁世凱)의 갑신정변 개입과 일본 제압
  - ‘조미통상조약’ 등 열강과의 조약 통한 개방 촉구(일본/러시아 견제) : 만국공법 체제로의 편입 권유
  - ‘조청수륙무역장정’(1882) 통한 중국과의 호시무역 개시로 중국의 경제적 진출 강화, 일본 압도
  - 1880-1894년 동안 일본의 조선 침략 저지 시도(실패)

## 2) 원세개(袁世凱)와 조선

가) 명문가문의 출신(1859-1916)이지만 과거시험과는 거리가 멀어, 결국 '군대'에 투신, 1882년 조선에 파견되면서 점차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나) 1884년의 갑신정변에서 상관 무시한 직접 개입으로 '과감성' 주목 받음.

다) 1885년 26세의 젊은 나이에 '주찰조선총리조선통상교섭사의(駐札朝鮮總理朝鮮通商交涉事宜)'로 파견되는 파격적인 출세

- 이후 1894년 청일전쟁 직전 도피할 때까지 십년간 조선에서 사실상 '감국'으로서 활동
- '상국(上國)'의 대표로서 조선의 '속방' 위치 끊임없는 재확인, 조선의 독립이나 정치·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무시하고 청의 국익을 앞세워 관찰시키는 데 전권을 행사하면서 앞잡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내정·외교에 간섭 : 전통적 청-조선 관계 및 "사대(事大)-자소(字小)" 관계의 파괴
- 조선 측의 강력한 반발(반청/친일 사조의 양성)을 삼(장기적인 양국 관계의 '악화'에 치명적 기여) ← 이홍장의 비호
- ex) 초대미국공사 박정양의 파견 좌절
- ex) 조선정부의 개혁에 대한 끊임없는 충고/개입
  - 대부분 고종의 책임론(고종폐위 시도)으로 귀결
- 청일전쟁 직전 잘못된 판단으로 일본의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실수/판단착오를 저지르지 만 전쟁 개시 직전 중국으로 도피
- 이홍장이 모든 패전의 책임을 뒤집어쓰면서, 다른 후원자 찾아 출세 모색
- 신건육군(新建陸軍)의 양성자로 발탁, 이후 북양신군의 모든 군권 장악
- 무술개혁 진압(밀고?), 의화단 진압, 이후 북양대신으로 출세
- 신해혁명 시기 청조와 혁명당 양쪽을 압박하여 정권 장악 성공



### 3. 강유위(康有爲)·양계초(梁啓超)의 개혁론

#### 1) 배경 : 중화제국의 붕괴

- 가) 대만사건(1874) : 유구(琉球)의 상실 / 청불전쟁(1884-1885) : 월남의 상실 / 청일전쟁(1894-1895): 조선의 '독립'
- 나) 청일전쟁 패배의 결과 : 시모노세키 조약(1895) : 조공국 조선의 독립과 對日 패전의 충격, 막대한 배상금과 영토의 할양, 삼국간섭과 열강의 이권획득 경쟁, 외국자본 제조업 직접 투자 허용과 최혜국대우 → '과분' 위기의식의 심화 → 중화제국 질서(전통적 조공체제)의 와해, '망국멸종'의 위기의식 고조, 변법과 혁명 동시 출현

#### 2) 강유위의 초기 활동과 개혁론

- 가) 강유위(康有爲, 1858-1927)의 초기 활동
  - 강유위 : 광둥 광주부 남해현 출신. 광서21(1895)년 진사, 1888년 처음 북경에 가서 상서 올림(이후에도 여러 차례 상서 올리나, 황제에게 전달되지는 않는다).
  - 1891년에는 광둥에 돌아가 만목초당(萬木草堂)을 열어 제자를 모아 강학 활동을 시작하여 양계초(梁啓超) 등의 제자를 확보.
  - 변법 이론을 창조하기 위해 『신학위경고(新學偽經考)』, 『공자개제고(孔子改制考)』, 이후 『대동서(大同書)』 출간.
  - 1895년 공거상서(公車上書) 시도(1895.4) : 거아(拒俄)·천도(遷都)·변법(變法) 제기
  - 회시 합격 후 강유위는 공부주사에 임명. 이후에도 몇 차례 황제에게 상서를 올림
- 나) 강유위·양계초의 개혁운동(무술변법)과 그 과정
  - 1895년 이후 제2-5차 공거상서: 황제 권력예의 의존(이후의 保皇會)한 개혁의 모색
  - “망국의 군주가 되지 않겠다”며 친정을 개시한 광서제(光緒帝)가 스스로 나서서 정치개혁에의 의욕을 불태운 것이 무술개혁의 주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
  - 강유위·양계초 등 개혁파는 지지세력으로 관신(官紳)을 설정, 민중투쟁에의 위기의식(亂民), 유교의 공교화(孔敎化) 시도 → 북경 강학회(強學會)와 상해 “시무보(時務報)”(양계초 주필) 출간.

- 민권(紳權)론의 전개와 학회 활동 추진
- 1898.1.24일 광서제 소견 좌절 후 제6, 제7상서.
  - “일본명치변정기(日本明治變政記)”, “아라사대피특변정기(俄羅斯大皮特變政記)” 제출.
  - ‘제도국(制度局)’ 제안(황제 중심의 위로부터의 개혁: 민권론과 의회제도의 부재가 중요한 특징).
- 1898.4.12 보국회 조직(保國, 保種, 保教) ← “보중국 불보대청(保中國, 不保大清)”의 비난
- 다) 무술개혁과 그 실패
  - 친정을 하게 된 광서제의 정치변혁으로의 모험: 6.11. ‘명정국시(明定國是)’의 상유(→ 9.21 정변: 백일유신)
  - “왕공 이하 사대부·서민에 이르기 까지 마땅히 노력·향상한다, 성현의리(聖賢義理)의 학문으로 근본을 두텁게 하고 널리 서학(西學)의 시무(時務)에 절실한 바를 채택하여 실력을 강구한다.”
  - 6.15일 광서제의 스승 옹동화(翁同龢) 파면 등 보수파의 견제 시작
  - 6.16 이후 신정 상유 발포(대부분 미실행)
    - ㄱ. 변법 국시, 관민의 건의 자유, 관아 및 관원의 정리, 유능한 인재 등용. ㄴ. 실업 진흥, 철도건설, 우편제도 정비. ㄷ. 군대 개혁, 전족 폐지, 과거(科擧) 개혁과 근대적 학교제도 설치 ㄹ. 외국서적 번역, 해외 유학생 파견, 신문사 설립. - 무술정변(戊戌政變) : 개혁의 좌절
  - 10.19 서태후 쿠데타의 풍문: 9.16 원세개 소견, 변법파의 설득. 원은 영록 → 서태후에 밀고 9.21 이화원에서 돌아온 서태후는 광서제를 영대(瀛臺)에 유폐하고 훈정(訓政)을 선언.
  - 강, 양은 정변 전날 외국 주선으로 망명, 무술육군자 체포, 처형. 실업 진흥 외 대부분 개혁 중단 내지 취소 (2년 후 광서 신정기에 다시 부활!)
  - 일본 망명 이후 강·양은 보황회(保皇會) 조직 해외활동
  - 『청의보(淸議報)』, 『신민총보(新民叢報)』 등 민권론과 서구의 새로운 정치사상·개혁론을 보급하는 양계초의 언론활동은 엄청난 파급력을 지님(본인 자신의 보수화로 실제 운동 면에서는 영향 적음)
  - 개혁 실패의 원인: 추진세력의 약체성과 사상적 급진성
    - ex) 유교의 공고화 ← ‘공자기년(孔子紀年)’ 때문에 장지동(張之洞) 등 기존 원조세력 이탈, 기존체제의 저항과 수구세력
    - \* 서동(徐桐), “차라리 나라가 망해도 법은 바꿀 수 없다”;
    - \* 강의(岡毅), “개혁은 漢人의 이익은 되어도 滿人에게는 해가 된다”
    - \* 일반 민중과의 궤리, 운동의 사회적 기반 결여

**\* 강유위·양계초의 개혁운동과 조선:**

- 강유위의 공교회는 무술개혁의 실패요인이기도 하나 이후에도 존속하면서 조선에도 일정한 영향력 행사
- 양계초의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의 한국에의 소개와 출판으로 당시 지식계에 상당히 큰 영향력 행사.
- 강유위·양계초의 개혁운동 자체는 조선보다 훨씬 뒤늦은 것이어서 조선에 대한 영향은 비교적 적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다만 강유위·양계초의 사상적 영향력은 비교적 컸을 것이라는 점 주목 필요(군주입헌제 사상이나 공교론, 민권론, 내셔널리즘, 신사학(新史學) 등 다방면 가능)

**【참고자료】**

1) “양국에 속하는 방토(邦土)는 서로 예의로 대하고 조금이라도 경계선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청일수호조규 제1조) : 중국 측은 방토를 ‘속방’과 ‘중국 내지’로 해석하였다

2) 〈조선·청 상민수륙무역장정(朝·清商民水陸貿易章程)〉

“현재 각국(各國)이 수로(水路)를 통하여 통상하고 있어 해금(海禁)을 속히 열어, 양국 상인이 일체 상호 무역하여 함께 이익을 보게 해야 한다. 변계(邊界)에서 호시(互市)하는 규례도 시의(時宜)에 맞게 변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일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데 있지 않다.”

3) 황준헌(黃俊憲)의 『조선책략』 : “조선의 오늘날 급무를 책획하고자 한다면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탁하고, 미국과 연맹을 맺어 자강을 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4) “제1조. 중국은 조선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조선의 독립자주 체제를 훼손하는 모든 것, 가령 조선이 중국에 대하여 바치는 공헌(貢獻)이나 전례(典禮) 등은 앞으로 모두 폐지한다. 중국은 조선이 확실한 완전무결한 독립국임을 인정한다”(시모노세키조약 제1조)

##### 5) 근대 중·한관계의 변용 - 자주와 독립 사이 -

이전 왕조와 마찬가지로 '대청제국(大清帝國)' 역시 전통적인 '중화사상'에 기초하여 스스로가 세계의 중심임을 자처하는 조공체제를 설정하고 있었다. 이 구도에 따르면 중심부에는 황제의 직할 아래 놓인 중국의 경계 바깥에는 조공(朝貢)과 책봉(冊封) 관계로 맺어진 조공국(조선과 베트남, 유구 등)과 무역을 위해 방문하는 국가들(일본 및 서양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도 아래서는 물론 천조상국(天朝上國)인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조공체제'는 불평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남경조약 이후 몇 차례의 전쟁과 충돌을 거치면서 맺게 된 일련의 조약으로 중국은 도리어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위치를 강요당하게 되었다.

특히 1637년 병자호란으로 조선을 속방(屬邦)으로 예속시킨 다음 청은 조선과 책봉과 조공, 변경의 호시(互市)를 중심으로 사대(事大)-자소(字小)의 관계를 건립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19세기까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두 차례의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에서 청 중심의 중화질서가 동요되기 시작하자 점차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불평등조약 체제를 통해 이러한 동요를 가속화한 서양 열강은 중국과의 통상관계(즉 '호시')의 확대의 확대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책봉-조공 질서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았다.

또한 19세기 후반의 자강운동으로 청조는 기사회생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서서히 가속화되는 전통적 '중화제국'의 붕괴를 막아낼 정도는 아니었다. 대만사건(1874)을 통해 유구(琉球)가, 청불전쟁(1884-1885)과 청일전쟁(1894-1895)을 통해 월남(越南)과 조선(朝鮮)이 조공국에서 이탈하면서 조공체제가 붕괴되었다. 이것을 대신하는 것은 근대적 국제관념에 기초한 '조약체제'(마찬가지로 불평등한)였다.

한편 청은 속방이지만 그 내정·외교는 조선이 자주적으로 알아서 처리한다는 방침(속방-자주론)을 계속 고집하면서, 서구 각국에 대해 조선의 개방을 권유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이 1879년 청의 조공국이기도 하였던 유구(琉球)를 병합하였다. 이에 청은 각국과 조약을 맺어 통상관계를 시작하도록 조선에 권유하는 방침으로 돌아섰다. 청은 만국공법 중심의 서구적 국제질서를 의식하면서도 조선과의 전통적 질서를 유지하여 청조의 '근본'인 만주를 보호하려 하였다. 1882년 체결된 「조·청수륙무역통상장정」은 그러한 청조의 시도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1880년대에 들어와 청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자, 조선도 1882년 미국과의 조약(「조미수호통상조약」)을 시작으로 잇따라 각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개방정책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후의 진로를 둘러싼 조선의 정국과 내부 갈등은 결국 청과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경쟁과 개입을 불러들였다. 1882년 7월의 임오군란과 1884년 12월의 갑신정변은 조선에 둘러싼 청과 일본의 군사적 대립을 초래하였다. 1885년 4월 이홍장과 이토오 히로부미는 천진회담을 통해 양국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시켰지만, 청은 1885년 11월 조선에 원세개(袁世凱)를 파견하여, 이

후 10여 년간 내정·외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하였다. ‘중주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히면서 ‘독립’을 지향하는 조선의 움직임에 적극 저지한 것이다. 이러한 청의 ‘속국화’의 시도는 조선의 독립 의지와 충돌하였으며, 양자 사이의 상호 배려에 기초한 사대-자소 관계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동학농민운동이 계기가 되어 청이 군대를 파견하자, 이를 구실로 일본 역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청이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중국이 조선이 “완전무결한 독립국임을 인정”하게 되면서 청과 조선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후 조선은 중국과의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고자 하였지만, 종전의 ‘속방’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는 것을 꺼린 청의 반응으로 관계 정상화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되고, 무술개혁 시기에 광서제가 결단을 내린 덕분에 1899년 9월 「한중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양국 사이에 최초로 성립된 평등한 외교관계는 뒤이어 의화단 사건이나 러·일전쟁 등 국제적 격변이 거듭되고, 일본의 한국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얼마 되지 않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양국이 다시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J.K.Fairbank 등편, 『캠브리지 중국사 11(1800-1911) 청 제국말 1·2부 上·下』(새물결, 2007)  
J.K. 패어뱅크(김형중 등 옮김), 『新中國史』(까치, 2005)  
구보 도루 등(강진아 등 옮김), 『중국근현대사 1-4』(삼천리, 2013)  
기시모토 미오·미야지마 히로시(김현영·문순실 옮김), 『조선과 중국 - 근세 오백 년을 가다: 일국사를 넘어선 동아시아 읽기』(역사비평사, 2003)  
김병준 등, 『아틀라스 중국사』(사계절, 2007)  
유용태·박진우·박태균 지음,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창비, 2011)  
이매뉴얼 쉬(조운소, 서정희 옮김), 『근현대중국사 1-2』(까치, 2013)  
한중일삼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지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근현대사』(휴머니스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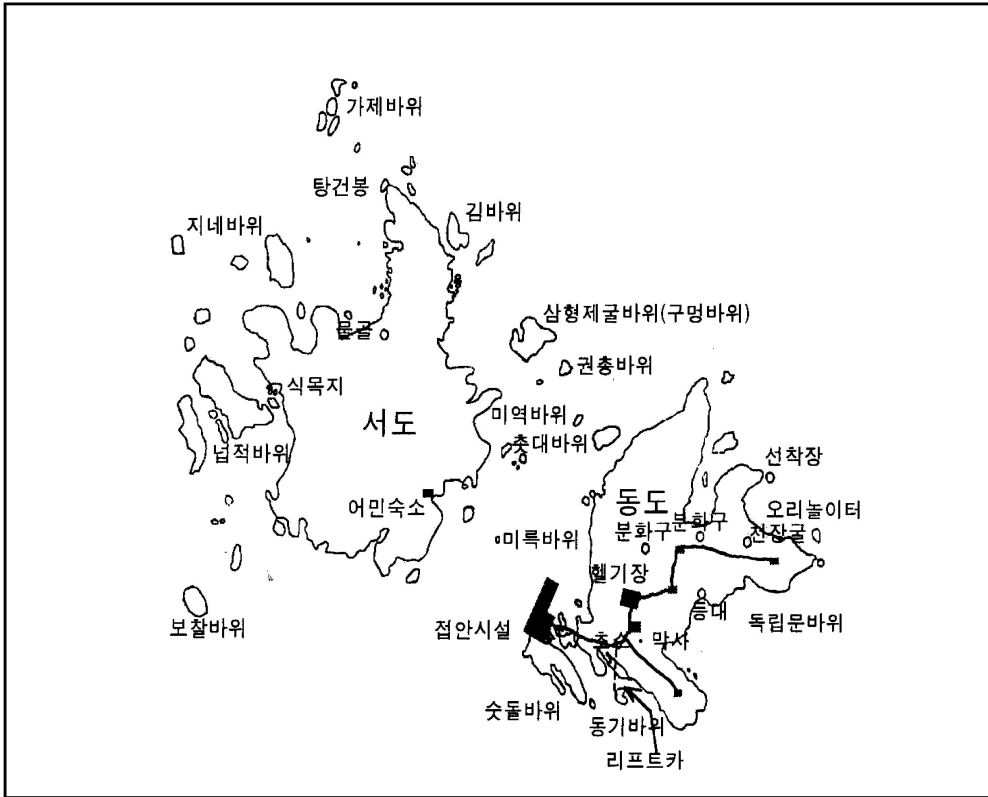
# 독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김병렬 (국방대)



# 독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김병렬 (국방대)



## □ 구성 및 면적

- 동도, 서도 기타 부속도서 89개로 구성, 총면적 187,554㎡(56,835평)

구 분	면 적	높이	주요시설
동도(東島)	73,297㎡	98.6m	· 접안시설 500톤급 1선석 · 독도등대 1개소 · 독도경비대 숙소 1동(약 101평)
서도(西島)	88,740㎡	168.5m	· 어업인 숙소 1동(36평) · 선가장 1개소
부속 도서	25,517㎡		

작년 초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일본의 방위백서 한글 번역판을 우리 국방부로 전달하여 국방부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서울 한 복판에서 일본 대사가 독도는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명백한 일본의 영토이다.”라고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독도주변 수역에서 과학조사를 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를 해서 또다시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기 와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독도와 관련된 많은 부교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재들을 보면 뭔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독도의 여러 이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개 1900년대 이전에는 ‘우산도(于山島)’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00년에 고종 황제께서 칙령 제 41호를 내리셨는데 그 칙령에서는 ‘석도(石島)’라고 했습니다. 돌 석자를 써서 석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6년에 일본 사람들이 울릉 군수한테 와 가지고 저쪽에 있는 바위섬이 이 시간부터 우리 일본 섬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울릉도의 주민들이

이 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통보를 받고 울릉도 군수가 강원도 지사한테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에 “본 군에서 바다 밖으로 100여 리 되는 지점에 ‘독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기네 섬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하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게 되고, 그 보고서를 받아 본 강원도 지사가 다시 중앙정부로 똑같은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거기에 ‘독도’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국 측 문헌으로는 1906년의 위 보고서가 처음이고, 일본 측 문헌으로는 1904년 일본 군함 니이다카(新高)호가 항해일지를 적으면서 독도라고 기록한 것이 최초입니다. 즉 1904년에 니이다카호가 독도 근해를 지나가면서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 섬을 독도라고 하는데 우리 일본 어부들은 리양고도라고 부른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르기는 그 전부터 ‘독섬’, ‘독도’ 이렇게 불렀겠지만, 문헌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는 1906년이 처음이고 일본 측 문헌으로는 1904년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는가? 1900년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송도(松島)’ 즉, ‘마츠시마’라고 불렀습니다. 소나무 송자를 써 가지고 1900년 이전에는 ‘송도’라고 하다가 1900년대에 와 가지고 ‘리양고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서양말을 써서 ‘리양고도’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리앙쿠르(Liancourt)’라고 하는 프랑스의 고래 잡는 배가 독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1849년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서 서양 사람들이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원래 서구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리양고도’라고 하다가 그 후에 1905년부터 ‘죽도(竹島)’ 즉, ‘다케시마’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 2. 역사적인 논쟁

우리는 독도 문제가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도 밖으로 평화선을 선포한데 대하여 일본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야기된 것으로 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문제입니다.

조선 태종 7년, 그러니까 1407년에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를 탐내어 자기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걸 태종이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 후 몇 차례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1625년부터는 아예 달라고 하는 말도 없이 무단으로 울릉도에 건너와 고기잡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사람들이 이용하던 울릉도를 1696년에 가까스로 되찾아 온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용복입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1696년에 울릉도를 조선으로 되돌려 준 것을 천추의 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릉도를 차지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그렇다면 독도라도 차지해 보려고 1905년에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제 40호'를 통해 은근슬쩍 자기네 영토로 편입해 놓게 됩니다. 그 후에야 한반도 전체가 일본에 병탄 되었으니까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이 되어도 우리가 따지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게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과 일본 간의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이 조약문상에 우리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기하고자 했고, 일본은 반대로 자기네 영토로 표기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어느 쪽도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의 평화선 선포로 다시 표면화된 것입니다.

### 〈한일 양국의 영유권 주장과 반박〉

우리는 독도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의 이사부 장군께서 우산국을 점령했다고 나온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이래로 독도는 한국의 것이다.

이사부 장군의 이야기가 언제 때 이야기냐 하면 서기 512년대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는 그 후에 나온 책입니다. 1145년인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록 자체는 서기 512년대 기록입니다. 신라 지증왕 13년이 서기 512년입니다. 이 때 우산국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라! 우리가 이 때 즉, 신라 지증왕 13년 이 후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건 옳지 않은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울릉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가 이만큼 바다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 내용은 우산국을 점령했다고 하는 기록이지 독도를 점령했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다. 독도가 육지하고 울릉도 중간에 있다면 우산국을 점령했다는 기록만을 가지고 독도까지 점령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줄 수가 있겠지만 독도는 울릉도 밖에 있는 섬이다. 그런데 울릉도를 점령했다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그 밖에 있는 독도까지 점령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럼 좋다. 삼국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기록은 충분히 많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보면 동해 바다에 두 개의 섬이 있는데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두 섬 중 하나는 울릉도이고 다른 하나는 독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종실록지리지」는 1432년대 기록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 원문 자체를 보여 드리고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于山武

陵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清明則 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 一云鬱陵島 地方百里”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산, 무릉 두 개의 섬이 거리가 서로 멀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맑으면 바다를 볼 수가 있다. 신라시대 때는 우산국이라고 불렀는데 혹은 울릉도라고도 한다. 지방이 백리가 되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도, 무릉도가 나오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무릉도’는 바로 ‘울릉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우산도’는 ‘독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려사지리지」에 보라. 「세종실록지리지」 하나만 그런 기록이 있다면 우리가 주장을 안 하겠는데 「고려사지리지」에 또 있다.” 「고려사지리지」는 이것보다 조금 뒤에 나온 것입니다. 제목 자체는 「고려사지리지」이지만 편찬은 「세종실록지리지」가 더 먼저 되었습니다. 이 「고려사지리지」를 보면 “有鬱陵島在縣正東海中” 즉, 울릉도가 있는데 울진현의 정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新羅時稱于山國” 신라시대 때 우산국이라고 불렀다. 어찌고 죽 나오다가 “一云 于山武陵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清明則 可望見.” 혹은 우산하고 무릉이 본래 두 개의 섬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맑으면 바다를 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려사지리지」에도 나오지 않느냐. 보라. 여기도 보면 우산도와 무릉도가 두 개의 섬이라고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람」은 그것보다 한 30년 뒤에 나온 책입니다. 이걸 제목 자체가 두 개로 나옵니다. “우산도 울릉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一云武陵 一云羽陵”. 혹은 무릉이라고도 하고 혹은 우릉이라고도 한다. “二島在縣正東海中 三峯岌 巖撐空 南峯稍卑 風日清明則 峯頭樹木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則二日可到 一說于山鬱陵本一島 地方百里 新羅時恃險不服……” 두 개의 섬이 울진현의 정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 개의 봉우리가 하늘을 지탱하고 있는데 남쪽에 있는 봉우리가 조금 낮다. 날씨가 맑으면 산꼭대기에 있는 수목하고 산 밑에 있는 모래밭을 역력히 바라다 볼 수가 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면 이틀이면 닿을 수 있다. 일설에 의하면 우산도하고 울릉도가 본래 하나의 섬이라고 한다. 지방은 백 리고 신라시대 때 어찌고, 주로 나는 토산물은 뭐가 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독도가 우리 것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세종실록지리지」에 보면 두 개의 섬이 너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나오기는 한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점이 있다. 여기서 우산도하고 무릉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섬을 두 개의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것이다. 즉, ‘우산도’가 ‘울릉도’고 ‘무릉도’도 ‘울릉도’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태종실록」에 보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태종실록」 태종 17년(1417)을 딱하니 펼쳐 놓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按撫使金麟雨 還自于山島 獻上產大竹水牛皮生苧綿子檢樸本等物 且率居人

三名以來 其島戶凡十五 口男女并八十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김인우를 안무사로 해서 우산도에 보내 가지고 우산도에 살고 있는 세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우산도에는 15가구에 86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면서 “봐라! 「태종실록」에 보면 우산도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나오지 않느냐? 우산도를 독도라고 한다면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독도에 그 예날 사람이 그것도 86명씩이나 살았다는 얘기가? 이러한 앞뒤의 기록으로 보았을 때 우산도는 한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외에도 우산도가 울릉도라는 증거는 많다. 한국이 주장하는 두 섬간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二島相距不遠 楓日清明則 可望見”은 두 개의 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섬이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래서 육지에서 날씨가 맑으면 바라다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태백산맥에서 보면 날씨가 맑은 날, 현재는 여러 가지 공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관찰이 힘들지만 쌍안경을 통해서 보면 울릉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울릉도가 보인다고 하는 것이지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세종실록지리지」의 부록으로 되어 있는 ‘팔도총도(八道總圖)’에 나오는 그림이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산도 하고 무릉도를 그려 놓았는데 우산도가 왼쪽에 있고 무릉도가 그 다음에 조그마한 섬으로 그려져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지도를 그린 사람이 우산도, 무릉도, 이렇게 섬 이름이 두 개가 있으니 그냥 울릉도에 섬이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막연히 두 개로 그려 놓은 것이지, 이것이 우산도가 독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산도는 울릉도인데 어느 시대 때는 우산도라고 불렀다가 어느 시대 때는 무릉도라고 불렀다가 이 지도를 그릴 시점까지 와 가지고는 그게 같은 이름인 줄 모르고 거기에 두 개의 섬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이렇게 지도에 그려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또 무슨 주장을 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뚜렷하지 못한 근거보다 우리는 훨씬 더 확고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확고한 근거, 그게 뭐냐 하면 즉 일본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 시대에 현재의 돗토리현(鳥取縣)지방에 오야진기치(大谷甚吉)하고 무라카와이치베에(村川市兵衛)라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김 모씨 집안 박 모씨 집안 정도 되겠지요. 두 개의 집안에 대해서 막부가 울릉도 도해면허권을 주게 됩니다. 1625년에 울릉도 도해면허권을 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면 1696년까지 무려 71년 동안 울릉도에 두 개의 집안이 교대로 도해하여 나무를 잘라 내고, 울릉도 주변에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는 여기에 대한 세금을 도쿠가와막부에 낸 것입니다.

“봐라! 대한민국에서는 뚜렷하게 울릉도와 독도를 지배했다는 근거가 없는 반면에 우리 일본은

이처럼 울릉도 경영권을 주고 세금을 받아 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독도가 울릉도보다 더 한반도 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울릉도만 경영했기 때문에 독도는 대한민국 것이라는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울릉도보다 독도가 더 일본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울릉도 갈 때는 반드시 독도를 거쳐서 가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부터 독도를 이용하고 관리하고 유지를 해 왔으며, 그에 대한 증거로 1656년경부터는 독도에 대한 허가증도 내주었다. 따라서 우리 일본이 훨씬 더 독도에 대해서 연고권이 있다. 사실은 울릉도까지도 우리 일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 근거가 충분히 있지만 울릉도는 한국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독도만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이쯤에서 독도를 돌려 달라”라고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 연대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 울릉도에 대해서 면허를 내준 1625년은 정확하지만, 독도에 대해서 내준 것은 현재 면허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울릉도에 대한 허가증’뿐만 아니라 두 개의 집안에 ‘독도에 대한 허가증’ 까지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일본 주도 논쟁의 모순성〉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의 논쟁은 모두 일본의 논쟁에 우리가 끌려들어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일본 사람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독도는 무인도입니다. 만약에 독도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이라면 울릉도에서 보인다고 하더라도 독도에 살고 있는 사람에 의해 영유권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본 사람들이었다면 한국의 섬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였습니다. 무인도였기 때문에 보이는 섬에서 관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물론 울릉도 밖에 있는 무인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 정확한 제원을 가지고 수시로 방문하여 관리할 수 없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영유권이 부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독대에 있는 돌은 장독대의 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돌입니다. 장독대의 주인이 그 돌의 무게가 몇 Kg인지 어떤 무늬가 있는지 하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장독대에서 항아리들의 받침돌로 사용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탐낸 이웃사람이 주인 몰래 이 돌을 가져다가 받침대도 만들고 하여 수석이라고 전시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한 그가 장독대의 주인은 그 돌의 제원을 잘 모르는데 자신은 몇 Kg인지 무슨 무늬가 있는지 잘 안다고 하면서 자신이야 말로 그 돌의 정당한 소유권자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을 올바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독도는 울릉도 밖에 있는 불모의 무인도였기 때문에 관심이 적었다는 것이지 관리를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세종실록지리지」나 「고려사지리지」 기록의 증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 정확한 제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울릉도를 불법적으로 침범해서 어로작업을 할 때 알게 된 지식입니다. 즉 장독대의 돌을 훔쳐다가 수석으로 만들면서 알게 된 지식과 같은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유로 독도와 같은 무인도의 영유권이 유인도인 주도에 종속된다는 사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역사적인 기록이나 지도들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논쟁은 일본의 술책에 말려 들어가는 것일 뿐 객관적인 논쟁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3. 법적인 논쟁

그 다음에 법적인 논쟁은 뭐냐 하면 1905년에 일본 시마네(島根)현에서 고시 제 40호로 독도를 일본 섬으로 편입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리양고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죽도(다케시마)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관리를 시마네 현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독도가 조선의 것이었다면 그 때 당시에 조선에서 항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섬인데 왜 너희가 어찌구 저찌구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항의를 했어야 하는데 너희가 그 때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주장을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1905년이 어떤 때냐?” 1904년 2월 23일 제 1차 한일협약이 체결이 되어서 한국 국토 내에 일본 군인이 주둔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입고시를 한 것이 언제냐 하면 1905년 2월 22일입니다. 고시 제 40호지요. 1904년 2월 23일 제 1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일본군이 주둔을 하고, 1904년 8월 23일날 제 1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고문정치를 하지요. 우리나라 외교고문에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스티븐슨’이 임명되고 하는 식으로 외국 사람들이 고문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05년 11월 17일날 제 2차 한일협약 즉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그 다음에 1906년 2월 1일부터 통감부가 설치되어서 통감정치가 되죠. “이렇게 되어서 한반도 전체가 다 일본으로 넘어가는 판인데 무슨 독도 하나 넘어갔다고 해서 항의를 하고 말고 할 계기가 있었느냐?” “봐라. 1905년에 너희가 고시를 했고, 1906년에 울릉군수한테 와서 통고를 했는데 이보다 앞서 1905년 11월 달에 ‘을사늑약’에 의해서 외교권이 박탈되지 않았느냐? 외교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의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주장입니다. 이

게 법적인 논쟁이지요.

국제법적인 논쟁에서도 우리가 일본의 술책에 끌려간 측면이 있습니다. 시마네현의 고시가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바람직한 논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영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논쟁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분명히 조선 정부에서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지방관리인 울도군수가 이를 정확히 인지도 있었기 때문에 시마네현 고시는 주인이 분명한 물건을 훔쳐다가 자기 것이라고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시가 유효하냐, 아니냐, 항의가 필요했었느냐, 아니냐 하는 논쟁 또한 무의미한 것입니다.

#### 4. 무엇이 문제인가?

자,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문제가 될 만한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독도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독도문제가 평 하고 터지면 양심 없는 학자들이 마스크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만든 지도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이런 지도가 새로 발견되었다.” 뭐가 새로 발견된 것입니까? 그것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인데…… 어디에 감춰 놓았다가 일이 터지면 들고 나와서 “새로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도가 한국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일본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실은 독도에 대한 영유 의식은 있었지만 독도가 불모의 무인도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일만 생기면 아주 훌륭한 학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독도는 명명백백한, 일점 의심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일본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강연을 합니다. 그건 국민들 기분 좋게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반면에 우리가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 하자면 우민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국민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100%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알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오래되기는 했지만 1995년에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라고 하는 잡지에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100% 한국 땅으로 알고 있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 가는 부분도 많다 라

고 설문에 나왔지요? 세계 사람들을 보면 서양 사람들은 40%가 한국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60%가 일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53%가 한국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47%가 일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지금 조어도(센가쿠 열도)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대만 사람들 중 30%만 한국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일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입니다. 물론 이런 설문조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문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지도를 찍어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책을 보면 대한민국 지도에 울릉도, 독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일본지도를 보면 일본해라고 한 곳에 국경선 표시도 없이 울릉도, 독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찍어낸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찍어낸 것이 사람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낸 것이 아닙니다. 무심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독도문제가 심각한지 몰랐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심히 작업을 해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도대체 뭘 일만 터지면 텔레비전에 나와서 “여기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나온 지도가 있는데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했다.”라고 소리 높여 떠들면서 대한민국 지도는 이런 식으로 찍어내도 되는 겁니까? 이걸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을 못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독도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었다면 서문당에서 이렇게 찍어냈겠습니까? 그것 우리 것이니까 들어가도 우리 것, 안 들어가도 우리 것, 이런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세계 지도를 찍어내는 유수의 다른 나라 회사에서 나온 지도책을 보면 일본 것으로 나와 있거나 안 그러면 일본 것인지 한국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나와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고등학생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리부도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지리부도입니다. 이 책에는 독도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 어디에 보면 우산도 무릉도라고 되어 있어서 ‘무릉도는 울릉도고, 우산도는 독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이 지리부도에 보면 우산도가 울릉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희들이 맨날 우산도가 독도라고 우기는데 너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를 보면 우산도가 울릉도라고 나오더라. 지금도 그렇게 나온다. 1990년대 너희들이 썼던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독도 뭐가 문제냐 하면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뭐냐? 국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민들이 다 문제점을 모르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찾아내서 빨리 시정을 해야 합니다.

## 5. 차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독도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울릉도에 가시게 되면 울릉도에 삼성에서 지은 ‘독도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틀림없다”고 하면서 모든 전시된 자료들이 입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자료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이 트집을 잡고 있을까요? 그것은 독도박물관에 전시된 자료들과는 다른 자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전시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되고 우리에게 불리한 자료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자료가 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밝혀내어 잘못된 자료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심할 없이 우리 땅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연구할 필요성을 못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 하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일본이 무력으로 도발하게 되면 무력으로 대응하고, 재판으로 하게 되면 재판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일본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재판을 하자는 소리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6. 맺음말

독도문제에서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교육만하고 또 데모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일 관계만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득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용히 있으면서 준비만 철저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망언한다고 데모만 하면 뭐 합니까? 그 시간에 망언을 못하도록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선착장 만들 때 뭐 그걸 자랑하고, 무슨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합니까? 그냥 조용히 만들면 됩니다. 광고하고 홍보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도 국민이 있는데 …… 다른 섬처럼 그냥 조용히 건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만 착착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준비는 안 하면서 데모나 열심히 하고, 스피커 가지고 열심히 광고만 한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건 절대 아니더라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독

도는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언젠가 독도를 실제로 가지게 되면 다시 한 번 보시고, 일본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일본 교과서 문제와 한국사 기술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 일본 교과서 문제와 한국사 기술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 1.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란

일본 역사교과에 한국사 관련 내용이나 식민지 지배·침략전쟁 관련 기술이나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왜곡되어 있거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는 문제로, 1982년 일본 교과서 왜곡 파동을 계기로 한일 간에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첫째,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기술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을 부정하는 것으로 동북아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은 부당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제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1993년 고노 담화나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구체화 되었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도 2014년 3월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 담화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해 역사인식과 관련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검정을 실시하는 역사교과서에도 이러한 담화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노 담화는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동일한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새롭게 표명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다보며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잘못에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역사교육을 통해 이 문제를 기억하고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올바르게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담화를 부정하는 기술이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것은 담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둘째, 교과서는 국제이해와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데, 왜곡된 교과서는 다른 집단이나 국민에 대한 경멸이나 증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1974년 11월 19일, 교육은 '국제 이해와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해야 하고 모든 종류의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에 기여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교과서가 '오해, 불신, 인종 차별주의 또는 다른 집단이나 국민에 대한 경멸이나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요소가 전혀 없도록 보장해 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은 이러한 유네스코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교과서로 학습할 경우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침략의 피해를 받은 국가의 역사 인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발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사히신문이 2013년 12월 20대와 30대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는 30대 이상에 비해 역사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침략전쟁은 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스쿠니신사에 도조 히데키 등 전범도 모셔져 있다는 사실을 30대 이상은 84%가 알고 있지만 20대는 56%밖에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찬성이 60%이고 반대는 15%에 불과합니다. 20대는 침략전쟁이었다는 답변도 45%로 30대 이상에 비해 10%나 적습니다. 즉 역사적 사실은 잘 모르면서도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찬성하고 침략전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역사교육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1〉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결과 중 역사인식 관련 부분(2013.12.29)

	질 문	답변		
		20대	30대 이상	
1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찬성	60	59
		반대	15	22
2	야스쿠니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지도자였던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전범도 모셔져 있다. 이 사실을 아는가?	알고 있다	56	84
		모른다	43	15
3	이 전쟁은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침략전쟁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가?	침략전쟁이었다	45	55
		침략전쟁이 아니었다	33	26

셋째, 2001년 검정결과 발표 때까지는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독도 기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28일 교과서 기술의 근거가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가 개정되어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다케시마’ 및 센카쿠제도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도 언급한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었습니다. 향후 일본의 모든 역사교과서에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상 적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영토로 편입했다는 내용이 기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도가 일본 교과서에 일본 영토라고 기술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모든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독도에 대해 우리가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행사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근거한 정당한 것으로, 일본 교과서에 일본 영토로 기술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로 허약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해도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미래를 짚어지고 나갈 일본의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게 되면 신뢰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급변하는 동북아정세를 고려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협력해 나갈 일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게 된 미래세대가 과연 신뢰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일관계뿐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넷째, 일본 교과서는 4년을 주기로 하여 <편집>, <검정>, <채택>, <사용>이 진행됩니다(자료2). 중학교의 사례를 보면, 2013년 집필과 편집을 한 교과서를 2014년 5월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합니다. 이 교과서는 검정을 거쳐 2015년 3월말에서 4월초 검정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8월에 채택을 하고 2016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사용됩니다.

향후 일정(자료2)을 보면 매년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과 독도 기술 왜곡으로 인한 갈등이 매년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2〉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 검정 일정(2013년-2020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구 분	초등학교	검정	◎				◎				
		채택		★				★			
		사용개시			○				○		
	중학교	검정		◎				◎			
		채택			★				★		
		사용개시				○				○	
	고 등 학 교	저학년용	검정			◎				◎	
			채택				★				★
			사용개시	○				○			
		중학년용	검정				◎				◎
			채택	★				★			
			사용개시		○				○		
고학년용	검정	◎				◎					
	채택		★				★				
	사용개시			○				○			

◎ : 검정 (신청은 통상적으로는 4월)

★ : 채택 (검정결과 발표 3월, 채택 8월)

○ : 사용 (4월부터)

※ 고등학교 고학년용 과목에 사회과는 포함되지 않음

## 2.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경위

자학사관의 극복을 주장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차 내각의 성과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교육기본법의 개정(2006.12)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찬반양론이 제기되었는데 논쟁의 핵심은 ‘애국심 조항’이었다. 찬성론은 자학사관 극복을 위한 애국심의 필요성을 내세웠고, 반대론은 강요된 애국심의 위험성을 내세웠다. 그런데 개정된 교육기본법을 보면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러한 것들을 길러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함(A)과 동시에, 타국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B)를 기를 것”이라는 교육 목표(5항)에 나타나 있듯이 국제주의(B)와 애국주의(A)가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국내 언론은 일본 교과서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일본 우익세력은 교과서가 ‘자학적이고 반일적인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역시 일본 교과서에 국제주의와 애국주의가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1945년 8월 이후 일본의 교과서 기술은 국제주의와 애국주의가 길항(拮抗)하는 가운데 변화해 왔다는 인식을 토대로 일본 교과서 문제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 일본 교과서 문제 연표

연도	애국주의	국제주의
1949		교과서제도 국정에서 검정으로 변경
1955	민주당(여당), 『걱정스런 교과서 문제』 라는 소책자 배포	
1965		이에나가 사부로, 교과서 검정제도는 위헌·위법 소송
1970		이에나가 소송 1심 판결, 검정은 헌법과 교육법 위반
1974		고등학교 교과서에 난징대학살 재등장
1975		중학교 교과서에 난징대학살 재등장
1980	자민당(여당)이 당 기관지에 “지금 교과서는-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언” 연재	

1982	고등학교 검정결과 발표(아사히신문, 중국 화북(華北) 침략이 진출로 바뀌었다고 보도)	미야자와 기이치 관방장관 담화 발표, '근린제국조항' 신설
1984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난징대학살 기술
1985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난징대학살 기술
1986	우익세력 原書房에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신편 일본사』) 발간	
1993	자민당, '역사·검토위원회' 설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 발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 표명
1994		1993, 1994 검정통과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위안부' 기술(23종 중 22종)
1995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 발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 표명
1996	'밝은 일본·국회의원 연맹' 결성,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결성	
1997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모임' 결성	중학교 교과서 '위안부' 기술(7종 중 7종)
2001		'새역모', 중학교 역사 및 공민 교과서 발간, 제1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발족
2005	중학교 '위안부' 8종 중 2종으로 감소	
2006	'새역모'와 '일본교육재생기구' 분열, 교육기본법 개정('애국심' 조항 신설)	
2007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발족
2008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 명기	
2011	우익세력, 育鵬社, 自由社에서 교과서 발간,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 사라짐 모든 중학교 지리, 공민 교과서에 독도 기술	
2014	중·고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북방영토와 독도 불법점거 명기	
2015	모든 중학교 지리, 공민 교과서에 독도 한국 이 불법점거 기술	마나비샤 중학교 역사교과서 일본군'위안부' 기술

## 1) 제1기 : 패전에서 제1차 교과서 공격 전까지(1945-1955)

1945년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의 지시에 따라 태평양전쟁 당시 황국사관에 의해 기술된 교과서는 폐기되고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발행되었습니다. 1946년 문부성은 『나라의 발자취』, 『일본 역사』를 발간했는데 난징대학살이 기술되었습니다. 1949년부터는 교과서 발행이 국정제도에서 검정제도로 변경되었는데, 많은 교과서에 만주사변, 중일전쟁, 동남아시아 침략이 일본의 ‘침략’이라고 기술되었습니다. 점령시기 출판된 교과서는 한계는 있었지만, 전쟁 당시에 비하면 크게 진전된 것이었습니다.

## 2) 제2기 : ‘제1차 교과서 공격’에서 ‘이어나가 판결’ 전까지(1955-1970)

점령이 끝나고 독립하자 침략전쟁과 가해사실을 교과서에 기술한 것에 대한 보수 세력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1955년 8월, 여당인 민주당이 『걱정스런 교과서 문제』라는 소책자를 배포하면서 교과서에 대한 공격이 시작하는데 이것을 제1차 교과서 공격이라고 합니다. 공격의 초점은 일본교직원조합이 편향된 교과서로 좌편향적 정치교육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을 침략한 사실을 교과서에 기술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일본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교과서 검정을 통해 기술 내용을 통제합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7년 이어나가 사부로(家永三郎) 교수가 쓴 교과서는 “과거의 사실에 대해 반성을 추구하려는 열의가 지나쳐, 학습을 통해서 선조의 노력을 인식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높이고 민족에 대한 풍부한 애정을 키운다는 일본사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이어나가 교수는 “‘과거의 사실로부터 반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미화하는 것이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높이고 민족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한다’는 이유때문이라면, 이러한 생각은 일본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항의합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을 통해 교과서 기술을 강력하게 통제된 결과, 일본의 침략과 가해에 대한 기술을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교과서 통제에 대해 1965년 12월, 1957년 12월 교과서 집필자가, 1960년에는 역사학협회와 역사학 관련 9개 학회가 각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어나가 사부로(家永三郎) 교수(도쿄교육대학)가 1965년 교과서 검정제도는 위헌·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제1차 소송). 그리고 1967년, 1968년도용 교과서 검정에서 3건 6곳의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합격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제2차 소송).

### 3) 제3기 : ‘이에나가 승소 판결’에서 ‘제2차 교과서 공격’ 까지(1970-1982)

제1차 교과서 공격으로 사라졌던 난징대학살에 대한 기술이 본격적으로 재등장하는 것은 1974년판 고등학교 일본사와 1975년판 중학교 교과서부터입니다. 재등장의 배경으로는 첫째, 1970년 스기모토 료기치(杉元良吉) 재판장이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교과서 검정 위헌 소송에 대해 “교과서의 사상 내용을 심사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교과서 내용 개입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교과서 검정은 헌법과 교육법에 위배 된다고 판결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이나바 오사무(稲葉修) 문부대신이 동년 9월 29일 국회에서 “전쟁을 통해서 중국 국민에게 얼마나 중대한 피해를 끼쳤는지에 대해 국민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금후 초중등 교육과 그 밖의 사회교육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야스나가 의원의 생각과 같습니다”고 답변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중일공동성명에서 일본은 중국 침략에 대해 “과거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서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나바 문부대신의 발언은 중일공동성명에서 밝힌 일본정부의 이러한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일본과 중국의 국교 회복이 일본의 교과서 기술에 영향을 줍니다. 난징대학살에 대한 기술이 1974년판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에 다시 등장하고, 중학교 교과서에도 1975년판 개정판에 다시 등장합니다.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교과서에 일본의 침략에 대한 기술이 늘어나자 보수 세력에 의한 교과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제2차 교과서 공격이라고 합니다. 1980년 1월 여당인 자민당이 당 기관지 『자유신보』에 “지금 교과서는-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언” 연재를 시작하면서 본격화 됩니다. 동년 7월에는 오쿠노 세이스케(奥野誠亮) 법무대신이 기자회견에서 “현행 교과서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을 피하고 있는 등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점점 확대됩니다.

〈표 4〉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식민지 지배 · 침략전쟁 관련 기술 변화

주제		기술 시기
식민지 지배	타이완 식민지화 · 저항	1978 (東書), 1993 (日書), 1997 (帝國,大阪,日文), 2002 (敎出), 2012 (淸水)
	동화(황민화)정책 (타이완)	1997 (帝國,日文), 2002 (日書,敎出), 2006 (東書), 2012 (淸水)
	강제동원(대만)	1981 (日書), 1990 (敎出), 1993 (淸水,中敎), 2012 (帝國)
	한국병합(식민지화)	1952 (日書,淸水), 1955 (敎出,帝國), 1956 (東書,大阪), 1957 (中敎)
	식민지 가해 실태 (한국)	1966 (日書), 1975 (東書,敎出), 1978 (帝國,大阪,淸水,中敎)
	황민화정책(한국)	1984 (東書), 1987 (中敎,大阪), 1990 (敎出), 1993 (日書,帝國), 1997 (淸水)
	3·1운동	1957 (日書), 1962 (敎出,中敎), 1969 (大阪), 1972 (帝國,淸水), 1975 (東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966 (日書), 1975 (大阪), 1978 (東書,敎出,中敎,帝國,淸水)
	강제동원(한국)	1966 (日書), 1974 (敎出), 1978 (中敎,帝國,淸水), 1981 (東書,大阪)
	일본군 '위안부'	1997 (日書,東書,敎出,帝國,淸水,大阪,日文) 2002 (日新,淸水,帝國), 2006 (日新,帝國), 2012(없음)
침략전쟁	중국침략(용어)	1984 (日書,東書,敎出,大阪,淸水,中敎), 1990 (帝國)
	난징대학살	1975 (日書), 1978 (東書,敎出), 1981 (中敎), 1984 (大阪), 1987 (淸水), 1990 (帝國)
	동남아시아 침략	1981 (日書), 1978 (東書,敎出,帝國,大阪), 1981 (淸水), 1987 (中敎)

(주) 日書(日本書籍), 東書(東京書籍), 敎出(敎育出版), 帝國(帝國書院), 淸水(淸水書院), 大阪(大阪書籍), 日文(日本文敎出版), 中敎(中敎出版)

#### 4) 제4기 : '1982년 교과서 파동'에서 1966년 중학교 교과서 일본군'위안부' 기술까지(1982-1996)

제2차 교과서 공격을 배경으로 진행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문부성에 의해 '침략'이 '진출'로 바뀌고 침략전쟁 관련 기술이 대폭 삭제되었다는 내용이 1982년 6월 26일 일본 언론에 보도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강하게 비판하자, 일본 정부는 동년 8월 26일 '근린제국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역사교과서에 관한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근린제국조항이란 "근린 아시아 여러 나라와 관계된 역사적 사상(事象)을 다룰 때는 국제이해와 국제협력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으로, 교과서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내용도 사실대로 기술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내용을 검토하고 정부차원에서 13개항 19가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의 침략, △토지약탈, △3·1운동, △신사참배 강요, △한국어 말살, △창씨개명 강요 등 4개항 6가지 내용에 대한 즉각 수정을 약속합니다.

제2차 교과서 공격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을 축소시키려던 보수 세력의 의도와는 달리,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술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1984년판 중학교 교과서, 1985년판 고등학교 교과서 전체에 난징대학살이 기술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역사교과서 기술이 개선된 것은 이애나가 사부로를 비롯한 집필자 및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과 이웃 국가의 외교적 압력의 결과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검정제도를 통해 교과서 기술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웃 국가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990년대 접어들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필두로 일본 정부에 대해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일본의 전후처리에 대한 아시아 피해자들의 문제제기가 본격화됩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위안소'의 설치 및 '위안부' 동원에 일본 정부와 군이 관여한 점을 인정하고 사죄했고, 1995년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一) 총리가 담화를 통해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교과서 기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995년판 고등학교 교과서와 1997년판 중학교 교과서 전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기술됩니다.

## 5) 제5기 :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공격(1993-현재)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명, 교과서 기술 개선이 제3차 교과서 공격을 불러옵니다. 1993년 8월, 자민당은 ‘역사·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태평양전쟁은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고, △난징대학살과 일본군‘위안부’는 허구로, △침략과 가해를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와의 ‘싸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자를 동원한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1996년 6월에는 ‘밝은 일본·국회의원 연맹’, 1997년 2월에는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모임’이 결성되어 “우리나라의 역사를 침략국가로 최악시 하는 자학적 역사인식과 비굴한 사죄외교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기술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1998년 6월 5일 국회에서는 마치무라 노부나가 문부대신이 역사 교과서가 균형을 잃고 있는제 특히 메이지 이후 부정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열거하고 있다며 기술이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1996년 12월 니시오 간지(西尾幹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가 결성됩니다. ‘새역모’는 결성 초기에는 기존의 역사교과서가 일본군‘위안부’를 기술한 것은 ‘자학사관’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직접 중학교 역사·공민교과서를 직접 발간합니다.

2001년 이후 일본 교과서 문제는 ‘새역모’ 계열(2006년 10월 ‘새역모’는 ‘새역모’와 ‘일본교육재생 기구’론 분열)에 의해 발간된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새역모’ 계열의 교과서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역모’ 계열의 교과서에도 난징대학살, 황민화 정책, 강제동원 등 침략전쟁과 식민지로 인한 가해 사실도 간략하게나마 기술되어 있습니다. ‘새역모’ 교과서에 이러한 기술이 들어간 것은 검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검정이 교과서 기술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1969년 검정에서는 난징대학살 기술에 대해 “일본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을 들추어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새역모’에 의한 공격의 결과, 일본군‘위안부’ 관련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이 1996년 7종 중 7종, 2001년 8종 중 3종, 2005년 8종 중 2종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에는 모든 교과서에서 사라지게 되는 등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011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새역모’ 계열의 역사교과서가 1종에서 2종으로 늘어났고 채택률도 0.039%(2001년)에서 3.8%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 채택률은 약 6.3%로 증가합니다.

자민당의 교과서에 대한 개입과 애국주의 강조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자민당의 2012년 총선거 「종합정책집-과일(2012)」는 “많은 교과서에 아직도 자학사관에 기초하는 등 편향된 기술이 존재한다.”며, ‘근린제국조항’도 수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정권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근린제국조항’ 수정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 3.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실태

일본에서 일본사를 가르치는 과목은 초등학교 사회(6학년),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일본사(A/B), 세계사(A/B)입니다. 초등학교 사회와 중학교 역사는 필수 과목이지만 고등학교는 세계사가 필수 과목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왜곡 사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이 ‘애국심’을 강조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교육기본법(2006.12), 학습지도요령(2008.3), 학습지도요령해설서(2008.7)를 근거로 집필된 것입니다. 개정 교육기본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애국심’조항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의 목표) 5항을 보면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을 길러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함과 동시에 타국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타국에 대한 존중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고’라는 내용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요령 역시 역사교육의 첫 번째 목표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하고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기른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로 “역사를 통해 국제관계와 문화교류의 줄거리를 이해시켜, 우리나라와 여러 외국의 역사와 문화가 서로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타 민족의 문화, 생활 등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국제협조의 정신을 배양한다”는 내용도 명기하고 있지만, 최근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애정’입니다.

우익 모임인 교과서문제연구회의 “교육기본법에는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을 길러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제2조 교육의 목표 3)고 되어 있고 학습지도요령에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해’(역사적 분야의 목표 1)라고 되어 있는데”라는 주장에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듯이 우익 세력은 ‘국제협조의 정신’은 철저히 무시하고 ‘애국심’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과서의 구체적인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일본의 한국 침략 관련 내용을 보면, 학습지도요령에는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해설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료5〉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일본 식민지 지배와 침략 관련 기술 변화

시기	주요 내용
195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이 대륙진출에서 전쟁으로의 길을 걸었다.</li> <li>- 특히 전쟁(태평양전쟁)이 초래한 일류의 불행에 대해 깊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li> </ul>
197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전쟁(러일전쟁)이 아시아의 민족적 자각을 고양시킨 것을 다룬다. 또한 러일전쟁 당시 국내 일부에 반전론이 있었다는 사실과 민족적 자각이 나중에는 대국익식이 되어 아시아 여러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 등을 다룬다. 메이지 말기부터 다이쇼 초기에 걸쳐 조선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본의 <b>한국병합</b>을 (중략) 일본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정세의 추이를 다룬다.</li> <li>- 일본의 대륙진출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li> <li>- 전쟁 중의 국민생활에 대해서는 이 대전이 이른바 총력전으로, 일화사변(日華事變) 이후 장기전으로 인해 물자가 극도로 부족하여 국민생활이 곤란해진 점, 모든 것이 전쟁을 위해 동원된 사실을 다룬다. 패전에 대해서는 히로시마(広島)·나가사키(長崎) 원폭투하, 소비에트연방의 대일선전도 있어 결국 불리하게 되어 결국 패전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이해시킨다.</li> </ul>
197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이 전쟁(러일전쟁)의 승리가 한편에서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족적 자각을 촉진시켰으나, 그 반면 일본인이 여러 민족에 대한 지도자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깨닫도록 한다. 러일전쟁 후의 대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병합에 대해 그 사정을 이해시킨다.</li> <li>- 대전 후 아시아, 아프리카에서의 민족운동이 발흥하고 발전을 보였다는 점, 특히 중국혁명의 진전, 인도의 독립운동에서 이 시대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이해시킨다.</li> <li>- 이 경향이 군부의 대두를 초래하여 중국대륙으로 진출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파악시킨다.</li> <li>- 그 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사실에 착목시켜, 원자력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전쟁의 참화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국제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킨다.</li> </ul>
198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일·러일전쟁’에 대해서는 그 원인, 전쟁의 경과 및 결과, 국내외 반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시켜, 러일전쟁 후의 <b>한국 식민지화와 중국의 민족운동, 중화민국의 성립과 더불어 아시아 정세를 폭 넓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b></li> <li>- 아시아에서의 민족운동이 고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한다.</li> <li>- 군부의 대두를 초래, 결국 중국대륙으로의 진출로 이어졌다는 점을 이해시킨다.</li> <li>- 또한, 대전이 인류 전체에 많은 참화를 초래한 점을 토대로,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시킨다.</li> </ul>

199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일·러일전쟁’에 대해서는 대륙을 둘러싼 당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의 움직임, 전쟁의 개요와 국내외 반응, 한국 식민지화 등을 다룬다.</li> <li>- 그 때, 중국과 조선에서의 ‘민족운동의 고양과 국제연맹의 설립과 군축조약 체결로 대표되는 ‘국제평화의 노력’을 깨닫도록 한다.</li> <li>- 군부가 대두하여 대륙으로 세력 확장한 사실, (중략) 이해시킨다.</li> <li>-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이 커다란 전화(戰禍)를 입은 사실, 나아가 대전이 인류 전체에 참화를 썼다는 사실을 이해시켜, ‘국제협조와 국제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을 깨닫게(내용의 취급)하도록 한다.</li> </ul>
200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일·러일전쟁’에 대해서는 ‘이 무렵의 대륙과의 관계에 착목시켜’(내용의 취급)에서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의 움직임, 전쟁의 개요와 국내외 반응, 한국 식민지화 등을 다룬다.</li> <li>- 민족운동의 고양과 국제협조 움직임’에 대해서는 중국과 <u>조선에서의 민족운동 고양</u>, 국제연맹 설립과 군축조약의 체결 등을 다루도록 한다.</li> <li>- 군부가 대두하여 대륙에서 세력을 확장한 사실, 중국과의 전쟁이 장기화 한 사실,</li> <li>-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사실, 각지에의 <u>공습, 오키나와전, 히로시마·나가사키에의 원자폭탄 투하</u> 등, 우리나라의 국민이 커다란 전화를 입은 사실 등으로부터 대전이 인류 전체에 참화를 미쳤다는 사실을 이해시켜, ‘국제협조와 국제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내용의 취급)는 것을 깨닫게 한다.</li> </ul>

## 2) 교과서 검정제도

일본 정부는 1950년대 중반부터 검정제도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을 통제해 왔다. 이에나가 소송도 이러한 검정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오히려 ‘새역모’ 계열 교과서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내용이 기술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즉 같이 제도지만 시대에 따라 그 기능이 변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검정제도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교과서 기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까지 “태평양전쟁에 대해서는 일본의 잘못은 너무 쓰지 말고, 그것이 사실이어도 로맨틱하게 쓸 것”, “일본의 과거 전쟁을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일본이 중국을 지배하여 불행하게 했다는 것은 부적당하다”, “태평양전쟁은 역사적인 용어가 아니다. 대동아전쟁으로 할 것”, “우리나라는 특히 태평양전쟁에 의해 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고 되어 있으나, 태평양전쟁에 의해 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독립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견도 있는 바, 이 기술을 삭제할 것” 등의 검정의견이 제시

되었다.<sup>1)</sup> 이로 인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이 축소되었다.

일본 정부가 검정제도를 활용하여 교과서 기술을 통제할 사실은 “사토 전 총리가 예산위원회에서 ‘중일전쟁은 유감이었다’고 발언, 닉슨 방중에 발표된 이후 기묘하게도 각사의 후기 제출본에 ‘중일전쟁’ 소재목이 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시도 없었다.(지금까지는 ‘일화사변’등으로 변경을 명령했다) 또한 ‘중국 침략’이라는 용어도 통과했다. 명백하게 정부=자민당의 정책 변경을 수용해, 정치적 배려를 한 흔적이 보인다. 얼마나 충실하게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검정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sup>2)</sup>는 주장에도 역설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침략전쟁 관련 기술에 대한 검정 수위가 변해왔음을 보여준다.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 정부의 통제가 약화되기는 했으나, 1980년대 초까지는 여전히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에 정부가 개입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sup>3)</sup>

〈표 6〉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수정지시 사례

검정 연도	과목	검정 제출 원고	수정지시 <sup>4)</sup>
1973	고교 일본사	태평양전쟁	일본에서는 대동아전쟁이라고 했다. (1974, p.19)
1976	중학 역사	(조선으로의 침략, 한국병합) “(조선인이) 토지를 빼앗겼다”, “토지를 잃어버려”	사실에 반한다. 토지조사의 결과다. (1977, p.12)
	고교 일본사	조선인이 .... 강제적으로 연행되어, 중일전쟁의 포로로 연행된 중국인과 함께 전혀 인권을 무시한 노예적 노동을 강요당했다.	‘강제적으로 연행되어’는 실태로서는 그렇지만, 일본인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강제적은 아니다. 국민징용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 “전혀 인권을 무시한 노예적 노동”도 많은 경우는 그렇지만 정부가 그랬었는지 어떤지는 당시 실정을 토대로 검토할 것(1977, p.20)
1977	고교 세계사	일본의 중국침략 *1977년도 검정	안 된다. ‘침략’은 진출 혹은 침입으로 할 것 (1979, p.24)

1) 依義文, 『教科書攻撃の深層』, 学習の友社, 1997, 168~169쪽.  
 2) 日本出版労働組合連合会, 『73 教科書レポート』 1973, 12쪽  
 3) 출처는 日本出版労働組合連合会에서 매년 발간하는 『教科書レポート』  
 4) 연도와 쪽수는 『教科書レポート』 출판연도와 상기 내용이 기술된 쪽수

1979	중학 역사	많은 조선인이 강제적으로 일본 본토로 이주당해	당시 조선은 일본령으로, 국민징용령에 의해 모집된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이라고는 할 수 없음 (1980, p.31)
1981	고교 현대사회	침략	'침공', '침입', '침출'을 사용하기 바람. '침략'에는 나쁘다는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음.(1982, p.13)
	고교 일본사	중국에서는 서안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정부와 공산당의 항일통일전선이 성립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중국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태도가 강경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의 침략'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서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진출', '침입' 등의 단어로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적합성을 유지할 것. 자국의 역사 교과서라는 입자에서도 '침략'이라는 단어는 어떨지 의문이다.(1982, p.49)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기술에 대한 개입은 1982년 일본 교과서 왜곡 파동 해결 방안으로 '근린제국조항'이 신설된 것을 계기로 약화된다. 1986년 6월에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제작한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신편일본사』가 검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비판을 제기하자,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 康弘) 총리는 문부성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고, 문부성은 출판사에게 이례적으로 4회에 걸쳐 127곳에 대한 수정을 지시했다.<sup>5)</sup> 대표적인 보수정권인 나카소네 정권에서 오히려 교과서 기술 개입은 줄어들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이 늘어난 것이다. 이것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를 펼쳤던 나카소네 정권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sup>6)</sup>, 교과서의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 관련 기술과 보수정권과의 관계가 일면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새역모' 역사교과서도 검정 의견에 의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이 표12의 사례에 보이듯이 일부 개선되었다.<sup>7)</sup>

5) 日本出版労働組合連合会, 『教科書レポート '87』 1987, 16쪽.

6) 吉田裕, 『日本人の戦争観』, 岩波書店, 1995.

7) '새역모' 교과서 기술과 검정의견에 관한 연구로는 남상구, 「'새역모' 발간 교과서의 검정실태에 나타난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의 문제점」, 『역사교육논집』 43권, 2009가 있다.

〈표 7〉 2001년

신청 내용	검정의견	수정 내용
<p>1910(메이지43)년 일본은 한국을 병합했다(한국병합).① 이것은 동아시아를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구미열강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② 한국병합은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했지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꼭 이익을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었다. 단 실행되었던 당시로서는 ③ 국제관계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 ④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당연히 병합에 반대하는 찬비양론이 있었고 반대파의 일부로부터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p>	<p>① 일본의 한국병합 시 서구열강이 병합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② 한국병합에 대해 일면적으로 ‘필요’성과 ‘이익’이 기술되어 병합과 통치의 실태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③ “국제관계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만 기술하는 것은 병합과정의 실태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④ 한국 국내의 병합 반대파의 ‘격렬한 저항’이 일부밖에 없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p>	<p>② 일본 정부는 한국병합이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① 영국, 미국, 러시아 3국은 조선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서로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1910(메이지43)년 일본은 한국내의 반대를 무력으로 배경으로 억압하고 병합을 단행했다(한국병합).                  ④ 한국 국내에서는 일부 병합을 받아들이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민족의 독립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 그 후에도 독립회복을 위한 운동이 끈질기게 전개되었다. 한국병합 후 일본은 식민지로 만든 조선에 철도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 개발을 하고 토지조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이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경작지에서 쫓겨나는 농민도 적지 않았다. 또한 일본어 교육 등 동화정책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강화했다.                  ③ 삭제</p>
<p>[국민의 동원(전체)]</p>	<p>대만과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p>	<p>〈아래 내용 추가〉                  이러한 징용과 징병 등은 식민지에서도 실시되어 조선과 대만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희생과 고통을 주었다. 이 밖에도 다수의 조선인과 점령하의 중국인이 일본의 광산 등에 끌려와 열악한 조건 아래서 노역 당했다. 또한 조선과 대만에서는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황민화정책이 강화되어 일본식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정책 등이 실시되었다.</p>

〈표 8〉 2005년



신청 내용	검정의견	수정 내용
<p>한국병합 후에 설치된 조선총독부는 철도·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개발을 하고 토지조사를 시작하여 근대화에 노력했다.</p>	<p>식민지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p>	<p>한국병합 후 설치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개발을 하고 토지조사를 시작했다.</p>
<p>조선반도에서는 중일전쟁 개시 후, 일본식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창씨개명이 행해져 조선인을 일본인화 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전쟁말기에는 징병과 징용이 조선과 대만에도 적용되어 다수의 조선인이 일본의 광산 등에서 열악한 조건 아래서 노역 당했다.</p>	<p>전시 하 식민지 등의 실태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p>	<p>조선반도에서는 중일전쟁 개시 후, 일본식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창씨개명 등이 행해져 조선인을 일본인화 하는 정책이 강화되었다. 전쟁말기에는 징병과 징용이 조선과 대만에도 적용되어, 현지 사람들이 여러 희생과 고통을 당했다. 또한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일본의 광산 등에 끌려와 열악한 조건 아래서 노역 당했다.</p>
<p>공습의 피해 ...메이지 이후, 일본의 국민이 처음으로 체험한 패전이였다.</p>	<p>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내용'(5)의 가 "또한 (세계)대전이 인류전체에 참화를 끼쳤다는 것을 이해시킨다."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인의 피해만을 기술하고 있어 취급이 부적절하다.</p>	<p>...메이지 이후, 일본의 국민이 처음으로 체험한 패전이였다. 일본의 항복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은 종결되었다. 대전 전체의 전사자는 2200만 명, 부상자는 3400만 명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P.206에 중국의 희생, P.207에 동남아시아의 희생을 상기 검정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했음.) *P.206: 이 전쟁은 전쟁터가 되었던 아시아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특히 중국의 병사와 민중은 일본군의 침공에 의한 다수의 희생자를 냈다. *P.207 : 일반 시민도 포함한 다수의 희생자가 나왔다.</p>

### 3) 왜곡 사례

일본 역사교과서 한국사 및 침략전쟁 관련 내용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에 대해 2015년 검정을 통과하여 2016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비판 논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가) 식민사관에 기초한 고대 동아시아 관계사 기술

##### <고대국가의 영역 표시>

출판사	교과서 내용
<p>東京書籍 (p.27)</p>	 <p>도판 &lt;기원전 2세기말의 세계&gt;</p>
<p>日本文教出版 (p.23)</p>	<p>본격적인 국가의 형성은 기원전 2세기말, 한에 의한 낙랑군을 포함한 4군 설치 이후로 추정된다. 나중에는 북쪽에 고구려, 남쪽에는 몇 개의 소국이 생겼다.</p>
<p>帝國書院 (p.17)</p>	 <p>도판 &lt;⑤ 기원전 · 후의 동아시아&gt;</p>
	<p>기원전 202년에 진의 뒤를 이은 한 왕조(전한)는 중앙아시아와 베트남 북부, 그리고 조선반도 북부에도 세력을 확장하였다.(p.19)</p>



紀元前 2 世紀ごろの東アジア

도판 <그림⑥ 기원전 2세기경 동아시아> (p.19)

清水書院  
(p.19,  
p.20~21,  
p.24)



도판 <로마제국과 한(漢) -기원전후 무렵의 세계-> (p.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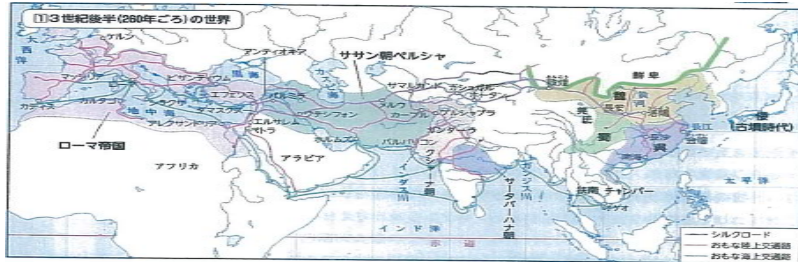
도판 <3세기경의 동아시아>(p.24)

育鵬社  
(p.29,32)



3 世紀ごろの東アジア

도판 <3세기경 동아시아>(p.29)



도판 <3세기 후반(280년 경)의 세계> (p.32)

自由社  
(p.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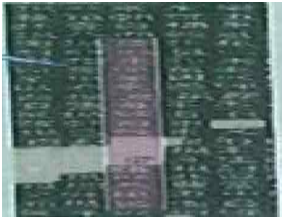

学び舎  
(p.21,35)



印張の地圖(紀元前3世紀)/万里の長城の位置と道路網。

<히미코에게도 금도장이 하사되다>  
3세기가 되자 중국에서는 한이 멸망하고 위·오·촉이 분립되어 다투는 3국시대가 되었다. 북방에 있었던 위가 조선반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관청을 설치하자 히미코는 곧바로 사신을 보냈다.(p.35)

〈광개토대왕비문 해석〉

출판사	교과서 내용
日本文教出版 (p.35)	조선반도에서는 6세기에 신라·백제의 세력이 커졌다. (칼럼)〈이와이의 난〉 6세기가 되자 신라·백제의 세력이 가야지방으로 미쳤다. 아마토 왕권은 군대를 보내 가야지방에서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였다. (중략) 6세기 중엽 가야지방은 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가 아마토 왕권은 조선반도에서의 창구를 잃었다.
帝國書院 (p.32)	6세기가 되자 조선반도에서는 왜국과 관계가 있었던 가라 제국이 멸망하고 백제와 신라가 세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왜국은 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育鵬社 (p.34~35)	이러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임나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중략) 6세기가 되어 신라가 세력을 뻗치게 되자 우호관계에 있던 백제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자가 종종 찾아왔다. 신라는 임나에도 진출하여 6세기 중반에는 그 지역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조선반도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후퇴하였다.(p.34~35)  도판 〈4광개토왕 비문 일부〉 왜가 조선반도에 출병하여 백제와 신라를 복속시켰다고 쓰여 있다.(p.35)
自由社 (p.7, p.48)	이 비문으로부터 왜(일본)가 391년에 바다를 건너 백제를 격파한 것을 알 수 있어.(p.7)  도판 〈고구려 광개토왕(호태왕)비〉 높이가 6.4m. 비문에는 광개토왕의 사적이 기록되어있고 조선반도에 출병한 일본과 고구려가 싸운 모습도 알 수 있다. 현재 광개토왕비가 세워져 있는 곳은 중국령이 되어 있다.(p.48)

	<p>조선반도 남부에는 4세기경부터 다수의 소국가로 분립된 지역이 있었다. 일본서기에서는 임나, 조선 측 호칭으로는 가라, 또는 가야로 총칭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백제와 함께 일본열도 사람들과 깊은 교류가 있었다. 임나는 철의 산지이고, 아마토 조정은 이 땅으로부터 철을 수입하여 지방에 분배함으로써 국내 통일을 추진하였다고 보인다. 고구려에게 공격당한 백제는 아마토 조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고구려의 광개토왕(호태왕) 비문에는 왜의 군세가 바다를 건너 백제·신라를 「신민」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후 고구려왕이 이를 격퇴하기 위하여 군사를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마토 조정은 고구려와 싸웠지만 점차 형세가 불리해져 404년 조선반도에서 철퇴하였다.(p.48)</p>
<p>自由社 (p.49)</p>	<p>&lt;중국 사료와 명문에서 본 동아시아 국제관계&gt;  - 391년 왜가 백제·신라를 「신민」으로 삼다.  - 404년 왜와 고구려가 교전하여 왜가 조선반도로부터 철퇴하다.  - 562년 신라에 의해 임나가 병합되다.(p.49)</p> <p>한편 신라는 임나의 영유를 백제와 다투어 562년에는 임나를 병합하였다. 이렇게 임나는 멸망하였다. 신라는 이 문제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게 임나의 산물을 보내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였다.(p.49)</p>

나)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 식민지 지배 축소 기술 및 정당화

<러일전쟁>

출판사	교과서 내용
<p>自由社 (p.193, p.195, p.208)</p>	<p><b>[러일전쟁 개전으로]</b>  일본의 10배나 되는 국가예산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는 만주의 병력을 증강하고, 압록강 하구 용암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묵시한다면 러시아의 극동에서의 군사력은 일본이 맞서지 못할 정도로 증강될 것임은 분명했다(주4). 정부는 때를 놓치게 될 것을 우려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결의했다.(p.193)</p> <p><b>[세계를 바꾼 일본의 승리]</b>  러일전쟁은 일본의 사활을 건 전쟁이었다. 일본은 이에 승리해서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립했다. 근대국가로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본의 승리는 서구열강의 식민지가 되었던 여러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다.(p.195)</p> <p>&lt;칼럼 외부의 눈으로 본 일본; 세계가 본 러일전쟁-유색인종 아시아 민족이 독립에 대한 커다란 희망을 품게 되었다&gt;</p>

	<p><b>[아시아인의 반응]</b>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배를 타고 아시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수에즈 운하를 지나자 많은 현지인이 내가 황색인종인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전에는 우리 동아시아의 유색인종은 서방의 백색인종의 압박을 받았고 고통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다는 것은 동방민족이 서방민족을 이긴 것이 된다. 일본인은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도 이겨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환희한다.’고.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 결과, 아시아민족이 독립에 대한 큰 희망을 품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쉰원이 관찰한 러일전쟁에 대한 아시아인의 반응이었습니다.</p> <p><b>[독립에의 의욕을 고무]</b>  쉰원이 관찰한 것을 전 세계의 독립운동 지도자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독립 운동가이자 훗날 수상이 된 네루는 “만약 일본이 가장 강대한 유럽의 한 나라에게 승리를 거뒀다고 한다면, 어쩌서 그것을 인도가 이룰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썼습니다.  이집트의 민족운동 지도자 무스타파 카밀은 “일본인이야말로 유럽에게 분수를 알게 한 유일한 동양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시인 시라지는 “입헌제를 통해서 일본은 강대해졌다. 그 결과 이처럼 강한 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일본이 승리한 요인을 분석했습니다.(p.208)</p>
<p>育鵬社 (p.191, p.192)</p>	<p><b>[러일전쟁]</b>  러시아의 동아시아에서의 군비증강을 이대로 묵인한다면, 우리나라는 존립 위기를 맞게 되리라 생각한 정부는 전쟁을 결의하고, 1904(메이지 37)년 2월, 러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p.191)</p> <p><b>[일본에 대한 기대와 경계]</b>  또한, 같은 유색민족이 세계최대의 육군국인 러시아를 물리쳤다는 사실은 열강의 압박과 식민지 지배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 네루와 중국 혁명의 지도자 쉰원은 일본의 승리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 준 감동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후 아시아 각지에서 일어난 근대화와 독립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움직임도 이 전쟁의 영향이 있었습니다.(p.192)</p>
<p>教育出版 (p.178, p.179)</p>	<p>만를 점령한 러시아는 청과의 조약으로 군사를 철수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그 기한이 와도 철병하지 않고 한국에도 군사 시설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된 일본정부는 외교적 교섭으로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권익을 인정하는 대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p.178)  또한 일본의 승리는 열강의 침략과 지배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국, 인도, 터기 등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민족독립과 근대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p.179)</p>
<p>東京書籍 p.179</p>	<p><b>[러일전쟁 후의 일본]</b>  한편,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인도와 베트남 등, 구미열강의 식민지였던 아시아의 여러 민족에게 자극을 주어 민족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새로운 제국주의국가로서 아시아 민족과 접하게 되었습니다.</p>

### 〈한국 강제 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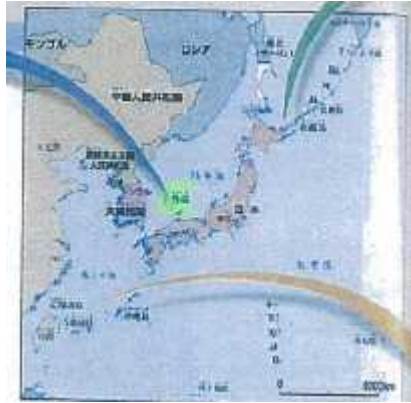
출판사	교과서 내용
日本文教 出版 (p.194)	1909(메이지42)년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민족운동가 안중근에게 암살당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일본은 1910년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한국을 병합하고 식민지로 하였다. 이를 한국병합이라고 한다.
育鵬社 (P.192)	또한 러일전쟁 중에는 미국의 필리핀 영유와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서로 지지하는 내용의 합이 미일 간에 성립하였다. 게다가 영일동맹과 포츠머스 조약에서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이 인정되었다. 그 후 한일협약에 따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가지게 되어 한국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였다.
自由社 (p.198)	구미열강은 러시아의 북만주·몽고, 영국령 인도, 미국령 필리핀 등 자국의 식민지 지배를 일본이 승인하는 대신 일본에 의한 한국의 보호국화를 승인하였다.  러일전쟁 후 일본은 한국통감부를 설치하고 보호국으로 삼아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 〈식민지 조선 개발론〉

출판사	교과서 내용
帝國書院 (p.182~183)	조선에서는 근대화가 추진되어 철도 등이 정비되는 한편, 학교에서 일본어와 일본 역사·지리를 배우고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칠 기회는 줄어들었다.
育鵬社 (p.193)	우리나라의 조선통치에서는 병합의 일환으로 근대화가 추진되었지만 쌀 수확을 강요당하거나 일본어 교육 등 동화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반감은 강해졌다.
自由社 (p.198~199)	병합 후에 설치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의 철도·관개시설을 만드는 등 개발을 실시하였고 토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도 개설하여 일본어 교육과 함께 한글 문자를 도입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석③ 이들 근대화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경작지에서 쫓겨난 농민도 있었다. 그 외 조선의 전통을 무시한 여러 가지 동화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그러나 36년간의 조선 통치로 인구는 2배가 되었고 경작지도 크게 늘었다.

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출판사	교과서 내용
<p>東京書籍</p>	 <p>5. 국경과 영토의 확정(p.168) 지도1. (국경과 영토 확정 지도)(p.168)</p>
	<p>(각주 설명)(p.168) 동지나해의 센카쿠제도는 1895년에 오키나와현에, 일본해의 '竹島'는 1905년에 시마네현에 각각 편입되었습니다.</p>
	 <p>(표내 설명) 메이지시대의 외교(p.169) -1905년 竹島の 일본령으로의 편입을 각의결정하다.</p>
<p>(각주 설명)(p.251) 한국과의 사이에는 '竹島'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 p.252)</p>	



지도2. 제목 없음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와 그 역사(p.252)

**竹島**

‘竹島’에서는 에도초기부터 막부의 허가를 얻은 돛토리번의 초닌이 어업을 하고 강치와 전복 소리를 채취했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강치잡이가 본격화된 것을 영향 받아 일본정부는 러일전쟁중인 1905 (메이지38) 년 1월에 각의결정을 해서 ‘竹島’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2월 22일에 지사가 고시했습니다. 이 후 竹島에서의 어업은 시마네현의 허가제가 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1941년(소화16)년 중지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 당시에 한국의 대통령의 이름인 “이승만 라인”이라고 불리는 선을 공해상에 일방적으로 그어 그 선안에 ‘竹島’를 포함시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엄중히 항의했습니다만 1954년부터 한국은 竹島에 경비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이 竹島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도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은 2005년(헤이세 17)에 ‘竹島’가 시마네현에 편입을 고시한 2월 22일을 ‘竹島의 날’로 제정하는 등 반환을 요구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료1. 시마네현 고시(시마네현 竹島자료실 소장)(p.252)



사진1. 메이지 시대의 竹島(개인 소장)  
1907년경 시마네현 사진사가 촬영한 사진과 그 설명문(p.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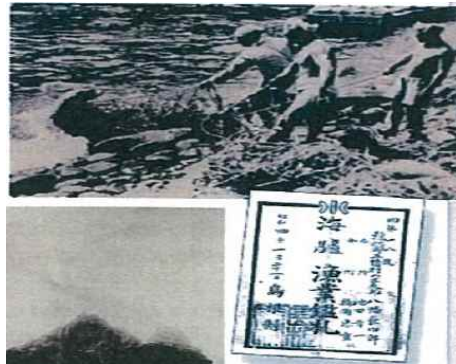


사진2. 강치 조업 모습(1935년)과 강치 조업 허가증(아래)  
(시마네현 竹島자료실 소장)(p.252)

**중국의 한국사교육,  
중국교과서 속의 한국사 서술**

김지훈 (성균관대)



# 중국의 한국사교육, 중국교과서 속의 한국사 서술

김지훈 (성균관대)

## 1.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교과서 편찬

### 1)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서 문화대혁명시기 - 『역사교학대강』 교과서

- 가) 중국교육부 산하의 인민교육출판사가 모든 교과서를 전국에 독점하여 공급
- 나) 인민교육출판사의 동판이나 필름을 지방 인쇄소에 공급하고, 일선 학교는 신화서점을 통해서 교과서를 주문.
- 다) 구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한 한 종류의 교과서가 전국에 공급됨. 이 시기 역사교과서는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계급투쟁을 중시함.

### 2) 1980년대-1990년대 역사교과서

- 가)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 각 지역의 경제적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 종류의 교과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나)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교과서를 출판하려 함
- 다) 1990년대 초부터 하나의 『역사교학대강』에 입각한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가 출판되기 시작함
- 마) 이에 따라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교과서 독점이 깨지고 경쟁 구도가 형성됨.
- 바) 역사교과서에서 계급투쟁이 약화되고 중화민족이 강조되기 시작함

### 3) 21세기 『역사과정표준』 교과서

- 가) 1990년대 말부터 새로운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됨.
- 나) 미국 등 해외의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구소련식의 『역사교학대강』에서 미국 식의 『역사과정표준』으로 전환
- 다) 『역사과정표준』은 개괄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세세한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음
- 라) 2001년 중학교 역사과정표준은 세 종류가 반포됨
  -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
  -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와 사회 과정표준 1』
  -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와 사회 과정표준 2』

### 4) 중국의 현행 교과과정

- 가) 2001년 9월 18개 학과의 과정표준과 49권의 실험교과서가 심사를 통과하여 전국의 38개 실험구에서 실험을 시작.
- 나) 2002년에는 전국의 매 地區와 市에서 적어도 1개의 실험구(500개)가 설치되었고, 2003년에는 전국의 1,642개 현시(縣市)의 3,500여 만명의 학생이 새로운 실험교과서를 사용.
- 다) 2004년에는 2,576개 현구(縣 區)에서 사용하여 전국의 90%를 점하게 되었다. 중국의 중학교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는 현재 모든 지역에서 사용.
- 라) 고등학교 실험교과서는 2003년에 『역사과정표준』이 발표되었고 2004년 가을학기부터 (중국의 1학기) 海南島, 廣東, 寧夏, 山東 등 4개 성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 실험이 시작되었으며 2012년에는 광서 장족 자치구 지역으로 확대됨.

## 2. 현행 중국 역사교과 과정과 역사교과서의 특징

### 1)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 중학교 교과 과정

- 가) 중국은 9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나) 중학교(초급중학교) 역사교과서는 1-2학년에서 중국사를 배우고 3학년에서 세계사를 배움
- 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8세트가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라) 『역사와 사회』 교과서는 정치와 역사, 지리가 통합된 교과서로 3세트가 발행됨
- 마) 그러나 2011년판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와 사회 과정표준』은 정치부분이 제외되고 역사와 지리 통합 교과서로 『역사와 사회』 교과서를 개편함.
- 바) 베이징과 상하이 지방 과정으로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각각 1세트씩 발행되어 사용되고 있음.

## 2) 중학교 『역사과정표준』 교과서의 특징

- 가)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한 중학교교과서는 이전의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하여 편찬된 교과서에 비해 내용이 크게 줄어들고 암기보다는 학생들의 탐구를 강조
- 나) 통사 서술을 지양하고 주제 위주로 서술을 함
- 다) 중국과 서구 위주의 서술이 두드러짐
- 라) 세계사는 제3세계보다는 서구 중심의 서술이 강한 편임
- 마) 중국사에서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입각한 중화민족이 강조됨

## 3) 중국정부의 교과과정에 대한 통제 강화

- 가) 중국정부는 국가의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을 관철하고 기초교육과정교재의 관리와 제도를 강화하며 교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부에 기초교육과정교재공작영도소(基础教育课程教材工作领导小组)를 설립.
- 나) 2010년 4월 14일에는 국가기초교육과정교재 전문가자문위원회(国家基础教育课程教材专家咨询委员会)와 국가기초교육과정교재 전문가공작위원회(国家基础教育课程教材专家工作委员会)를 설립.
- 다) 국가기초교육과정교재 전문가공작위원회는 각 교육분야 전문가들이 교육행정부문의 기초교육과정교재 관련 업무를 돕기 위해 조직됨.

## 4) 수정된 역사과정표준의 공포

- 가) 중국의 19개 학과의 과정표준이 진통 끝에 2011년 12월 28일자로 공포.
- 나) 중학교 역사과정도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义务教育历史课程标准)』과 『의무교육 역사와 사회과정표준(义务教育历史与社会课程标准)』으로 공포.

### 5) 새 과정표준의 특징

- 가) 2011년판 『역사과정표준』의 특징은 2001년 『역사과정표준』과 비교할 때 2001년 『역사과정표준』이 주제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2011년판 『역사과정표준』은 통사 형식으로 구성됨.
- 나) 이에 따라 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주제사에서 통사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 이 새 교과과정은 학생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용을 대폭 축소.
- 다) 2011년 『의무교육역사와사회과정표준』은 2001년 『의무교육역사와사회과정표준』이 1과 2의 두 개로 공포되었던 것과는 달리 하나의 과정표준으로 공포됨.

## 3.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 1) 중학교 『역사과정표준』

- 가)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교과과정의 개혁을 추구하여 미국식의 『역사과정표준』을 도입.
- 나) 중국교육부는 2001년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과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와 사회과정표준 1』,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와 사회과정표준 2』를 반포하고 이에 의거한 교과서 편찬.
- 다) 과정표준은 교학대강과는 달리 개괄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음.
- 라) 이러한 새 교과과정에 따라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1-2학년의 중국역사와 3학년의 세계역사로 구성된 역사교과서가 8세트 출판되었고, 역사와 사회 교과서가 3세트 출판됨.

### 2) 중학교 『역사과정표준』과 한국사 서술

- 가) 역사과정표준교과서의 특징
  - 『역사교학대강』 교과서에 비해 내용이 줄어들고 암기보다는 학생들의 탐구를 강조.
  - 통사 서술을 지양하고 주제 위주의 서술.
  - 내용적으로는 중국과 서구 위주의 서술을 하였고 중화민족의 시각이 강조됨.
  - 역사과정표준교과서는 이전의 역사교학대강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한국사 관련 내용이 크게 감소.

나) 중학교 『역사교과대강』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 『역사교과대강』에 의거하여 서술된 역사교과서는 중학교 『세계역사』 상권에서 한국사를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까지의 역사를 서술.
- 중학교 『중국역사』에서도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소개.
- 고등학교 『세계근대현대사』에서는 임진왜란과 이순신장군의 활약, 19세기 말의 의병전쟁과 3.1운동 등 독립운동 등을 서술. 한국전쟁의 경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모두 소개.

다) 중학교 『역사과정표준』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변화

- 2001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역사과정표준교과서는 분량이 줄어들면서 중국역사에서 한국사 관련 서술이 축소되어 일부 교과서에서는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을 서술하지 않는 교과서가 나오기 시작함.
- 더 큰 변화는 중학교 세계역사에서 한국사를 소개한 내용이 모두 사라지게 된 점. 인민교육출판사는 한국사 내용을 칼럼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분량이 크게 감소함.
- 중국의 중학교 세계역사에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한국사에 대한 서술은 삭제됨.
-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서술되었던 이웃 국가의 역사가 삭제된 것으로 양국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서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4. 『역사과정표준』 교과서에서 한국사 서술이 감소한 원인

가)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중학교 『역사과정표준』에서 한국사 관련 내용이 사라졌기 때문.

나) 2005년 10월 일부 언론에서 연변교육출판사의 『세계역사』 9학년 상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 한국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보도를 함. 그러나 그 교과서는 2003년 출판된 인민교육출판사의 『세계역사』 9학년을 번역한 것으로 이미 2003년에 한국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sup>1)</sup>

1) 2003년 6월에 출판된 인민교육출판사의 『세계역사』 9학년 상책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이미 삭제되었다.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2003, 『世界歷史』 9年給 上冊, 人民教育出版社, 26-29쪽. 중국의 중학교 실험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에 관해서는 김지훈정영순, 「중국 실험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인식」, 참조.

다) 2000년 『역사교학대강』의 항목 설정

원래 2000년 『구년의무교육전일제초급중학역사교학대강(시용수정판)』의 세계역사 부분 30쪽에는 다음과 같이 항목이 설정됨.

## 5. 아시아봉건국가

### 1. 조선 2. 일본 3. 이슬람교의 흥기와 아랍제국 4. 오스만제국<sup>2)</sup>

이 『역사교학대강』에는 조선(한국)에 대해 의무적으로 서술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 교학대강에 의거한 중학교 『세계역사』 교과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사를 소개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었다.

### 1) 2001년 『역사과정표준』의 항목 설정

가) 2001년 『전일제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실험고)』의 세계고대사 부분 22쪽에는 다음과 같이 항목이 설정됨.

나) 中古 아시아 유럽문명

## 내용표준

- 타이카개신의 기본내용을 이해하고 마호메트의 주요 활동을 서술하라<sup>3)</sup>
- 2000년 출판된 『중학교 역사교학대강』에는 『세계역사』 ‘아시아봉건국가’에서 조선, 일본, 이슬람교의 발흥과 아랍제국, 오스만제국의 역사에 대해 서술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2001년 출판된 『중학교 역사과정표준』에서는 ‘中古 아시아-유럽문명’에서 일본의 타이카개신과 마호메트의 활동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다. 『중학교 역사과정표준』을 설명한 『역사과정표준해독』에서도 아시아문명에 관해서 『역사과정표준』이 일본과 아랍이라는 비교적 중요한 국가와 지역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일본의 타이카개신이 일본문명이 형성되는 표지이고, 아랍지역이 현재 세계의 다극화 정치체제 가운데 중요한 구성부분이므로 아랍제국과 이슬람교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sup>4)</sup>

2)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九年義務教育全日制初級中學歷史教學大綱(試用修訂版)』,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0, 30쪽.

3)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全日制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實驗稿)』,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 22쪽.

4) 教育部基礎教育司組織, 『全日制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解讀(實驗稿)』,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2, 103쪽.

- 결국 중학교 실험교과서 『세계역사』 9학년 상책에서 한국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은 『중학교 역사과정표준』에서 조선 항목이 제외되었기 때문.
- 이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는 인민교육출판사를 비롯하여 화동사범대학출판사, 악록서사, 사천교육출판사, 북경사범대학출판사, 중국지도출판사, 하북인민출판사, 중화서국 등 모든 중학교 역사실험교과서 9학년 상책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사라짐.<sup>5)</sup>

## 2) 2011년 『역사과정표준』에서 한국사 서술

- 가) 2001년 『역사과정표준』에서 한국사가 삭제된 이후 2011년 『역사과정표준』에도 한국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2011년 중학교 『역사과정표준』은 세계사에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음.
- 나) 세계 고대사 부분에서 “서기 7세기 일본은 중국에서 배워서 일련의 개혁을 하였고 사회 정책적 발전을 이루었다. 7세기 초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립하였고, 선교와 정복 과정에서 아라비아반도를 통일하였으며, 정교함일의 정권을 건립하였다. 8세기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에 걸친 아랍제국으로 발전하였다. 아랍-이슬람문화는 스스로의 특색을 갖추고 있으며, 고전문호를 보존하고 전파하여, 동서방 문화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sup>6)</sup>라고 서술하여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없음.
- 다) 따라서 앞으로 수정되어 발행될 중국의 중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 전통시대 한국사 관련 내용은 수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1세기 들어 한중관계는 여러 면에서 크게 발전했지만 중국 교과서에서 한국의 역사 소개는 후퇴함.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가 등장하면서부터 중국의 중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누락된 지 10여년이 흐름.
- 라) 한중간의 밀접한 관계와 교류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으나 2012년에 반포된 중학교 『역사과정표준』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함. 따라서 중국의 중학교 세계사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이 수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5) 인민교육출판사의 중학교 실험역사교과서는 2001년 6월에 『중국역사』 7학년 상권이 출판되어 2001년 가을 학기(1학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매 학기마다 1권씩 발행되었고 2003년 8월에 9학년용 『세계역사』 상권이 출판된 것이다. 그리고 이 교과서가 2005년 번역되어 가을학기부터 연변지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6)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2011年版)』,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2, 25쪽.

〈표 1〉 중학교 『역사교학대강』과 『역사과정표준』의 한국 관련 내용과 세계역사 교과서 서술의 변화

	2000년 역사교학대강 <sup>7)</sup>	2001년 역사과정표준 <sup>8)</sup>	2011년 역사과정표준 <sup>9)</sup>
관련 내용	5. 아시아봉건국가 1. 조선 2. 일본 3. 이슬람교의 흥기와 아랍제국 4. 오스만제국	(3) 中古 아시아 유럽문명 내용표준 (1) 타이카개신의 기본내용을 이해하고 마호메트의 주요 활동을 서술하라	서기 7세기 일본은 중국에서 배워서 일련의 개혁을 하였고 사회정책적 발전을 이루었다. 7세기 초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립하였고, 선교와 정복과정에서 아라비아반도를 통일하였으며, 정교합일의 정권을 건립하였다.

## 5.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한 인민교육출판사 중학교 『세계역사』 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 1) 제10과 동아시아의 봉건국가

조선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중국의 이웃이다. 고대의 일본은 “扶桑國”이라고 불렀고 역시 일중국과 “한 줄기의 띠와 같은 좁은 물을 사이에 둔(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이다. 옛날부터 중국과 조선,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와 빈번한 교류가 있었다. 너는 고대 조선과 일본의 상황을 아느냐? 고대 中朝, 中日간의 문화상의 중요한 교류를 이해하고 있느냐?……

### 2) 신라의 통일과 조선왕조의 건립

조선인민은 옛날부터 조선반도에 거주하였다. 기원전후 조선반도의 북부는 高句麗 노예제 국가가 통치하였다. 이후 반도의 서남과 동남부에 또 백제와 신라라는 두 개의 노예제 국가가 출현하였다. 이후 몇 백년 동안 반도에는 삼국정립의 국면이었다. 봉건관계는 전후로 3개 국가에서 발전하였다. 676년 신라가 조선반도의 대부분 지역을 통일하였다.

7)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九年義務教育全日制初級中學歷史教學大綱(試用修訂版)』,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0, 30쪽.

8)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全日制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實驗稿)』,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 22쪽.

9)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2011年版)』,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2, 25쪽.

통일 이후의 신라는 경제문화에서 더욱 발전하였다. 논농사 면적이 확대되고 농작물의 종류도 더욱 많아졌다. 수공업에서는 금은 세공, 비단 방직 등이 모두 유명하다. 상업과 무역도 흥성하였다. 신라는 중국, 일본과의 무역이 매우 활발하였다.

통일신라시기 전통문화를 발양하고 외래문화를 흡수하여 문화가 비교적 크게 발전하였다. 중국의 儒家思想과 학설이 신라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7세기 귀족자제를 배양하기 위하여 신라는 國學을 설립하고 유가 경전을 가르쳤다. 8세기 신라는 당왕조의 제도를 모방하여 과거제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통일신라시기 불교가 크게 발전하였다. 이 기간에 일부 학식이 있는 승려가 출현하였는데 그 가운데 혜초가 유명하다. 그는 어렸을 때 당왕조에 유학하였다. 후에 그는 중국에서 남해를 향해 하여 인도에 도착하여 불교 사적을 두루 찾았으며 여정에서 견문한 것을 저술하였다. 이 시기 신라의 불교예술도 발전하였다. 수도 경주에 석굴암이 있고, 그 안의 석벽에 불상이 부조되어 있으며 또한 높이가 3미터가 넘는 석가모니의 상이 있다.

10세기에 왕건이 高麗王朝를 건립하였다. 14세기 말 고려의 대장인 이성계가 朝鮮王朝<sup>①</sup>를 건립하고 漢城을 도읍지로 건설하였으며 국호를 조선으로 개칭하였다.

조선왕조시기 문화가 더욱 발전하였다. 15세기 조선은 문자면에서 중대한 성취를 이루었다. 일부 학자들이 조선어를 연구하면서 중국어 음운학의 성과를 결합시켜 28개의 자모를 만들었다. 이 문자는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조선에서 수력을 이용하여 시간을 재는 기구를 발명하였고 측우기도 만들었다.

① 20세기 초 일본이 조선의 併呑하여 조선왕조의 통치가 종결되었다.<sup>10)</sup>

## 6.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한 현행 인민교육출판사 중학교 『세계역사』 교과서

“조선반도에는 일찍부터 인류가 거주했고 기원 전후 조선반도의 북부를 통치하는 고구려 노예 제국과 후에 서남과 동남부에 계속 백제와 신라라는 두 개의 노예제 국가가 출현하였다. 676년 신라는 조선반도의 대부분 지역을 통치하였다. 10세기 왕건이 고려왕조를 건립하였다. 14세기 말, 고려의 대장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립하고 漢城에 도읍을 정하였으며 국호를 조선으로 고쳤다.”

10)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校科書 世界歷史 第1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1판, 2004년 4월 3쇄

## 7. 중국에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

### 1) 상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논쟁

2004년부터 발행된 중국 상해지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문명사를 위주로 역사교과서를 서술하면서 종래의 혁명사관이 약화되는 형태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중국내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킴.<sup>11)</sup> 특히 상해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미국 뉴욕타임즈 등 외국 언론에서 모택동이 퇴출되고 빌게이츠가 진입했다는 등의 과장 보도로 촉발되어 중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켜 중국의 역사교육정책을 변화시킴.

### 2) 단일교과서로의 회귀?

상해 지역의 고등학교 교과서가 문제가 된 이후 중국 내의 공산당 내의 보수세력들은 역사와 국어, 정치도덕 교과서를 단일 교과서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됨. 단일교과서로 갈 것인가 현재 대로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발행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중국 내에서 격렬한 대립.

이러한 논란은 학문적인 논란이라기 보다는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통제정책과 개혁개방 시대의 교과서 정책의 충돌로 야기된 것으로 보임.

---

11) 「상하이 새 표준교과서 '마오 퇴출, 게이츠 진입」, 『연합뉴스』, 2006.9.1.

## 중국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2013.050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2001년 『교학대강』을 대신하는 『과정표준』을 반포하고 『의무교육과정 표준 실험교과서』를 출판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사용하였다. 2007년부터 중국 교육부는 『과정표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12년 1월에 18개 과목의 2011년판 『의무교육과정 신과정표준』을 반포하였다. 이 신과정표준에 따라 15개 과목의 중학교 교과서가 2012년 가을학기부터 출판되어 사용되고 있다. 새로이 출판된 교과서는 기존의 실험교과서라는 명칭이 사라졌다.

이 가운데 『의무교육 역사와 사회 과정표준』(2011년판)<sup>12)</sup>에 의거하여 인민교육출판사와 상해교육출판사, 지질출판사의 『역사와 사회』 교과서 3종이 검정을 통과하였다. 이 가운데 인민교육출판사의 『의무교육교과서 역사와 사회』는 2012년에 가을에 7학년 상책이 출판되었고 2013년 봄에 7학년 하책이 출판되었다. 이후 학기 순으로 2015년 봄학기까지 6권의 『역사와 사회』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역사와 사회』 7학년 상책(上册)은 27쪽에서 다음과 같이 동아시아를 서술하고 있다.

### 제2단원 인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세계

이 교과서는 제1과 대륙과 대양 27쪽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면서 아시아를 북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한국을 동아시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교과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 대만 등을 동아시아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과서와는 다르게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에 편입시키고 있다.<sup>13)</sup>

이 교과서의 32쪽 제2과 자연환경에서는 아시아의 지형을 소개하면서 한반도는 조선반도, 서해는 황해,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으며 동중국해를 동해로 표기하고 있다.<sup>14)</sup>

이 교과서는 49쪽에서 제3과 세계대가정에서 남북한의 명칭을 한국과 조선으로 표기하고 있다.<sup>15)</sup>

제3과 51쪽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피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한국, 브라질, 중국, 나

12) 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 『義務教育歷史與社會課程標準』(2011年版),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2年 1月.

13)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與社會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義務教育教科書 歷史與社會 七年級 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2年 6月 1版 1刷, 27쪽.

14)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與社會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義務教育教科書 歷史與社會 七年級 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2年 6月 1版 1刷, 32쪽.

15)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與社會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義務教育教科書 歷史與社會 七年級 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2年 6月 1版 1刷, 49쪽.

이지리아, 인도 등 개발도상국가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국제통계연감 2010』에 의거하여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21,530달러로 소개하고 있다.<sup>16)</sup>

#### 제4단원 문명의 중심 - 도시

이 단원에서 미국 정치의 심장 워싱턴, 문화예술의 도시 파리, IT신도시로 인도의 방갈로르(Bangalore), 자동차도시 울산, 도시계획의 모범 브라질리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4과의 자동차도시 울산에서는 3쪽에 걸쳐서 울산의 자동차 공업을 소개하고 있다.<sup>17)</sup>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생산능력이 가장 큰 자동차제조공장이 유럽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의 울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반세기가 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울산은 미국의 디트로이트, 독일의 슈트가르트와 일본의 도요타에 비견하는 자동차도시가 되었다.”

이 단원에서는 한반도 동남부의 울산의 위치와 울산의 주요 공장을 소개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한국의 동남부에 위치한 울산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와 한국 최대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있으며 최대의 자동차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1962년 울산이 첫 번째 특별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반세기만에 한국 최대의 공업도시로 성장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공장이 울산시에 있으며 연 16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것과 공장의 설비와 울산항을 소개하고 있으며 울산대학 등과 자동차 회사가 산학협력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각종 오염을 줄인 녹색 자동차 도시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sup>18)</sup>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與社會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義務教育教科書 歷史與社會 七年級 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2年 10月 1版 2012年 12月 1刷

제5단원 중화 각민족 인민의 가정 제1과 국토와 인민에서는 중국의 강역 지도에서 남북한의 수도를 한국의 서울과 조선의 평양으로 소개하고 있다.<sup>19)</sup> 중국대륙의 해안선이 중조 변경의 압록

16)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與社會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義務教育教科書 歷史與社會 七年級 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2年 6月 1版 1刷, 51쪽.

17)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與社會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義務教育教科書 歷史與社會 七年級 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2年 6月 1版 1刷, 104-106쪽.

18)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與社會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義務教育教科書 歷史與社會 七年級 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2年 6月 1版 1刷, 104-106쪽.

19)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與社會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義務教育教科書 歷史與社會 七年級 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2年 10月 1版 2012年 12月 1刷, 3쪽.

강 하구에서 중월 변경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sup>20)</sup>

제1과 국토와 인민의 대민족의 대가정 부분에서는 지도에서 조선족이 주로 길림성 등 동북 지역에 살고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sup>21)</sup>

제5단원의 마지막 쪽의 스스로 평가 부분에서는 중국의 한족 이외의 민족을 표현한 4장의 우표 가운데 조선족이 장구를 치고 있는 우표가 들어있다. 그 아래에서는 중국의 어느 민족인지 풍습과 문화 전통 등을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있다.<sup>22)</sup>

### ▶ 2014년 5월 중국 중학교 역사교과서 중국역사 검정 통과

중국에서는 역사교과서 등을 단일교과서로 하지는 주장과 현행대로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출판 하지는 의견이 몇 년 동안 대립하고 있었다. 결국 2014년 현행 방식대로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이 진행되었다.

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중국역사 부분의 교과서는 수정집필이 완료되어 기존의 인민교육출판사, 북경사범대학출판사, 화동사범대학출판사, 중국지도출판사, 사천교육출판사, 약록서사, 하북인민출판사, 중화서국 등 8개 출판사의 역사교과서가 2014년 2월에 검정을 신청하였고 5월에 검정을 통과하였다. 중학교 세계역사 부분은 아직 집필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올 연말 경에 검정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 ▶ 중국교육부 종합심사 절차를 추가

중국의 중학교 역사와 어문, 정치 교과서는 2014년 가을학기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검정 절차에 의하면 검정에 통과된 교과서를 신학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교육부는 2014년 교과서 검정과정에 종합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교과서의 정치적인 부분을 심사하기로 하였다.

### ▶ 2014년 가을학기에 새 역사교과서가 사용되기 어려움

중국교육부에서 8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고 7월 말까지 내용 수정을 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종합심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14년 가을학기에 새 역사교과서가 사용되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

20)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與社會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義務教育教科書 歷史與社會 七年級 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2年 10月 1版 2012年 12月 1刷, 4쪽.

21)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與社會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義務教育教科書 歷史與社會 七年級 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2年 10月 1版 2012年 12月 1刷, 9쪽.

22)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與社會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義務教育教科書 歷史與社會 七年級 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2年 10月 1版 2012年 12月 1刷, 34쪽.

### ▶ 중국 중학교 역사교과서 개정의 특징

- 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량을 감소시켰다.
- ② 교과서의 내용 서술에서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교육을 강화하였다.
- ③ 영토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특히 조어도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었다.
- ④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の内容을 추가하였다.

### ▶ 중학교 세계역사 부분의 검정

중학교 세계역사 부분 교과서는 올 연말 정도에 검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 ▶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사 서술문제

2011년 12월에 반포된 중학교 『역사과정표준』의 세계역사 부문에서 한국사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다. 중국의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낮추고 교과서 내용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한국사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못하였다.

### ▶ 한중역사교과서 회의 교류를 통한 한국사 서술 개선

중국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와 사회』 9학년 하책에서 한국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이 교과서의 집필자인 양닝이교수는 『역사와 사회과정표준』에는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지만 『역사와 사회』를 집필하면서 “문화 소프트 파워(軟實力: Soft Power)를 투시하다”라는 종합탐구과를 두었고, “한강의 기적”에서 본 문화의 역량을 주제로 하여 한국이 매우 짧은 20여 년의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땅의 하나에서 일약 새로운 형식의 산업국으로 성장한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여주었고, 아울러 교육·전통문화의 선양·민족응집력 등의 면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2012년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한 한중교과서 회의 이후에 방문한 제주도의 생각하는 정원과 성균관 관련 내용이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와 사회』 9학년 하책에 수록되었다.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와 사회』 9학년 하책은 2015년 봄학기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 ▶ 고등학교 역사교과과정의 개정 일정

2014년 5월 고등학교 신교과과정을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중학교 신교과과정이 2014년 가을에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고등학교 신교과과정도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  
한국사 연구와 교육, 그리고 동아시아사**

김정인 (춘천교대)



#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

## 한국사 연구와 교육, 그리고 동아시아사

김정인 (춘천교대)

### 1. 머리말

최근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시대적 한계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과 역사 서술이다.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과 서술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을 한민족을 주어로 한국사라는 일국사적인 맥락에서만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있다. 동아시아의 지각 변동을 불러 온 7세기 동아시아 전쟁사를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맥락으로 해석하는 경우나, 17세기 동아시아 전쟁사를 왜란과 호란 등으로 부르면서 외세의 침입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근대사 연구와 교육에서도 제국주의 열강 간 세력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일본이 외교와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줄타기를 거듭하며 한국을 강점한 사태를 일본의 집요한 침략 야욕의 결과로만 해석하고 교육하는 반일 프레임은 여전히 위력적이다. 한국현대사 연구와 교육 역시 독재, 민주화, 경제 성장, 통일이라는 민족사적·일국사적 차원의 화두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민족 정체성을 가진 국민 형성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과 서술이 극복 대상이 된 것은 그것이 세계화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라는 현실을 담보하며 앞으로 다가올 삶을 내다볼 수 있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찰에서 민족과 국민이 아닌 보편적 집합 주체인 시민에 주목하여 한국사, 특히 한국근현대사를 재구성하고 한국사 교육을 시민교육으로 개조하려는 흐름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주목하면서 이를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시민화'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시민화는 민족주의적인 자국사의 경계를 넘어 시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계사보편사로서의 한국사를 지향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세계화·다문화 시대를 맞아 민족과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애국(애족)주의를 넘어 평화와 인권에 기반한 세계시민주의를 추구하는 호

름이 차츰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상호배타적인 대립항으로 설정하고 전자를 극복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흐름과 함께 양자 간의 연대를 내세우는 흐름도 존재한다. 아직은 민족주의적 속성이 강한 한국사 연구와 교육이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역시 이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변화를 시민화로 개념화한 것이다.

그런데, 시민적 역사학과 역사교육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사의 세계사화, 세계사로서의 한국사를 지향한다고 할 때, 아직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현실에서 그와 관련한 담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동아시아사를 통해 한국사의 주체와 범주를 확장하면서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과 서술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모색은 담론적 논의와 함께 역사 재구성 작업을 시도하는 단계까지 진전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역사교육 현장에서 ‘동아시아사’가 선택교과목으로 자리잡아 한국사는 물론 중국사, 일본사, 베트남사 등을 포괄한 동아시아의 역사가 교수되고 있다. 민족주의적 역사인식과 서술을 뛰어넘어 시민적 역사학과 역사교육으로 가는 경로에 동아시아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시민화의 경로로서 동아시아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와 교육 영역을 굳이 함께 분석하는 것은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민족주의적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동아시아 담론이 활성화되고 동아시아 공동 역사서가 만들어지고 ‘동아시아사’가 역사 교과목으로 선택되는 일련의 흐름이 거의 동시다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사처럼 연구와 교육이 서로 견인차 역할을 한 전례는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 2. 동아시아사를 통한 한국사 연구의 시민화

### 1) 시민적 역사학의 제기

한국사 연구의 민족 중심의 역사 체계, 소위 국사라는 틀에 제일 먼저 반기를 든 이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의 서양사학자들이었다. 그들은 기존의 민족주의 사학이 민족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전근대 시기부터 민족사의 허상을 그려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민족주의 사학의 토대가 된 민족주의는 지금까지 동아시아 삼국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국내적으로는 독재 권력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활용되는 등 악용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21세기를 맞아 민족주의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강요한 국사의 서술 체계를 해체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봉은 국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민족이라는 초역사적인 실체의 기억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 바로 국사다. 한국 역사학에서 국사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한국사만을 특별하게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쓰인다. 국사란 역사로써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써 역사를 구성하는 한국 역사학의 특수성을 대변하는 개념이다.<sup>1)</sup>

그가 볼 때 한국 역사학이 민족 패러다임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된 것은 식민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미완의 근대’로 설정하고 민족 문제의 해결을 근대의 완성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민족의, 민족에 의한, 그리고 민족을 위한 국사가 탄생되어 오늘날까지 강고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국사가 청산과 폐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국사 해체론자들의 현실 인식이다. 우리의 생활세계가 더 이상 민족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된 21세기에서 우리 기억의 장을 민족으로 축소하는 국사 패러다임은 시대착오라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학에 뿌리 내린 국사 패러다임은 한국 사료만으로 한국사를 구성하는 것을 당연시할 만큼 강고하다. 가령, 제주도의 경우,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가며 역사를 형성해 온 섬이라는 공간이다. 그런데, 제주도‘사는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한국 사료들에 기초하여 구성되어 있다. 중국, 일본, 혹은 동남아시아 각국의 역사자료에 등장하는 제주도에 관한 기록은 외면한 채 한국사의 기존 틀에 맞춰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생산된 사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 연구의 풍토에 대해 국사 해체론자들은 이제껏 역사학자들이 민족의 자장과 범주를 넘어선 역사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한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의식을 결여했던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 결과 국사 패러다임에 갇힌 역사학자들이 한·중·일 삼국 간의 역사 분쟁이라는 현실 문제 앞에서 이를 한국사를 성찰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학계는 이러한 민족주의 폐기와 국사 해체의 주장에 쉽게 동조하지 못했다. 그것을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탈민족주의 담론으로서 일시적 유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일방적 거부감과 비판을 딛고 한국사의 연구 풍토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역사 해석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서서히 일어났다.

가장 먼저 한국사 연구 ‘밖’의 국사 해체론자들의 비판에 화답한 것은 한국근대사 연구자들이었다. 한국 근대사는 경제사학계와 수탈론 대 식민지근대화론이라는 전선을 형성하며 비교적 활발한 논쟁을 전개한 바 있었다. 역설적이지만, 그 논쟁이 한국 근대사학계를 스스로 돌아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근대사학계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 연구에서의 성찰적 역사 해석 역시 민족주의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에서 출발했다.

1) 김기봉, 『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푸른역사, 2006, 178쪽

식민 경험의 산물이겠지만, 한국 근대사는 유달리 수탈=일본의 식민 지배=악, 저항=독립운동=선이라는 강고한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식민 정책사와 독립운동이 한국 근대사 연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 이분법적 구도 자체가 확고부동한 민족주의 입장에서 나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그 민족주의적 입론은 폐쇄적인 연구 방식을 낳았다. 식민 정책사는 식민 모국인 일본 제국주의 정부의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한 해명 없이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사료만을 분석하여 재구성되었다. 독립운동 역시 타국인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독립운동, 심지어 무장독립운동까지 가능했는지 전후 맥락에 대한 분석 없이 오직 주인공이 한국인이면 독립운동으로 간주하는 역사상이 구성되었다.

한국 근대사 전공자인 윤해동은 민족주의 역사 인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 식민지는 일국적이고 자족적인 정치·경제·사회적 단위가 아니라 제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제국과 식민지는 상호 작용하는 하나의 연관된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관의 고리를 끊고 식민지 조선 안의 역사만으로 식민정책사를 연구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둘째, 오늘날 사회 운동이 근대화의 산물이자 식민 지배기 사회 분화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동 발생의 근대적 측면을 오로지 민족주의로만 귀속시켜 독립운동=민족운동의 일원만으로 파악하는 편향적 역사인식을 비판했다. 셋째, 이러한 수탈과 저항의 이분법적 민족주의 역사 인식에 의해 말소되어버린 식민 지배하의 일상생활이 작동하는 역사의 광범한 틈새를 회색지대라 명명했다. 이제는 그 회색지대에 주목하는 역사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sup>

이처럼, 역사학계 내에서 한국 근대사 연구자가 민족주의와 국사의 틀로부터의 ‘해방’을 선도한 것은 역사학에서의 근대가 민족주의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시기이고, 근대사 연구가 가장 민족주의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찰적 반작용이기도 하다. 윤해동의 문제제기는 한국사학계에도 국사 해체론자가 등장했음과 이제 탈민족주의 역사학으로의 전환이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사실의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역사상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했다.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하는 소장학자들은 이와 같은 이분법적 도식에 입각한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해체하려는 고민을 적극 수용하면서 1980년대의 계급주의적 민중사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민중사’를 제안했다. 이들은 1980년대 민중사학이 “역사를 과학적 변혁운동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 설명하는 사학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역사와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혁하는 사학”을 추구했으나, ‘과학적·변혁적 민중론’이라는 규범성·도식성에 갇혀 민중의 실상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한 채 변혁을 지향하는 지식인이 스스로 염원하고 있던 민중상만을 그려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민중사학이 실현하고자 했으나 결국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2) 윤해동, 『식민지 근대의 패러독스』, 휴머니스트, 2007, 52쪽

‘아래로부터의 역사’라는 기본 전제 위에서 근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견지하는 새로운 역사학의 관점과 방법론을 수용하여 민중을 변혁주체가 아닌 피지배층, 하층민,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을 지시하는 개념, 즉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모순을 느끼고 그것에 저항하는 존재로 정의했다. 나아가 ‘새로운 민중사’는 그러한 민중의 역사를 민중의 일상성, 민중의 다성성(多聲性)과 중층적 구성, 자율과 종속의 이중적 맞물림을 고려하며 재구성할 것을 천명했다. 국민으로 수렴되지 않는 민중과 근대를 향한 발전의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민중의 삶에 주목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학계에서 제기된 탈민족주의적인 역사 인식에 일상사, 문화사, 생활사 등 1990년대 이후 부각된 신문화사를 접목시켜 민중의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민족이 아니라 민중을 주체로 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것을 천명한 ‘새로운 민중사’에서 시민적 역사학으로서의 고민과 모색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다.

한편, 역사학의 민족주의적 편향성이 가져온 피해 중 하나는 민주주의를 역사화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사 연구는 반봉건, 근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등의 잣대를 준거로 역사상을 구성해왔다. 이 중 민족주의가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많은 사건과 인물의 행적이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해석되어왔다. 민주주의가 홀대받은 것은 그것이 국권 상실과 함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졌고, 해방 이후에야 미국에 의해 이식된 제도라는 선입견 때문이었다. 즉 민족주의는 한국 근대를 움직인 가장 강력한 내적 동력으로 평가받은 반면에, 민주주의는 외적 계기에 의해 이식된 선진적인 제도라는 탈맥락적이고 몰역사적인 선입견으로 인해 이제껏 살아 숨쉬는 역사적 실체로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민주주의가 오늘의 한국적 현실을 역동적으로 이끌어온 이념체계라는 데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주의의 역사성 규명은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성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이식된 제도라는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가치신념과 행동 간을 매개하는 그 물망, 즉 문화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하는 연구가 최근 시도되고 있다.<sup>3)</sup>

주목할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화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에 앞서, 역사학의 민주화, 즉 역사학계에 권력 역사학에서 시민 역사학으로 나아가 진보성을 회복하는 문화 혁명을 요구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이다. 임지현은 이제껏 역사학은 권력의 역사학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역사학은 공공의 역사학으로서 시민의 역사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역사학이 시민사회에 자신의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편에서 역사로서 국민을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권력의 주체인 민중이 납득할 수 있는 역사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sup> 그가 말하는 시민의 역사학이란 대중의 생활세계에 뿌리내리고 있는 참여민주주의, 지역자치운동, 페미니즘운동, 녹색운동,

3) 김정인, 「근대 한국 민주주의 문화의 전통 수립과 특질」, 『역사와현실』 87, 2013 ; 김정인, 「민주주의의 눈으로 본 역사학」, 『역사교육』 126, 2013

4) 임지현, 「권력의 역사학에서 시민의 역사학으로」, 『역사비평』 46, 1999, 62쪽

평화운동 등 정치권력과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다양한 흐름의 시민사회운동과 접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는 역사학을 의미한다.

이처럼 역사 주체로서의 민중의 재해석, 민주주의의 역사화 등은 민족과 민족주의의 틀을 벗어나 시민과 민주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시민 역사학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민을 넘어서 시민은 곧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 세계 보편 가치의 실현 주체로서 그야말로 시민권을 획득해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역사학은 한민족과 한반도를 넘어서는 확장된 역사로서 동아시아 시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동아시아사에 주목했다. 일찍이 임지현, 김기봉과 같은 국사 해체론자들도 국민 국가의 폐쇄성을 넘어 그 대안으로 평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역사상의 수립을 제안한 바 있다. 한·중·일 3국 간의 역사 분쟁이 본격화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 역시 국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동아시아 역사상 수립이 절실하다는 것이다.<sup>5)</sup>

민족 혹은 국민적 역사로서의 일국사의 외연을 넓혀 시민적 역사학으로서의 동아시아사를 모색하는 새로운 담론 공간에는 동양사학자들도 가담했다. 유용태는 일국사로는 포착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사가 갖는 의미에 주목했다.<sup>6)</sup> 지구사 혹은 보편사적 맥락에서 동아시아/동아시아사를 위치지우려는 동양사학자도 있었다. 백영서는 서구에 대한 동아시아라는 주변의 눈과 동아시아 내부 위계 질서 속의 주변이라는 이중적 주변의 시각으로 동아시아를 재해석할 것을 제안했다.<sup>7)</sup> 임성모는 ‘주변’을 공간으로서의 변경, 경계, 지방을 뜻하는 동시에 주체로서 마이너리티, 디아스포라, 민중 등 기존의 주류 역사학에서 은폐되거나 소외당해온 공간과 주체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확장시켜 ‘주변’이 갖는 다층성과 다원성에 주목하는 프론티어 히스토리로서의 동아시아 역사상을 제안했다. 반면 강진아는 변경에 역사서술의 주권을 부여하려는 프론티어 히스토리로서의 동아시아사에 대해 회의를 표명하며 동아시아사를 글로벌 히스토리의 일부라는 시각에서 재구성할 것을 주장했다.<sup>8)</sup> 이렇듯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동아시아사가 자국가자민족 중심의 일국사를 탈피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혹은 세계사·지구사의 일부로서 주목받고 있다.

동아시아사가 시민적 역사학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는 학자만이 아니라 시민과 시민사회가 실천 주체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민족주의·국가주의적 역사관 간의 충돌로 동아시아 내에서 역사 전쟁이 본격화되는 2000년대에 들어 한·일, 한·중·일 간에는 시민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역사 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통신사』(2005), 『미래를 여는 역사』(2005), 『여성의

5) 신호철, 「한국사학계의 당면과제와 향후 전망」, 『역사학보』 199, 2008, 8쪽

6) 유용태, 『환호 속의 경중 :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 휴머니스트, 2006, 481-482쪽

7)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 2000, 30-37쪽

8) 임성모, 「주변의 시선으로 본 동아시아사」 『역사비평』 79, 2007 ; 강진아,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현대 동아시아 경제사」, 『역사비평』 79, 2007 참조

눈으로 본 한일근현대사』(2005), 『미주보는 한일사』(2006), 『한일교류의 역사』(2007),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2012), 『한국과 일본 그 사이의 역사』(2012) 등의 공동 역사는 그러한 동아시아 시민 역사 대화의 산물이다. 정부간 역사 대화로는 엄두도 못내는 풍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도 시민 역사 대화를 통해 동아시아 시민 혹은 민중을 주체로 한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상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지금 역사학계에는 탈민족주의 역사학 논의로부터 ‘새로운 민중사’, 민주주의 역사학, 동아시아사 모색 등에 이르기까지 민족주의 역사 인식을 극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민적 역사학을 모색하고자 하는 다양한 경로들이 등장하고 있다. 동아시아사 역시 시민적 역사학의 길을 열어가는 주역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2) 한국사의 동아시아사화 모색

동아시아사는 역사학이 자국가·자민족 중심의 역사상을 극복하고 시민적 역사학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대안 역사학의 일환으로 주목받았다. 그것은 동아시아사가 한국사의 ‘시민화’를 이끄는 경로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자국가·자민족 차원에서 역사를 해석하던 습속에서 벗어나 한국사를 동아시아사 차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한국사의 동아시아사화를 모색하는데 있어 선구적인 담론을 제시한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백영서의 동아시아사 담론을 들 수 있다. 그는 동아시아사를 자아확충의 동아시아사=한국사의 확대로서의 동아시아사와 자아충실(자아성찰)의 동아시아사=국사의 틀을 넘어서는 동아시아사로 나눈다.<sup>9)</sup> 그리고 전자에 대해서는 비판으로 일갈한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역사인식의 발로로 자기를 상대화하는 역사서술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지향하는 동아시아사는 소통적 보편성을 지향하는 동아시아사다. 그래서 종군위안부 문제나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례를 ‘제국주의, 국가폭력, 전쟁과 결합된 성폭력’이나 ‘국가권력에 의한 집단적 학살행위’와 같은 범주로 추상화하는 보편적 독해에 관심을 보인다.<sup>10)</sup> 한국사가 동아시아사라는 경로를 거쳐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 역사학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 담론과 방법론에 주목한 경우들도 있다. 박원호는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의 재구성은 일국사의 집합 형태로 이루어진 동아시아사를 한단계 격상시키는 작업이라 평가했다. 나아가 국가의 경계가 더욱 낮아질 장래에 폐쇄적인 지역사를 벗어나 각국의 역사를 횡관(橫貫)하는 초국가사로서의 한국사, 즉 보편사로서의 한국사를 지향하는데 있어 동아시아사로서

9) 백영서, 「자국사와 지역사의 소통 : 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성찰」, 『역사학보』 196, 2007 참조

10) 백영서, 앞의 글, 121-122쪽

의 한국사가 초석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sup>11)</sup>

윤해동은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를 방법론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제국, 근대국가, 지역이라는 키워드로 한국근대사를 재구성한 성과를 내놓았다.

한국의 근대는 동아시아의 제국질서 속에서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일본제국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공식비공식제국을 포함하는 일본 제국 내의 트랜스내셔널한 상호관련은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근대 한국은 동아시아 제국 질서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혹은 그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던 것이다. 요컨대 한국사는 제국사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와 길항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사는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라는 면모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sup>12)</sup>

이러한 분석과 함께 그는 동아시아는 현재적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자유로이 신축하는 공간(장소)이고, 동아시아사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심장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기봉은 동아시아사가 외부와 내부, 글로벌과 로컬의 접면지대에 위치한 지역세계의 역사로서, 전지구적으로 역사를 사유하면서 지역적으로 역사를 만드는 글로벌 히스토리의 차원을 열어 나갈 것이며 한국사가 민족주의적 속성을 넘어서 문명교류사적 관점에서 21세기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가리켜 주는 나침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로서의 한국사’,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라는 과거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sup>13)</sup>

이상에서 살펴 본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 담론과 방법론은 서로 초점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사라는 경로를 거친 한국사의 시민화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란 한국사를 동아시아사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한국사를 동아시아사적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한국사의 시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두 경우 모두를 한국사의 동아시아사화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한국사의 동아시아사화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한국사의 동아시아사로의 확장과 한국사의 동아시아사적 맥락화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사의 동아시아사로의 확장이란 한반도에 간혀 있던 역사 경험의 공간을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에서 일어난 일국사적 사건에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을 끌어 들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해방 후 학생운동을 중국의 문화대혁명기 홍위병, 혹은 텐안먼 사건이나 일본의 전공투 등의 역사 경험과 견주어 살펴보면 서로가 역사적 거울 역할을 하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일국사적 사건이 한

11) 박원호,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 구성을 위한 재론」, 『한국사학보』 34, 2009, 257쪽

12) 윤해동, 앞의 글, 58쪽

13) 김기봉, 앞의 글, 25쪽

국사적 맥락을 넘어 동아시아 타국의 역사 경험과 상호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가 쌓이면서 한국사의 시민화 가능성은 높아져 갈 것이다.

한국사의 동아시아사적 맥락화란 특정 사건이나 현상이 한국사적 맥락의 이해보다는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이해할 때 좀 더 역사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역사 인식에서 출발한다. 가령, 한일 간의 영토 분쟁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독도 문제는 사실상 일본의 침략사와 관련된 동아시아적 차원의 영토 분쟁의 일환이며 그 해결 과정은 중국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 운명과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사의 동아시아사적 맥락화란 한국적·한민족적 역사 경험이 과거의 일국적 역사 경험에서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역사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안목에서 동아시아적인 연쇄 고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의 경우, 동아시아적인 역사 경험 속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역사적 진실에 다가가기 보다는 ‘의도하지 않는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사의 동아시아사화의 방법론으로서는 한국사의 동아시아사로의 확장보다는 맥락화에 주목한 경우가 아직은 더 많다. 김기봉은 21세기 한국사의 재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한국사의 동아시아사적 맥락화에 주목한다. 한국사의 중대 전환점이 되었던 나당전쟁, 임진왜란,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구조적 원인은 모두 동아시아사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 통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sup>14)</sup>

이처럼, 한국사의 동아시아사로의 확장과 맥락화에 기반한 한국사의 동아시아사화에 대한 활발한 모색과 그에 따른 한국사상(韓國史像)의 재구성은 한국사의 시민화를 지향하는 성찰적 연구 풍토가 단지 제안에 그치지 않고 한국사학계에 뿌리를 내리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동아시아사를 통한 한국사 교육의 시민화

#### 1) 시민적 역사 교육: ‘역사’·‘동아시아사’의 탄생

한국사 연구가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때, 한국사 교육을 골간으로 하고 있는 역사교육 역시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역사학이 학문의 특성상 개별 혹은 집단 지성의 차원에서 관점과 방법론에 있어 편차를 보이며 변화를 추구했다면, 역사교육은 국가 주도의 교육 과정 개정에 반영하는 근본적인 전환을 꾀했다.

---

14) 김기봉, 앞의 글, 29쪽

제7차 교육과정까지 역사교육의 골간은 국사와 세계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국사와 세계사의 구분은 한국에만 고유하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그것은 서구의 근대를 모방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시켜야 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서구 근대 역사 개념이 인류 전체의 역사를 포괄하는 보편사를 지향했다면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의 근대 역사 개념은 그러한 서구 보편사에 대항해서 민족사의 정립을 목표로 성립했다. 유럽 교과서는 일반사로서의 역사와 자국사로서의 국사를 분리해서 서술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사와 세계사를 분리해서 역사 교과서를 서술한다.<sup>15)</sup> 사토우 마나부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비판하면서 양자 모두 내셔널리즘의 주술에서 탈피하지 못한 독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 서술에서 내셔널리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무도한 시도이지만, 내셔널리즘의 주술로부터 해방시켜 대화의 서술로 전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교육이 국민 교육에서 시민성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6)</sup>

역사교육계는 이러한 자국사·자민족 중심의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며 2007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종래의 ‘국사’ 교과목의 이름을 ‘역사’로 개정하는 형식상의 혁신을 꾀했다. <sup>17)</sup> 내용적으로도 민족국가사적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주변 국가들과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화 시대에 자국사 중심의 역사교육을 벗어나야 한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방안을 내놓았다.<sup>18)</sup> 이러한 형식과 내용상의 혁신안을 담아 낸 ‘역사’ 교과목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인류의 삶을 이해하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과거와 연관지어 살펴봄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삶에 관하여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키우는 과목이다. …(중략)…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인간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나아가 과거와 현재, 나와 타인의 삶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sup>19)</sup>

이러한 ‘역사’의 탄생은 민족이나 국민이 아닌 ‘인류로서의 인간’을 주체로 한 성찰적 역사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역사교육 시민화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사 중심으로 한국사와 세계사를 병렬적으로 서술한 중학교 ‘역사’와 달리 고등학교 ‘역사’의 경우는 특히 한국근현대

15) 김기봉, 앞의 책, 177-178쪽

16) 사토우 마나부, 「독백의 역사에서 대화의 역사로」, 『일한 역사교과서의 현재와 미래』(도쿄대학교 심포지엄 자료, 2005.4.6.)(김성보, 「민족국민사와 동아시아사의 접맥」, 『역사와실학』 32, 2007, 834쪽에서 재인용)

17) 김한중, 「중등 역사교과서 개편의 과정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64, 2011, 20쪽

18) 방지원, 「새 교육과정 ‘역사’의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와 검정 중학교 교과서 서술」, 『역사교육연구』 12, 2010 참조

19)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과 교육과정』, 2007, 31쪽

사를 중심으로 하되 세계사 내용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한국사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한국사 이해에 도움이 되는 개념을 학습 내용으로 포함한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사의 전개를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비교하고 반성적으로 돌아보자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었다.<sup>20)</sup> 그러므로 한국사와 관련성이 높은 동아시아사를 좀 더 비중있게 다루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가 세계사의 흐름이나 이웃나라와 관계를 맺으며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역사’의 성격, 목표, 내용 등을 분석한 김육훈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역사’과목은 교육과정을 제정하는 이들-국가가 설정한 민족 정체성 혹은 국가 정체성을 내면화하려는 국사(national history)와 다르다. 세계에 의해 관계 지워지는 국사의 존재를 파악하고, 자국사의 경험을 다른 나라 역사 경험에 비추어 되새겨 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미래를 발견하려 한다. 민족 국가 차원 이외에 다양한 층위의 삶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다른 차원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자는 문제의식이 담겼다.<sup>21)</sup>

‘역사’의 탄생은 국사 해체론자들로부터도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기봉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사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사, 그냥 세계사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계사라는 것이다. 즉 국사와 세계사라는 이분법으로 자국사와 타국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와 세계사의 상호관련성을 구현하는 역사 교과서 서술이 요청된다’<sup>22)</sup> 기대를 피력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한 역사교육의 변화 모색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2009년 12월 17일 2009년 개정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하여 고등학교 ‘역사가 근현대사 분량을 줄이고 2개의 전근대 단원을 넣은 ‘한국사로 급조되면서 사실상 좌절되었다.’<sup>23)</sup> 시민적 역사교육 차원에서 추진되던 한국근현대 중심인 ‘역사’의 통사 체계인 ‘한국사’로의 후퇴는 한국근현대사 교육을 백안시한 이명박 정부와 통사 체계의 역사교육을 선호하는 한국사 연구자들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역사’를 통해 시민적 역사교육을 실현하고자 한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교육연구소 등 시민사회 차원에서 역사 교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적 역사교육을 모색하는 풍토가 마련되어갔다. 김육훈은 지금까지 역사교육이 민족교육이라는 점에서 주로 접근되었고 민주주의 교육이란 관점에서는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민주주의 교육은 주로 사회과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사회과에서는 민족보다 시민을 강조했고, 시민성이나 민주 시민의 자질이란

20) 김육훈, 「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과 근현대사 교육」, 『역사와교육』 1, 2009, 62쪽

21) 김육훈, 위의 글, 73쪽

22) 김기봉, 앞의 책, 197쪽

23) 양정현,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검정의 양상」, 『역사교육연구』 12, 2010 참조

개념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접근하면서 역사가 너무 많은 사실을 가르치는데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처럼 제도화된 민주시민교육은 현실의 민주주의 질서에 효과적으로 시민을 통합시키는 것을 일차적 과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적 역사교육은 사회과에서 이루어낸 민주시민교육의 성취를 올바르게 수용하되, 현실적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제도와 개별 구성원의 실천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sup>24)</sup> 이러한 민주주의적 역사교육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구경남은 고등학교 ‘한국사’ 현대사 부문에 등장하는 시민을 타율적 시민, 정치적 시민, 탈국가적 시민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시민과 국민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 역사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는 성과를 내놓았다.<sup>25)</sup>

이처럼, 역사교사를 주축으로 민주주의적 역사교육을 모색하는 데는 일본 역사교육자협의회(이하, 역교협)와의 교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역교협은 일본에서 패전 후 군국주의 교육을 청산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교육 개혁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탄생한 역사 교사 단체로 민주 시민 양성에 기여하는 역사교육을 위해 역사과 독립에 반대한다. 역교협과의 교류는 역사 교사들에게 민족 편향적 폐쇄성을 갖는 역사교육은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보편 가치를 구현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이처럼 동아시아 차원의 역사 교사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스스로의 자국사 교육을 돌아볼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데는 2001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으로 불거진 동아시아 역사 갈등이 각성제이자 자극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일본 후쇼사의 『새로운 역사교과서』 발간, 2002년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 일련의 사건이 야기한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역사 교사들은 일국사적 역사 인식이 가져오는 폐해를 성찰하면서 동아시아 시민 혹은 민중을 주체로 하는 공동 역사서의 발간을 위한 역사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조선통신사』, 『한국과 일본, 그 사이의 역사』, 『마주보는 한일사』 등의 성과물을 내놓았다. 동아시아 역사 대화에는 역사 교사만이 아니라, 아시아 평화와역사교육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등의 한중일 공동 역사서를 발간하는 등 동아시아 차원에서 시민적 역사교육의 장을 열어나갔다.

이러한 동아시아 역사 갈등에 대한 성찰이 자국가자민족 중심의 한국사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사’와 함께 ‘동아시아사’라는 신생 교과목이 탄생했다. 이는 한국사와 세계사라는 두 줄기를 근간으로 실시되어온 역사 교육의 틀을 흔드는 커다란 변화임에도 교육 과정의 개정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동아시아 역사 전쟁에 대한 대응이라는 정

24) 김육훈, 「민주주의와 역사교육」, 『역사교육』 87, 2009

25) 구경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속 ‘시민’ 재해석」, 『역사교육연구』 15, 2012

책적 고려에 따라 줄속으로 채택되어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역사가 한국사에 세계사적 맥락을 곧바로 접합하는 방식의 역사교육의 시민화를 의미한다면, ‘동아시아사’는 일국사로서의 한국사의 외연을 지역사인 동아시아사로의 확대를 통해 시민화(보편화)로 가는 ‘경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동아시아사’는 개설 목표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를 것’을 천명했다. 또한, ‘역사’와 마찬가지로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키울 것’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자국가자민족적 편향의 역사교육을 지양하고자 했다. 형식적으로는 동아시아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를 주제로 선정하여 역사사실의 나열이 아닌 주제 중심의 역사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틀을 선보였다.

‘동아시아사’가 역사교육으로서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는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는 평화교육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 명칭은 사라지고 내용은 변조되는 곤혹을 치른 ‘역사’와 달리 지금도 역사교육 현장에서 ‘동아시아사’가 생존하고 있음은 지속적인 역사 대화를 통해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고자 한 시민사회의 지속적 요구가 제도권 역사교육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동아시아사’의 탄생이 기존 역사교육의 지형을 흔들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육계가 기대와 우려 속에 개설 취지에 대체로 동감한 것은 다음 역사교사의 소회에서 읽을 수 있듯이 역사교육의 시민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거의 서로를 가슴 아프게 하였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첩되어 있는 동아시아이지만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역사 인식을 공유한다면 동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 2)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역사교육적 연계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사’, ‘세계사’, 그리고 ‘동아시아사’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사’가 자국가자민족 중심의 역사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강하게 투영된 역사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의 외연 확대보다는 세계사의 부분 집합인 지역세계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 역사학계에서는 한국사의 동아시아사화 혹은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확장되어가는 반면에, 역사교육계에서는 한국사보다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의 연계에 대한 모색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6) 윤세병·김현경, 「‘VI.오늘날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역사와 역사교육』 24, 2012, 156쪽

이러한 경향은 세계사 교육 속의 동아시아사는 지역사로서 그 안팎의 경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지만, 한국사 교육에 등장하는 동아시아사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 한국사의 확대로서의 동아시아 역사상을 그려내기가 쉽지 않은 데 기인한다. 곧, 자국가자민족 중심의 한국사 교육이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아직은 그로부터 발목잡혀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세계사 내용이 다소 보강된 ‘한국사’를 ‘동아시아사’를 함께 배우는 역사교육 현장에서는 차츰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연계에 대한 모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연계가 한국사 교육에서는 쉽게 시도되지 않게 되었는지를 짚어 보자.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국사』와 『한국근현대사』이다.<sup>27)</sup> 이들 교과서에서 동아시아사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역사 교육을 통해 어떤 동아시아 역사상이 구현되고 있었는지를 살필 수 있다. 여기서는 일국의 운명이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운명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던 격랑의 근현대사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근대의 기점을 동양이 아닌 서양의 근대화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적인 서구 중심주의 역사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동아시아사는 서양의 진출이라는 시각에서 ‘후진 지역’의 실패한 역사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서양의 침략과 도전에 대한 동아시아의 저항과 응전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입각해 있다. 동아시아를 역사의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후진적인 객체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근대화 노력과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둘째,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사는 일국의 상황만으로 자국사를 기술하는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적 맥락을 생략하고 있다. 자국가자민족 위주의 역사 전개 과정을 서술할 뿐, 청과 일본, 두 제국이 왜 몰락하고 부상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셋째, 일제 시기 서술에서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침탈’, ‘수탈’, ‘약탈’ 등 반일 시각이 농후한 용어들이 반복되는 교과서에서 ‘일제’의 악행에 대한 강조는 저항으로서의 독립운동을 영웅시하는 서술로 이어진다. 일본의 수탈과 한국인의 저항만이 보일 뿐, 식민 모국인 일본의 근대사 흐름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파란만장한 근대 역정도 알 길이 없다.

넷째, 현대사가 근대사보다 훨씬 자국가자민족 중심주의에 충실하다. 1945년 이후 한(북한 포함)중일 상호간에는 ‘단절’의 역사가 상당기간 지속되었고 지금도 단절된 역내 관계가 존재한다.

27) 분석대상은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김한중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주)금성출판사, 2009 ;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9 ; 김광남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주)두산, 2009 ;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주), 2009 ; 김홍수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주)천재교육, 2009 ; 김종수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법문사, 2009 등이다.

그리고 미국이 동아시아의 현실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세계사적 안목과 함께 동아시아사적 안목이 필요하고, 또한 동아시아적 맥락의 역사 서술이 절실하다. 하지만, 교과서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서술로 가득하다. 오직 고군분투하는 한국인의 모습만이 그려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들 교과서에서 이웃인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이다. 일본은 군사 정치 대국화를 지향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sup>28)</sup> 중국 역시 반공적인 차원에서 고도 성장 속에 북한을 지원하므로 우리에게는 또다른 위협의 증대라고 본다.

이처럼 제7차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는 근현대의 역사를 지배와 저항의 이분법적 구도하의 일국사로 파악하며 이웃을 늘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도록 서술하고 있다.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연계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sup>29)</sup>

그렇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이러한 한국사 교과서의 동아시아사 서술은 이러한 한계를 얼마만큼 극복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국사와 세계사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한 ‘역사가 마련되었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전근대사의 비중을 높여 급조한 ‘한국사가 개설되었다.’<sup>30)</sup> 그럼에도 상대적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에 비해서는 한국사 이해에 필요한 세계사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편이다. 특히 동아시아사 서술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국사’의 근현대사에 해당되는 3단원부터 9단원까지 한국사와 연관된 동아시아사를 중단원으로 배치한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한국사’ 교과서가 다루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가 이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근대사의 시작을 서양사부터 서술하던 서구 중심주의적 역사 인식에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근대에 해당하는 단원을 ‘자본주의가 발달하다’라는 중단원 하에 ‘처음 산업 혁명을 시작한 영국은 19세기에 세계의 공장이 되어 세계경제를 지배하였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교과서도 있지만<sup>31)</sup>, 조선 후기 근대로의 변화 양상을 먼저 언급한 뒤 서양의 자본주의화와 아시아 진출을 다룬 교과서들도 있다. 하지만 서양의 아시아 진출, 그리고 아시아의 저항으로 이어지는 이분법적 구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둘째, 근대사에서 중국과 일본 역사에 대한 서술이 절대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이전에 비해 꽤 늘어난 편이다. 교과서마다 편차가 있지만, 중국의 개항으로부터 신해혁명 혹은 54 운동,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 중

28) 주진오 외, 위의 책, 335쪽

29) 김정인, 앞의 글, 2009, 21-29쪽

30)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1 ;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법문사, 2011 ;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1 ; 정재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2011 ; 이인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삼화출판사, 2011 ;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2011

31) 이인석 외, 위의 책, 92쪽

국의 북벌, 국공합작 등을 설명한 교과서는 적다. 191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 성장과 다이쇼 데모크라시, 군국주의화 과정 등에 대한 서술은 교과서마다 편차가 심하다. 동아시아 근대사 전반을 이해하고 그 속의 한국사의 흐름을 파악할 만큼 온전히 서술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독립운동의 경우, 여전히 동아시아 정세와 연결 짓지 못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게 민족사적 관점에서 서술한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천재교육의 경우는 곳곳에서 독립운동의 동아시아사적 맥락을 서술하고 있다. 가령, 1910년대 연해주의 독립운동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탄압으로 한 때 주춤했으나 러시아 혁명 이후 활기를 띠게 되었다’<sup>32)</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족유일당운동의 경우는 ‘중국의 제1차 국공합작이 깨지고 코민테른이 좌파 세력에게 민족 부르주아와의 결별을 요구하여 결국 1929년 한국유일독립당 상하이 총성회가 해체되었다’<sup>33)</sup>고 동아시아사적 배경을 일러 주고 있다.

넷째, 현대사에서 일본과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한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 오히려 대부분의 교과서가 동북아의 화해 모색을 위한 중단원을 설정하여 ‘동아시아사’가 추구하는 평화교육적 측면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모든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중국과 일본 현대사에서 경제사에만 주목하는 한계를 보인다. ‘경제 대국’이 모든 교과서가 강조하는 현대 일본의 상이다. 중국 역시 개혁·개방 정책 이후 경제적 부상이 강조된다. 한국 현대사는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양축으로 서술하면서도 중국과 일본 현대사는 유독 경제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사’ 교과서는 이전의 ‘국사’, ‘한국근현대사’에 비해 동아시아사에 대한 인식과 서술에서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역사’의 목표이기도 했던 한국사와 세계사의 맥락을 상호 관련지어 역사상을 구성하고자 하는 모색이 부분적으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즉 역사 교육에서의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 교육에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연계의 싹을 발견했다면, 동아시아사 교육에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연계성은 그보다 더 긴밀할 것으로 기대하기 마련이다. 여기서는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근현대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연계의 의미를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사례를 들어보자.<sup>34)</sup> 먼저, 신채호의 경우, ‘한국사’에서는 민족주의 사학을 대표하는 역사학자이고 1923년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인물로 그려진다. 하지만, ‘동아시아사’에서 신채호는 동아시아 국제 연대를 다룬 중단원에서 무정부주의자로 그려진다. 이처럼, ‘한국사’에서 조선혁명선언 작성이라는 무정부주의적 행적을 언급하면서도 무정부주의자임을 명시하지 않고 독

32) 주진오 외, 앞의 책, 203쪽

33) 위의 책, 239쪽

34) 분석대상은 안병우 외,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2012 ; 손승철 외,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학사, 2012 등이다.

립운동가로만 형상화함으로써 신채호가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에서 각기 다른 인물상으로 그려진다는 것은,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국사 교육이 자국사적 맥락화에 매몰될 때는 ‘의도하지 않은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둘러싼 한중관계 서술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한국사’에서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들만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이 중국과 항일연대 조직을 꾸리는 주체로 등장한다. 그들이 중국 국민당 인사들과 함께 만든 비밀결사인 중한민족항일대동맹의 목적은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한중연합으로 중국의 실지 회복과 한국의 독립을 꾀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6·25전쟁의 경우, 국제전의 양상을 띤 이상 동아시아사적 맥락 나아가 세계사적 맥락의 서술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은 삼화출판사의 경우처럼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치는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미국은 6·25전쟁을 치른 후 소련의 새로운 침략에 대비하여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강화하는 등 냉전은 격화되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1950년 120억 달러 정도였으나 1953년에는 5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미국과 대적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발언권을 확대시켰다.<sup>35)</sup>

반면에 ‘동아시아사’는 많은 분량을 냉전 고착화에 미친 세계사적·동아시아사적 영향에 할애하고 있다.

6·25전쟁은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 관계회복을 서둘러 전쟁 중이던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마일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군사적 반공망을 만들어갔다. 일본은 전쟁 협력에 적극 나서 유엔군에 각종 보급품과 장비를 공급하면서 전에 없는 경제 호황을 맞았고, 고도 경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타이완의 장 제스 정부는 6·25전쟁으로 미국의 전면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일본과도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살아남는데 성공하였다. 중국은 참전으로 타이완을 점령하여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으나 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sup>36)</sup>

6·25전쟁은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반공망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략)…또 6·25전쟁은 유럽에서 영국과 서독의 재무장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창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소련은 이에 대항하여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과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조직하였다.<sup>37)</sup>

35) 이인석 외, 앞의 책, 322쪽

36) 안병우 외, 앞의 책, 237쪽

37) 손승철 외, 앞의 책, 205쪽

‘한국사’에서 6·25전쟁의 국제적 영향에 대해 제대로 서술하지 않은 것은 자국가자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이 국제전으로서의 6·25전쟁이라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경우에 해당된다.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냉전 구도 확립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가르칠 때, 전쟁으로부터 얻는 교훈이 더 분명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아시아사’ 속의 한국사에는 ‘한국사’ 속의 그것과 다른 사실이 담겨 있거나 다른 맥락 속에 서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사의 내용 중에서 동아시아사적 맥락화가 가능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현대 정치사의 경우도 한국-일본-타이완의 민주화 흐름과 북한-중국-베트남의 사회주의 정치의 변화로 대별시켜 그에 해당되는 역사적 사실로만 구성된다. 동아시아 현대 경제사 역시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으로 대별하여 구성하고 나아가 두 권역의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역내 교역의 확대까지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정치와 경제, 나아가 사회 영역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어우러져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지역세계를 형성하며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의 특질이라고 할 때, 한국사 관련 내용 역시 이러한 기준에서 선별된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동아시아사 교육에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연계’는 한국사가 각국사의 나열 속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주제 하에 포괄되는 한, 내용 선정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사’의 한국사 관련 내용의 선별 기준을 정치하게 분석한다면 한국사와 동아시아사가 연계된 한국사 교육의 시민화, 즉 시민적 역사교육의 길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한국사 연구와 교육이 민족주의의 틀을 벗어나 시민화를 요구받고 동아시아가 역사전쟁으로 요동치는 가운데 동아시아사가 급부상했다. 학문적·교육적 차원의 후진성 극복과 정치적·외교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면서 동아시아사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후자는 지역세계사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었지만, 전자는 민족과 국가를 넘는 역사 인식과 역사 서술이 일거에 시민화·보편화하기는 불가능하므로 간극을 메우기 위한 징검다리 혹은 경로로서 동아시아사에 주목했기에 많은 고민과 실험이 뒤따랐다. 지금 학문적 모색은 한국사의 동아시아사화 차원에서 역사상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단계에 와 있고, 교육적 성찰은 ‘동아시아사’를 통해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연계를 시도하는 단계에 와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모색과 성찰의 결과로 동아시아사라는 경로를 거쳐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시민화가 달성될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한국사의 동아시아사화,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연계를 거

쳐 동아시아사의 세계사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의 연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시민화의 길이 좀 더 순탄하게 개척될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낙관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동아시아사에는 시민적 역사학과 시민적 역사교육이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진전을 가로막는 민족주의적 장애를 넘고자 하는 '시민성'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민족과 국민을 주체로 하는 일국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연구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폐쇄적인 안목과 낡은 관행이라 비판하는 풍토를 만들어가는 데 동아시아사가 한 역할이 적지 않음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